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2021년 11월



정부부처 합동

발간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년 5월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국정운영 방향도 정해질 것입니다.

정해진 임기에 따라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정책들은 또한 장기적인 비전과 다년간의 계획 하에서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중에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보완·발전되어야 할 정책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잘 준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를 정부부처 합동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작성하였으며, 그간의 성과는 물론이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보완·발전시켜야 할 과제, 새롭게 시도해야 할 사업들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현 정부의 주요정책 추진경험을 있는 그대로 공유함으로써, 차기 정부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보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1년 11월

국무총리 김부겸

목 차

I . 개 관	1

II .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13

경제 분야

1. 기획재정부	17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
3. 농림축산식품부	43
4. 산업통상자원부	56
5. 국토교통부	68
6. 해양수산부	81
7. 중소벤처기업부	92
8. 방송통신위원회	104
9. 공정거래위원회	114
10. 금융위원회	124
11. 국세청	134
12. 관세청	139
13. 조달청	145
14. 통계청	151
15. 농촌진흥청	154
16. 산림청	160
17. 특허청	167
18. 기상청	173
1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78
20. 새만금개발청	184

사회 · 문화 분야

1. 교육부	191

2. 법무부	203
3. 행정안전부	215
4. 문화체육관광부	229
5. 보건복지부	241
6. 환경부	254
7. 고용노동부	264
8. 여성가족부	275
9. 국가보훈처	285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95
11. 식품의약품안전처	299
12. 경찰청	305
13. 소방청	309
14. 문화재청	315
15. 질병관리청	320
16. 해양경찰청	328
17. 원자력안전위원회	333

외교 · 통일 · 안보 분야

1. 외교부	341
2. 통일부	355
3. 국방부	365
4. 병무청	376
5. 방위사업청	381

조정 · 지원 분야

1. 국무조정실	389
2. 국민권익위원회	401
3. 인사혁신처	413
4. 법제처	419



I . 개 관



1. 추진 배경

-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각 기관의 기본적인 주요 정책은 연속성을 갖고 보완·발전 필요
 - 이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한 주요정책의 추진성과, 추진상 애로와 향후 보완 필요사항 또는 신규 추진 필요과제 등을 종합하여 공유
- 현 정부 주요정책 추진 경험을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가감 없이 정리하여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분들과 국민들에게 제공
 -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수립과 국가 발전전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생산적 논의 등에 참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 작성 개요

- **(작성기관)** 46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25개, 차관급 21개)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
- **(작성주체)** 기관별로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작성
 - * 내용 중 향후과제, 신규 추진 필요과제 부분은 기관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
- **(작성대상)** 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 중 중요성이 높은 정책을 기관별로 선정(대체로 실 단위 수준의 업무)

- 주요정책 : 중앙행정기관의 추진 정책 중 중요도가 높거나,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을 선정
- 신규과제 : 미래 경제·사회 구조변화, 정책환경 또는 국제질서 변화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

- **(내용구성)** 각 기관이 정책별로 작성하고, 기관은 분야별로 편제
 - 정책별로는 추진배경,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과제로 구성
 - 분야별로는 경제 → 사회·문화 → 외교·통일·안보 → 조정·지원 순
- **(고려사항)** 정책 선정 및 작성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성·중립성 유지
 - 주관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공식 자료·통계 등을 활용
 - 사실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서술

3. 작성정책 현황

① 대상 정책

- 총 229개 정책 (주요정책 211개 + 신규과제 18개)

② 기관 유형별

- (장관급) 25개 기관, **161개** 정책 (기관 평균 6.4개)
 - 주요정책 145개 + 신규과제 16개
- (차관급) 21개 기관, **68개** 정책 (기관 평균 3.2개)
 - 주요정책 66개 + 신규과제 2개

③ 정책 분야별

(단위 : 개)

분 야		경 제	사회·문화	외교·통일·안보	조정·지원	합 계
계		99(43%)	84(37%)	27(12%)	19(8%)	229
주요정책	장관급	58	56	19	12	145
	차관급	32	21	6	7	66
신규과제	장관급	7	7	2	0	16
	차관급	2	0	0	0	2

◇ 경제 분야

* 주요정책 90개, 신규과제 9개

기관명	정책명		페이지
기획재정부	1	한국판 뉴딜 전략 추진	17
	2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19
	3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 및 자립화 대책	22
	4	BIG3 산업 집중 육성 등 혁신성장 전략	25
	5	국제금융 안정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	27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	국가 첨단전략기술 선제적 발굴·육성	29
	2	정부 연구개발(R&D)의 전략적 투자 확대	31
	3	4차 산업혁명과 국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33
	4	디지털 플랫폼·미디어 상생 생태계 조성	35
	5	노벨상 근접 우수 이공계 인재 지원 강화	37
	6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	39
	신규	민관협력 우주개발 본격화	41
	신규	디지털 신산업 육성	42
농림축산 식품부	1	농촌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	43
	2	청년농 육성 및 귀농귀촌 활성화	45
	3	농산물 수급 및 농가 경영 안정장치 강화	47
	4	농업 생산·유통 스마트화	49
	5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	51
	6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및 반려동물 산업 육성	53
	신규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먹거리 기본권) 강화	55
산업통상 자원부	1	주력산업 혁신 및 신산업 육성	56
	2	글로벌 공급망 선도	58
	3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60
	4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62
	5	무역·투자 활성화	64
	6	통상협력 고도화	65
	신규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	67

기관명	정책명		페이지
국토교통부	1	국토 균형발전	68
	2	포용적 주거안정 추진	70
	3	친환경 녹색건축 확산	73
	4	물류산업 선진화	75
	5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77
	6	해외건설 진출 지원	78
	7	디지털 국토 및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추진	79
	신규	미래모빌리티 일상화를 앞당길 첨단교통 육성	80
	신규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 및 공급관리	80
해양수산부	1	해운재건 및 수출입 물류지원	81
	2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기반 조성	83
	3	해양안전관리 선진화	85
	4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86
	5	해양수산 탄소중립 추진	88
	6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89
	신규	도서민 교통 기본권 보장	91
중소벤처 기업부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지원	92
	2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94
	3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96
	4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98
	5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저탄소화 및 지역혁신	100
	6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 확산	102
방송통신 위원회	1	미디어산업 활력제고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강화	104
	2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	105
	3	디지털 성범죄물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107
	4	방송시장 규제체계 혁신	109
	5	재난방송 강화	110
	6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및 시청자 복지 제고	112
공정거래 위원회	1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114
	2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마련	116
	3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118
	4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120
	5	소비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122
금융위원회	1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및 금융불균형 완화	124
	2	코로나19 취약계층 금융지원 및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126
	3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	128
	4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안전망 개선	130
	5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132

기관명	정책명		페이지
국세청	1	다각적 세정지원을 통한 국민경제 활력 뒷받침	134
	2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성실납세 지원	136
	3	공정세정 구현을 통한 국민신뢰 제고	137
관세청	1	무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139
	2	수입물품에 대한 세수 확보로 국가재정 뒷받침	141
	3	수출입 관리를 통한 국민안전 보호	142
	4	불법부정무역 차단으로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	144
조달청	1	혁신조달 확산	145
	2	차세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146
	3	사회적 책임과 국민안전을 우선하는 조달 구현	148
	신규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 강화	150
통계청	1	K-통계체계 구축 추진	151
	2	포괄적 연금통계 및 생애계층별 사회통계 개발	152
	3	사회 포용성 확대와 사회정책을 지원하는 통계 개선·개발	153
농촌진흥청	1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확산	154
	2	식량안보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보급	155
	3	농촌소멸화 대응 농촌 활력 제고	157
	4	한국형(K)-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	158
산림청	1	산림조성과 일자리·소득 창출	160
	2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162
	3	산림재해 예방 및 보전·복원	164
	신규	산촌 육성으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166
특허청	1	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식재산 인프라 마련	167
	2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169
	3	지식재산 빅데이터 활용 강화	171
기상청	1	예보소통 및 방재대응 지원 강화	173
	2	국가기상관측망 관리제도 강화	175
	3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상세 기상기후자원정보 생산	176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청	1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강화	178
	2	광역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	180
	3	그린·스마트도시 조성	182
새만금 개발청	1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및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184
	2	새만금 교통인프라 조성	185
	3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등 공공주도 사업 추진	186

◇ 사회·문화 분야

* 주요정책 77개, 신규과제 7개

기관명	정책명		페이지
교육부	1	교육비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191
	2	미래교육으로의 체계적 전환 추진	193
	3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평생교육 혁신	195
	4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197
	5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사회정책 협력 기반 마련	199
	신규	코로나19 교육결손의 완전한 회복	201
	신규	국가차원의 인재양성정책 추진	202
법무부	1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완비	203
	2	민생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	204
	3	건전한 공정경제 질서 기반 조성	206
	4	실효적인 범죄대응 체계 마련	208
	5	인권 친화적인 법무행정 추진	210
	6	엄정한 국경관리, 미래를 준비하는 이민정책	212
	신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미래 법무서비스 조성	214
행정안전부	1	자치단체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	215
	2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217
	3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 구현(자치분권 2.0)	219
	4	재정분권 추진	221
	5	지역활력 제고	223
	6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	225
	7	지속 가능한 정부혁신	227
문화체육 관광부	1	전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229
	2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	231
	3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	233
	4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235
	5	국민 스포츠권 신장	236
	6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38
	신규	문화기술 육성을 통한 콘텐츠산업 디지털 역량 강화	240

기관명	정책명		페이지
보건복지부	1	코로나19 대응	241
	2	의료·건강안전망 강화	243
	3	소득안전망 강화	245
	4	돌봄안전망 강화	247
	5	글로벌백신허브화 도약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기반 조성	249
	6	인구구조 대응역량 강화	251
	신규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253
환경부	1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추진	254
	2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감축	256
	3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258
	4	통합물관리 체계 완성 등 물환경 개선	260
	5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262
고용노동부	1	코로나19 고용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	264
	2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266
	3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268
	4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270
	5	청년인재 양성	271
	6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272
	7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혁신	273
	신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익 확대 및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274
여성가족부	1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	275
	2	성폭력 등 젠더폭력 근절	277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지원 확대	279
	4	촘촘한 돌봄 지원체계 구축	281
	5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282
	6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강화	284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 소득 보장	285
	2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등 복지 확대	287
	3	국가유공자 장례·안장 서비스 강화	289
	4	보훈문화 조성	291
	5	제대군인 등 사회복귀 지원	293

기관명	정책명		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 마련	295
	2	코로나19 개인정보 보호 강화	296
	3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297
	신규	디지털 시대 국민의 권리강화	298
식품의약품 안전처	1	코로나19 대응 의료제품 적기 공급	299
	2	생산부터 소비까지 체계적인 먹거리 안전 확보	301
	3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	303
경찰청	1	수사권 개혁	305
	2	자치경찰제 내실화	307
	3	정보경찰 개혁	308
소방청	1	소방의 국가 책임성 강화	309
	2	제2차('22년 ~ '26년) 화재안전정책 추진	311
	3	구급처치 범위 확대로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313
문화재청	1	국민과 상생하는 문화재 보존	315
	2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전환	317
	3	문화유산 가치 대내외 확산	318
질병관리청	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	320
	2	코로나19 방역 대응	322
	3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추진	324
	4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326
해양경찰청	1	주변국 해양력(해양패권) 확장 대비 우리나라 국가해양경비력 강화	328
	2	민·관 협력에 의한 선진 해양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331
원자력 안전위원회	1	원전 안전규제 신뢰성 제고	333
	2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안전관리체계 구축	334
	3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336

◇ 외교 · 통일 · 안보 분야

* 주요정책 25개, 신규과제 2개

기관명	정책명		페이지
외교부	1	코로나19 대응(국민안전과 경제활동 보호)	341
	2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343
	3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 외교	345
	4	신남방·신북방 정책	347
	5	국제무대 선진국 외교	349
	6	기후환경 대응 국제협력 강화	351
	7	신흥·핵심기술 관련 국제협력 강화	353
통일부	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	355
	2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추진	356
	3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제도화	358
	4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360
	5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361
	6	통일국민협약을 토대로 전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	363
	신규	새로운 대북·통일정책 수립·추진체계 구축	364
국방부	1	북 핵·미사일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365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366
	3	군 사법개혁	368
	4	장병 인권보장 및 생활여건 개선	369
	5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	371
	6	국방 AI·무인체계 발전 추진	373
	신규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	375
병무청	1	공정한 병역이행	376
	2	안정적 병력충원	378
	3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379
방위사업청	1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381
	2	신속획득체계 구축	382
	3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제도 개선	384

기관명	정책명		페이지
국무조정실	1	규제혁신	389
	2	국제개발협력(ODA)	391
	3	탄소중립	393
	4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	395
	5	생활SOC 확충	397
	6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399
국민권익위원회	1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추진	401
	2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기준 확립	403
	3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405
	4	적극적인 국민권익 구제 확대	407
	5	국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정책·제도개선	409
	6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411
인사혁신처	1	적극행정 활성화	413
	2	공직사회 전문성·개방성·다양성 확대	414
	3	공직윤리제도 개선	417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한 법령정보 제공	419
	2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421
	3	「행정기본법」 제정 및 행정법제 혁신	423
	4	아시아 국가 법제행정을 선도하기 위한 법제교류협력	425



Ⅱ.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 내용 중 향후과제, 신규 추진 필요과제 부분은 기관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

경제 분야

1. 기획재정부	17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
3. 농림축산식품부	43
4. 산업통상자원부	56
5. 국토교통부	68
6. 해양수산부	81
7. 중소벤처기업부	92
8. 방송통신위원회	104
9. 공정거래위원회	114
10. 금융위원회	124
11. 국세청	134
12. 관세청	139
13. 조달청	145
14. 통계청	151
15. 농촌진흥청	154
16. 산림청	160
17. 특허청	167
18. 기상청	173
1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78
20. 새만금개발청	184

기획재정부

1. 한국판 뉴딜 전략 추진

① 추진 배경

-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사회 구조변화 선제대응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대전환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20.7월)
 - 디지털 뉴딜을 통해 선도형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그린 뉴딜로 저탄소·친환경 사회로 전환하며, 안전망 강화로 포용사회로 도약 목표
-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심화 우려, 탄소중립 대응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진화하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21.7월)
 -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하여, 3+1 체제*로 개편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사업전환, 공정한 노동전환 등도 적극 지원

* 뉴딜 3+1 체제 : 디지털뉴딜 · 그린뉴딜 · 휴먼뉴딜 + 지역균형뉴딜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재정투자)** '20년 추경(5.4조원), '21년 본예산(21.0조원), '22년 정부안(33.7조원) 등 차질없는 재정투자로 한국판 뉴딜을 민간으로 확산*
 - * 신안 해상풍력단지(48조원),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36조원), 새만금 대규모 수상 태양광 등
- **(제도개선)** 제도개선 과제 191개 개선방안 마련, 뉴딜 2.0을 반영하여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43개 법률)로 확대
- **(뉴딜펀드)** '21년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중 3.9조원의 자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 세제지원 법령개정 등 뉴딜 인프라 펀드** 출범 준비
 - * 국민참여 뉴딜펀드 1차분(0.2조원) 6영업일만에 완판, 2차분(0.1조원) 11월중 판매
 - ** 1차 심의위원회에서 2건의 세제혜택 확정(6월), 심의회 개최 등으로 펀드결성 지속 지원
 -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한국판 뉴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긍정적으로 평가 중

▶ (IMF)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환영 받을 전략" ('21.3월 IMF 연례협의보고서)

▶ (OECD) "한국판 뉴딜은 환경친화적·포용적 경기회복을 뒷받침 할 것... 재생에너지·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제회복 공고화에 기여" ('20.8월 한국경제보고서)

3 향후 과제

-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지원)** '21. 7월 발표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추진

- 범부처 협의체인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중심으로 과제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계부처 간 연계체계 고도화 예정

* 예) 기활법·중기사업전환법 등 법령개정, 지원전담기관(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개소

<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21.7월) >

- ▶ **(전략적 수요발굴·관리체계 구축)** 사전 수요탐색 및 수요발굴 기능 강화, 통합관리 및 맞춤형 지원
- ▶ **(인센티브 강화)** 사업재편 R&D 및 사업전환 중진공 융자자금 확대, 사업재편 펀드 신설·P-CBO 보증 지원 및 법인세 과세이연 확대 등 세제지원 강화
- ▶ **(시장친화적 구조개편 촉진)** 금융공급확대, M&A 활성화 지원 및 금융지원 기반 확충
- ▶ **(인프라 확충)**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통합 DB 구축

- **(공정한 노동전환)**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산업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노동자 등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 향후, 노동전환 규모를 업종 및 지역 수준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현 계획을 필요에 따라 수정·보완하며 대응해나갈 필요

<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주요 내용(21.7월) >

- ▶ 단기간 노동전환 수요가 큰 자동차·석탄화력 발전에 대해 기업·근로자·지역 차원의 신속지원 체계 마련
 - (기업) 사전적 사업전환 수요발굴 → 컨설팅 제공 등
 - (근로자) ①직무전환 + ②전직·재취업 지원 강화
 - (지역) 사업재편 피해예상 지역에 대체산업 육성지원, 고용위기지역 신속 지정 등

- **(미래입법)** 한국판 뉴딜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한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 43개 법률의 조속한 입법 추진

- 제·개정 법률의 하위법령 정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한 노력 강화

▶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 추진 성과

- 디지털집현전법, 탄소중립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24개 법률 입법완료(잔여법률 19개)

2.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① 추진 배경

- '20.1월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제활동 위축 및 실물경제 충격이 나타나는 방역·경제 동시위기 발생

※ 경제성장률(전기비, %) : ('20.1/4)△1.3 (2/4)△3.2 (3/4) 2.2 (4/4) 1.1

<전년동기비, %> <1.5> <△2.6> <△1.0> <△1.1>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비, %) : ('20.3)△1.8 (4)△25.6 (5)△23.7 (6)△10.9 (7)△7.1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20.3)△19.5 (4)△47.6 (5)△39.2 (6)△35.2 (7)△27.7

- 방역체계 보강을 통한 국민안전 보호와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극복·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재정의 버팀목 역할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긴급추경 편성)** 코로나19 발생 이후 6차례 긴급 추경을 총 116.7조원 규모로 편성하며 코로나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을 적극 지원
 - ('20년 1~4차 추경) 59년 만에 최초로 4차례 추경을 편성하여 방역, 민생, 고용, 지역경제 등을 폭넓게 지원(총 66.9조원)

< '20년 1~4차 추경 주요내용 >

- ▶ (1차, 11.7조원) ①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1조원)
②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12조원 등 中企·소상공인 지원(4.1조원)
③ 취약계층 생계·소비여력, 양육지원, 고용안정 지원(4.2조원)
④ 코로나19 피해지역 고용안정 및 소비회복 등 지원(1.2조원)
- ▶ (2차, 12.2조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2.1조원 지원
* 2,171만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 ▶ (3차, 35.1조원) ①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5.0조원)
② 직접일자리,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21만명 고용지원(9.1조원) + 긴급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0.9조원)
③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2조원), K-방역 육성 및 재난대응 시스템 고도화(2.4조원), 한국판 뉴딜(4.8조원) 등(10.4조원)
- ▶ (4차, 7.8조원) 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3.9조원)
② 고용유지지원금 등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1.5조원)
③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0.4조원)
④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1.8조원)
⑤ 코로나19 백신, 독감무료 접종 등 긴급방역지원 패키지(0.2조원)

- ('21년 1~2차 추경)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 소상공인 보호 및 백신도입 확대 등을 위해 2차례 추경 편성(총 49.8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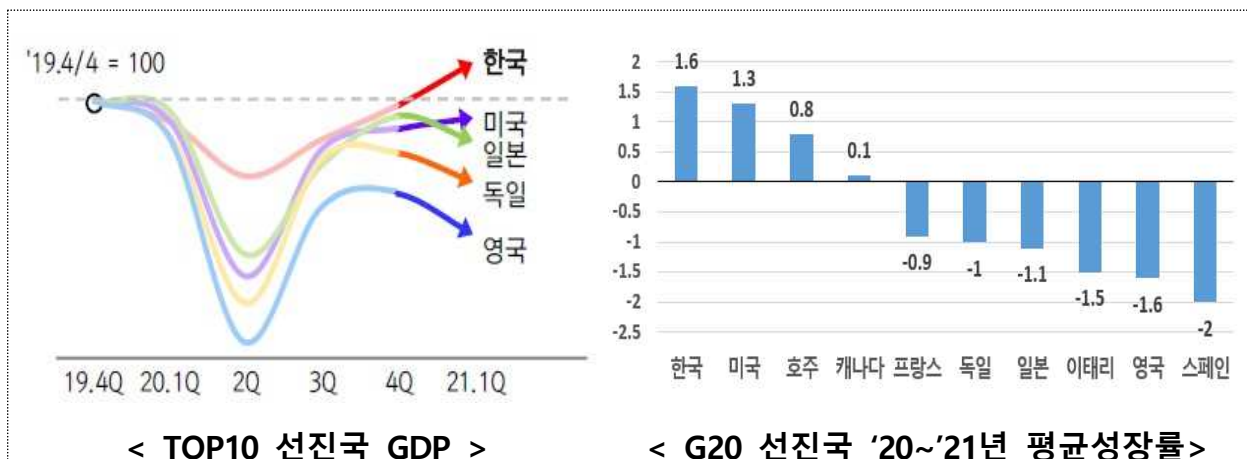
< '21년 1~2차 추경 주요내용 >

- ▶ (1차, 14.9조원) ①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와 피해집중계층 대상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금 확대**(8.4조원)
 ②**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한 **긴급 고용유지·창출** 소요(2.5조원)
 ③대규모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소요 확대** 재원(4.2조원)
- ▶ (2차, 34.9조원) ①소상공인 피해지원,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총 17.3조원, 국비 14.9조원)
 ②**백신 1.9억회분 확보** 및 **내년도 선구매**(1.5조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대응(2.7조원), **백신허브 구축**(0.2조원) 등(4.9조원)
 ③**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2.5조원)
 ④**지역·온누리·농축산물쿠폰** 및 **지방교부세(금) 지원**(12.6조원)

- **(확장재정)** '22년 예산안 역시 ①**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회복**과 ②**선도국가 도약** 견인을 위해 전년대비 8.3% 증가한 **604.4조원**으로 확장적 편성

- 백신 9천만회분 구매(2.6조원) 등 백신·방역 소요 5.8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1.8조원) 등 지원소요 6.5조원과 같은 위기극복 반영
-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개 유지·창출 등 일자리 예산 확대(30.1 → 31.3조원), 뉴딜2.0 투자 33.7조원 등으로 경기회복 뒷받침

⇒ 주요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 달성(G20 중 '20~'21년 평균성장률 1위, 1.6%)



3 향후 과제

- **(예산안 국회통과)** '22년 예산안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심사 및 국민과의 소통 등에 최선
 - 정부안 제출이후 여건변화에 따른 증감액 소요 등은 면밀히 점검·대응
 - 국회 통과와 동시에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 **(재정의 지속가능성)** 다만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채무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된 측면 →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시점
 -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
- **(재정건전성)**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지출증가속도 조절 등 선제적 총량관리 및 재정준칙 법제화 등 추진으로 건전성 관리
 - 경제회복이 공고화된 이후 지출증가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재정지출	558.0	604.9	604.4	634.7	663.2	691.1	5.5
(증가율)	(8.9)	(18.1)	(8.3)	(5.0)	(4.5)	(4.2)	-

- 위기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의 단계적 정상화*, 유사 중복·저성과사업 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 코로나 긴급 금융지원, 한시 일자리·생계유지 등 구조조정 및 재투자

-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재정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안*) 추진

*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20.10.5) →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제출('20.12.30)

재정준칙 관리기준(정부안) : (국가채무비율/60%) x (통합재정수지/△3%) ≤ 1.0

3.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 및 자립화 대책

① 추진 배경

- 일본 수출규제('19.7) 및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화 추진

* 소부장은 주력 제조업(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뿐만 아니라 신산업(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 등 산업 전반의 생산 공정에 매우 필수적인 품목들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소부장 3중세트 중심으로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와 산업 내 협력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지속

- **(소부장 3중세트 마련)** 소부장 자립화를 영구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인 '소부장 3중세트' 마련

- ① '소부장 특별법' 전면 개정, ②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 ③ '소부장 경쟁력강화위' 설치

- ▶ (소부장 특별법) 전략기술 확보, 특화단지 지정, 으뜸기업 육성 등 지원 법적근거 마련
- ▶ (소부장 특별회계) 소부장 투자규모를 2배 이상 확대(19년 1.1 → 21년 2.6조원)
- ▶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소부장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기구**로 신설('19.10월) → 이후 7차례 회의 개최, 총 41건의 대책 발표 + 주요 정책 이행상황 지속 점검

- **(공급안정화)** 3대 품목 및 100대 품목의 안정적 공급 추진

- (3대 품목) 국내생산 확대, 대체 신소재 투입 등 추진

* (불화수소) 솔브레인 생산능력 2배 확대, SK머트리얼즈 불화수소 국내생산 성공 (EUV 레지스트) 美듀폰 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 유치, 벨기에 C사 제품 대체투입 등 (불화 폴리이미드) 코오롱인더스트리 생산·수출, SKC 공장신설 테스트 및 대체소재(UTG) 투입

- (100대 품목) 다변화, 신증설투자, M&A 등 다각적 방식으로 안정성 제고

- ▶ (수입다변화) 대체처 발굴 및 수요기업 생산라인을 활용한 대체품 적합성 테스트
- ▶ (재고확충) 보세구역 반출기간 연장(15일→필요기간), 보세운송 임시제공·검사생략 등
- ▶ (신증설투자) 공장 신증설 및 인허가 절차 fast-track 적용
- ▶ (M&A) 핵심전략품목 국내외 M&A, 7개 프로젝트에 유동성 지원

- (자체기술 확보) 100대 품목 중 85개 품목 등 기술개발에 약 2조원 투입, '20년 23개 품목 시제품 개발완료, 434건의 특허출원 등

⇒ 소부장 3대 핵심품목* 공급안정화 및 생산차질 全無

+ 100대 품목 대일의존도 감소('19.1~5) 31.4% → ('21.1~5) 24.9%)

+ 전체 품목 대일의존도 감소('19.1~5) 16.8% → ('21.1~5) 15.9%)

* ①(불화수소) 대일수입액 1/6수준으로 감소, ②(불화폴리이미드) 대체소재 사용으로 대일 수입 사실상 無, ③(EUV 레지스트) 대일의존도 절반 이하로 감소

○ **(협력생태계)** 협력사업 발굴 및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한 기업지원으로 산업생태계 내에서 '연대와 협력' 움직임 확산

- 소부장경쟁력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34건의 협력·상생모델을 승인 하여, 수요-공급기업 다양한 협력활동에 대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제49~50조: 수요-공급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에 대해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총 37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6만대의 장비와 1.1만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애로를 지원*

* 소부장 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기간을 기존 평균 6개월 → 평균 2.4개월로 단축

⇒ 소부장 상장기업 총매출액은 '21년 1분기에 '19년 대비 20.1% 증가하여 상장기업 전체 평균 매출액 증가율(12.7%) 크게 상회

⇒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도 기존 13개에서 31개로 크게 증가

③ 향후 과제

○ **(미래선도품목 육성)** 주력산업·신산업을 망라한 65개 미래선도 품목*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R&D 투자 등 지원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자동차·기계금속 5대 주력산업 27개 품목 + 미래소재·비대면·바이오·그린 등 4대 신산업 38개 품목

- 미래선도품목 대상 자율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참여 제한 완화(3책 5공* 적용 예외) ▲연구 목표 및 방식 변경 허용 등 지원

* 책임연구원 지위로는 3개, 공동연구원 지위로는 5개까지만 R&D사업 참여 가능 정책

- 아울러, 대내외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선도 품목을 주기적으로 재설계(Rolling Plan, 2~3년 주기)

- **(기업 성장역량 제고)** 소부장 스타트업-강소기업-으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강화

- (으뜸기업) '24년 100개를 목표로 확대하고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진출 등 전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

< 으뜸기업 지원 내용 >

- ▶ **(R&D)** 으뜸기업 대상 R&D지원(최대 50억원/년) 및 민간부담금 완화
- ▶ **(실증)** 수요기업과의 양산테스트 지원, 339개 공공기관 현장 Test-bed 개방 등
- ▶ **(사업화)**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 소부장 성장지원펀드 우선지원
- ▶ **(규제특례)** "규제 하이패스" 도입 → 15일내 개선여부 회신 등 신속일원화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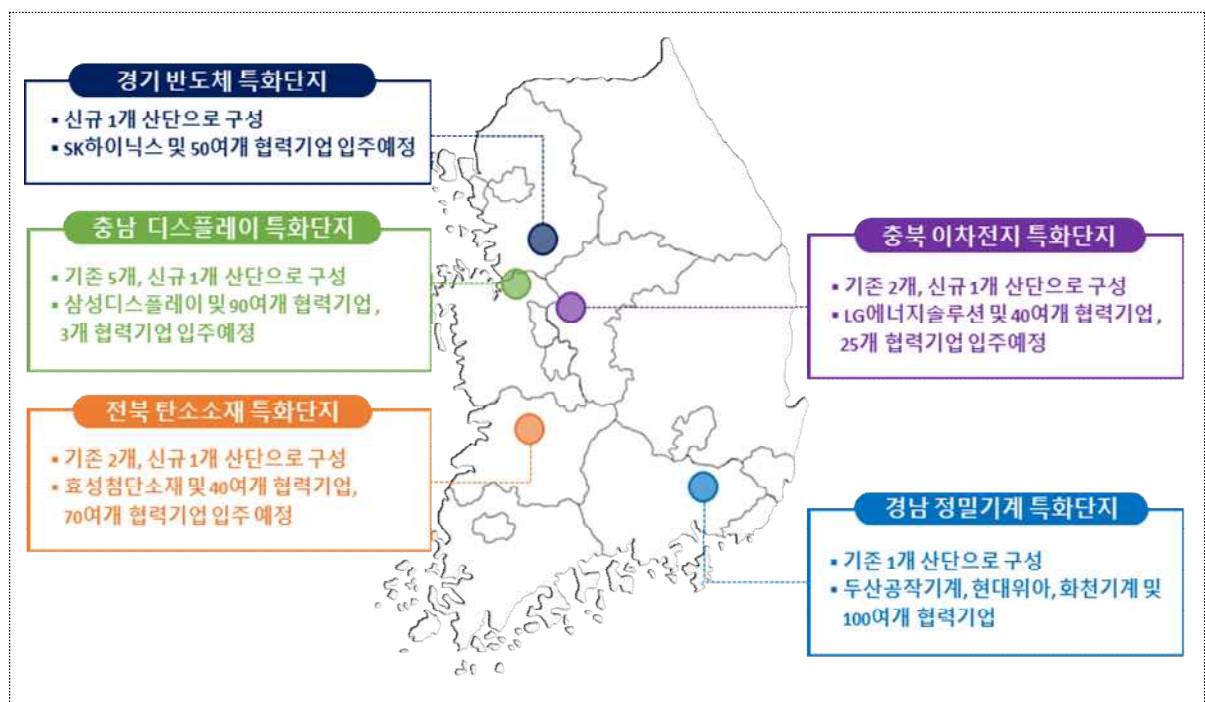
- (강소기업) 선정기업 100여개社* 대상 R&D·투자·보증 등 미래성장 집중 지원*

* '19.12월 1차 강소기업 55개社 선정, '20.10월 2차 강소기업 46개社 선정

- (스타트업) '24년 100개 목표로 AI, 로봇 등 유망기업 중심으로 스타트업 지속 추가 발굴·육성 지원

* 사업고도화자금(최대 2억원), 융자(최대 100억원), R&D(가점5점) 후속사업 연계 등

- **(클러스터화)** 용인(반도체)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밸류체인 완결형 핵심 클러스터로 조성



4. BIG3 산업 집중 육성 등 혁신성장 전략

① 추진 배경

- 요소투입형 성장모델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성 증대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
 - 특히, 혁신성장의 핵심산업인 **BIG3 산업**(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BIG3)** '20.12월부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설치·운영하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육성·지원*

* BIG3 산업관련 '22년 예산(안) 6.3조원 ('21년 4.4조원 대비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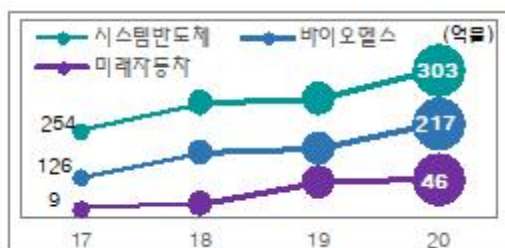
- 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바이오헬스 10대 수출품목 진입('20)**, 반도체 설비투자 대폭 확대*** 등 성과 창출

* 글로벌 시장점유율('21.上) : (현대차) 51.7% (도요타) 40.9% (혼다)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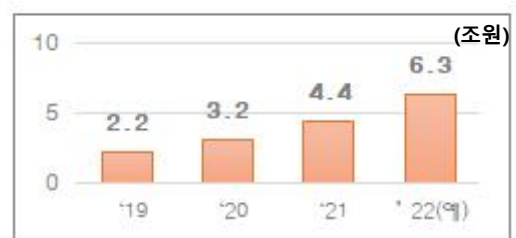
** '20년 수출액 217억 달러 및 의약품 무역수지 사상 첫 흑자달성

*** 한국 '22년 반도체 설비투자 전세계 1위 예상(300억불,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BIG3 산업 수출액 추이>



<BIG3 재정투자 금액>



- **(벤처·창업)** K-유니콘 프로젝트*,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 벤처 활성화 제도 개선** 등 추진하여 제2벤처붐 확산

* 유망 스타트업 200개 성장 지원(기업당 최대 159억원), 점프업 펀드 1조원 조성 등

**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벤처확인제도 전면개편,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등

- '20년 벤처투자 및 창업기업 수 역대 최대실적 기록* + 국내 유니콘 기업 수도 역대 최대인 15개 기록('17: 3개 → '21.7: 15개)

* (벤처투자, 조원): ('17) 2.38 → ('18) 3.42 → ('19) 4.28 → ('20) 4.30
(창업기업, 만개): ('17) 125.6 → ('18) 134.4 → ('19) 128.5 → ('20) 148.4

- **(뉴딜 시너지)** 디지털·그린 뉴딜과 연계성이 큰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를 중점 육성하여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 극대화

- 5G 세계최초 상용화('19.4월),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확대*, 수소연료 전지시스템 신규 수출('20.9월) 등 신사업 분야에서 선도적 성과 창출

*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 ('17)14.4조원 → ('18)15.6조원 → ('19)16.8조원

③ 향후 과제

- 규제혁파와 생태계 조성, 기존대책의 확실한 이행과 가속화, 신산업 발굴 등을 통해 혁신성장 성과를 확산

- (규제혁파 등) 민간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위해 규제개혁 과제 집중발굴 및 혁파 지속, 국가핵심전략산업법 제정* 등을 추진

*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보호를 위해 종합 지원방안 마련

- (기존대책 이행) K-반도체 전략, 이차전지산업 발전 전략, 글로벌 백신허브화 전략 등 핵심정책의 확실한 이행 및 가속화 추진

- (신산업발굴) BIG3, D.N.A 분야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블록체인, 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5. 국제금융 안정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

① 추진 배경

- 코로나19 전개에 따른 글로벌 경기전망 변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 등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 대외충격이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대응 필요
- 한국의 건실한 경제 펀더멘털과 위기 대응력 등을 국제신평가 및 해외투자자와 적극 공유하여 대외신인도 제고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추진현황 >

- **(통화스왑)** 위기사 통화스왑(currency swaps)* 체결, 외환건전성 제도 완화운영 등 외환·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적·선제적 대응
 - *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비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
 - 과거 위기사 국제금융 변동성 확대 및 신인도 영향 경향, 그러나 금번 코로나 위기는 국제금융 변동성 낮고 안정성 견지

- ▶ 美('20.3월 신규), 濠(20.2월 연장), 스위스('21.3월 연장), 中('20.10월 연장), 터키('21.8월 신규) 등 통화스왑체결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여력 확보
- ▶ ①선물환포지션 25% 상향조정, ②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적 경감, ③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한시적 완화 등

- **(대외신인도)** 해외투자자, 국제 신용평가사 등과 우리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 강화

- * '19년 이후 Moody's, S&P, Fitch 등 3대 신평가사와 총 8차례 연례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회복 및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을 적극 설명

- **(국제정책공조)** G20 국제금융체제(IFA) 공동의장국(韓·佛)으로서 코로나19 충격 최소화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 등을 위한 국제 정책공조 논의 선도

- ▶ G20 IFA 의장국 지위를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및 저소득국·취약국 지원을 위한 G20 차원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

- * ①저소득국 채무상환유예 재연장('21.6월→12월) ②IMF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 6500억불 합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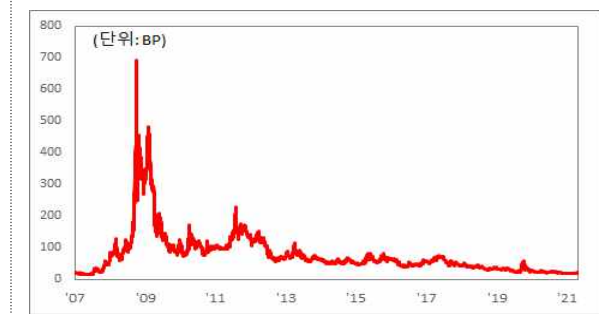
< 성 과 >

- **(신용등급)** 우리나라는 3대 신평사 모두 기존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 코로나19 이후 113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하향조정
 ↳ 신평국 뿐 아니라 G7 등 주요 선진국 신용등급 및 전망도 하향조정
- **(CDS프리미엄)**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기록
 * '21.8.30.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17bp) 경신 이후 현재 17~20bp 수준

<코로나 이후 국가신용등급·전망>

	국가신용등급(전망) 추이	비 고
美	AAA(안정적) → AAA(부정적)	Fitch (7.31일)
英	AA(부정적) → AA-(부정적)	Fitch (3.27일)
日	A(안정적) → A(부정적)	Fitch (7.28일)

<CDS프리미엄 추이>



- **(외평채발행)** '20, '21년 모두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성공적 외평채 발행,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견고한 신뢰 재확인

- ▶ ('20.9월) 약 14.5억불 규모(달러화 10년물 6.3억불+유로화 5년물 7억유로)
 - 달러화 : 사상 최저 발행금리(1.198% = 미 국채금리 + 가산금리 50bp(역대최저))
 - 유로화 : 비유럽 최초 마이너스 금리 국채(△0.059%)
- ▶ ('21.10월) 약 13억불 규모(달러화 10년물 5억불+유로화 5년물 7억유로)
 - 달러화 : 역대 두 번째로 낮은 발행금리(1.769% = 미 국채금리 + 가산금리 25bp(역대최저))
 - 유로화 : 아시아 정부 최초 녹색채권(green bond) 발행, 마이너스 금리(△0.053%) 발행

3 향후 과제

- **(시장안정 노력)** 美 연준 테이퍼링(Tapering)*, 신평국 發 부채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시장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필요시 시장안정 노력 지속
 *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
- **(홍보 확대)** 주요 국제회의 등을 계기로 기업설명회(IR)을 개최하고, 해외투자자들과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한국경제 상시 홍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국가 첨단전략기술 선제적 발굴·육성

① 추진 배경

- 선진국들은 첨단기술(AI·양자·이동통신·우주 등) 육성 강화에 역점
 - 국가 R&D 컨트롤타워(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과기관계장관회의)를 바탕으로, 범정부 역량 결집 및 첨단기술 자립 본격화
- **(기술패권 경쟁)** 최근 주요국은 첨단기술 가치를 신기술·신산업에서의 우위를 넘어 국가안보 수단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중
 - 첨단기술이 국가안보에 직접 활용·접목*되는 과학기술의 전략무기화도 진행
 - * 미래 전장환경(우주戰, 무인공격, 사이버戰 등) 대비 AI·무인화, 우주양자 등 첨단기술 접목
- **(기술블록화)** 이에 따라 당분간 우방국 간 기술동맹체제가 가속화되고, 우리는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마주할 전망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범부처 R&D 협업체계)**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17.7월)으로 국가 R&D의 종합·조정을 통해 日 수출규제, 코로나19, 기술패권 등에 효과적 대응중
- **(기술패권 의제화)** 특히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첨단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후속조치 등을 통한 육성 논의 본격화('21.5월~)
 - * 우주, 바이오, 양자, 5G·6G 등 신흥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분야 공동연구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력교류 확대 등에 합의
- 패권경쟁의 패러다임 변화 및 첨단기술의 전략무기화 흐름 등에 대응하는 '국가 첨단전략기술 육성전략' 수립 방향 보고('21.8)
- **(후보기술 발굴)** 부처별 기술체계 내에서 지정·운영 중인 세부전략기술과 핵심정책(BIG3, 뉴딜 등) 포함기술, 해외 주요국 전략기술을 기본 후보군으로,
 - 전문가평가,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첨단전략기술」 선정중
- * (예시)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 양자기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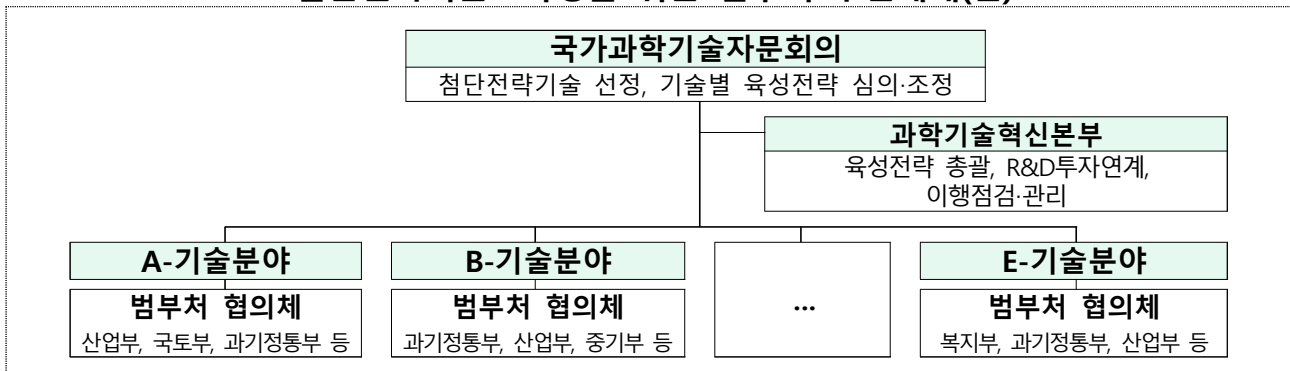
첨단전략기술 개념과 기준

▲ 공급망·통상(산업경쟁력) ▲ 국가안보 ▲ 신기술·신산업(미래혁신)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와 파급효과가 큰 기술

공급망·통상	현재·미래 공급망 차원에서 미확보 시 국가적 타격	국가안보	외교·안보상 전략무기로 활용 가능 기술	신기술·신산업	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기술
▶ 경제효과/산업 파급효과 ▶ 시장진입 기술난이도(대외경쟁력) ▶ 대체불가능성		▶ 안보분야 전략적 활용성 ▶ 기술도입 난이도 ▶ 민군겸용기술		▶ 혁신잠재성 ▶ 신산업 창출효과 ▶ 기술개발 가능성	

- **(범부처 육성체계 정립)** 장관급 회의* 통해 국가 첨단전략기술의 발굴·지정(기준), 범부처 협의체 구성 통한 육성전략 수립·이행 체계 마련
 - *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10.18)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下 우리 기술 육성보호 전략」 논의
- 아울러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심의 범부처 육성전략 총괄·조정* 추진
 - * R&D투자로 긴밀히 연계하고 평가시스템을 통해 지속적 점검·환류

< 「첨단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안) >



③ 향후 과제

- **(육성방향 제시)** 국가 첨단전략기술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육성전략 수립·추진(안) 확정 및 법제화* 추진
 - * (가칭) 국가 첨단전략기술 지정·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협의체 운영)** 첨단전략기술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점 세부 기술 도출 및 추진 로드맵 등 기술분야별 육성전략 마련(22.上)
 - ※ 국가안보 분야 첨단전략기술은 특수성(기술보안, 무기체계 개발과 연계 등)을 고려하여, 최근 신설된 국방과학기술위원회(미래국방기술분과)를 통해 구체화
- **(성과 점검 및 지속 관리)** 주기적 점검 통해 첨단기술별로 개발·자립 현황을 평가하고, 육성전략 및 R&D 투자전략 지속 수정·보완
- **(신속한 재정 투입)** 긴급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R&D 사업에 대해 Fast Track을 신설하여 R&D 예타 신속 추진
 - ※ 재정투입이 기술 변화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Fast Track 대상사업 요건 및 평가방식 마련 추진

2. 정부 연구개발(R&D)의 전략적 투자 확대

1 추진 배경

- 과학기술혁신 기반으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국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정부 R&D투자 지속 확대중
- 특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각국은 미래를 대비한 신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R&D를 강화중

※ (미) 10대 핵심기술 R&D에 5년간 1,200억불 투자(Endless Frontier Act)

(중) 7대 과학기술, 8대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국가 R&D투자 연 7%이상 확대

2 추진현황 및 성과

- **(투자 추이)** 정부 R&D는 '19년에 20조원 돌파 후 꾸준히 확대되어 '22년 29.8조원(정부안) 도달, 3년 연속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
- 민간을 합친 국가 R&D 투자는 '21년에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수준

※ 국가 R&D 투자('19년) : (정부·공공) 19.1조원, (민간·외국) 70.0조원

<연도별 정부 R&D 예산 규모>

(단위: 조원, %)



- **(투자 성과)** R&D 분야 높은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논문·특허 등 R&D성과가 양적·질적으로 지속 향상중
- 특히, 감염병, 소재·부품·장비 R&D 통해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국민 삶의질 제고

※ IMD 국가경쟁력 순위 : 전체 ('17) 29 → ('21) 23, 과학인프라 ('17) 8 → ('21) 2

※ SCIE 논문 : ('10) 23,915 → ('19) 41,919건, 특허: ('10) 24,398 → ('19) 59,042건

- **(분야별 투자현황('22년안))** 위기대응 및 미래 대비 역량 확충에 중점
 - (위기대응)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대응에 0.5조원, 재난·재해·범죄에 대응하는 국민안전 R&D에 1.7조원 투자
 - (혁신 산업)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2.0에 3.6조원, 시스템반도체 0.4조원, 바이오헬스 1.9조원, 미래차 0.5조원 등 혁신성장 BIG3 투자
 - (미래 신산업) 우주·항공에 0.8조원, 양자기술·6G 등 차세대 D.N.A (Data, Network, AI) 기술에 0.4조원 등 첨단전략기술에 선제적 투자
 - (기반조성) 기초연구,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등 국정과제 목표달성 완수 및 혁신인재 0.7조원, 국제협력 0.6조원 등 R&D 기반 공고화
- ※ (기초연구) '17년 1.26조원 → '22년안 2.52조원 (중기전용) '17년 1.18조원 → '22년안 2.53조원

③ 향후 과제

- **(안정적 투자 확대)** 정부 R&D투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위해 매년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 필요
 - ※ 총지출 대비 R&D 비중(%) : ('16) 4.94, ('17) 4.86, ('18) 4.59, ('19) 4.37, ('20) 4.73, ('21) 4.9
- **(투자 전략성 확보)** R&D 투자규모 확대에 걸맞는 전략적 투자를 위해 중점 투자분야를 선정하여 R&D 투자전략 수립 및 예산 연계
 - 탄소중립·바이오헬스 등 사회적 수요가 높고 여러부처가 연관된 분야별 R&D 투자전략* 마련 및 최상위 전략으로 「중장기 R&D 투자전략」 수립
 - * (既수립) 탄소중립, 양자기술, 뇌연구, 미래차, 센서, 소재, 감염병, 국제협력 등 10개 분야 (예정) 지역 기초연구, 디지털기술, 우주, 첨단항공모빌리티, 데이터기반 바이오헬스 등 6개 분야
- **(국가혁신체계(NIS) 및 투자시스템 혁신)** 도전적·창의적 R&D 활성화 및 R&D 성과 제고 위해 출연연·대학·기업 등 연구주체간 다양한 협업방식 촉진
 - 출연연 융합연구사업*, 출연연·대학 간 연구협력으로 국가 첨단 기술 개발, 거대공공프로젝트, 사회문제 해결 R&D 등 추진
 - * 출연(연) 간 협력·융합의 장애요인 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융합연구 투자 확대 추진
 - 민·관의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활성화하여 산업계 수요를 정부 R&D에 상시적으로 반영하고, 부처 간 협업 R&D에 투자 강화
 - ※ 탄소중립, 스마트센서 2개 분야에 대해 선도기업 중심 민간 R&D 협의체 구성·운영('21.3~)
 - 첨단 전략기술의 국방분야 접목과 군의 민간 신산업 참여 등을 통한 민·군 R&D 협력 활성화

3. 4차 산업혁명과 국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① 추진 배경

- 디지털기술 발전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이 사람의 일상과 산업·사회
 주 영역에서 패러다임을 변화시킴에 따라 주요국들은 대비에 한창
-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도래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추진현황 >

- **(4차 산업혁명 선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립('17.10),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17.11) 통해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선언('18.8), 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19.1),
 세계 최초 5G 상용화 및 「5G+ 추진전략」 수립('19.4) 등 추진
 - **(인공지능 시대 개막)** '인공지능 기본구상('19.10)'을 구체화 한 「인공
 지능 국가전략」 수립('19.12)으로 'IT강국 넘어 AI강국'으로 이행중
 -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개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21.5)
 등 신뢰기반 조성,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21.9)로 민·관 협력 강화
 - **(SW산업 도약)** SW산업 체질개선(SW진흥법 전면개정, '20.5), 「SW생태계
 혁신전략」('21.6)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기반인 SW 혁신 촉진
 - **(디지털 뉴딜로 진화)**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회복과
 더불어 디지털 대전환 대응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20.7~)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91종(5.3억건) 구축·개방, 빅데이터 플랫폼(16개),
 AI융합 프로젝트 등 '데이터댐'을 통해 데이터·인공지능 경제 선도
 -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뉴딜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 및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위한 디지털 뉴딜 2.0 추진('21.7~)
- ※ '25년까지 49조원 투입(과기정통부 '20년(추) 0.64조원, '21년 1.6조원, '22년(안) 2.3조원)

< 주요성과('21.7월 기준) >

- **(新산업 성장)** 기존 SW·SI 기업이 데이터댐 사업에 참여하며, 데이터 공급기업 2.9배('19년 393개 → '21년 1,126개), 인공지능 공급기업 4.5배('19년 220개 → '21년 991개) 증가
- **(데이터시장 성장)** 금융·교통·문화·의료 등에서 10억건 이상의 데이터가 구축·개방·활용되며 국내 데이터 시장은 전년 대비 14.3% 성장('19년 16.9조원 → '20년 19.3조원)
- **(기업 디지털 전환)** 중소·벤처기업(약12.7만개社)*에 바우처(데이터·인공지능·비대면 등) 제공, 공장** (8천여개)·소상공인 점포(4천여개) 스마트화 지원
* 94.6%(12만개社)가 非ICT기업으로 소산업의 디지털전환 확산 지원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 생산성 28.5%↑, 품질 42.5%↑, 원가절감 15.5%↓
- **(SW산업 성장)** 디지털 전환에 따른 SW수요 증가, 정부의 SW생태계 활성화 정책으로 국내 SW기업 매출 16.6% 성장('19년 74.5조원 → '20년 87조원)
- **(민간투자 촉진)** 디지털 뉴딜에 우리 기업들이 함께 호응하며, 초거대AI 개발, 데이터센터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
※ 네이버·LG·SKT 등은 초거대 AI 개발 위한 연구소 설립 등 대규모 투자('21.4~5)
- **(사이버보안 강화)** 'K-사이버 방역'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병행으로 사이버보안 국제경쟁력 상승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사이버보안지수(GCI) '19년 15위 → '21년 4위

3 향후 과제

- ◇ **(D)**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생태계 강화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 ◇ **(N)** 통신망 넘어 디지털시대 삶의 기반(자율차 스마트시티 등)으로 접근·안전성 제고
- ◇ **(A)** 경제·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확산 정책과 신뢰성 확보 정책 병행

- 데이터기본법*('22.4월 시행) 상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등 범부처 데이터·디지털 컨트롤타워 강화로, 디지털 대전환 조기 완수 및 데이터경제 이행 촉진
* 데이터 생산·분석·활용, 거버넌스, 인력양성 등 데이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제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하여,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향상을 비롯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 추진
-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 등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강화, 국민에 대한 디지털 권리 보장 등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환경 조성
* 민간·공공 포괄 기본계획 수립, 정보공유 활성화, 기반시설 보호강화 및 침해사고 대응 협력 등

4. 디지털 플랫폼·미디어 상생 생태계 조성

① 추진 배경

- ‘플랫폼(platform)’은 디지털 시대가 작동하는 기반
 - 과거 방송·통신 중심에서 포털·OTT·메타버스 등으로 확장됨에 따라,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 조화로운 진흥·규제 필요
 - * (가치) 마스크앱 개발, 백신예약시스템 개선, 초거대AI 투자, 비대면서비스 제공 등
 - ** (보호) 구글 인앱결제 강제, 알고리즘 윤리, 소상공인 갑질, 플랫폼 노동 등 대응
- 한편 기존(legacy) 통신·미디어 플랫폼은 새로운 성장기회 제공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부분에 대한 지원 확대 시급
 - ※ 망 투자 독려, 방송통신 서비스 질 제고 등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디지털 플랫폼)** 구글·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 조치사항 의무화(‘20.12~)
 - *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중 일평균 국내 이용자수 100만명 및 국내 트래픽 1% 이상
→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 넷플릭스, 웨이브
 - ※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 장애 조치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15건 ‘20.12~’21.10)
- 나아가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경쟁과 혁신환경 조성 등 균형잡힌 관점의 종합적 논의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운영중(‘21.9~)
 - * 주요 ICT 전문가 및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 30여명으로 구성하여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성장, 유연한 규제체계방안, 사회적 책임 제고 등에 대해 논의
- **(미디어)** 국내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성장 지원을 위해 범정부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 마련(‘20.6)
 - * 콘텐츠, 플랫폼, 기반조성, 공정·상생 환경의 4개 분야 55개 과제
- OTT에 대한 최소 규제와 진흥 기조를 명확히 함에 따라, 신규 OTT 출현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의 다양한 변화 촉진중
 - * (신규 OTT 출현) 카카오TV(‘20.9.), 쿠팡플레이(‘20.12.)
(콘텐츠 투자 확대) 카카오 TV 3,000억원(~’23), 웨이브 1조원(~’25), CJ ENM 5조원(~’25) 등

3 향후 과제

- ◇ IT벤처에서 시작하여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포털, OTT 등)는 글로벌 경쟁상황을 감안하여,
 - 건전한 혁신·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투자, 서비스 발굴,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하고,
 - 경제사회적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독려하면서, 부작용 해소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로 상생·발전 도모
- ◇ 이미 자리잡은 기존 플랫폼(통신, 방송)에 대해서는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등 정부·민간의 플랫폼 관련 논의에서 도출된 산업 혁신, 경쟁 활성화 위한 정책과제 이행
 -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 기술기반 혁신 플랫폼 역량 확보,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추진 등
 - 문제나 부작용 해소 위해 AI 신뢰성 등 관련 제도 정비,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 및 필요최소한의 입법 추진 등
- **(미디어)** 미디어 구조 변화를 반영해 관련 제도정비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업체와 경쟁 중인 국내 OTT에 대한 지원 확대
 -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동일한 공적의무를 부여하는 現 규제체계 개선, 공공과 산업영역으로 구분하고,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
 - ※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방송미디어 중장기 법제 정비방안' 마련과 단기적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 마련 동시 추진
 - OTT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21.2. 국회제출) 필요) 후, 세액공제, 자체등급제 등 OTT 업계가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본격화
 - * 정부는 OTT 지원정책 추진시 필요한 지원대상 특정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기로 합의('20.6.)
 - ※ OTT 업계가 글로벌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은 보다 확대하되, 업계의 혁신과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신설은 지양

5. 노벨상 근접 우수 이공계 인재 지원 강화

① 추진 배경

- 추격형(모방형)→선도형 성장 전환 위해서는, 성공률이 낮더라도, 성공시 파급효과 큰 창의·도전적 연구 통해 국가적 과학기술 역량 향상 필요
⇒ 우수인재의 이공계 유입 단계부터 안정적인 성장까지 쏠주기 지원함으로써, 노벨상 근접 우수 이공계 인재 지속 육성

- ▶ 최근 10년간('10~'19)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77명 분석 결과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진 핵심연구를 시작한 연령은 평균 37.7세로 나타남(한국연구재단, '20)
- ▶ 세계 상위 1% 영향력을 가진 과학자에 선정된 한국 과학자는 '20년 46명으로 증가(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기초연구)** 기초연구에 대해 꾸준한 지원 확대
 - (기초연구 2배 투자 확대 등) 기초과학연구원(IBS) 설립 등 꾸준한 지원 결과, 양적·질적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가 지속 창출중
 -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예산을 '17년(1.26조원) 대비 '22년까지 2배(2.52조원) ↑
 - * SCI논문 수/ IF 상위 10% 논문 수('19년 기준) : 31,106개/ 5,279개
과학인프라 세계 2위(IMD, '21년), OECD 국가중 과학기술 혁신역량 8위(KISTEP, '20년)
 - (기초연구법 개정, '21.6.9 시행) 기초연구의 장기적(20년 이상) 지원, 국제공동연구 지원, 미래유망기술개발 시범사업 근거 마련 등
- **(청년연구자)** 청년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지속 강화
 - (청년연구자 지원) 신진 및 생애첫연구 지원 확대('17년 1,489억원 → '21년 2,819억원), 박사후연구자의 독립적연구 신규 지원('세종과학펠로우십')
 - (근로계약 등) 출연(연) 학생연구자 근로계약 체결('19.6월 가이드라인 마련), 학생연구자 인건비 통합관리 추진 및 하한선 도입
 - (연구환경 개선) 연구자권익보호위('21.2월)·연구윤리센터('20.7월) 설치, '건강한 연구실' 제도 지정 운영('20년 6개, '21년 10개 시상)

③ 향후 과제

< 고등교육기관 역할 제고 >

- 세계 최고수준 연구성과 창출을 주도할 대학 내 강한연구소 육성
 - 연구활동 우수 대학 중심으로 연구 인프라, 융복합 연구자금, 전임 연구원 채용 등을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배출
 - ※ 2030년까지 세계 100위권 대학(QS평가 기준) 15개 이상 진입 목표('21년 6개)

< 청년과학자 지원 >

- **(지원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의 학업·연구·생활 지원 확대
 - 청년 연구자가 경제적 걱정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 이공계 대학원생까지 기본 학업장려금(Stipend)* 제도 적용 추진
 - * 예시 : (현행) 4대 과기원 석·박사 → (개선) 일반대학 대학원생까지 단계적 확대
 - 지방대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신설해 안정적인 학업·연구 지원
 - 청년연구원의 연구경력 단절해소와 동시에, 첨단기술 기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兵科 신설(관계부처 협의필요)
 - ※ 국방치안 관련 연구소를 대학에 설립 → 군인신분으로 연구에 전념하는 연구병과 신설(연 1천명)
- **(성장 지원)** 박사후연구원이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자 육성 프로그램 신설
 - 포닥(Post Doctor) → 신진 연구자 → 중견 연구자로 성장을 끊임없이 지원
- **(우수인재 양성)** 최상위 과학자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인 1,000명 지정
 - 우수 연구자에게 몰입형 안정적 연구환경 제공* 통해 미래 국가의 먹거리 원천기술 확보, 최우수 인재의 과학기술계 진출 확대
 - * 상위 10% 연구자를 국가과학기술인으로 지정, 인건비 지원, 정년연장 등

< 노벨상 수상 기반 조성 >

- **(과학외교)** 우리 과학 우수성과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과학외교지원 센터·북유럽과학기술협력센터 등 해외거점센터를 활용, 과학외교 강화
- **(도전·개척 지원)** 쉬운 연구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개척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생태계 조성 지원

6.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

① 추진 배경

- 디지털 시대가 심화될수록 ICT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불가능과 배제의 상황 우려
⇒ 디지털 통합(Inclusion) 위해, 청·장년층 대상 업스킬·리스크일 지원,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이 필수
- **(디지털 인재)** 디지털 전환 전면화에 따라 전 산업 분야에서 AI·SW,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문인력 수요 급증*
 - 아울러, 미래세대 위해 AI·SW 등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 * 향후 5년간 SW분야 신규 인력수요 35.3만명+ α 타 산업 SW인력 연평균 19.5% 증가(SPRI)
- **(디지털 포용)** 디지털의 혜택을 국민 누구나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해 디지털 역량 교육부터 접근성 제고 등 요청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AI대학원·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인재 양성 체계 강화 및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한국판 뉴딜) 추진
 -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기반 SW인재 양성 대책」(‘21.6) 통해 ‘25년까지 총 41.3만명 양성 추진

< 주요 사업 >

- ▶ AI대학원(‘21년 10개, 석·박사 고급인재), SW중심대학(‘21년 41개, 대학 혁신 SW교육 지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21년 750명, 전문 SW인재 양성), 이노베이션 스퀘어(‘21년 전국 5대거점, 지역 인재 양성),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 양성(‘21년 1,700명, 청년 교육·취업연계), 산업전문인력 AI역량 강화(‘21년 12대 산업분야 재직자 대상 AI교육) 등

※ 지난 7년 간 AI·SW 인재양성 투자규모 약 10배 증가 : (‘15년) 208억 → (‘21년) 2,288억원

- **(초·중등 SW교육)** ‘15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18년부터 초·중등 SW교육 필수화*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 기반 조성**

* ‘18년 중학교 도입(중1~, 34시간), ‘19년 초등학교 도입(5·6학년, 17시간)

** SW교육 선도학교 확대(‘15년 160교 → ‘20년 2,011교), 핵심교원 1만명 양성 등 추진

- **(디지털 포용)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수립('20.6) 통해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등 추진
 - 주민센터·도서관 등 집 주변 생활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배움터'를 매년 1,000개소 운영, 수준별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20~)
 - '20.9~'21.9월간 17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84만명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 제공, 강사·서포터즈 등 매년 4,000개 일자리 창출
 -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지속 향상
 - ※ ('18) 68.9% → ('19) 69.9% → ('20) 72.7% (NIA, 20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 버스정류장·공원 등에 공공 WiFi 신규 구축('20~'22년, 4.1만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10만 세대, ~'21.9월) 통해 디지털 이용환경 개선

3 향후 과제

- **(디지털 인재양성 강화)** 분야별 인재 수급 전망에 기반해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기업 주도 민관 협력형 교육 프로그램 본격 추진
 - 유연한 학사과정 운영으로 융합형 고급인재 조기양성 위한 학·석 통합과정 신설 및 재직자 대상 1년 단기 석사과정 지원
 - 우수인재 유치 위한 최고급 전문가·기업인 등 대학겸직 허용 및 첨단학과 신·증설, 해외인재 유치 등 병행 추진
- **(AI·SW 교육시스템 혁신)** 미래세대가 공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보편적 AI·SW 교육기회 확대
 - 초·중·고 AI·SW 교육 전면화(주 1시간 이상) 및 학교당 전담교원 1인 확보, 교원의 SW·AI역량 확보를 위한 연수 강화
- **(디지털 기본사회 이행)** 디지털을 기본권리(Digital Right)로 인식하고, 필요한 인프라 및 배움 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동시에,
 - 디지털 시민(Citizenship)으로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포용국가로서의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 신규 추진 필요과제 》

1. 민관협력 우주개발 본격화

① 추진 배경

-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대두와 함께, 세계 우주산업은 급격히 성장중
 - 우리도 독자기술로 한국형발사체(누리호)* 개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달 탐사) 협력 약정 등 통해 우주산업 발전여건 조성
 - * 저궤도 등에 위성을 보낼 수 있는 우주운송수단('우주車')
- ⇒ 기업주도·정부지원의 종합·다각적 우주개발 및 산업역량 제고 통해 우주산업 육성 본격추진 시점

② 주요 내용

- **(민간기업참여 확대)** 출연(연) 중심으로 축적된 우주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고, 기업주관 우주개발체계로 단계적 전환*
 - * 차세대중형위성, 다목적실용위성, 한국형발사체 반복발사 등 기업주관 추진
- **(공공수요 확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6G통신위성** 등 공공목적의 우주개발을 확대하여, 수요 창출 및 글로벌 우주기업 육성
 - * 총 8기, '22~'35, 3조 7,234억원 / ** 저궤도 군집 통신위성 기술개발 예타 추진
- **(개발역량 제고)** 발사체·위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 지원 사업인 「스페이스 파이오니어(pioneer) 사업*」 시행
 - * '20.4월 예타통과, 총16개 세부과제, 총사업비 2,115억원, 사업기간 '21~'30
- **(산업인프라 구축)** 발사장 등 우주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
 - *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 거점 지정 후 각각의 거점을 하나의 벨트로 연계 지원
- **(전문인력 양성)** 숙련도·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인력양성·연수 프로그램* 운영 통해 신규인력 적기공급 및 기존인력 역량제고
 - * 체계기반 도제식 실무교육, 우주분야 시설·장비 전문교육, 우주기술 전문연수 등
- **(지원제도 신설)** 기업이윤 보장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우선구매, 기반시설 개방활용 확대, 기술이전 촉진 등 제도 신설
 - ※ 신설제도를 반영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추진(연내 국회제출 예정)

2. 디지털 신산업 육성

① 추진 배경

- 팬데믹 이후 온라인 기반으로 오프라인이 더해지는 디지털대전환 및 하이브리드(온택트) 현상 본격 확산
 - 이에 따라 그 근간이 되는 ICT 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하며 다양한 신규 서비스·기술 활성화(메타버스·클라우드·초거대AI 등)
 - 또한 고도화된 ICT 기술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인에이블러(enabler) 역할 수행 기대
-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수년전부터 ESG에 대비한 기술 연구 및 제품 개발중 (저탄소·친환경 데이터센터, 데이터 효율화 SW 개발 등)
- ⇒ 디지털전환·기술패권 경쟁·기후위기가 국내 디지털(ICT)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가 되도록, 핵심전략분야 선정 및 집중육성·선점

② 주요 내용

- **(디지털 신산업)** 메타버스·AI 등 사회 각 분야 디지털전환을 위한 핵심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신산업 창출
 - (메타버스+XR(AR·VR·MR))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지역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인재 양성
 - (AI) 초거대 AI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 AI 서비스를 확산하고, 설명가능한 AI, 가정용로봇 SW 등 기술혁신 촉발
- **(디지털 신기술)** 글로벌 정치·외교의 핵심자산으로 부각 중인 디지털 핵심기술에 대한 독자적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
 - (양자) 양자 컴퓨터·암호통신·센서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양자 기기 간(양자센서·양자컴퓨터) 연결 위한 양자 중계기·메모리 등 개발
 - (6G·위성) 세계최초 5G의 경쟁우위를 6G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표준특허를 선점하고, 위성통신 시범망 구축 등 추진
 -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스템반도체 경쟁우위도 확보토록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메모리+프로세서 융합 등) 개발
-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 ① ICT 인프라(5G망·인터넷데이터센터 등)의 탄소중립과 ②소 산업의 에너지 효율화 위한 디지털 핵심기술 개발·보급

농림축산식품부

1. 농촌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

① 추진 배경

- **(농촌지역 소멸 위험)** 농촌의 취약한 정주여건으로 도·농간 삶의 질 격차가 크고, 이로 인해 인구유출로 농촌지역 소멸위험도 증가
※ 각 분야별 도시/농촌 정주 만족도(KREI, '20) : (전체) 6.3/5.1, (보건·복지) 6.8/5.2, (교육·문화) 6.1/4.8, (정주기반) 6.9/5.9, (경제·일자리) 5.5/4.6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분산 거주 수요 증가에 대응, 농촌의 정주여건·사회서비스·일자리 등 균형적 발전 요구
※ 귀농귀촌 인구(천명) : ('17) 517 → ('18) 490 → ('19) 461 → ('20) 495(전년 대비 7.4%↑)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정주여건 개선)** 농촌 특성에 맞는 생활 서비스 인프라 확충, 노후 주택 개량 등 농촌지역의 기초 생활여건 개선
 - 읍·면 소재지 등 중심지에 행정·복지·교육·문화 등 지역 수요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복합된 '생활SOC 거점*'을 확충
* 생활SOC 개소수(누계) : ('18) 488개소 → ('19) 589개소 → ('20) 693개소 → ('21) 797개소
 -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5년) 및 이행계획(1년) 수립을 의무화하고, '빈집정비업무 매뉴얼'을 마련·배포하여 빈집 정비 촉진
※ 빈집 정비 실적(누계) : ('18) 8,160동 → ('19) 15만 9,333동 → ('20) 16만 7,319동
 - 지자체가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농촌협약' 도입('20~)
※ '20년 선정한 12개 사군은 계획 수립 등 준비를 거쳐 '21.7월 협약 체결 '21년 20개 사군 기 선정

- **(삶의 질 개선)** 농촌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취약 농가를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삶의 질 개선
 - 대중교통 사각지대인 농촌지역에 100원 택시, 소형버스 등 농촌형 교통모델*을 지속 확충하여 배후마을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
 - * 서비스 유형별 도입 지역 수(개소) : ('18) 택시형 74 / 버스형 4 → ('20) 80 / 73
 - 고령자 돌봄 등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보완하는 사회적 농장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충
 - ※ 사회적농장(개소) : ('18) 9 → ('19) 18 → ('20) 30 → ('21) 60
 -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액 인상, 농지연금 농지감정평가를 상향(80% → 90) 및 가입연령 완화(만 65세→60) 등 고령농의 생계안정 지원
 - 영농도우미 지원, 결혼이민 여성 1:1 후견인제 시행, 농촌 공동아이 돌봄센터 및 농번기 돌봄방 운영 등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 ※ 농촌 보육 서비스(개소) : ('19) 57 → ('20) 84 → ('21) 184

3] 향후 과제

- **(농촌재생)**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살고싶은 공간으로 농촌을 변모 시키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및 농촌재생뉴딜 추진
 -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촌형 용도지구 설정 등 농촌 특성이 반영된 국토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근거해 공장·축사 등을 이전·정비하고, 정주 여건·일자리 등을 통합적으로 확충하는 농촌재생 뉴딜 추진
 - ※ 향후 10년간 매년 40개 농촌생활권에 대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공간정비, 지역 특화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농촌협약' 확대 추진
- **(일자리 확충)** 농업 이외에 다양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 노후 농공단지 인프라 개선 등으로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농촌지역 서비스 공백을 보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2. 청년농 육성 및 귀농귀촌 활성화

① 추진 배경

- **(농업 인력 감소)** 농가인구 감소, 농업인력 고령화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여 역량있는 청년 농업인 육성 필요
 - ※ 농가 인구(천명) : ('00) 4,031 → ('05) 3,434 → ('10) 3,063 → ('15) 2,569 → ('20) 2,314
 - 농가 경영주 평균연령(세) : ('00) 58.3 → ('05) 61.0 → ('10) 62.3 → ('15) 65.1 → ('20) 66.1
- **(경제·사회 변화 안전망)** 농업·농촌은 과거 IMF 구제금융,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사회 구조적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망 기능 수행
 - ※ 귀농귀촌(가구) : ('97)1,841 → **(98)6,490** → ('00)1,154 → ('08)2,218 → **(09)4,080** → ('11)10,503
 - 코로나19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귀농·귀촌 가구가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청년농 육성)**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정착지원, 농지 및 자금, 교육·컨설팅·판로 등 종합적 육성체계 구축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의 이탈방지를 위해 경영비, 일반 가계자금 성격의 **영농정착지원금**(최장 3년, 월 최대 100만원) 지급*
 - * 지원규모(누계) : ('18) 1,600명 → ('19) 3,200명 → ('20) 4,800명 → ('21) 6,600명
 - 영농 **창업자금**(최대 3억원 연리 2%)을 농신보 우대보증 95% 제공(5년 거치, 10년 상환), 농지은행 **비축농지 1순위 임대 지원**
 -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 스마트팜 기술 교육 및 실습을 지원*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
 - * ('18) 45명(교육 수료 후 38명 창업, 4명은 스마트팜 선도농가 취업) → ('19) 81명 ('21.6월 수료) → ('20) 174명(경영실습 중) → ('21) 208명(입문교육 중)
 - **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4곳, 기타 지역특화형 2개소 등 총 6곳 조성 중

○ **(귀농·귀촌)** '준비된' 귀농·귀촌 및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 지역 밀착형 정보·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귀농·귀촌 실행단계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농촌 이주 이후 정착 유도

※ 귀농귀촌 증가세 전환(천명) : ('16)496 → ('17)517 → ('18)490 → ('19)461 → ('20)**495**

- 농촌 이주 전 최장 6개월간 밀도 높은 농촌생활 경험을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도입·운영

※ 운영마을에서 주거 및 귀농귀촌 특화 체험프로그램 제공, 참가자는 별도 비용 없이 원하는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농촌 일지라생활 체험 지역주민과 교류(10월말 기준 624가구 참여)

- 지자체가 빈집 등을 활용하여 '귀농인의 집'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층의 주거 수요를 고려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여가를 즐기는 전원생활 희망, 자녀양육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동 육아·여가시설이 복합된 단독주택형의 임대주택단지 형태로 조성(괴산, 서천, 고흥, 상주 등 4곳)

3] 향후 과제

○ **(청년농 유입 촉진)**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청년농영농정착지원' 확대 추진

○ **(귀농·귀촌)** 민·관 협력으로 귀농·귀촌 준비에서 정착까지全过程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22~'23)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귀농·귀촌 청년가구의 주거부담 해결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지원 확대('21년 4개소 → '26년 20개소)

3. 농산물 수급 및 농가 경영 안정장치 강화

① 추진 배경

- **(농가 소득 안정)**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 수급 변동과 가격 급등락에 따른 농가 수취가격 불안 방지 필요
- **(경영 안전망)** 기후변화로 빈번해지고 있는 재해에 대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중소농가의 소득원을 다각화하여 안정적 경영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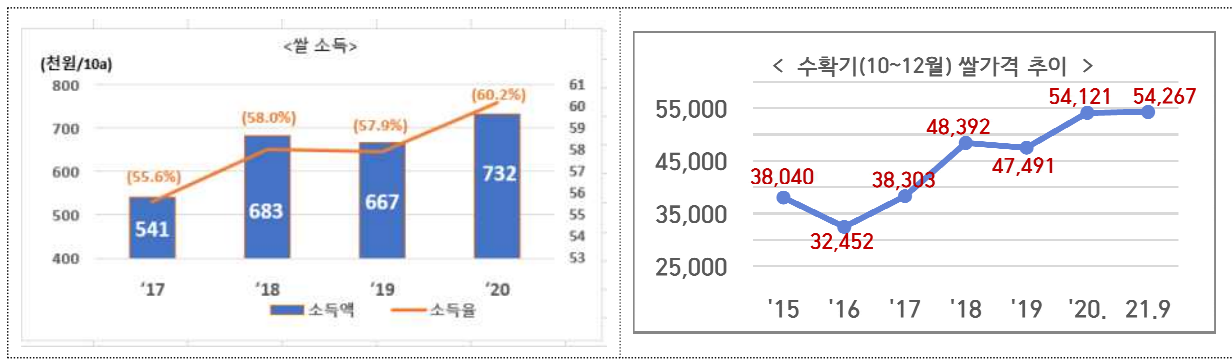
< 소득원별 농가소득 추이 >

(단위 : 천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20/’16)	증감률 (‘20/’19)
					구성비		구성비		
농 가 소 득	37,197	38,239	42,066	41,182	100.0	45,029	100.0	21.1	9.3
- 농 업 소 득	10,068	10,047	12,920	10,261	24.9	11,820	26.2	17.4	15.2
- 농업외소득	15,252	16,269	16,952	17,327	42.1	16,608	36.9	8.9	-4.1
- 이 전 소 득	8,783	8,902	9,891	11,230	27.3	14,263	31.7	62.4	27.0
- 비경상소득	3,095	3,022	2,302	2,364	5.7	2,337	5.2	-24.5	-1.1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수급 안정)** 수급안정 장치를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방지, 농가 소득지지
 -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하고, 의무자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장치 강화
 - * [품목] (‘16) 2개 → (‘21) 6 / [가입물량] (‘17) 8% → (‘18) 10 → (‘20) 15 → (‘21) 17
 - ** 농산의무자조금 : (‘15) 1개 → (‘18) 10개 → (‘20) 14개 → (‘21) 16개
 - 쌀 생산조정제(‘18~’20)를 통한 사전적 수급조절과 함께, 쌀 가공식품 등 수요 확대를 통해 폭락했던 쌀값을 회복, 안정적으로 유지



- 농업관측의 **정확도·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화 설문조사 방식에서 실측 조사 체계(5대 채소 중심) 전환('20~)
- **(농가 경영안전 장치 강화)**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재해보험을 확대하는 등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 재해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복구를 위해 농약대·대파대(재파종 비용) 등 지원단가 현실화* 및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에 품목 추가**
 - * 지원단가 현실화율 : ('17) 시중가의 66% 수준 → ('18) 72 → ('19) 73 → ('20) 83
 - ** 신규항목/ 전년도 전체항목 : ('18) 10개/ 160 → ('19) 5/ 170 → ('20) 2/ 174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17: 69개 → '20: 83)와 농가 보험료 부담 완화 등으로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18) 33.1 → ('19) 38.9 → ('20) 45.2
- **(공익직불 도입)** 쌀 중심의 직불제를 개편한 공익직불제를 본격 시행하여 중소농가 소득안정 및 공익적 기능 강화 추진
 - ※ 공익직불제 도입성과 : 0.5ha 이하 경작자 수령액 비중('19년 10.6% → '20년 22.3), 밭 수령액 비중('19년 16.2% → '20년 27.7) 증가

3 향후 과제

- **(자율적 수급안정 장치 강화)** 채소가격안정제 품목 및 비율을 확대하고, 자조금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 ※ 채소가격 안정제: ('21) 생산량의 17% → ('22) 20% → ('26) 30%
- 전국 9개 권역별로 주요 작물의 저장·가공·유통을 위한 출하조절 시설 18개소 조성 추진(현재 강원·경북에 각 1개씩 2개소 기 설치)
- **(재해안전망 강화)** 현재 재해보험 체계상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대상품목 지속 확대

4. 농업 생산·유통 스마트화

① 추진 배경

- **(스마트 농업)** 농업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 확산 필요
 - 고령농 은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의 노하우에 의존하는 노동 집약적 농업 구조를 기술 집약적인 구조로 전환
- **(디지털 유통 전환)**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도매시장·대면 거래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필요
 - 특히, 도매시장에 집중된 거래 구조는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을 지속 보급, 노지 스마트팜 기술 실증을 추진하고, 스마트 농업 확산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온실·축사 등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팜을 지속 확산
 - ※ 스마트 온실 : ('17) 4,010ha → ('18) 4,900 → ('19) 5,383 → ('20) 5,985
 - 스마트 축사 : ('17) 801호 → ('18) 1,425 → ('19) 2,390 → ('20) 3,463
 - 노지 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노지 시범사업('20~'22, 괴산·안동), 무인자동화 생산단지 시범 조성('20~'23, 전남) 등 추진
 - 한국형 스마트팜 시스템 수출을 위한 수출 유망국가에 스마트팜 기술 실증을 위한 거점(데모온실)* 조성
 - * 국산 스마트팜 기술로 해외 현지 재배기후, 품목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데모온실 조성 추진(카자흐스탄 10월 완공 예정, 베트남 '22년 상반기 완공 예정)
 - 스마트팜 기술 실증, 전문 인력양성, 데이터 등이 집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조성 추진 및 청년 스마트팜 창업 교육 확대**
 - * 1차 지역(상주, 김제) '21년 11월, 2차 지역(고흥, 밀양) '22년 상반기 완공 예정
 - ** 보육센터 교육생 선발(누계) : ('18) 60명 → ('19) 164명 → ('20) 372명 → ('21) 580명

- **(발농업 기계화)** 주산지 중심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파종·정식, 수확 작업을 위한 농기계 지속 보급
 - ※ 주산지 지원 실적(누계): ('18) 97개소(작목반) → ('19) 231개소 → ('20) 354개소
- **(온라인 거래)** 양파·마늘 등에 대해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대안적 유통경로로서 가능성 확인
 - ※ 양파·마늘 온라인 거래물량이 32개 도매시장 중 3~4번째로 많은 수준
- 화훼 분야도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구축, 양재공판장에서 시범 거래를 추진 중이며, 축산물도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 중

③ 향후 과제

-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 청년·귀농인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11개소),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단지(7개소) 조성
- **(스마트팜 수출)** 데모온실을 거점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시스템 및 전·후방 기업들의 기술 실증 지원, 한국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 촉진
- **(발농업 기계화 확대)** 양파·마늘 주산지를 중심으로 파종·정식, 수확 까지 일관 기계화 우수 모델 정립, 타작물로 확산 추진
-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다양한 유통주체가 참여하여 모든 품목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한국 농식품 거래소(B2B)' 개설 추진
 - 플랫폼 유통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지원
 - ※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누계) : ('23) 6개소 → ('27) 400

5.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

① 추진 배경

-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기존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 구조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전환
 - ※ '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 국가 전체 727.6백만톤, 농축수산 분야 24.7백만톤(3.4%)
- 농업·농촌이 재생에너지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농업·농촌 분야 에너지 이용 구조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 **(축산 분야 외부효과)** 가축질병, 분뇨 악취 등 축산업이 유발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축산업 체질 개선 요구 증가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친환경 농업)**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 인식 제고 등 친환경농업 확산 지원
 - * 친환경농업 지구(누적) : ('19) 47개소 → ('21) 82 / 유기 재배면적 : ('19) 29,711ha → ('20) 38,540
- **(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25개소, '19~)
 - * 예시 : 적정 양분 투입, 토양침식 및 양분 유출 방지, 농약사용 저감, 경운 최소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 제제 사용, 농업용수 수질 개선, 영농폐기물 수거·관리, 경관 관리 등
- **(축산 환경 개선)** 사육환경 개선, 악취저감 등을 실천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 관리하여 축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도모
 - * 누계 : ('17) 1,029호 → ('18) 1,815호 → ('19) 2,607호 → ('20) 3,629호 → ('21上) 4,295호
- **(가축분뇨 적정 처리)**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지속 확충(전국 87개소 운영 중)
- **(축산 악취 개선)** 축산밀집 단지, 신도시 등 축산악취 집중 관리지역*을 선정하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악취저감시설 지원
 - * '21.10월 현재 전국 30개 시·군의 700여 농가 및 시설 관리 중

- **(가축 방역)** 상시 방역 및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를 정비하여 ASF·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대응력 강화 및 피해 최소화
 - ※ 구제역 : ('15) 185건 → ('16) 21건 → ('17) 9건 → ('18) 2건 → ('19 이후) 미발생
ASF : ('19) 14건 → ('20) 2건(2일만에 확산 차단) → ('21) 4건(수평 전파 없이 확산 차단)
- 방역의 실질적 주체인 농가의 방역 역량 및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시행('21)
 - * 농가의 방역수준에 따라 등급 부여, 예방적 살처분 여부에 대해 농가 선택권 부여
- **(재생에너지 확산)** '18년 이후 농촌태양광 4.62GW를 신규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당초 목표('22년 3.3GW) 조기 달성

③ 향후 과제

- **(공익직불제 확대)** 기본직불금 규모 확대, 탄소중립 등 공익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직불제 개발 및 추가 재원 확보
- **(친환경 농업 확산)**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을 통한 규모화로 친환경농산물 품질·가격 경쟁력을 강화, 소비 저변 확대
 - * 산발적 입지는 주변 환경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에 노출되어 친환경 인증 관리에 한계
-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환경부 등과 협업하여 자원화 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지역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모델 확산
 - ※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22) 7개소(공공형 1) → ('23~'27) 매년 8개소(공공형 2)
- **(질병관리등급제 확대)** 산란계 농장 시범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타 축종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농가의 방역 책임성 강화
-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영농형태양광 세부기준 마련, 염해간척 농지 판정기준 개선 등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가공·유통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의 에너지 전환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 RE100 모델 개발 및 확산

6.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및 반려동물 산업 육성

① 추진 배경

- **(반려동물 산업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문화 여건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빠르게 증가('10년 17.4% → '20년 27.7%)하면서,
 - 반려동물 사료, 미용·진료서비스 등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 필요성도 증가
- **(반려동물 관리 문제)** 유기·학대,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증가
 - ※ 동물 유기·유실 발생 건수(천건) : ('17) 103 → ('18) 121 → ('19) 136 → ('20) 130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동물 유기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하고, 동물학대 행위의 악의성에 따라 처벌 차등화('21.2~)
 - ※ 동물유기 :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기존) 2년이하/2천만원이하 → 3년이하/3천만원이하
- **(안전관리 강화)** 외출시 목줄 길이 제한(2m) 등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맹견소유자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21.2~)
- **(동물등록 개선)** 동물 등록 가능 월령 조정(3개월 → 2개월) 시행('20.3), 등록대상동물 판매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21.2~)
 - '18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동물등록 대상을 고양이까지 확대
 - ※ '21년 현재 146개 시·군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운영 중
 - 동물 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面) 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 시범사업 운영('21)

-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반려동물 서비스업 등록제를 신설('18.3)하는 등 영업 관리 강화
- **(동물보호 시설 지원 강화)** 위탁 방식보다 보호 수준이 우수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원하여 직영 유도
 ※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19) 4개소 → ('20) 10 → ('21) 6 → ('22안) 11

3 향후 과제

-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관리 등 전면적 개선 추진
- **(수의사법 개정)** 동물진료 항목, 진료비 사전 고지 등 동물 진료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의사법 개정* 마무리
 * 입법 추진 경과: 개정안 마련('20.3), 입법예고('20.4~5), 규제위 심사('20.7), 법제처 심사('20.9~'21.5), 차관·국무회의 의견('21.5), 국회 제출('21.5.12)
- **(펫푸드 산업 육성)** 펫푸드 산업의 관리·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산 펫푸드의 품질·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개 식용 문제)** 개 식용 금지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국민적 공감대 마련 및 제도 개선 추진
- **(거버넌스 강화)**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반려동물 복지·관리 강화 등 다각화되고 있는 정책 요구에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 검토
 ※ 현재 '과(課)' 단위 조직을 '국(局)' 단위 조직으로 확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 신규 추진 필요과제 》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먹거리 기본권) 강화

① 추진 배경

- **(취약계층 배려)** 경제 발전에도 저소득층은 양질의 식품을 섭취할 안정적 기회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질병 등 사회적 부담 가중
 - ※ 영양소별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 수준(중위소득 50% 이하): 비타민A 49.8%, 비타민C 54.4%, 칼슘 59.6%, 나이아신 84.7% (국민건강영양조사, '16~'18)
 -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도 저소득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먹거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 ※ 美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 '64~)', 英 '건강한 출발 프로그램(Healthy Start, '06~)', EU '식품 및 생필품 지원사업(LEADER, '14~)
- **(국산농산물 안정적 소비기반)** RCEP 등 메가 FTA에 따른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비,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 필요

② 주요 내용

-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도입)** 취약계층에 양질의 농식품 구입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20~)을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
 -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 154만 가구), 차상위 가구 등을 포함한 중위소득 50% 이하 약 200만 가구 지원
 - 영양소별 권장섭취량 충족에 필요한 식품비와 식품 소비에 지출 가능한 금액의 차액을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
- **(법적 근거 마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저소득층 먹거리 지원 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
- **(기존 사업 통합)**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물지원 성격의 사업을 통합

산업통상자원부

1. 주력산업 혁신 및 신산업 육성

① 추진 배경

- **(산업경쟁)** 반도체·배터리 등 중심으로 주요국 첨단산업 육성경쟁
→ 핵심산업 선점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 역할 확대
※ (美) 혁신경쟁법(반도체 등 2,500억불 투자), (EU) 배터리 동맹(61억 유로 투자), (中) 제조2025
-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글로벌 新경제질서로 대두
※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EU '19.12월, 中 '20.9월 등),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논의
- **(디지털)**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를 거치며 산업 디지털화 진전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주력산업)**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에 맞춰 업종별 초격차 확보 전략 수립·이행 →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글로벌 위상 공고화
※ 주요전략 : K-조선 재도약 전략('21.9월), K-반도체 전략(21.5월), 미래차 확산전략('20.10월)
 - ①메모리반도체가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수성하고 있는 가운데, ②자동차 생산 5강 달성('20), ③조선은 13년만 최대실적 기록('21) 등
- **(신산업)** 빅3 신산업(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과 이차전지 등 분야 시장 확대, 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집중 육성 → 차세대 먹거리로 성장
※ (미래차) 충전소 확충, (바이오) 백신실증센터 생산라인 ↑, (반도체) 팹리스-파운드리 연대협력
 - 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수출이 비약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수소차(보급)·이차전지** (점유율)는 기술경쟁력 기반 세계 1위 발돋움

* 수출('16→'20년, 억불) : (시스템반도체) 205→303(5대 품목 진입), (바이오) 67→141(10대 품목 진입)
** 이차전지 점유율('19→'20년, %) : (전체) 34.3(2위) → 44.1(1위), (전기차용) 22.1(3위) → 39.8(1위)
- **(혁신기반)**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혁신노력 뒷받침
 - (기술혁신) 탄소중립 등 핵심분야 R&D 투자 확대*와 함께, R&D 성과의 신속한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조성**
 - * (탄소중립) 8,592억원('20년 대비 15.5% ↑), (DNA) 9,665억원('20년 대비 43.4% ↑)
 - ** 기술사업화 GIFT 1호 펀드(1,040억원), 소·부·장 경쟁력 강화 GIFT 2호 펀드(1,000억원) 등
 - (규제혁신) 혁신제품·서비스 촉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운영(총 169건)
 - * 주요사례 : (실증특례)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 AI 기반 자율주행 로봇 운행 (임시허가)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 (인증·표준) 新산업 인증 확보*와 함께 불필요 인증 상당수 개선**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 ('17) 21 → ('20) 60건, ** '20년 7개 통폐합, 20개 개선

○ (지역·중견) 지역·중견기업을 우리 경제 핵심주체로 육성

- (지역) 광주 1호차 출하 등 상생형일자리 성과를 가시화*하고, 스마트그린산단 확산(7개 → 21년 10개) 등 지역산업 활성화**

* 선정 : (20.6월) 광주(경형SUV) → (20.10월) 밀양·횡성(전기차) → (21.2월) 군산·부산(전기차)

** 고용창출 성과 : (광역협력사업) 4,962명(17~20년), (상생형일자리) 1,140명(21.9월 기준)

- (중견) R&D·수출·금융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수 5천개를 돌파하며 수출·고용 내 비중 확대

※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성장전략(20.11월),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1.2월) 등 수립

③ 향후 과제

○ (산업전환) 산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친환경·디지털전환 가속화

- 업계 수요에 기반한 핵심 탄소저감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면서, 화이트바이오·친환경 소재 등 기회시장 선점

※ (철강) 수소환원제철, 제철공정 CO2 포집·재활용, (조선) 친환경·스마트선박 재편 (석유화학) 미래차용 고강도·초경량 화학소재 개발, (바이오) 바이오플라스틱 개발·실증

-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업계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산업 데이터 플랫폼, 100대 협업과제 등 추진

○ (경제안보) 글로벌 공급망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성장기반 강화

- 경제안보·미래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발의(10월) → 법 시행 및 하위법령 마련

- 빅3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시장선점과 생태계 강화에 총력

※ (반도체) 국내공급능력 제고, (바이오) 핵심소부장 자급화, (미래차) 부품기업 1천개사 전환

○ (지역·중견) 초광역협력 중심 지역 주도형 맞춤형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산업혁신의 주역으로 육성

- 지역별 초광역협력 추진체계·인프라 구축 등 활성화 기반 마련

※ (추진체계) 균특법에 초광역협력사업 추진근거 추가, (인프라) 스마트화 기반구축 등

- 중견기업 글로벌화를 촉진하며 성장 걸림돌 개선노력 지속

※ (예) 초기 중견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구간 신설, 명문장수기업 대상 확대(전체 중견)

2. 글로벌 공급망 선도

1 추진 배경

- **(소부장)** 日 수출규제 및 GVC(글로벌가치사슬) 재편에 대응,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화 및 소부장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요구
- **(공급망)** 美中 패권경쟁 등 자국 중심의 공급망 복원력을 위한 공급망의 진영화·블록화 등으로 공급망 재구축 리스크 확대

2 추진현황 및 성과

- **(소부장)** 공급안정 실현과 함께 첨단 소부장 강국 도약 기틀 마련

※ 1차 대책('19.8월) : 100대 품목 공급안정성 + 협력모델 구축 + 강력한 추진체계
 ※ 2차 대책('20.7월) : 338개 품목으로 외연 확장 + 첨단투자지구 등 인센티브 강화

- **(공급안정)** 핵심전략기술 지정('20.5월), R&D*, M&A**,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수출규제 3대품목 포함 對日 100대품목의 공급안정 실현

* 100대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소부장 기술개발에 3조원 이상 집중투자('19~'21년)

** 세액공제 지원 등을 통해 16건의 국내외 M&A로 핵심전략기술 확보 및 기술협력 시너지 창출
 *** 테스트베드 구축, 실증·양산성능평가 지원, 융합혁신단·대학소부장자문단 등 기술애로 지원

- **(협력기반)** 으뜸기업*, 5대 특화단지** 등 핵심 기업·거점 육성 및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생태계 구축

* 선정(개사) : ('20년) 22 → ('21년) 20+α(누적 40내외) → ('22~'24년) 58+α개(누적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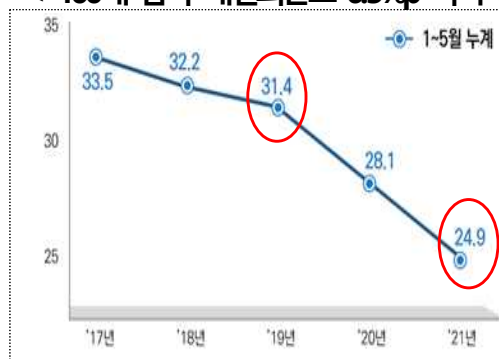
** 반도체(경기)·디스플레이(충남)·이차전지(충북)·탄소소재(전북)·정밀기계(경남) 단지별 맞춤형 지원('21.5~)

- **(산업성장)** 소부장 기업 성장* 및 투자·일자리 창출**

* 시총 1조원↑ 소부장 중소중견 13개('19년)→31개('21년), 상장기업 매출 20.1%↑('19→'21.1분기)

** 수요-공급기업 공동 R&D → 투자 4.5천억원, 고용 3천명, 특허 1.3천개(출원) 달성

< 100대 품목 대일의존도 65%p 하락 >



< 소부장기업 및 상장기업 시총 증가율 비교 >



- **(기술·시장보호)** 핵심기술·시장보호 기반구축을 통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 (기술) 73개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수출 및 해외 M&A심사, 핵심인력 관리, 컨설팅·교육을 통한 보안역량 관리
 -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12개 분야 73개 지정('21.10월 현재)
 - (시장) 반덤핑 조치('17~'21년, 26건)로 13조원 규모의 국내시장 보호

③ 향후 과제

- **(소부장)** 본격화되는 GVC 재편,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新패러다임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 추진으로 “글로벌 공급망 중심국가”로 도약
 - 미래 공급망 선점 및 탄소중립 생태계 구현을 위한 R&D·사업화 지원, GVC 재편 대응 인프라 구축(특별법·특별위, 펀드 등) 등 정책 업그레이드
 - 으뜸기업 확대, 특화단지·첨단투자지구 육성* 등 既추진과제를 통한 소부장 첨단 생산기지 구축 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 본격화
 - * 「산업집적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21.9월) → 글로벌 기업 유치 본격화
- **(기술·시장보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기술보호환경 변화 적극 대응
 - (기술보호) 핵심인력 관리강화, 핵심기술 지정확대, 중소기업 보안 역량강화 지원 등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선제적·예방적 제도 확충
 - ※ (대책) 제4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22~'24년), (제도) 산업기술보호법령 및 보호지침 개정
 - (시장보호) 잠정조치 활성화, 조치기간 확대(3→5년) 등 무역구제 조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양자·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산업 보호
 - * 무역구제 국제포럼, 무역구제기관간 양자협력회의 개최 등
- **(파트너십)** 美, EU 등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급망 협력기반 마련
 - (미국) 美 통상당국(USTR)과 핵심 공급망 관련 논의 진행을 위해 한미간 통상-공급망-기술 협의채널 마련 추진(한미 FTA 공동위원회 연계)
 - (EU)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 기존 협력채널 논의 범위를 공급망, 기술·통상 등으로 확대하고, 선도기술 보유국과 특정분야 협력* 추진
 - * (예) 독일(첨단소재), 프랑스(원전해체), 네덜란드(반도체 노광), 노르웨이(수소)

3.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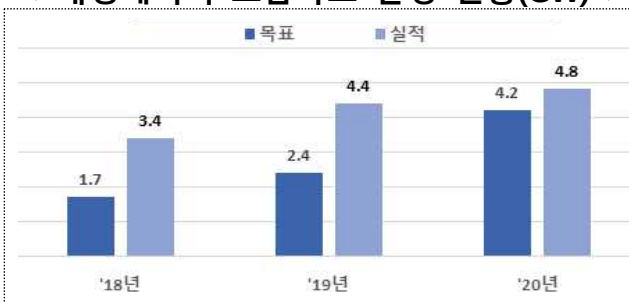
① 추진 배경

- **(대외동향)** 파리협정('16년 발효), UN 기후정상회의('19.9) 이후 121여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 → 2050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
*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19년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칠레 주도 설립)
- **(국내여건)** 온실가스 배출의 87% 차지하는 에너지 시스템 혁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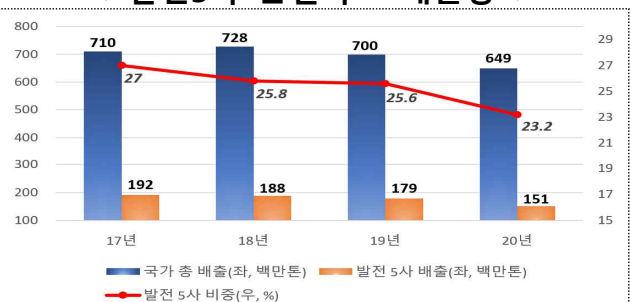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전략·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해 수립된 중장기 전략 및 대책*을 성공적으로 이행 중
* (중장기 전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 제9차 전력기본계획('20.12월),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20.12월) (보완대책)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19.4월),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대책('18.5월)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3년('18~'20) 연속 목표 초과 달성
- **(석탄발전)** 올해까지 노후석탄 10기 폐지완료* 예정, 해외 신규 석탄발전 투자중단,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
* 8기 既폐지 : 서천#1·2('17.7월), 영동#1('17.7월)·#2('19.1월), 보령#1·2('20.12월), 삼천포#1·2('21.4월) ※ 호남#1·2('21.12월 폐지예정)
- '석탄발전 자발적 상한제'('21년~),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에도 적극적으로 기여
※ 석탄발전 미세먼지(만톤) : ('17) 2.7 → ('18) 2.3 → ('19) 1.7 → ('20) 1.1
- **(원전수출)** 바라카 1호기 상업운전 본격 개시('21.4월~), 2호기 계통 연계('21.9월) 등 UAE 원전수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 중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현황(GW) >



< 발전5사 온실가스 배출량 >



3 향후 과제

- **(청정에너지 확산)** 재생E 수용성·환경성 제고 및 시장·제도 개선
 - 풍력 입지발굴부터, 인허가까지全过程을 지원하는 풍력 원스톱샵 도입, 어민 등과 상생하는 수산업 공존방안 마련
 - 태양광은 공장지붕·건물옥상, 도로·공유수면 등 유휴부지 중심으로 보급을 확산하고, 주민주도의 마을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 수용성 강화 및 발전이익 공유를 위해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및 주민참여사업의 참여범위 확대 추진
 - REC 시장 안정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고려한 RPS 연도별 의무비율 상향, 자가용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 전기 다소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구매 수단을 완비하고, 각종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RE100 본격 확대 추진
- **(전력계통 투자 확대)** 계통 보완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뒷받침
 - 재생에너지 전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선제적으로 계통 구축
 - ※ 배전선로 및 변전소 신·증설, 중장기 설비계획 수립·이행, 공동접속설비 구축에 선제적 투자 등
 -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신규 유연성 자원 확보
 - ※ 계통안정화용 ESS 및 신규 양수발전소 구축, 섹터커플링 기술 상용화 등
 - 재생에너지의 예측·제어와 계통인프라 보강으로 계통운영 안정성 확보
 - ※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계통안정화 설비(동기조상기 등) 확대·적용
- **(자원안보 강화)** 국가 자원안보 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탄소 중립에 필요한 핵심광물과 전통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관리 추진
 - ‘국가 자원안보 위기대응 종합 매뉴얼’ 마련 및 위기 대응 모의 훈련 실시 등을 통해 비상시 대응 역량 강화
 -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국내외 공급선을 확보하고, 비상시 대응을 위한 비축 물량 확대 추진
 - 단기적 수급 차질에 대비해 비축유를 추가 확보하고, 가스 도입 시 리스크 분산에 효과적인 계약 방식 활용 확대

4.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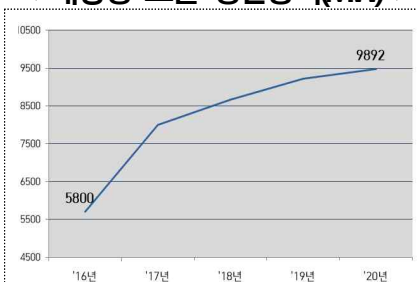
1 추진 배경

- **(대외동향)** 美, EU 등 주요국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대규모 투자 추진 중
- **(국내여건)** 탄소중립에 대한 능동적·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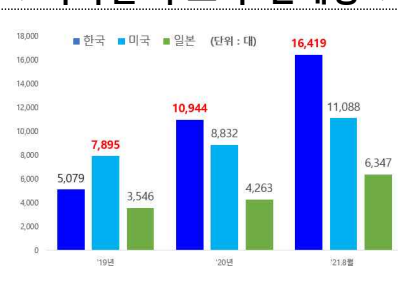
2 추진현황 및 성과

- **(재생에너지)** 태양광 및 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강화
 - 최저효율제('20.1월)·탄소인증제('20.7월) 시행으로 태양광 산업의 고효율·저탄소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 R&D·보급확대를 통한 산업생태계 확산
 - 대용량(8MW급) 해상풍력 터빈 개발 등 핵심부품 국산화 R&D,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을 통한 풍력 산업·보급 활성화 지원
 - 탄소가치 평가 기반의 보증을 통해 신재생 혁신기업 금융지원 확대
- **(수소)**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수소경제 성과 달성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월) 수립 이후 세계최초 수소법 제정('20.2월), 수소경제위원회 발족 및 3대 수소 전담기관 지정('20.7월) 등
 - 수소차 세계판매 1위, 연료전지 발전량 세계최대 등 성과 달성
- **(신산업)**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분산에너지 확산
 - 공기업 구매와 연계하여 에너지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수요연계형 R&D' 관련 규정 제·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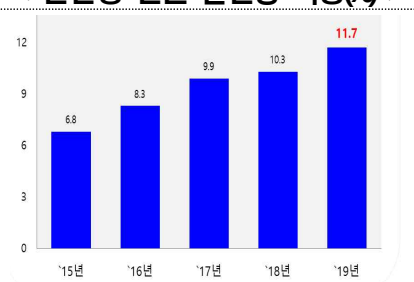
<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MW) >



< 국가별 수소차 판매량 > (단위: 대)



<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 >



3 향후 과제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로 先순환 연결
 - 미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 공동 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양산성 검증 지원
 - 저탄소·친환경 태양광 모듈의 국내 확산을 위한 탄소인증제 강화
 - 기술개발-실증-보급을 연계하여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 추진 지원

※ 8MW급 해상풍력 터빈 개발·실증, 핵심부품 국산화(~'22년) → 전북 서남권·신안 등,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및 실증(~'25년) → 울산 부유식 단지조성('25년~)
- **(수소)**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쉼주기의 생태계 구축 필요
 - (생산·도입) 실증 지원을 통한 국내 그린·블루수소 생산 가속화, 우리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 청정수소 도입
 - (저장·운송) 암모니아 추진선·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 수소항만 조성 및 액화수소 인프라, 수소배관 구축
 - (활용) 열차·선박·건설기계 등 수소모빌리티 다양화, 수소터빈, 석탄 암모니아 혼소,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 등 추진
- **(신산업)**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 에너지 新사업모델 창출·활성화,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사업화 프로세스 강화 등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 재생e O&M, EaaS 등 계통 안정화 에너지 新사업모델 창출 지원,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내 기업지원, 공공 ESS 설치, 선박용 ESS 개발, 사용후배터리 활용제품 개발

 -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계통 인프라, 전력 시장, 제도 조성을 통한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화 추진

5. 무역 · 투자 활성화

① 추진 배경

- **(대외동향)** 日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GVC 재편,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애로 등 무역·투자 활동에 차질을 빚는 리스크 요인 지속
- **(국내여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비대면·디지털 경제가 가속화 되면서 온라인, 서비스·디지털 무역 등 무역 외연 확장에 대응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무역)** 日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은 3년만에 플러스 전환과 동시에 역대 최고실적 달성 유력
 - ※ '21.10월 역대 최단기간 무역 1조불 달성
 - 무역금융 공급규모 지속 확대*, 수출기업 바이어 발굴, 화상상담 등 비대면 마케팅, 기업인 출입국 지원 등 수출 총력 지원
 - * 연도별 무역금융 규모(조원) : ('18)149 → ('19)156 → ('20)165 → ('21)167
 - 추가선박, 중기전용 적재공간, 운임비 지원 등 물류애로 최소화
 - ※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운영('20.12~) 및 물류애로 해소대책발표(경대본, 5.12, 8.12)
- **(투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투자상담, 주요기업 및 협·단체 아웃리치 등 적극적인 유치 노력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세 시현
 - (외투) '21년 3분기, 신고 및 도착기준 모두 역대 2위 실적 기록
 - ※ (신고) 182.1억불(전년동기 대비 +41.3%) / (도착) 117.4억불(전년동기 대비 +40.9%)
 - (유턴) '20년 역대 최대 24개社, '21.9월까지 20개社 유턴('14년~ 총 102개社)
 - ※ ('18년) 8개社 → ('19년) 16개社 → ('20년) 24개社 → ('21.9월 기준) 20개社

③ 향후 과제

- **(무역)** 물류애로, 원자재 가격 급등, 부품수급 차질 등 수출현장 애로를 지속 관리*하고, 디지털·서비스 등 미래 무역 기반** 조성
 - * (리스크 관리) 물류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 및 주요 원자재·부품 수급 동향 모니터링
 - **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서비스) 6대 K-서비스 집중 육성 등
- **(투자)** 첨단투자 촉진을 위한 첨단투자지구* 육성, 핵심기업 유턴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생산기지로 도약 추진
 - *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일부 또는 대규모 투자지역에 지정하고 입주기업 등 지원('21.9월~)
 - ** 업종별 밸류체인 분석, 주요 업종 협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유턴수요 적극 발굴

6. 통상협력 고도화

① 추진 배경

- **(통상환경)** 통상의 중심축이 시장개방에서 기후변화, 기술패권, 디지털통상, 공급망 등 새로운 이슈로 급격히 이동
- **(보호무역)** 보호무역주의 확산, 新통상질서 형성 등에 적극 대응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계시장 주도를 위한 기회로 활용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신남방·신북방 협력 강화)** 신남방·신북방*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신남방 시장이 우리의 제2의 교역상대로 자리매김

* 교역('16→'20, 억불) : (신남방) 1,346 → 1,607(19.3%↑), (신북방) 167 → 242(44.9%↑)

- 신남방(11개국)·신북방(3개국) 정상순방을 통한 산업·에너지 협력 성과

분야	신남방·신북방 기업 진출 성과
신남방	▶ 인니 현대차 완성차 공장 건설('19), 정유공장 프로젝트 수주('20, 40억불) ▶ 베트남과 소재부품 기술협력 등을 위한 테스트 센터 설립('19.3~)
신북방	▶ 러시아 선박 수주('17~'20, 8.5조원), 한-러 해양기자재센터 개소('19.6) ▶ 부하라 정유공장 설계 수주('20.7, 720만불), 카자흐 완성차 공장 증설('~21.6)

- **(FTA 네트워크 확대)** 세계 최대 FTA인 RCEP 타결('20.11월) 등을 통해 우리의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GDP의 85%까지 확장

※ 전세계 GDP 대비 FTA 체결국 비중 (% '20년) : ('17) 78.9 → ('21) 85.0(RCEP 발효시)

- 한미 FTA 개정협상 신속타결, 브렉시트下 한영 FTA 체결 등으로 교역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고, 중미·중동과 최초 FTA 체결

※ (중미) 한-중미 FTA 발효('19.10월) / (중동)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 서명('21.5월)

< FTA 네트워크 >



< 신남방·신북방 수출액 >



- **(통상분쟁 대응)** 보호무역 및 통상갈등에도 적극적·효과적으로 대응
 - (WTO 분쟁) 한일 수산물분쟁* 등 최종판정이 확정된 WTO 분쟁 (4건**)에서 모두 승소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등 국익 수호
 - * 對日 수산물 분쟁은 WTO 역사상 위생검역 분쟁에서 1심 패소 후 2심 승리한 유일 사례
 - ** 對日 수산물('19.4), 공기압밸브('19.9), 對美 유정용강관('17.11), 세탁기('19.2) 승소
 - (수입규제) 주요국의 한국 대상(철강 등) 수입규제 조치에도 민·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여 우리 업계에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국가	주요 수입규제 대응 성과
미국	열연(57.04→0.51%), 냉연(59.7→0.51%) 등 상계관세를 하향('21.7~8)
인도	석유화학 제품 상계관세 미부과 결정('21.3)
필리핀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사 시 한국산 제외('21.8)
GCC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미부과 조치('21.9)

③ 향후 과제

- **(新통상이슈 논의 참여)** 디지털 무역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통상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새로운 통상 어젠다 정립에 적극 참여
 - (디지털 통상)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전자상거래 원활화 등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확대 여건 마련
 - * WTO 전자상거래 협상, 한-싱가포르 D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등
 - (기후변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하고, 해외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 계기로 국가간 협력 추진
 - * (美) 친환경인프라 2조불 투자 계획('20.11), (EU) 배터리 자급에 29억 유로 투자('21.1) 등
 - (보건) 글로벌 백신 부족·불평등 개선을 위한 양자·다자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과 백신 파트너십 등을 통한 백신 생산 협력
- **(아태지역 통상질서 재편 대응)** 아태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남방·신북방·중남미 등과의 신규 FTA에 대해 조속한 성과 도출에 주력
 - ※ (신남방) 필리핀 (신북방) 우즈베크, 중러 서투, (중남미) 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 차질없는 RCEP 발효('22.1월~) 및 CPTPP 가입 적극 검토 등 메가 FTA를 통한 아태 지역의 경제 통합에도 지속 참여

《 신규 추진 필요과제 》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

① 추진 배경

- 美·中 패권경쟁 등으로 급박하게 전개 중인 주요국 “핵심산업 공급망 전쟁*”에 신속·강력하게 대응 필요

* 첨단기술 활용 핵심품목의 자국 내 생산기지 구축, 공급망 진영화 등 현재진행 중

- 반도체, 이차전지 등 공급망 전략산업 집중 육성·보호를 통해 생산·기술력 확충 ⇒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실현

② 주요 내용

◇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①과감한 육성책과 ②기술보호 대책 마련

※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 **(대상)**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 경제안보 차원에서 '특히' 중요하고,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의 토대가 되는 산업기술

- ①공급망 안정화, ②성장잠재력·기술난이도, ③연관 산업 파급효과, ④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산업부장관이 기술지정

- **(지원)** 투자지원·인력양성·기술혁신 등 전방위적 지원 추진

투자지원	• 특화단지 지정 → 인·허가등 신속처리 특례, 전력·용수 등 지원
인력양성	• 계약학과·특성화대학 등 핵심인력 양성체계 구축
기술개발	• 국가핵심전략R&D 추진근거 마련 및 예타 신속추진 특례 규정
금융·세제	• 모태펀드 활용 투자지원 + 세제지원 근거 규정(선언적)

- **(보호)** 산업기술보호법과 연계해 핵심기술·인력 보호체계* 구축

* (기술) 국가핵심전략기술 지정 → 수출M&A 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승인 의무화
(인력) 전문인력(기술 보유) 지정 → 기업 주도 인적자원 관리 및 정부 지원

- **(체계)** 총리 주재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 설치 ⇒ 중요사항 결정

※ 구성 : 국무총리(위원장) + 산업부(간사) + 관계부처 +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국토교통부

1. 국토 균형발전

① 추진 배경

- **(수도권 집중 심화)** 수도권 과밀화는 주거 문제* 및 교통혼잡** 등 비효율을 가속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약화

* (주거)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 ('20년 기준) : 수도권 (8.0배) > 전국 (5.5배)

** (교통)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35.4조 (전국 대비 52.2%)

- **(지역위기 대응)** 비수도권 인구감소 등 지역위기* 대응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경제·생활거점 육성을 통한 분산 필요

* (인구) 전체 인구의 50.2%, 청년층의 56.2%가 수도권 거주 ('20년말 기준)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자립역량 기반 강화를 추진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종합계획)** 5차('20~'40) 국토종합계획('19.12), 4차('21~'40) 수도권 정비 계획('20.12) 수립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비전 및 방향 설정
-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착공, 혁신도시 공공 기관 이전 완료('19.12), 새만금 수변도시 착공('20.12) 등 거점 조성
- **(산업단지)** 신규 국가산단(7곳, '18.8 선정), 캠퍼스혁신파크(5곳*, ~'21.4 선정), 노후산단 대개조 지역(10곳, ~'21.3 선정) 등 지역 산업기반 확충

* 한양대 ERICA, 한남대, 강원대, 경북대, 전남대

- **(도심융합특구)** 지방광역시(5곳)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융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계획 발표('20.9) 및 선정*(~'21.3)

* (현황) '20.12월 대구·광주, '21.3월 대전

- **(낙후지역)** '지역주도 + 중앙지원' 방식의 지역발전투자협약* 도입 ('18.9),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등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 11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협약 체결('19.6), 3년간('19~'21) 국비 1,000억원 지원

-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 로드맵'(18.3월)에 따라 총 417곳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중이며, 주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인구유입 등 경제기반을 확충

3 향후 과제

◇ 지방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형성하여, 국토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 ⇒ '초광역협력' 지원

<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조성 >

- **(광역철도)**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지정기준 개선을 통한 광역철도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 등 초기 운영부담 경감 방안 적극 강구
- **(광역교통시설)** 철도와 연결되는 광역 BRT·환승센터, 순환형 도로망에 연결되는 방사축 도입 등 중심부·주변도시 간 연결성 강화*
* 초광역권 추가 광역교통망 수요는 타당성을 점검하여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 등 추진
- **(맞춤형 교통)** 교통 취약지에 저렴한 택시서비스 및 대체버스(소형·콜) 확대, 첨단기술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추진
- **(공항)** 가덕신공항 등 지방거점공항 중점투자 진행

< 인재·자본·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단계별 거점 육성 >

- **(중심거점)** 광역교통 중심지에 최고 수준 특례*가 적용된 도심융합 특구**와 기업·주거·청년인재가 융합된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
* 각종 특구 중복 지정, 창업패키지사업(중기부), 지자체·대학 지역혁신사업(교육부) 등 종합지원
** 초광역권 내 성장거점 확대를 위해 지방광역시(5곳) 외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시에도 추가 추진
- 또한, 초광역권 혁신도시에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등 거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
* 혁신도시형 도첨산단(비즈파크), 혁신융합캠퍼스, 공유오피스 등을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융복합 물류 플랫폼 조성
- **(자족거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주거플랫폼(주거+생활SOC+일자리) 확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 추진 병행
* (기존) 농산어촌(읍·면 지역)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변경) 시·군(읍·면·동) 단위로 확산

2. 포용적 주거안정 추진

1 추진 배경

- **(주택 공급확대)** 초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주거·생활 트렌드 변화, 가구분화, 도심 내 공급부족 우려 등으로 주택수요가 증가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무주택 임차가구 수, OECD 등 선진국 주거안전망 등을 고려하여, 취업, 결혼, 출산, 노후 등 생애단계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고 품격있는 주거복지 환경 조성

2 추진현황 및 성과

< 공급기반 확충 >

◇ 주거복지로드맵('17), 수도권 30만호('18), 도심 공급대책(5.6·8.4·3080⁺ 대책) 등으로 전국 205만호 규모의 공급기반 마련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확대 및 공공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등 도심 내 공급 확보수단 마련으로 미래 공급기반 확충

- **(공공택지)** 중장기적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 노력

< 연도별 공공택지 지정실적(단위 : 만호) >

구분	'17	'18	'19	'20
전국	1.8	7.7	16.3	10.4
수도권	0.8	5.5	14.6	9.3

- **(주택 인허가)** 금년 들어 서울·수도권 인허가 실적*도 전년 동기대비 급증하는 등 공급 여건 개선 중

* 주택 인허가('20.1~9→'21.1~9월) : 서울 3.9→6.3만호(62.2%↑), 수도권 15.2→18.4만호(21.3%↑)

- 특히 수도권·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月 1.7만호, 0.37만호 수준*, '21년 들어서는 인허가 실적이 더욱 큰 폭으로 개선

* APT 월평균 인허가물량(만호) : [수도권] 10년평 1.59, '17.5~'21.9 1.69
[서울] 10년평 0.34, '17.5~'21.9 0.37

'21.9월 APT 인허가 물량(만호) : [수도권] 13.2만호(전년대비 24.5% 증가)
[서울] 4.0만호(전년대비 136.3% 증가)

- **(장기)** 205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시 향후 10년간 연평균 56.3만호 공급 전망

< 장래 공급전망 검토('21~'30, 민간공급물량 포함, 단위 : 만호) >

		10년 평	5년 평	'20	'21 ^e	'22 ^e	'21~'30년 ^평
전국	전체	46.9	54.0	47.1	46.0	48.9	56.3
	아파트	31.7	39.3	37.3	32.2	37.4	43.6
수도권	전체	23.4	27.7	25.0	27.9	27.6	31.4
	아파트	14.8	18.9	19.4	18.6	20.3	23.5
서울	전체	7.3	7.8	8.2	8.3	8.1	10.7
	아파트	3.7	4.2	5.7	4.2	3.6	7.0

- **(단기)**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절대 기간 등으로 '23년 이후 본격적인 분양 및 입주가 시작될 전망으로, 사전청약 확대, 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단기 수급상황도 철저히 관리

< 단기 수급관리 방안 >

- ▶ (사전청약 확대) '24년 상반기까지 신규 사전청약 10.1만호 추가 실시(6.2→16.3만호)
 - 서울 출·퇴근이 용이한 입지에 8.7만호 공급(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 1.4만호 조기공급
- ▶ (단기 공급확대) 도심내 非아파트 규제완화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 도생주의 면적 확대(50→60㎡)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 등
 -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분상제 심의기준 구체화 등으로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 ▶ (3080⁺) 본지구 지정(12월) 추진 등으로 서울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해소

<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

◇ 주거복지로드맵('17) 등 중장기계획('18~'22)을 수립하여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강화

- **(공공주택 확충)** '18~'22년 공공주택 105.2만호 계획 중 '18~'20년 65만호 공급, 연도별 계획 초과공급
- **(생애주기별 지원)** 소득계층별 지원에 더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 보완* 및 맞춤형 주택·금융지원 등 추진

*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로드맵 수립('17.11) 및 로드맵 2.0으로 보완

- (청년) 청년특화주택을 플랫폼으로 학업·취업 연계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청년월세(월20만원, '22.4~) 등 청년전용 금융지원 신규도입

※ 제1차 청년기본계획('21~'25)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맞춤형 지원 및 소통체계 마련

- (신혼) 육아특화 설계가 반영된 **신혼희망타운***(임대+분양) 신규 공급, 특공비율 확대 및 청약기준 완화 등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 '22년까지 15만호(분양10만+임대 5만) 사업승인 계획, '21년 8월부터 입주 개시
 - 다자녀 가구에 공공임대 우선공급 및 중형평형 공급, 기금우대금리 지원
- (고령자) 복지서비스(복지관)를 결합한 **고령자복지주택** 도입 및 의료 등 서비스 확대, 무장애 설계 확대 및 자가 수선도 지원
- **(주거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주거약자 지원 확대,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등 노력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18.5) 등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상한액 현실화*
 - * ('15.12) 80만 가구, 10.8만원/월 → ('21.6) 127만 가구(59%↑), 15.4만원/월(43%↑)
- (비주택거주자) 쪽방·고시원·반지하 등으로 대상을 넓혀 주거상향 본격 활성화('20~'25, 4만호), 쪽방촌 정비사업 착수('20)
- (특수가구) 재난·사고·코로나19 등에 의한 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등 지원대상 적극 발굴·확대
- **(지자체 역량강화)** 지역 중심으로 수요발굴,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위해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설치(현재 43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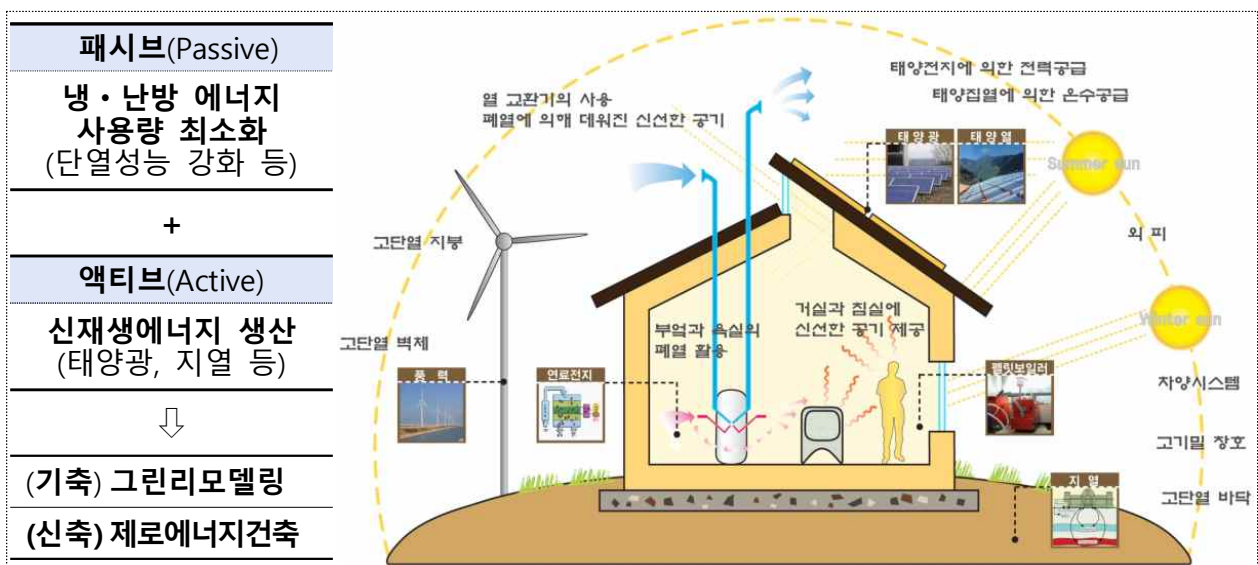
③ 향후 과제

- **(주택공급 확대)** 규제 합리화, 세제·금융 등 지원방안 발굴, 도시·건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 **(맞춤형 주거지원)** 공공재고 지속 확충*,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대(중위 130→150%), '소득연계 임대료 체계' 도입
 - * '22년 200만호(재고율 9%) → '25년 240만호(10%)
- 60~86㎡ 중형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여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
 - * '21년 3천호(건설형 사업승인, 매입 포함) → '25년까지 6.3만호 공급

3. 친환경 녹색건축 확산

1 추진 배경

- **(현황)** 글로벌 탄소중립 연대 가속화* 및 국가별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정부도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20.12) 등 강한 의지 표명
* '21 파리협정('15.12 채택) 이행 및 NDC 갱신, 기후목표 상향 동맹(121 개국) 등
- **(필요성)**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 요구되며, 건물부문은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을 핵심과제로 대응



⇒ 탄소 중립에 대한 글로벌 환경 및 정부의 적극적 정책 변화에 맞춰 녹색건축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2 추진현황 및 성과

- **(그린리모델링)** 소유형태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한 맞춤형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추진 중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대상 에너지성능·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비 지원('20년~)
 - ※ 한국판뉴딜('20.7) 10대 과제로 '20년(3차 추경)과 '21년에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2천여 동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총 4.5천억 국비)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이자비용 (3%)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5.2만 건* 완료('14~'20, 약 200억 지원)
 - * '14년(3백건), '15(27백), '16(77백), '17(86백), '18(93백), '19(1.1만), '20(1.2만)

- **(제로에너지건축)** 세계 최초 ZEB 인증제도 도입('17.1) 후 공공부문 의무화('20.1~) 등 확산 중이며, 다양한 시범사업 및 인센티브 운영*

* (시범사업) 단독주택 474호 입주, 공동주택 2,341호 착공, 특화도시 2곳(성남북정·수원당수) 조성, (인센티브) 용적률 완화(11~15%), 취득세 감면(15~20%), 신재생설비 보조금 지원 등

< ZEB 의무화 로드맵 >



※ 세부 적용대상은 면적·용도·용적률 고려하여 확정(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25년 의무화)

- 현재('21.9월말)까지 총 1,380건(예비 1,314건·본 66건) 인증 취득 완료

③ 향후 과제

- **(그린리모델링)** 기존 주요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 개발·시행

※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0만동 이상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필요 추정

- 공공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공공의 선도적 책임부여 및 민간확대 견인을 위한 의무화 제도 도입('25년~)

※ 건축물에너지 성능평가 기준·체계 마련 및 개선방안 도출시스템 개발 등 의무화 시행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이행('22~'24)

- 민간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방식 다각화 및 조세혜택 등 인센티브 개발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 기반 확충

- **(제로에너지건축)** 민간 의무화에 대비하여 인증제도 효율화 및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고, 도전적인 시범사업 지속 추진**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통합, 인증확인 간소화 제도 신설, 용적률 완화 확대(15→20%) 등

** 공동주택 최초 3등급 목표(세종 6-3생), 지구단위 최초 1등급 목표(세종 6-2생)

- 제로에너지 전문교육 및 일자리 연계, 제로에너지건축 컨설팅, 공사비 최적화 시뮬레이터 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조기 참여 유도

4. 물류산업 선진화

① 추진 배경

- **(생활물류)** E-커머스의 성장,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소비문화의 정착으로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가 국민의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

<택배 서비스 시장 규모 및 이용 정도>

구분		'15	'16	'17	'18	'19	'20
택배 시장 규모	물량 (억박스)	18.2	20.5	23.2	25.4	27.9	33.7
	매출액 (조원)	4.344	4.744	5.215	5.667	6.330	7.492
국민 택배	1인당 연간 이용(회)	35.7	39.6	44.8	49.1	54.3	65.1

(출처 : 국토교통부, 통합물류협회)

- 생활물류는 기존의 화물운송업과 다른 新산업이나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적 관리 기반은 미흡, 종사자 처우문제도 이슈화
- **(물류 인프라 첨단화)** 수도권 등 생활물류 수요의 급증에도, 도심 내 입지부족 등 인프라 확충이 어려워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
 - ※ 수도권 물량처리를 위해 택배터미널 56.8만㎡ 추가 공급 필요('19, 통물협회)
-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기존 물류시설의 노후화*, 기술투자 부족**으로 물류 인프라 첨단화 미흡

* 중규모(1,000㎡) 이상 창고 중 36.3%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시설('19년)

** 국내 물류기술은 글로벌 TOP(미국) 대비 78% 수준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생활물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제정·시행('21.7)으로 생활물류산업의 지원 및 종사자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 생활물류인프라 설치 근거, 표준계약서 등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소화물배송업에 대한 제도적 관리, 창업·연구개발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 등 반영
- 택배 기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분류업무 배제, 적정 작업조건 등을 반영한 민·관·정 사회적 합의 도출('21.6)하고 표준계약서도 마련('21.7)
- '배달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가이드라인('20.12)',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등 배달업에 대한 제도적 관리 및 종사자 보호기반도 마련

- **(물류 인프라 첨단화)** 첨단 물류시설에 대해 정부가 인증 후 금융 지원(최대 2%이자 보전)하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21년)
 - * ‘21.10월 현재 총 11개소 인증(이 중 중소·중견기업 6개소에 해당)
- E-커머스 지원을 위한 대형 물류단지 조성* 및 중소물류기업이 공동으로 첨단 물류시설 활용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시범 설치 추진
 - * 구리, 화성, 의정부 등 3개소(총 240만m²), 구리 물류단지는 사업계획수립 완료
 - ** LH 천안물류단지 내 유보지 활용하여 시범 추진(‘22년 내 완료)
- 물류용지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지자체 협조를 통해 교통광장, 고속도로 고가하부, 철도유희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를 발굴*
 - * ‘21년 고속도로 고가하부(부천), 교통광장(북인천IC) 등 총 10개소 7.8만m² 공급
- 한편, 선진 물류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해 배송·인프라·물류정보화 등 핵심 스마트물류 기술 개발 착수(총 1,248억원, ‘21~’27년)

③ 향후 과제

- **(생활물류)** 보다 체계적인 생활물류산업 육성·지원 중·장기 계획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2~’26)’* 마련 추진(‘22년)
 - * 물류분야별 육성정책 및 연구개발 촉진, 통계 등 정보체계 구축, 물류시설 확충 계획, 고용·창업 촉진, 소비자 보호 내용 등을 포함
- 택배기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사항 이행관리 및 이륜차 배달종사자 사고위험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
 - * 이륜차 배달종사자는 높은 보험비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에 소극적(가입률 약 18.5%)
- **(물류 인프라 첨단화)** E-커머스 대형 물류단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등 첨단물류시설 조성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 소요 지속 발굴
 - 도심 내 물류용지 확보를 위해 주요 개발사업 시 물류시설 확보를 제도화하고, 도심복합물류시설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 기존 도심 내 소규모 물류창고 등 생활물류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도 지속 검토

5.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① 추진 배경

- **(광역 생활권 형성)**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광역 생활권 경쟁력 확보**
- **(광역 교통체증 해소)** 대도시 생활권의 급속한 광역화로 인한 교통 체증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철도건설법」에 따라 10년 간 철도 중장기 건설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발표**(‘21.6)
 - 총 101개(119조), 신규는 서부광역급행, 광명~평택 등 **44개**(58.8조) 규모,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5개(권역별 1개) **선도사업 선정**(‘21.8)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권역별 여건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운영체계 개선계획을 포함한 광역교통 개선 추진과제를 제시(‘21.7)
 - 권역별 추진전략에 따라 수도권 76개, 부산·울산권 19개, 대구권 10개, 광주권 3개, 대전권 14개의 광역교통시설을 선정

< 권역별 광역교통시설 사업 개수 및 국비 투자계획(‘21~’25) >

구분	광역철도		광역도로		광역BRT		환승센터		합계	
	사업수	국비	사업수	국비	사업수	국비	사업수	국비	사업수	국비
수도권	29	58,782	7	585	8	665	32	1,320	76	61,352
비수도권소계	12	3,774	18	5,008	4	319	12	173	46	9,274
부산울산권	3	295	6	674	1	56	9	150	19	1,175
대구권	3	2,037	6	3,080	-	-	1	-	10	5,117
광주권	1	98	2	572	-	-	-	-	3	670
대전권	5	1,344	4	682	3	263	2	23	14	2,312
합계	41	62,556	25	5,592	12	984	44	1,493	122	70,625

③ 향후 과제

- 철도망 반영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등 차질없이 추진, 광역교통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시·도별 추진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

6. 해외건설 진출 지원

① 추진 배경

- **(환경 변화 대응)** 팬데믹에 따른 해외 건설시장 위축, 저유가 기조, 가격경쟁력 하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주실적*** 제고 필요

* 우리 수주실적(억불) : ('16) 282 ('17) 290 ('18) 321 ('19) 223 **(‘20) 351**

- **(질적 향상 지원)** 도급형태의 단순 시공 위주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수주 구조 전환** 추진

* 도급사업 비중 추이(%) : ('16) 99.3 → ('18) 96.3 → ('20) 98.2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국가 수주 지원)** 10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민관 합동 TF, 수주지원단 파견, 주한공관 정례협의체 등 **집중 지원****

* 파라과이(경전철), 인니(수도이전), 방글라(도로철도 등), 페루(리마 메트로), 우간다(도로) 등

** 파라과이 인프라 MOU 체결(9.9)을 통한 아순시온市 경전철 사업 우선사업권 확보 지원 등

- **(KIND 설립)** 우리 기업의 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설립('18.6)

- 총 10건의 해외개발사업 투자로 우리 기업의 수주(약 26억불) 견인

- **(금융 지원)** 해외사업 금융지원 우대 및 저신용국 금융지원(수은), 타당성조사*(F/S) 지원 및 **PIS 펀드**** 조성(現 1.1조원) 등

* 국토부(KIND) 100억원, 산업부(플랜트산업협회 등) 65억원, 수은 105억원('20~'21) 등

** 플랜트(P)·인프라(I)·스마트시티(S) 분야 투자 정책펀드로 현재 1.1조원 조성

- **(기업 애로 해소)** 해외건설 기업애로 해소 TF 운영을 통해 백신 우선접종 지원, 법률 자문 지원(불가피한 공기지연 등 대응) 등 추진

③ 향후 과제

- **(수주 연계 강화)** 향후 5년간 중점 투자분야·전략국가 선정 및 수주 연계 강화를 위한 국토교통 ODA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행

- **(지원체계 고도화)** 고부가 개발사업 수주 확대 등을 위해 금융 지원(KIND 자본금 확충, 펀드 투자 확대 등) 및 **G2G 협력** 등 지속 강화

7. 디지털 국토 및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추진

① 추진 배경

- **(디지털 트윈국토)** 자율주행차, 드론 등 新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全** 국토를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 **(국민안전 SOC디지털화)** 급속한 SOC 노후화에 대비하고 기후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에 선제적 대비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지상(3D지도), 지하(3D 지하공간통합지도), 도로(정밀도로지도)를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 * (3D지도) 전국 도시지역 1m해상도, 그 외 지역 5m, (지하공간통합지도) 전국 85개市, 33개郡 구축 완료, (정밀도로지도) 전국 고속도로 6,700km, 일반국도 11,570km 구축 완료
-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으로 해결하는 행정활용모델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중
- **(SOC 디지털화)** 디지털 기술을 도입, 효율적인 재난예방·대응체계 구축
 - (도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27년) 지원 등을 위해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간선도로에 ITS 및 C-ITS를 구축중
 - (철도) 철도유지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전기설비 IoT(경부선 등 16개 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경부고속선 등 13개 노선) 등 구축중
 - (공항) 항공기 탑승권·신분증·지문·얼굴 등을 하나로 결합(One-ID)한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중(김포·제주 등 주요 4개 공항)
 - (하천) 하천재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하천에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CCTV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중*
 - *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시스템 2,020개소 및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1,080km 구축 추진

③ 향후 과제

- **(디지털 트윈국토)** 2차 시범사업을 통한 행정활용모델 추가 개발 및 도출된 행정활용 모델을 연계한 디지털 트윈 통합 플랫폼 구축('22년)
- **(SOC 디지털화)** 기존 디지털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 항공, 하천, 철도 일부는 '22년까지, 철도통합무선망 및 도로 C-ITS 등은 '25년까지 구축 추진

《 신규 추진 필요과제 》

1. 미래모빌리티 일상화를 앞당길 첨단교통 육성

① 추진 배경

- **(미래모빌리티 주도권 선점)**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계기로 국민 삶과 도시공간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모빌리티 개발이 본격화

⇒ 조기 상용화, 산업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주도권 선점 필요

② 주요 내용

- **(자율차)** 비상상황 이외에는 스스로 운행하는 레벨3 자율차를 '22년, 사실상 완전자율주행인 레벨4 자율차를 '27년 상용화 추진
- **(도심항공교통)** 新교통수단인 UAM* '25년 상용화를 위해 교통법률체계 개편, UAM법 제정 등 기반 마련

* 도심 내 수직 이착륙을 특징으로 하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2.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 및 공급관리

① 추진 배경

- **(살고 싶은 임대주택 공급)** 높아진 국민 수요에 맞추어 도심 및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넓고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필요

② 주요 내용

- **(커뮤니티 허브 구축)** 공공임대주택의 여유공간에 생활SOC를 결합하여 지역 소통을 강화하고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예시)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 **(서비스 결합)**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건강,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생활, 사회서비스 결합 제공 강화

해양수산부

1. 해운재건 및 수출입 물류지원

① 추진 배경

- **(해운재건)** 해운은 수출입 화물의 99%를 수송하는 중요 국가기간산업이나, 한진해운(국내 1위, 세계 7위) 파산('17.2)으로 한국 해운의 위상 급락
- **(물류지원)** '20년 하반기 이후 전세계적인 물동량 증가와 주요 항만·내륙물류 지체 등으로 선적공간 부족 및 高운임* 상황이 지속

* 상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 ('20.1)1,023 → ('21.1)2,872 → ('21.6)3,713 → ('21.8)4,386 → ('10.15)4,588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해운재건)** 해운재건 5개년계획 수립('18.4), 해양진흥공사 설립('18.7) 등 정책 지원으로 매출액, 선복량 등 지표가 한진사태 전 수준을 회복 중

구 분	한진 사태 전	한진 사태 후	해운재건 중
해운 매출액	39조원('15)	29조원('16)	36조원('20)
원양 '컨' 선복량	105만TEU('16.8) (한진 63만, 현대 42만)	46만TEU('16.12) (현대 46만)	91만TEU('21.9) (HMM 84만, SM 7만)

- HMM은 초대형 '컨'선(20척)을 토대로 '20년 10년만에 흑자전환*, 중소선사도 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으로 경영여건이 안정화

* 영업이익 추이(억원) : ('19)△2,997 → ('20) 9,808 → ('21.上) 24,082

** 설립 이후 89개사 64조원선박 투자보증 24, '컨 박스 06, 재무구조 개선 23 선박 S&B 0.5 등 지원

⇒ 그간의 해운재건 성과를 발판으로, 글로벌 리더국가 도약을 목표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수립('21.6)하여 추진 중

- * 목표 : 2030년 ▲해운 매출액 70조원 이상 ▲원양 '컨' 선복량 150만TEU 이상
- 추진방향 : ①해운재건계획 발전보완 : 신규선박 확보 + 안정적 화물 확보 + 중소선사 경영지원
- ②미래 성장동력 마련 : 친환경 전환 가속화 +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 지원 인프라 구축

- **(물류지원)** 미주·유럽 등 주요항로에 매월 6척 이상의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선복 배정(매주 1,300TEU**) 등 선복공급 확대
 - * ('20.8~'21.9 실적) 미주 55척, 동남아 15척, 유럽 4척 등 74척 / 화물 17.6만TEU 수송
 - ** 미주 1,130TEU/주, 유럽 50TEU/주, 동남아 120TEU/주
 - 국적선사의 컨테이너박스 6만대 조달('21.3~10), 부산항 신·북항에 수출화물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장치장 제공('21.7~, 6,350TEU 규모)
- ⇒ 범부처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을 통해 물류동향 지속 모니터링과 함께, 수출입업계 애로 해소 및 제도개선 추진
- * 산업부/해수부(1급 공동 반장), 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관세청, 코트라, 중진공, 해진공 등

③ 향후 과제

- **(해운재건)** '안정적 화물 확보 → 선박 확충 → 선사 경영안정'의 선순환 구조 공고화로 국내외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기반 마련
 - 국적선사가 주요 전략화물*을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국내 제한입찰, 거래조건 변경**(DES→FOB) 등 공기업 입찰·계약 제도 개선
 - * 화물별 국적선사 수송비율('20년) : 원유 51.4%, LNG 52.8%, 석탄 93.7%
 - ** (FOB) 매수인이 선사 수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 (DES) 매도인이 선사 수배
 - 일본, 프랑스 등에서 선박·항공기 등에 적용하고 있는 조세리스 제도*의 국내도입으로 국적선사의 신조 자금 조달을 지원
 - * 선박에 대한 고속 감가상각률 적용 등을 통해 선박 투자자에게 법인세 절감 혜택 제공
 - 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정부 추가출자로 중소선사 경영지원 확대
 - * 해양진흥공사의 납입 자본금은 2.95조원으로 법정자본금 5조원 대비 59% 수준
- **(물류지원)** 수출입물류 선화주 간 안정적인 상생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우수선화주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검토
 - 컨테이너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선·화주의 안정적인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 이행 보증보험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2. 지속가능한 수산업 · 어촌 기반 조성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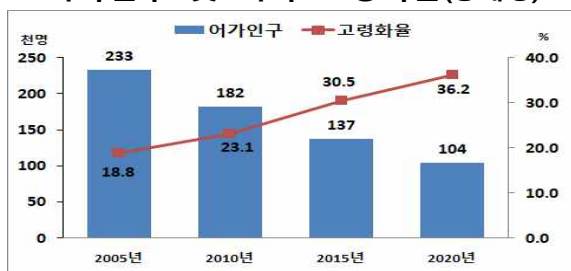
- **(어촌인구 감소)** 어촌인구는 전국 평균 및 농촌 대비 급감 추세이며, 인구 고령화 심화로 현 추세 지속될 경우 어촌의 81.2% 소멸 예상

* '15년 대비 '20년 인구 증감율(%) : 전체인구 0.6, 농가인구 △9.8, **어가인구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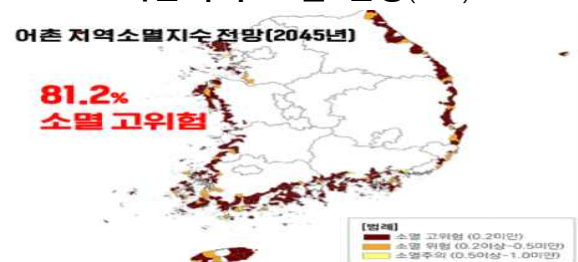
** 지역소멸지수(KMI) : **(섬) 0.234 > (연안어촌) 0.303** > (농촌) 0.341 > (도시) 1.208

- 일자리 부족, 소득기반 취약, 정주여건 불리 등이 신규유입 제약 요인

< 어가인구 및 어가 고령화율(통계청) >



< 어촌지역 소멸 전망(KMI) >



- **(수산자원 감소)** 자원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국내외 불법 조업, 자원량 대비 과다한 어선 투입 등으로 생산량 회복 지연

※ 연근해 어업 생산량(천톤) : ('10) 1,134 → ('15) 1,059 → ('18) 1,012 → ('20) 932

2 추진현황 및 성과

- **(어촌 활성화)** 수산공익직불제* 도입('20), 어촌뉴딜 300**, 귀어귀촌 활성화 등으로 소득 향상('16, 47백→'20, 53백)·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 도모

* 조건불리지역(118억), 자원보호(81억), 친환경생산(256억), 경영이양(40억) 등 4개 분야 총 51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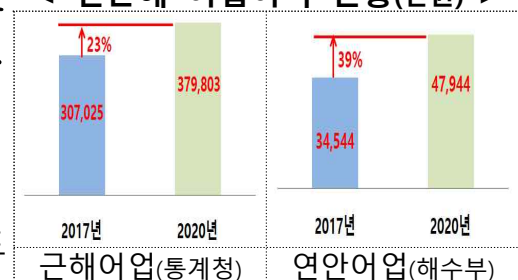
** 어촌어항 300개소에 대해 어촌필수 기반시설(선착장 등)을 현대화하고, 지역특화개발 추진

-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소득기반 확충·주거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21.9)하고, 단계별 대책 추진 예정

- **(수산자원 관리 강화)** 총허용어획량 제도 (TAC) 확대, 연근해 어선 감척 등 투입·산출량 관리 강화로 어선당 영업이익 증가, 수산자원은 회복 중

※ '17~'21년 총 179척의 근해 어선 감척, 여의도 면적의 8배 바다숲 조성 등

< 연근해 어업이익 현황(천원) >



③ 향후 과제

< 어촌 활성화 >

- **(일자리 창출)** 어선·양식장 공공 임대, 어촌계 개방성 강화, 어촌 자산 간접투자 확대* 어촌특화관광 활성화 등 신규 일자리 창출
 - * 어선·양식장·주거단지 등 어업자산 투자자에 '준귀어인' 지위 부여로 주택자금 등 지원
- 공공임대형 어업면허를 신설(법 개정)하고, 어선 임차료 지원('22년 신규), 예비창업자 대상 스마트양식 클러스터(~'25, 5개소) 부지 임대 추진
- **(소득 확대)** 수산공익직불제 유형 및 대상 확대*, 국가어항 유희부지 및 위판장에 상업시설 투자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 쏘어업인에게 지불하는 기본형(소규모 어가, 면허면적 및 톤수 기준)과 공적 기능을 강화한 선택형(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 등)으로 구분
 - ** 주요어항 투자유치 시범사업('22)을 바탕으로 '26년까지 연평균 700억원 투자 유치
- **(정주여건 개선)** 어촌·어항 시설개선을 주거 안정·생활서비스 확충으로 확대하는 「POST-어촌뉴딜」 사업 추진('22년 시범사업 → '23년 전면시행)
 -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 조성(국토부 협업), 어촌계 소유 건물 공유 주거 활용 등으로 어촌 신규 진입자의 주거 비용부담 완화
 - 의료, 보육, 문화시설 등이 복합화된 거점형 생활SOC센터 및 마을 단위 복합시설 건립으로 어촌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

< 수산자원관리 강화 >

- **(어업제한 합리화)** TAC 확대와 어선감척 속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어업규제를 완화하고, 어선 규모화 등 지원 확대로 현장 수용성 제고
 - ※ TAC 적용 대상 : ('21) 어획량의 29% → ('25) 50% → ('30) 80%
- 감척 폐업지원금* 기준가격 상향 및 어구·어법 제한 등 규제 완화 병행
 - * 폐업지원금 : ('16) 평년 수익액의 50% → ('20) 70% → ('21) 90% → ('22) 100%
- **(자원조성 확대)** 회복대상종(대문어·대게 등) 산란·서식장 조성 확대(~'30, 80개소), 바다숲(~'30, 54만ha), 바다목장(~'22, 누적 50개소) 지속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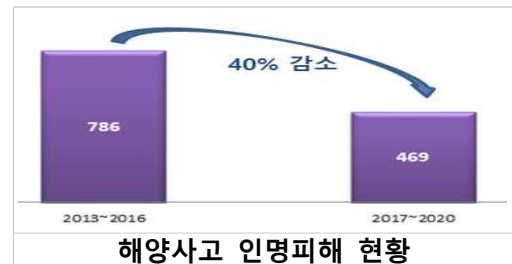
3. 해양안전관리 선진화

① 추진 배경

- **(필요성)** 국가해운물류의 기반이 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에서의 국민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안전관리체계 고도화
 - 디지털·친환경 신산업의 급속한 전환에 따라 새로운 해상교통 수단의 출현에 대비하고 기후변화 위기 등에 대한 대응 추진
 - 또한, 낚시·레저활동 등 국민의 해양이용 증가에 따른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해사안전정책 추진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제도·조직 강화)** 해양안전 제도개선*·전담조직** 확충 등을 통해 최근 4년간('17~'20, 사망·실종 469명, 중전 4년 786명) 인명피해 40% 감소



* 「어선안전조업법」 제정('19.8.), 「낚시관리법」 개정('19~'20), 위험물선박 제도개선('20.12.)

** 어선안전정책과 신설('20.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19.7.) 등

- **(디지털안전관리)** 세계 최초 바다 내비게이션* 시스템 및 어선 위치확인 시스템 등 구축·운영을 통해 디지털 안전관리 기반 마련



* 연안선박에 충돌·좌초경보 제공, 최적항로 안내,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등

- **(국민의식 제고)** 해양안전체험 교육(1.3만명)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등 해양안전기본수칙을 지속 교육하여 해양안전 국민 의식* 향상



해양안전체험관('21.6.~)



해양생존 체험장

- 안전한 바다이용을 위한 해양안전 기본수칙과 비상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전문체험시설(안산, '21.5. 준공/진도, '21.12. 예정) 건립·운영

* 일반국민 해양안전수칙 준수도(1천명 설문, 100점) : ('18) 75.0점 → ('20) 83.4점(11%↑)

③ 향후 과제

- **(차세대 안전관리)** 디지털·친환경 기술 패러다임 혁신에 대비하여 자율운항·무탄소선박 등 미래선박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필요
 - 新기술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디지털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바다내비게이션 고도화, 차세대 위성항법서비스 체계 구축 등
- **(해사안전 산업육성)** 4차산업 전환기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해사산업의 타깃분야를 정하고, 국가차원의 육성전략 마련·이행 필요
 -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국제표준화 주도 및 국제시장 창출 등 4대 해사신산업* 선도전략 및 산업육성 제도 기반 마련 등

* 디지털 해양교통정보, 친환경선박, 해양PNT, 첨단 선박관리서비스 및 신소재
- **(해양안전문화 정착)** 바다낚시 등 해양레저 수요 증가 등 국민의 해양이용 확대에 대비하여 실생활 해양안전문화 의식 고취 필요
 - 전문체험교육시설, 등대박물관 등 해양안전문화 인프라 확충, 국민참여·소통 플랫폼 및 홍보 브랜딩(로고·캐릭터·슬로건 등) 강화

4.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① 추진 배경

- **(해양플라스틱 문제 심화)** 해양폐기물의 80%가 플라스틱이고, 그 위해성이 해양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활동·건강에 영향
 - 플라스틱은 물속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유령어업, 미세플라스틱, 선박사고 등을 초래함에 따라 적극 대응 필요
 - UNEA, G20, APEC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대응을 위한 논의 활발
- **(대응체계 개선 필요)** 기존의 대응정책은 이미 발생한 해양플라스틱 폐기물의 수거 위주로 추진되어 근본적인 저감에 한계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대응체계 정비)** 해양플라스틱 발생량 '30년 60% 저감, '50년 제로화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법 제정 및 대책 수립 등 제도기반 마련
 -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19.12)하고,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19.5월) 및 제1차 해양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21.5월) 등 수립

- **(전주기 관리)** 해양플라스틱 폐기물의 생애주기에 걸친 관리 추진
 - (발생예방) 친환경부표 및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21년까지 571만개, 310척) 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 하천쓰레기 유입차단막 등 설치대책 도입
 - (수거·처리) 바다환경지킴이 배치(1,000명),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건조 착수(7척), 해양폐기물 집하장 확충(80개소) 등 추진
 - (거버넌스)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설치('21.10,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 반려해변제도 본격 시행(4개 시도)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투자확대) 기존사업 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 등('18 : 536억 → '21 : 1,306억)

3 향후 과제

- **(대응체계 내실화)** 수산업법 개정 등 제도정비 과제를 완료하고, 친환경 부표 보급 등 주요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
 - (제도개선) 어구 관리 강화를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실명제, 어구 일제회수제 등 법제화(수산업법 등 국회계류 중) 및 사업 추진
 - ※ 어구실명제 등의 규범력을 높이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본격 실시('23 : 통발 → '25 : 자망)
 - (내실화) 반려해변 전국 확산('23년), 해양폐기물 집하장 설치 확대 및 친환경부표 보급 완료*, 육상기인 쓰레기 통제 강화를 위한 강·하천 폐기물 총량제 도입('24~) 및 지자체 지원 확대(국비 50 → 70%) 검토 등 추진
 - * 친환경부표 보급(누적) : (24년) 100%(5,500만개), 해양폐기물 집하장 확충(누적) : (30년) 300개
 - 수거 효율화 장비·지원기술 개발(~'24) 및 스마트 관리기반 구축('26~)
 - (재활용 활성화) 재활용 및 자원화 기술개발, 폐어구 업사이클링 활성화, 어촌 해양쓰레기 자원순환모델 개발('24) 및 해양쓰레기 순환경제마을 조성 추진('25~)
 - * 어촌마을 해양쓰레기를 재활용·에너지화하여 지역사회 순환 공급 및 경관 등 개선
- **(국제협력 강화)** 해양플라스틱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신흥국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확대
 -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오염에 관한 협약 제정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컨퍼런스 개최('22.9, 부산)로 국제적 논의 주도
 - 기존 ODA와 차별화되고 체감할 수 있는 한국형 해양폐기물 협력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신흥국 등 개도국으로 확산('23~'28)
 - * 기존 역량강화 위주에서 바다환경지킴이, 해양폐기물 집하장 설치 등 실질적 저감사업으로 전환

5. 해양수산 탄소중립 추진

① 추진 배경

- **(기후변화)** 우리나라 연안은 해수면 및 해수온 상승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시급한 대응 요구
 - * 해수면 : 최근 30년('90~'19) 해수면 연평균 상승률 3.12mm / 전 지구 평균 2.00mm
 - ** 해수온 : 최근 50년('68~'20) 해수온 약 1.23℃ 상승 / 전 지구 평균 0.53℃
- 한반도 해역의 아열대성 어종 출현 등 해양생태계 변화, 고수온·대형태풍 수산업 피해, 연안침식 등 해양 분야 피해 현실화
- **(국제사회)**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및 국제해사기구(IMO) 해운 탈탄소화 선언(~50년, 온실가스 배출 △50%) 등 국제사회 움직임도 가속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추진기반)** 해양수산 탄소중립 로드맵*('21.12) 마련 및 적극적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해양수산 탄소중립 예산 확대('21년 3,339억원 → '22년 4,562억원)
 - * 2050년 탄소배출량 -323.7만톤(국내해운 30.7 수산 11.5 해양에너지 -229.7 블루카본 -136.2)
 - **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실증, 갯벌식생조림, 블루카본 기반 기후적응 해안 조성 등
- **(해운)**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 수립*('20.12), 친환경선박 핵심 기술개발 예타** 통과(2,540억원, '21.6) 등 탄소중립 해운 기반 마련
 - * '30년까지 관공선 388척, 민간선박 140척 등 총 5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 ** 암모니아 연료 추진기술, 전기·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설계·건조·실증기술 등 개발
- **(해양 흡수원)** 전국 연안 194개소(누적)에 바다숲 조성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21.7), 제1차 갯벌 기본계획 수립('21.9) 등 해양 흡수원 확대
- **(수산)** 노후 연근해어선의 기관·설비 대체 지원 및 양식장 및 수산가공 시설 고효율 에너지 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 등) 보급 등 저탄소 수산업 추진
 - * 히트펌프 기준, 기존 대비 에너지 사용 평균 절감율 51%
- **(해양에너지)** 시화호 조력발전소(설비용량 254MW) 에너지 중산방안 검토 및 조류·파력에너지 대규모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22)

③ 향후 과제

- **(해운)** 저탄소·무탄소 선박 시범건조 및 내연기관 개조·대체를 통한 관공선·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 지원 등 탈탄소화 강화

-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추진선박·수소선박 등 친환경선박을 시범 건조*(~'25)하고, 퇴역 관공선 개조 등을 통해 해상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 * 전기추진선 2척, 하이브리드 선박 3척, 혼합연료 선박 3척, 수소선박 3척 등
- **(해양 흡수원)** 신규 흡수원으로서 갯벌 탄소 흡수량의 국제 공인을 추진하고, 연안습지 복원 방안 다각화
 -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우선 반영하고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차기 지침 마련시 인증 협의, 폐염전·폐양식장 및 담수호 등을 연안습지로 복원*
 - * '10년부터 갯벌 1.5km²를 복원하였으며, '25년까지 4.5km² 추가 복원
- **(수산)** 친환경 어선 개발·보급 등 어선어업의 저탄소·무탄소화를 가속화하고, 양식업·수산가공업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방안 다양화
 - 친환경 하이브리드 어선 전기추진 기자재 개발 및 표준선체 설계(~'25), 양식장 소수력발전 설비 보급 및 수산 가공·유통시설 친환경 냉매 전환
- **(해양에너지)** 조력발전 확대 추진 및 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생산 기술 상용화, 해양에너지 적용모델 개발
 - 조류·파력 실증단지 조성·운영, 해양에너지·바이오 연계 수소 생산 R&D 및 에너지 자립섬·수소항만 등 해양에너지 생산·저장·보급 모델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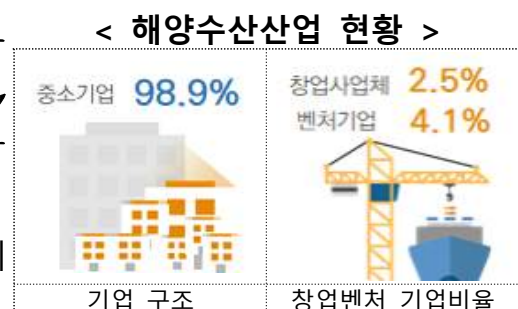
6.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① 추진 배경

- **(신산업 성장)** 미국·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양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여 '혁신성장'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4차 산업혁명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해운·항만, 수산 등 전통 해양수산업을 스마트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추세
- ※ (세계시장 전망치) **(22) 2,370억달러 → (30) 4,749억달러** / 연평균성장률 8.5%

- **(국내산업 영세)** 해양수산업은 전반적으로 영세(중소기업이 98.9%)하고, 벤처·창업, 기술개발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

※ 해양수산 **창업사업체와 벤처기업** 비중은 전체 산업 대비 각각 **2.5%, 4.1%**에 불과



2 추진현황 및 성과

- **(투자확대)**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19.10) 등에 따라 대규모 R&D 사업 예타 통과* 등 신산업 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중**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전주기 기술개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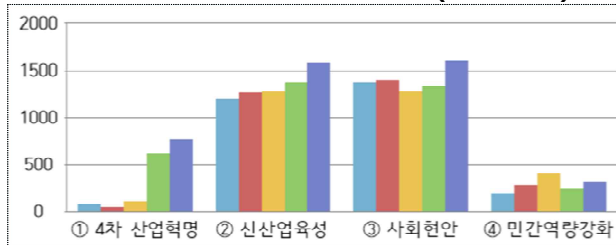
** 연도별 해양수산 R&D 예산 : ('20) 6,906억원 → ('21) 7,825 → ('22) 8,535

- **(산업생태계 조성)** 우수기술의 사업화 성과 제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 인증 및 기술이전*, 창업 및 투자 컨설팅, 정책펀드** 등 지원

* 최근 5년간 해양수산 R&D성과 특허등록 1,804건, 사업화 373건 달성('16~'20 누적)

** ('19) 해양수산 모태펀드 13개 자펀드, 2,025억원 → ('21) 19개, 2,871억원

< 해양수산 R&D 투자현황('17~'21) >



<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프로그램 >



3 향후 과제

- **(전략투자)**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전략('21.8, 과기장관회의)에 따라 탄소중립, 한국판뉴딜 지원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 해운·항만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 디지털·그린 선박, 스마트 수산업 등 핵심 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 추진

※ '25년까지 1조원 수준으로 R&D투자 확대,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산업 성장 극대화

- **(산업생태계 조성)** 기업 성장주기별(창업-성장-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핵심 기술의 국산화·표준화 지원 등 생태계 조성

-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공모형 R&D 확대, 성장 가능성이 큰 '예비 오션스타 기업*' 등 기업육성 및 집중지원, 산학연 협력 강화**

* (오션스타) 해양수산 분야 매출액 1,000억 원을 달성한 기업

** 창업기업 보육, 실증연구 등을 지원하는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구축(~'23)

- 해양수산 신기술 지정, 조달특례 지원 등을 강화하고, 산업계의 핵심 기자재 국산화 지원, 국가 산업표준(KS)의 인증체계 확대*

* 자율운항선박, 스마트양식 등 핵심기자재 국산화 지원, KS표준화 체계 마련(~'26)

《 신규 추진 필요과제 》

도서민 교통 기본권 보장

① 추진 배경

- **(운항안정성 제고)** 연안여객선은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나, 선사의 영세성, 수익성 부족 등으로 항로단절 우려가 상존
 - 항로유지를 위해 국가보조항로*를 지정하여 국비건조 여객선과 결손금 전액을 지원중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 등 한계 노출
 - * 전체 104개 항로 중 사업채산성이 없어 민간선사가 취항을 기피하는 27개 항로 지정
 - 여객선 미기항·대체 이동수단(연육교 등)이 없는 소외도서가 전체 유인도서(456개)의 약 9%인 40개에 달하는 상황
- **(운임부담 완화)** 도서민은 최대 7천원의 여객운임을 부담하고 있어 육상대중교통 대비 교통비 부담이 과도

※ 시내버스(1,200원) 지하철(1,250원), 광역버스(2,300원) / 여객선(500~7,000원)

< 운임 구간별 도서민 운임부담 현황 >

정규운임	~ 8,340원	8,340원 ~ 3만원	3만원 ~ 5만원	5만원 ~
도서민 부담	500원~2,5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 차액(정규운임-도서민부담)은 국비 50%+지자체 50% 부담 중('06~)

② 주요 내용

- **(운항안정성 제고)** 국가보조항로를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공영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
 - ※ 공영제 전환방안 검토 및 제도 정비('22~'24) → 공영제 전환('25~'27) → 항로 확대('28~)
 - 소외도서에는 지자체보유 선박 투입(비용 일부 국비지원), 국가보조항로 기항지 추가 등으로 항로운영을 지원

<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추진 계획 >

연 도	2022	2023	2024	2025	2026
대상 항로 수	10(시범사업)	15	20	25	30

※ 1개 항로 당 복수의 도서 기항 → 30개 항로 운영 시 40개 소외도서에 여객수송 지원가능 전망

- **(운임부담 완화)** 도서민이 거리에 상관없이 육상대중교통 수준의 단일 운임을 부담하도록 정부·지자체 지원을 확대 검토

※ 시내버스(1,200원)~광역버스(2,300) 수준으로 지원확대 시 최대 60억원 추가 소요

중소벤처기업부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중소기업 회복 지원

① 추진 배경

- 코로나19 및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등을 통해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재난지원금 지급)** 4차례 재난지원금을 편성·지원하였으며, 회차를 거듭할수록 신청·지급 편의, 지원기준 개선 및 지원금액 상향 등 지속 보완

< 4차례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

(단위 : 만원)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새희망자금 (‘20.9~’21.3)	200	150	100	
¹⁾ 버팀목자금 (‘21.1~’21.7)	300	200	* 경영위기업종 없음	
²⁾ 버팀목자금 플러스 (‘21.3~’21.8)	500·400	300	300·250·200	100
³⁾ 희망회복자금 (‘21.8월~)	2,000~300 (8개 구간)	900~200 (8개 구간)	400~40 (16개 구간)	-
업체당 최대 지원	3,000	1,550	900	300

- 1) 중대본 외에 지자체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 소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하여 코로나 피해가 큰 업종(여행업·관광업 등)은 일반업종보다 두텁게 지원, 1인 운영 다수사업체 추가 지원
 - 3) 최대 지원단가 5백 → 2천만원으로 상향, 매출감소 판단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 지원대상 추가 등
- **(손실보상 제도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7.7)하여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마련·시행

<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기준 (‘21.10.8 심의위 의결) >

- ▶ (대상) ①‘21.7.7~’21.9.30일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소기업·소상공인
- ▶ (산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기간 x 보정률(80%)
- ▶ (상·하한액) 하한액 분기 10만원, 상한액 분기 1억원

- **(융자·보증 공급)**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7.5조원을 지원
 - ※ **(중소기업)** 중진공 융자(0.6조원), 산기보 보증(2.9조원)을 통해 약 **3.5조원 지원**('21.9월말)
 - ※ **(소상공인)** 소진공 융자(0.97조원), 신보·지역신보 보증(3.44조)을 통해 **집합금지·제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4.41조원 지원**('21.9월말)
- '20.4.1 ~ '21.9.30일 동안 코로나19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중진공, 기보, 지신보)에서 **만기연장 지원**(40조원)
- 코로나19 방역상황,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환경 등을 감안하여 '21.10 ~ '22.3월 동안 **특별만기연장을 추가 시행**
 - ※ 기금 특성상 만기연장을 시행하지 못했던 **소진공**(융자상환금으로 대출재원 충당)도 공자기금 추가 확보를 통해 **최초로 만기연장 지원**(0.66조원)
- **(폐업·재기 지원)** 폐업지원 패키지*를 강화하고, 조속한 재기를 유도하는 '**재도전장려금****'(50만원) 및 **유망분야 사업화**('21. 120억원) 등을 추진
 -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채무조정, 법률자문 등 패키지 지원확대('21. 227 → 300억, 추경)
 - ** 폐업 소상공인 28만명에게 1,400억원 규모의 취업·재창업 준비금을 '21년말까지 지급

③ 향후 과제

- **(재난지원금 확인지급 등)** 국세청·지자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 심사·지급하고, 증빙서류 추가접수 등 구제절차 운영
 - ※ 예) 매출액 규모 또는 감소 기준 미충족, 경영위기업종 미해당 등으로 지원불가 판정받았으나, 행정정보와 달리 실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손실보상 제도 운영)** '22년도 손실보상 제도(정부안 1.8조원)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21년 3분기 집행과정에서의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
 - * 원활한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제도 홍보 등
- **(융자·보증 공급)** 융자·보증을 **지속지원***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도 강화
 - * '22년 정부안 : (중기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 8,000억원,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5,000억원 등
- **(재취업·재창업 촉진)** 민간 구인수요와 연계한 재취업 교육, 민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커머스, 공유주방 등)을 활용한 재창업 지원 확대
-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간소화* 및 홍보 강화
 - * 계좌인증서비스, 행정공동망 등을 활용하여 신청서류 최소화(5종 → 1~2종)

2. 소상공인 ·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① 추진 배경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상점가 소비활력 제고도 병행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스마트상점·공방 보급) 환경변화**(제조·유통·소비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및 기초 스마트기술(IoT, AI 등) 집목을 통한 디지털화
 - * 스타일링·피팅 등 가상 체험 스마트 미러, 자율주행 기능 탑재 서빙로봇, 3D 프린트 등
-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을 통한 매출 상승* 및 제조업 소상공인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 (스마트상점) '20~'21년 누적 15,788개 / (스마트공방) '20~'21년 누적 677개사
 - * 코로나19상황에도 불구하고 '20년 스마트기술 보급 상점의 39.5% 매출 상승
 - ** 평균매출액 13.4%(6.7억원→7.6억원), 평균고용인원 16.4%(3.97명→4.62명) 증가
- **(간편결제 확산)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0%대* 제로페이[®]를 도입('18.12월)하여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
 - * 신용카드: (3억원 이하) 0.8%, (3~5억원) 1.3%, (5~10억원) 1.4%, (10~30억원) 1.6%
제로페이: (8억원 이하) 0%, (8~12억원) 0.3%, (12억원 초과) 0.5%
- 서비스 개시 2년여 만에 130만개 가맹점에서 2.9조원 결제되어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 보다 약 324억원*의 결제수수료 경감 효과
 - * 제로페이 결제수수료율이 신용카드 보다 약 1.1%P가 낮아 29,442억원×1.1%=324억원
- **(디지털전통시장 지원) 변화하는 유통환경**(대면거래→비대면)에 대응하여,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 진출 지원
 - 전통시장 디지털매니저 사업 및 온라인플랫폼바우처를 통해 전통시장 온라인 입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VR지도 구축 추진
 - ※ '20년 38개 시장, '21년 9월 기준 98개 시장 온라인 입점 지원 및 10개 시장 VR지도 구축

- **(상권르네상스 조성)**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경영, 마케팅, 판로 등 종합적인 상권 경영혁신 개선 프로그램 마련
 - '18년부터 총 20곳*의 상권을 선정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 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문화·예술 공연 등 종합지원
- * (1차, '18.9) 3곳 / (2차, '19.5) 4곳 / (3차, '19.12) 5곳 / (4차, '20.12) 8곳
- **(온누리상품권 발행)** '20년 약 4.0조원 판매*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 *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조원) : ('17)1.3 → ('18)1.5 → ('19)1.7 → ('20)4.0 → ('21) 3.15조 목표
- **(구독경제 추진)** 비대면 가속화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下, 정기결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 확보 및 수익을 창출하는 구독경제 신규 추진('21.8월~)
 - ※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 마련(8.5) 후 사업공고(8.11, 지자체 / 9.15, 소상공인) → 지자체 2곳 선정(9.30, 경남도, 전남도) 및 소상공인 모집 중(~예산 소진시까지)

③ 향후 과제

- **(간편결제 성장)** 온라인·해외결제 연계 등 서비스 다각화 및 가맹점 확대(200만개)를 통해 소상공인의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성장 필요
 - * 가맹점 목표 : ('21.10) 130 → ('22) 160 → ('23) 200만개
 - ** 온라인 : ('21) 공영쇼핑(6월)·위메프(7월)·가치삼시다(11월) → ('22) 일반물·배달앱 등 확대
 - 해외결제 : ('20) 위챗페이(10월) → ('22) 유니온·프롬프트페이(上), 알리페이(下) 등 확대
- **(디지털전통시장 확산)** 시장상인들의 고령화로 인해 온라인 진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상인교육 강화* 필요
 - * 온라인 동영상 자료 배포·교육 및 전문가 현장파견 등을 통한 설명회
- **(구독경제 추진)** 구독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비대면 정기판로 확대 추진
 - (민간물 입점) 민간 유통기업과 협업 가능한 모델을 발굴·제공 →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참여 확대 ('21. 200개사 → '22. 1,000개사)
 - (자립화 지원) 소상공인이 직접 구독경제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자사몰 구축, 물류, 상품 큐레이션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22년~)

3.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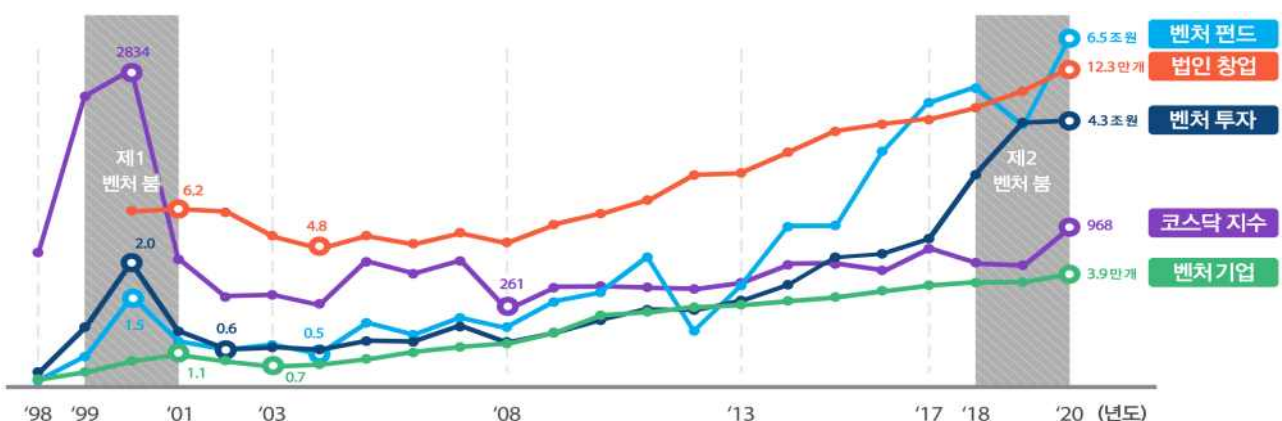
1 추진 배경

- **(디지털 경제 도래)**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창업·벤처 역할 증대)**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벤처·스타트업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우리가 미래경제를 선도하고, 글로벌 벤처 4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벤처·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필요

2 추진현황 및 성과

- **(정책노력)** 역대 최대 모태펀드 출자 등 예산확대, 제도개선, 법령 제정 등을 통해 혁신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
 - 창업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16 0.6 → '21 1.4조원)하고, 연대보증 폐지, 공공구매제도 도입, 벤처투자법 제정 등 창업·벤처 친화적 생태계 조성
- **(정책성과)** 신설법인 및 벤처투자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유니콘기업이 15개('21.9)에 달하는 등 본격적인 제2벤처붐 도래
 - ※ 올해 3분기 누적 벤처투자액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5.3조원, 전년 동기 대비 +81.8%), 역대 최대 실적이었던 작년 4.3조원은 지난 8월에 이미 달성함
 - 아울러, 우리나라 창업·벤처 생태계의 성과를 해외에서도 인정
 - ※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결과, 조사대상 280개 도시 중 서울이 16위 차지(스타트업자음 '21.9)

< 창업·벤처 생태계 주요 지표 변화 추이 >



③ 향후 과제

- **(신산업 분야 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강화
 - BIG3, 비대면, AI·데이터 분야 등 미래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는 신산업 분야를 집중지원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강화
 -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창업 지원가능 업력기준을 현행 7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 대기업이 제시하는 문제를 스타트업의 기술력으로 해결하며 상생 (Win-Win)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의 문제해결형 플랫폼 강화
 - ※ BIG3 분야, AI 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으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운영
- **(스톡옵션 제도개편)** 벤처기업이 폭넓게 스톡옵션을 발행·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 완화 검토(벤처기업법 개정 추진, ~'22)
 - * 현행 : (부여대상) 임직원 및 변호사 등 대통령령에 열거된 자, (행사가격) 시가 이상 또는 1인당 5억원 내 시가 이하, (행사시기) 재직 2년 경과 후
 - 다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부여하는 세제혜택 스톡옵션과는 명시적으로 유형을 분리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
 - ※ (해외사례) 美의 경우 스톡옵션 발행대상·행사시기·행사가격·보유기간 등 제한이 없으나, 인재유치 목적으로 세제특례를 받는 '세제혜택 스톡옵션'을 별도로 규정
- **(복수의결권 도입)**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근거 마련
 - ※ 정부안 발의 및 국회제출(20.12) 이후 산중위 소위 계류중
 - ※ 복수의결권(Multiple voting shares) :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
 - 복수의결권 도입 후 제도 운영을 거쳐 추가 개선방안 마련 검토
- **(벤처투자 시장 확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이 흘러들어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벤처강국 수준으로 벤처투자 규모 확대 필요

< 2018~2020 메가투자(1억\$ 이상) 유치 현황(CBinsights) >

	글로벌	미국	중국	인도	영국	한국
투자건수(건)	1,476	709	439	65	44	14
투자액(십억\$)	372.7	148.2	148.25	15.6	10.0	4.3
글로벌 비중(%)		39.8	39.8	4.2	2.7	1.1

- 모태펀드 등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에 유동성 마중물을 지속 공급 하면서,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 검토

4.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①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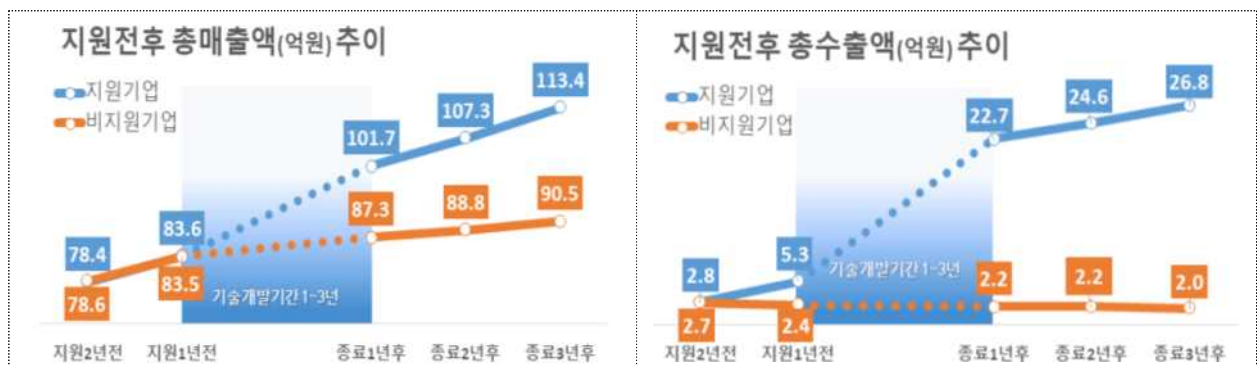
-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R&D·금융·수출·판로 등 중점 지원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R&D 확대)**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17. 1.17조원→'22안 2.53조원) 하였으며, 수혜기업은 매출 확대, 일자리창출 등 우수한 성과* 창출

* 주요성과('15~'19) : 매출(35.6%↑), 수출(405.7%↑), R&D투자(42.4%↑), 영업이익(31.8%↑)
일자리창출('17~'20) : 58,958명의 고용창출(누적기준)

< R&D 지원-비지원 기업 간의 성과 비교·분석 결과 >



- **(수출 지원)** 화상상담회·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등 수출지원 방식 다양화, 국가대표 중소기업 제품 브랜드 '브랜드K' 출범 등 추진 중
 - 중소기업 수출은 '20년 11월부터 11개월 연속 수출실적이 증가, '21.3분기 288억달러를 수출하며 역대 3분기 실적 중 최고치 기록
- **(혁신금융 공급)** 실패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18.4~), 어음제도 개편('21.6) 등 혁신적 정책금융 지원체계 구축
 - 연대보증을 폐지 후, 정책금융기관은 총 64.2조원('21.8 기준)의 대출·보증을 연대보증 없이 중소기업에게 지원
- **(공공구매 촉진)** '20년 기준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116.3조원으로 전체 구매액(145.8조원) 79.8%를 차지
 - '19년 대비 '20년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11.3조원(2%p) 증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 및 대상 기관 >

구 분	'18년	'19년	'20년
총 구매액(조원, A)	123.4	135.0	145.8
- 중소기업제품(조원, B)	94.0	105.0	116.3
- B/A(%)	76.2	77.8	79.8
대상 기관(개)	836	837	838

- **(사업전환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17~'20년 **4,541억원의 사업전환자금** 지원
 ※ '17~'19년 사업전환 계획을 완료한 **306개 기업**의 매출이 **26.5% 증가**하였고, 고용 **996명 창출**

3 향후 과제

- **(R&D 강화)** 산학연 혁신플랫폼 구축,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등에 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개발 프로세스별 인프라* 공급 확대
 * 연구장비·연구인력 활용, R&D 기획·사업화 지원 등
- **(수출 지속지원)** 전 세계적인 물류대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마련, 물류바우처를 통한 운임 보전 등을 지속 지원 필요
- **(정책금융 강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단계적 확대, 종이어음 폐지 검토, 상환청구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등 필요
- **(공공구매 촉진)** 중기제품 구매 실태조사, 대기업제품 구매, 중기간 경쟁 입찰 위반 등 사례를 조사하여 시정하여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이행력 제고
 ※ 실태조사수/공공기관수(개) : ('18) 220/788 → ('19) 227/837 → ('20) 230/837
- **(사업전환 고도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중소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업전환 제도 정비*** 및 지원 강화**
 * 사업전환 대상 확대(동일업종 내 유망품목 전환 등), 공동 사업전환 신설('21.10, 사업전환법 개정안 발의)
 ** 사업전환자금 확대 추진 : ('21) 1,000억원 (224개사) → ('22.안) 3,000억원 (540개사)

5.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 저탄소화 및 지역혁신

① 추진 배경

- 중국 등 新제조강국*, 환경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저탄소화를 촉진하고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지역혁신 거버넌스 기반 마련

* (獨) 인더스트리 4.0 (美) Manufacturing USA (日) Society 5.0 (中) 중국제조 2025 등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스마트 제조혁신)** '21년 9월까지 약 2.4만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함으로써 중소기업에도 스마트제조 저변 대폭 확대

< 스마트공장 연도별 보급 목표 및 실적 >

구분	'19목표	'19실적	'20목표	'20실적	'21목표	'21실적	'22목표
구축수(개, 누적)	12,200	12,660	17,800	19,799	23,800	23,859	30,000

- 스마트공장으로 생산성 29% 향상, 품질 43% 개선 등 경쟁력이 향상되고, 매출 증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경영개선 효과 확인

< 스마트공장 도입 후 성과 ('14~'18년 도입기업 7,903개社) >

공정개선 성과				경영개선 성과		
생산성(P)	품질(Q)	원가(C)	납기준수(D)	고용	매출액	산업재해
28.5% ↑	42.5% ↑	15.5% ↓	16.4% ↑	2.6명 ↑	7.4% ↑	6.2% ↓

※ 출처: (P·Q·C·D) 사업완료보고서, (고용/산재) 고용부, (매출액) 한국기업데이터

- **(저탄소화 촉진)** 고탄소배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공정혁신·금융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영전환을 지원

* 탄소중립 경영혁신 혁신바우처 ('21년, 100억원)를 통해 고탄소 제조 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탄소저감 컨설팅 및 기술 시험·인증 등 '탄소중립 경영혁신' 지원

- 저탄소·친환경 분야 新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탄소중립형 규제자유특구 지정 (1~5차, 총 14개)

- **(지역혁신 촉진)** 시·도 주력산업(48개)을 지역균형 뉴딜 중심으로 개편하고, R&D 및 사업화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 ('20) R&D 1,277억원, 비R&D 964억원 투자 → 일자리 2,634개, 매출 2,180억원 창출

주요 사례

- **[수0텍]** 바이오센서 기반 초소형·저전력 진단시스템을 개발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진단키트를 보급함으로써 K-진단키트라는 글로벌 트렌드를 만드는 데 기여
 - 전년 대비 매출액 975%, 수출액 3,254% 증가



-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법률체계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7월)
 - *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정부-지역 간 협력 거버넌스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근거 마련
- **(규제자유특구 지정)** '19.7월 이후 총 6차례 29개* 특구를 지정 ('21.11) 하여 신기술 세부실증사업 73개에 대해 144개 규제특례를 허용
 - * 미래교통 (8개), 에너지·자원 (10개), 바이오헬스 (6개), ICT (5개)
- 1,813명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2조 728억원 (VC투자 포함), 기업이전 202개사 등 성과 창출

3 향후 과제

- **(스마트 제조혁신)** K-스마트등대공장*, 디지털클러스터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AI 제조 플랫폼(KAMP**) 등 인프라와 제조혁신법 등 기반 구축
 - * 업종별 대표기업을 선정, 스마트공장의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선도형 공장 100개 구축(~'25)
 -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①제조 데이터 저장·분석 인프라, ②인공지능 개발·활용 도구, ③인공지능 데이터셋과 표준모델, ④상품화된 인공지능 제조 서비스 (솔루션), ⑤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탄소중립·ESG 대응)** 탄소중립 관련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ESG 지원방안**' 마련 ('21.4분기) 후 후속조치 이행
 - * '22년 탄소중립 예산 2배 이상 확대 추진 ('21 2,397억원 → '22안 4,840억원)
 - ** ESG 체크리스트 마련, 중소기업 ESG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ESG 민관협의회 구성 등
 -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를 중소기업 정책자금 평가에 우선 활용 ('22~)하고, 他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는 단계적 도입 ('23~)
- **(지역혁신 강화)**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지역혁신 선도기업 발굴·육성* 및 지역위기대응 체계 구성·운영 추진
 - * 지역스타기업, 규제특구 사업자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발굴('22, 100개사) 및 육성
-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규제자유특구 안착화(1·2차 특구) 등 후속조치 진행
 - 실증이 종료되는 특구의 사업화를 위해 관련 규제법령의 신속한 정비와 임시허가 등 특례조치 병행

6.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 확산

① 추진 배경

- 상생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성장 기반 마련
-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포용적 상생 확산)** 대기업의 축적된 자본, 경험,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온라인 진출 등 지원
 - (자상한기업) 34개사(∼'21.10)와 123조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소상공인 온라인진출, 벤처투자, ESG경영 등 지원
- ※ 자상한기업 : 전통적인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을 넘어서,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 등의 강점을 미거래기업·소상공인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 자상한기업 협력 사례 >

- ▶ 자상한기업 삼성전자와 품림파마텍 연결 →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으로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개발 및 FDA 인증 지원

- (소재·부품·장비 상생모델) 대기업이 판로를 보장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생산 가능한 상생모델을 발굴·승인(13개)하여 R&D, 정책자금 등 지원
- ※ 13개 상생모델 국산화 성공시 향후 5년간 매출 2,620억원 투자 610억원 고용 278명 창출 예상
- (상생협력기금) 대기업 등이 5년간('17~'21.9) 9,570억원을 조성하여 협력사 등의 기술개발, 성과공유, 해외진출 등 다각적 지원
- ※ 출연액(억원) : ('17) 1,571 → ('18) 2,013 → ('19) 2,006 → ('20) 2,572 → ('21.9) 1,408
- (상생결제) 5년간('17~'21.9) 상생결제액 540조 8,192억원 달성하여 중소협력사의 자금순환 개선에 기여
- ※ 결제액(조원) : ('17) 96.6 → ('18) 107.4 → ('19) 115.6 → ('20) 119.8 → ('21.9) 104.4
- **(수·위탁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제도개선, 법 집행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 (납품대금 제값받기) 수·위탁거래에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신청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19.1)
- ※ 공공기관도 상생협력법에 따라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가능(법제처 유권해석, '21.7)

- (기술보호)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도입('18.12)하고,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이내) 도입('21.8)
- (상생조정위원회) 민·관협업을 통한 불공정사건의 조정·중재를 활성화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21.9월 기준 28건 조정성립)
- **(사업영역 보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18.6),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20.10) 등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 강화
 - * 사업개시 등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시 과태료 상향(5천만원 → 1억원)
- 적합업종 지정(13건) 및 상생협약(59건), 사업조정(153건) 등을 통해 약 24만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및 경쟁력 확보 기회 제공
 - ※ 지정·상생협약 실적('17~'21.9) : (중기적합업종) 지정 2건, 상생협약 47건, 시장감시 6건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11건, 상생협약 12건, (사업조정) 권고 11건, 자율조정 142건

③ 향후 과제

-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온라인플랫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협력 촉진 및 불공정행위 등 규제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배달앱 상생협의회* 사례를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해 상생협력 유도
 - * 배달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와 소상공인협단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20.9~)를 운영하여 수수료인상 자제 효과 및 과거 주문내역 제공 등 6개 과제 해결
 - 상생협의회 설치, 정당하지 않는 수수료인상 금지, 분쟁조정 절차 등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추진
 - ※ 상생협력법 개정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21.2.4.) → 산중위 법안소위 회부(4.23.)
- **(골목상권 보호)** '사업조정 권고' 및 '자율조정 상생협약'에 대해 이행여부 점검과 이행을 강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제고에 한계
 - ※ '09년~'21.9월말 완료한 사업조정 중 77.8%(1,028건 중 799건)가 자율조정
 - 사업조정 권고사항 및 자율조정 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점검과 불이행시 이행권고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조정 실효성 제고
 - ※ '22년 상반기 개정안 국회 통과 목표
- **(자상한기업 확산)** 자발적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자상한기업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누적 50개, ~'23)
 - *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연간 백서 발간, 이벤트·설문조사 개최 등

방송통신위원회

1. 미디어산업 활력제고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강화

① 추진 배경

- **(OTT·플랫폼 영향력 확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과 OTT** 등 신유형 서비스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
*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 ('10년)25.2조 → ('15년)54.1.조 → ('19년)135.3조 → ('20.6월)74.3조
** OTT서비스 이용률 : ('17년)36.1% → ('18년)42.7% → ('19년)52.0% → ('20년)66.3%
-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이용자보호 필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등이 확대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용사업자 또는 이용자에 불공정 행위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플랫폼 산업의 종합적 규율체계 마련 시급
* 온라인쇼핑몰 이용사업자의 60.8%가 불공정행위 경험('19.9월, 한국법제연구원)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화)** OTT를 포함하여 미디어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법제로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마련 추진
 - 미디어 환경, 사회적 영향력, 경쟁 관계, 사업자 규모,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OTT를 제도권으로 편입 추진*
 - * 새로운 규제체계의 기본방향, 서비스 분류 등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반 운영 ('21.4월~)
-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마련)** 플랫폼사업자-이용사업자-최종 이용자 간 불공정행위 및 서비스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20.12월 발의, 전해숙 의원) 제정 지원
 - 현재 국회 정무위 발의법안(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과 유사·중복규제 조정*을 위한 부처협의 진행 중('20.10월~)
 - * '온라인 플랫폼 법제 포럼' 운영을 통해 법제 조정 논의 지원('21.6월~)

③ 향후 과제

-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신규입법을 완료하고 공공성 제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체계 개선
 - 지상파, 유료방송, 종편·보도PP 등 현재의 매체별 칸막이식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서비스별 경쟁 활성화·공익성 제고·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수평적 분류체제로 개편
 - 공영부문 역할 강화 및 민영부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영과 민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영부문 '공적책무 협약제도' 도입, 민영부문 기존 규제 완화 등 맞춤형 정책 추진
- **(역동적인 플랫폼 경제 구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22하)으로 중·소상공인·스타트업 등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통신·인터넷 분야 혁신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 촉진
 - 플랫폼사가 검색·추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련 정보를 나열하는 순서·기준 공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한 선택권 부여 의무화 등 플랫폼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 플랫폼 이용사업자도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기업의 데이터 개방 의무화 추진
 -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를 위해 해외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부정확한 매출액 자료 제출 시 매출 추정액 산정방안 제도화 등 추진

2.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

① 추진 배경

- 앱마켓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의무화, 결제수수료 30% 부과 등 결제정책을 변경하여 이용자와 앱 개발자의 이익 저해 우려 제기
-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들은 독점적 빅테크 기업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가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창출을 저해하고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요구

2 추진현황 및 성과

-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금지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방지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행('21.9월)

< 전기통신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

- ▶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제22조의9제1항)
- ▶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2조의9제2항)
- ▶ **이용요금 결제,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2제1항제6호)
- ▶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제50조제1항제9호~11호)

3 향후 과제

- **(이용자 피해 예방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1.9월)에 따른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불공정 행위 파악 및 이용자 보호 추진
 -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등 마련을 위한 법령 제·개정
 - 앱 마켓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 민원 접수 및 소관 기관·기구 등에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마련('23년~)
- **(앱 마켓 생태계 개선)** 국내 앱 마켓 및 콘텐츠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기반의 생태계 개선 지원
 - 앱 마켓 생태계 개선을 위해 국내·외 앱 마켓 시장 및 주요 플랫폼 비즈니스모델 비교·분석, 앱 마켓 생태계 단계별 특성(개발 → 심사 → 등록·노출 → 거래 →이용 구조)을 반영한 주요 아젠다 발굴 등 추진
 - 국내 앱 마켓 및 콘텐츠 사업자의 공정 경쟁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앱 마켓 및 콘텐츠 사업자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

3. 디지털 성범죄물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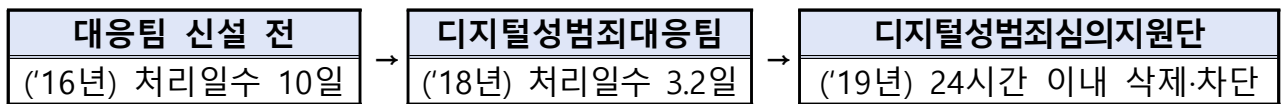
① 추진 배경

- N번방, 박사방 등 신유형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처벌 실효성 강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성범죄물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N번방, 박사방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수립('20.4월)
- **(피해자 신속 지원)** 야간 시간대 피해자 상담 및 삭제 지원이 취약한 점을 개선, 영상물 삭제·상담·수사 관련 **24시간 종합지원 체계 구축**
 - 신고 후 영상물 삭제까지 현재 24시간 내 처리하고 있으나, 보다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온라인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본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先삭제(자율조치)** 요청 및 긴급심의 실시

<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소요기간 단축 : 24시간 이내 >



- **(법령 개정)**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시행('20.12월)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 내용 >

- ▶ 웹하드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물 재유통 방지를 위해 웹하드사업자의 불법음란물 기술적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2천만원 → 5천만원)
- ▶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신고·삭제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없이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신설
- ▶ 부가통신사업자에 필터링 등 사전적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21.12월 시행)하고, 삭제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 ▶ 해외사업자에 명확한 의무부과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에 역외규정 도입 및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방통위에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법 개정 후속조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여부 점검·법정교육 실시, 사업자별 불법촬영물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 확인 및 홈페이지 공개 등
- **(불법촬영물 대리신고제도 시행)**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피해자 본인을 대신하여 영상물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지정·고시('20.12월)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디지털 성범죄 사례, 다각적 관점에서의 대처·예방 방법 등 학부모 대상(유아, 초등, 중·고등 총 3종)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20.6월) 및 실시('21년, 청소년 10,282명/성인 30,871명 교육)
- **(공공 DNA DB 구축·배포)** 웹하드 등에서 불법촬영물의 재유통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물의 고유한 데이터 특성인 DNA 값을 추출, DB로 구축·배포*
 - *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19.11월)에 따라 방심위 심의결과 및 경찰청·여가부·방통위에서 확보한 피해영상물을 '공공 DNA DB'로 구축·배포 추진
- **(온라인 청소년 유인행위 사전 감시)** 디지털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심존 SW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 도입 및 보급('20.5월~)

③ 향후 과제

-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관리 강화)** 국내외 인터넷사업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검색제한, 필터링 및 게재제한, 사전경고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21.12월~)
 - * 웹하드 사업자,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
- **(홍보·교육 강화)** 강화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빠른 제도 안착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및 사업자 대상 제도 안내 및 인식제고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22.10월~)
- **(시스템 고도화)**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투명성보고서 결과분석, 통계관리, 운영UI 개선 등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24.~)
 - 음란물 판별 기능 고도화를 위한 AI 등 신기술 활용 및 방심위 등 유관기관 간 연계기능 강화

4. 방송시장 규제체계 혁신

① 추진 배경

-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를 위해 중간광고 허용 등 지상파-유료방송간 비대칭규제 해소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비대칭규제 해소)** 지상파에 금지되어 온 중간광고를 매체 간 차별 없이 허용하고, 광고 총량(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 및 가상·간접광고 시간(7/100)을 매체 간 동일하게 규정
-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허용원칙 마련 및 시청자가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화면의 1/32 이상) 신설
 - 또한, 중간광고 규제(시간·횟수)를 우회하여 시청자불편을 초래한 분리편성 광고와 중간광고의 통합적용기준* 마련

*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1부·20부 등으로 분리하여 그 사이에 편성하는 분리편성광고를 중간광고로 보아 중간광고와 동일하게 시간·횟수를 통합 적용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비대칭 규제 해소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중간광고	고지의무만 규정	방송매체 구분 없이 허용 - 허용원칙,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 분리편성광고는 중간광고와 시간·횟수 통합기준 적용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지상파방송-유료방송간 차등 규제	방송매체 구분 없이 동일 규제 적용

③ 향후 과제

-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포지티브 방식의 광고규제를 프로그램 내·외 광고로 단순화,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22년~)
 - 불필요한 형식규제 개선, 시청권 보호를 위한 시청자 영향평가 도입 등 추진
- **(협찬제도 개선)** 방송프로그램과 홈쇼핑 연계 편성 등 협찬을 통한 소비자 기만 방지를 위해 협찬주 상품 등의 기능·효능 등을 다루는 경우 협찬 고지 의무화

5. 재난방송 강화

① 추진 배경

- **(재난의 일상화)** 감염병, 미세먼지 등 일상화·대형화되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잘못된 정보로 사회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심층적인 재난정보 제공 필요성 제기
- **(미디어 이용방식 변화)** TV에서 SNS,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진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재난방송 매체·형식 다양화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제도 정비)**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재난방송 표준매뉴얼’을 개정*하여 재난방송 유형에 **감염병(사회재난)** 추가
* 감염병 관련 재난방송 요청시기, 판단기준 등을 명시하여 표준매뉴얼 개정('20.12월)
- **(미디어 취약계층 정보제공 강화)** KBS에 한국수어·외국어자막 재난방송 실시의무 부과('20.3월, 고시개정)* 및 한국수어 통역사 재교육 지원('20년~)
* 재난방송 시 한국수어, 영어자막 방송을 신속하게 실시(주관방송사는 의무)하도록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방통위 고시, '20.3월)



정부브리핑(한국수어)



뉴스(한국수어·중국어)



국민행동요령(한국수어·영어)

- **(다양한 유형의 재난방송 실시)** 주요방송사(지상파, 종편·보도PP 등 9개사)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정보 전달을 위해 채널 특성에 맞는 정규 뉴스, 재난 특보, 재난 시 국민행동요령* 등을 다양하게 방송('20년~)
* ('20년) '여름철 물놀이', '집중호우', '폭염' 등 TV용 국민행동요령 40편 제작
(‘21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수칙' 등 TV 및 라디오용 행동요령 78편 제작·공유 예정



- **(종합계획 수립)** 일상화·국지화되어 가는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발표(‘21.8월)

<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주요 내용 >

- ▶ **(빠짐없는 재난방송)**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사각지대 없이 재난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체계 개선
- ▶ **(정확하고 심층적인 정보제공)**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제공 기반 마련을 통해 신뢰성 있는 재난방송 실시
- ▶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방송)** 전국 1만명 재난방송 ‘시민안전통신원’ 운영 및 교육, 수어통역사 재교육 등
- ▶ **(재난방송 관리·운영체계 효율화)** 재난방송 법체계 정비, 중앙·지방 재난방송협의회 연계 강화,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구축 등

- **(컨트롤 타워 설치)** 재난방송 모니터링 강화, 정보 공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구축(~’21.11월)

③ 향후 과제

- **(재난방송 역할 강화)**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재난방송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 **(매체 확대)** 재난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동체 라디오 허가 확대 및 온라인(OTT, SNS 등) 등 재난정보 제공 매체 확대
 - **(전문채널 신설)** 재난 심층정보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 전문채널 신설 추진
 - **(종합정보센터 설치)** ‘재난방송 종합정보센터’ 설치하여 방송사에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

6.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및 시청자 복지 제고

① 추진 배경

- **(미디어 이용률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로의 전환과 디지털 미디어 발달으로 전 국민의 미디어 이용이 크게 증가
 -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확대 필요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시·청각장애인 등이 방송콘텐츠를 불편함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미디어 환경 개선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맞춤형 미디어교육 확대)**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방송 장비·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활용 교육 실시
 -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등 생애주기별, 학교·마을공동체·소외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확대*('21.9월 기준 20만명)
 - * 학교 미디어교육 : ('18년) 333개교→('19년) 362개교→('20년) 400개교→('21년) 405개교
마을 미디어교육 : ('18년) 50개 → ('19년) 70개→ ('20년) 80개→ ('21년) 90개 마을
 - 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힘든 원거리 지역민, 노인·장애인 등에게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미디어교육 및 방송시설·장비 대여를 무상 지원하는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소외계층·지역민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위한 '미디어 나눔버스',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 등 인프라 확대
 - 1인 제작실, 교육장·공개홀 등 미디어 시설과 드론 등 장비를 갖춘 시청자 미디어센터 확대* 및 소외계층 지역민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확충**
 - * 시청자미디어센터 : '20년 8개 → '21년 10개 → '22년 12개 예정
 - **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 '21년 2대 → '22년 8대 예정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언제 어디서든 미디어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을 구축하여 온라인 미디어교육 제공('20.10월~)

-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연 15,000대) 및 장애인방송(자막·해설·수어) 제작 지원,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연중)
 - * 저소득층 누적보급률 : '18년 68% → '19년 80% → '20년 99% → '21년 100% 목표
- **(종합계획 마련)**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소외 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발표('21.10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주요 내용 >

- ▶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세계 선도)** 선진국(영국, BBC) 수준 이상의 한국수어 방송 의무편성 비율 상향
- ▶ **(장애인방송 편성 범위 확대)** VOD, OTT 등 비실시간 방송에서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추진
- ▶ **(기술 혁신)**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과기정통부 R&D 협업)
- ▶ **(미디어 법제도 기반 조성)** 장애인방송 지원 기본법(의사결정기구 마련, 장애인 방송 품질평가 등) 제정 및 장애인방송 디지털기기 제조·콘텐츠 제작 시 표준화 추진

③ 향후 과제

- **(미디어교육 기반 강화)** 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 확대 및 교육 인프라 지속 구축 추진
 - 미디어 교육 대상 확대,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등과의 시설·자원 공유 및 협업 활성화 등 추진
 - 미디어 교육과 체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및 ‘미디어 나눔버스’ 확충,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 고도화 등 인프라 확대 추진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소외계층의 미디어 포용 강화를 위해 5개년('21~'25년) 종합계획 주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
 - * **(1단계: '21년 하반기)** 제작 지원 및 법제도 정비, **(2단계: '22~'23년)** 기술 고도화 및 질적 평가제도 도입, **(3단계: '24~'25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법제 구현
 - 장애인방송 관련 고시 개정(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 및 시·청각 장애인용 TV 저소득층 누적보급률 100% 달성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1.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① 추진 배경

- **(디지털 전환)** IT기술이 발전하고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는 등 경제의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 온라인 시장에서 플랫폼을 통한 거래 비중 : ('17) 33.2% → ('19) 44.9% (온라인쇼핑협회)

- **(플랫폼의 명암)** 플랫폼의 연결성과 데이터 활용성을 토대로 새로운 사업기회가 열린 반면,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 우려도 심화

* 입점업체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오픈마켓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앱 39.6%, 숙박앱 69.4%,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60.8% (중소기업중앙회, 법제연구원)

*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 : ('16) 142,327건 → ('20) 214,872건 (소비자원)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비전제시)** 디지털경제의 갑을·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종합 대응 방안을 담은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 ('20.6월)

- **(법집행)** 플랫폼·ICT 분야의 경쟁제한·소비자이익침해 행위 시정

- 구글의 경쟁OS 출현 방해('21.9월, 과징금 2,074억원), 네이버의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을 위한 알고리즘 조정('20.9월, 과징금 267억원) 등 제재
- 배달앱(배달의 민족-요기요), 방송·통신분야에서 독과점을 형성·강화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기업인수합병(M&A) 적극 시정
- 주요 플랫폼 및 온라인 사업자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 SNS 등을 통한 부당광고** 등 시정

* 부동산중개·카셰어링·P2P대출·호텔예약 플랫폼('17년), 웹툰서비스('18년), 검색포털·게임서비스('19년), 배달앱·전자책·전기차('20년), OTT·스마트학습지·온라인중고차('21년)

** 온라인랜덤박스('17년), 게임('18년), 1인미디어음원서비스('19년), SNS기반 쇼핑몰·소개팅앱('20년)

- **(규범 마련)**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 규범 마련 및 보완
 - 디지털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및 온라인 중심의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마련
 - 플랫폼 사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제거하는 ‘킬러인수’ 심사를 위해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20.12월,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법·유통업법 등 법집행 기준*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구체화
- * 온라인 쇼핑몰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21.1월), 온라인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 심사지침 마련(‘21.11월 행정예고 예정) 등

3 향후 과제

- **(플랫폼 입법)** 시급한 민생법안으로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집행력 확보
 -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여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고, 전담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입점업체 및 소비자 피해구제 내실화
- **(ICT분야 법집행)** 빅테크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집행 강화
 - 국내외 독과점 플랫폼의 선수와 심판의 이중적 지위를 이용한 자사우대, 노출순위 조정 등 경쟁제한행위 감시·시정
 - 맞춤형 타겟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 데이터를 활용한 독점력 남용행위에도 엄정 대응
 - 정보 제공과 광고의 구분이 어려운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기만적 검색광고, SNS 뒷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감시
- **(경쟁법제 개선)** 우리 경제 현실과 외국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하여 경쟁법제를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 검토
 - 플랫폼이 M&A를 통해 인접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강화하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심사기준 보완 검토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단독행위 규율 조항을 디지털 경제에 맞춰 보완·개선 검토

2. 대 ·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마련

① 추진 배경

- **(포용적 회복)** 비대면 경제 전환·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부정적 충격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집중되면서 포용기반 확대 필요성은 더욱 증가
- **(공정경제 구현)**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갑을분야의 신속한 문제해결 및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중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제도개선)** 갑을관계가 고착화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을의 거래조건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분 야	주요 제도 개선 내용
하도급	전속거래 강요부당경영정보요구 금지, 임금체불 하도급업체에 직접지급 제한 의무화('19.4월)
가맹	신용훼손 시 점주에 손해배상 명시('18.10월), 직영점 1개·1년 이상 운영 의무화('21.4월)
유통	복합쇼핑몰·아울렛을 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추가, 영업시간 단축권 보장('18.3월·10월) 직매입거래에 대금 지급기한 도입,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 받은자도 보호('21.4월)
대리점	서면실태조사 및 공정거래협약 근거 마련('18.1월·12월)

- **(법집행)** 불공정 빈발 분야 감시·감독 강화 및 지자체 협업체계 마련
 -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전방위 대응*하고, 유통분야 약자에 대한 고질적인 갑질 행위 집중 감시·시정**

*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17년~'20년 총 7,968억원의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유도

** 롯데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19.11월),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관련 동의 의결('20.5월), BBQBHC의 점주단체 불이익 제공('21.5월), 쿠팡의 경영간섭 및 판촉비용 전가('21.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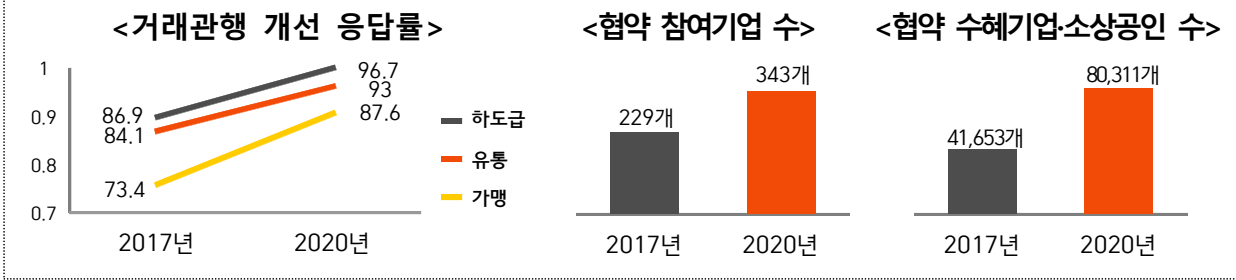
- 다층적 거래구조에서 취약한 지위를 갖는 플랫폼노동자(택배·배달 기사)에 대한 거래 단계별 계약서 점검 및 시정
- 지역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광역 지자체(서울·경기·인천·부산)에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 **(상생유도)** 포용기반 마련을 위한 자율준수기준 확대* 및 상생문화** 조성

* 표준계약서 보급 업종(가맹 4종→9종, 유통 7종→10종, 대리점 6종→12종)

** 가맹점의 영업중단 등 손해를 부담하는 "착한프랜차이즈" 지원, 신생 유통기업 상생컨설팅 등

- ▶ (거래관행 개선 및 공정거래협약 확대) 갑을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율이 크게 증가했고,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 수도 대폭 확대



3 향후 과제

- **(제도보완)** 변화하는 거래·유통 환경에 대응하여 제도 개선
 - 디지털경제 확산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유형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방안 등 검토
 - 유통 3법(가맹·유통·대리점법)을 비대면 시대에 적합하도록 개선
 - * (예) 정보공개·영업지역 등 기존 가맹제도를 비대면 시대에 적합하도록 개선, 서면 교부 의무에 있어 전자계약 체결 시스템의 보편화를 반영
- **(지역현장 감시역량 제고)** 법 집행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 지방사무소, 지자체 등 지역 현장의 집행 기능 강화
 - 법 집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지방사무소의 감시역량 강화
 - 지역 내 공정거래 분쟁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 및 협력 강화*
 - * 단속법규 위반 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여 지방 이양하는 방안 등
- **(피해구제 강화)**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가맹분야에 운영중인 가맹종합지원센터*를 갑을 전분야로 확대개편
 - * 고충상담, 분쟁해결방안 제시, 피해예방 및 법준수 교육, 소송지원 등
 - 갑을관계 사건에서 피심인이 조사·심의 단계에서의 피해구제 여부를 **과징금 수준과 연계**(예: 피해구제 수준에 비례하여 감경)하는 방안을 강구
 - 분쟁조정외 전문·신속성 제고를 위해 ‘(가칭)공정거래분쟁조정기본법’ 제정 및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검토
 - 중재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거쳐 도입여부 검토

- **(사건처리 신속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절차 및 인프라 개선
 - 경미한 사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 전결처리 및 약식처리, 위원 단독심의제 도입 등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검토
 -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무처 조사 기능 및 위원회 심결 기능 강화 방안 검토

3.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① 추진 배경

- **(경제력 집중)**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여전하고 상위 집단으로의 쏠림**은 더욱 심화

* 30대집단의 GDP 대비 자산총액 : ('02) 57.6% → ('19) 99.4% → ('20) 103.5%

** 5대집단/30대집단 자산비중 : ('00) 59.1% → ('10) 53.5% → ('20) 60.6%

- **(소유·지배 괴리)**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과 지배력 간 괴리*로 인해 사익편취 행위, 부의 편법승계 등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 상존

*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제도개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기업집단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 ('20.12월)

분 야	주요 제도 개선 내용
지주회사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회사의 지분을 요건 강화(상장 20%→30%, 비상장 40%→50%)
공익법인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
금융보험사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예외적 의결권 허용 사유에서 '계열사 간 합병' 제외
순환출자	신규 지정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
사익편취	총수일가가 20%이상 보유 회사 및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로 감시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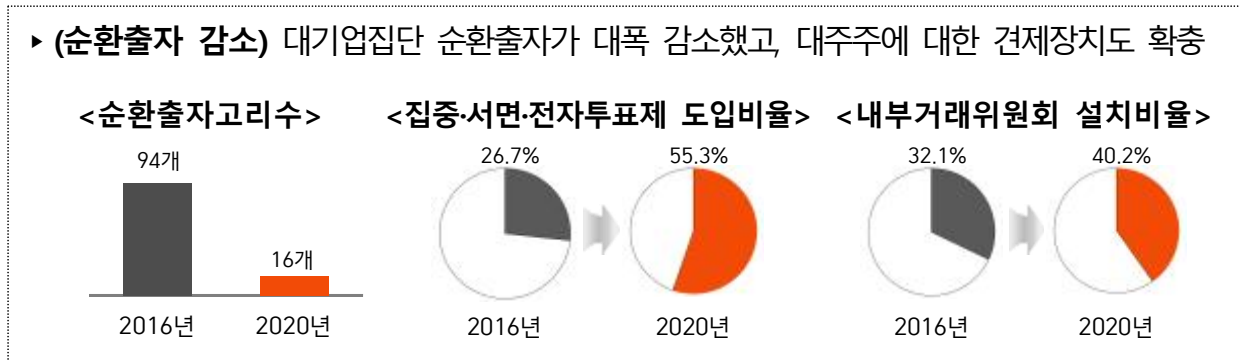
- **(법집행)**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등 부당내부거래 엄중 제재

* 현정부 출범 이후('17.9월~'21.10월) 삼성·SK·금호아시아나·미래에셋·하림·SPC 등 17개 집단을 제재하여 총 4,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연인 22명·법인 36개사 고발

- **(자율개선)**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고도화*하여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내부거래가 고착화된 급식·물류 분야의 자율적 일감 개방 유도**

* 지주회사 체제 내 내부거래 공시 강화, 물류·IT서비스 관련 내부거래 공시 확대
기업집단별 주요 내부거래도 공개, 총수일가의 계열사 임원겸직 현황 공개 등

**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 개최('21.4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마련('21.7월) 등



③ 향후 과제

- **(행태개선 유도)** 부당내부거래 등 불합리한 행태에 대한 대응 강화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도입된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사업자 교육 및 소통을 강화하여 자율 준수 유도
 -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
 - 감시역량 확충을 위해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강화
- **(제도의 합리성 제고)** 대기업집단 시책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편
 - '87년 도입 이래로 그 틀이 유지되고 있는 지정제도에 대해서 그간 경제·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성 제고 방안을 모색
 - 시장의 자율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공시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
 - 중장기적으로 공정경제 3법 운용 성과, 기업 지배구조 및 거래 행태 등을 종합 분석하여 기업집단에 대한 최적 규율 방안 모색

4.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① 추진 배경

- **(지속가능한 성장)** 우리 경제가 혁신을 동력삼아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혁신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기술이 보호받는 여건 조성 필요
- **(경쟁원리 확산)** 경제 회복 과정에서의 정부개입이 경쟁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당국의 적극적 경쟁주창*이 요구됨

*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 법 집행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타 정부기관과 일반대중에게 경쟁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경쟁의 혜택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경쟁제한행위 시정)**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담합 및 불공정행위 시정
 - 스크린도어 입찰담합, 신체검사로 담합, 철강제품 운송용역 담합 등 국민건강·안전을 위협하고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담합 엄정제재
 - 결핵백신 출고조절, 기술라이선스 관련 끼워팔기, 특허소송을 통한 경쟁자 거래 방해 등 독과점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적발·시정

- **(기술보호)** 기술유용 전담조직을 신설('17.11월)하여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장치를 확충**

* 전담조직 출범 후 두산인프라코어('18년), 현대건설기계('19년), 현대중공업('20년) 등 13건의 기술자료 관련 법위반을 적발했고(과징금 27억원 부과), 23건에 대해 조사중

** 하도급법상 보호되는 기술 범위 확대('18.4월, '21.7월), 비밀유지계약체결 의무화('21.7월)

- **(벤처투자 활성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 벤처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5%한도 내 허용) 폐지

- **(규제개선)**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개선*

* 수제맥주 유통망 제한 개선 및 제조시설 규제 완화, 소액 해외 송금 한도 상향, 온라인·비대면 판매 업종에 대한 사무실 규제 완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등

3 향후 과제

- **(법정부 협업체계 구축)** 법정부차원에서 경쟁원리를 확산하고 공정거래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합리적 협업체계를 모색*

*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 을지로민생현안회의 등을 발전적으로 개편·보완하는 방안 등 검토

※ 美 바이든 정부는 경쟁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정책담당 특별보좌관(빅테크전문가 Tim Wu 교수)을 임명하고, 백악관 내 경쟁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집행역량 강화)** 혁신 분야의 전문적 법집행을 위한 역량 강화

- 대학·연구소·특허청 등 전문기관 협업 및 전담조직 강화를 통해 기술유용 및 신기술 분야(AI, 데이터 등) 불공정행위 대응체계 강화
- 사건 경제분석 기능 내실화 및 글로벌 M&A 등 급증하는 기업결합 수요에 대응한 심사역량 확충 등 법집행 전문성 강화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고도화 및 유관기관 협업 확대 등을 통해 입찰담합 감시역량 제고

- **(경쟁주창기능 강화)** 규제개선 추진체계 개선 및 경쟁영향평가 내실화

- 구조적 경쟁제한요인 발굴·개선을 위해 주요 시장 실태분석* 실시

* 영국 경쟁당국(CMA)의 Market Investigation을 모델로 하는 방안

-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의 개선을 위해 경쟁주창역량을 강화하고, 규제 개선 추진 과정에서 국조실과의 협업 확대

- **(공정문화 인프라 확대)** 공정문화 확산 및 교육 강화 기반 마련

- 공정거래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공정거래 분야 연구, 사업자 교육, 피해구제 기능 등을 종합 수행
- 공정위 직원·조정원·소비자원·지자체·관계기관 공정거래 담당 직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인프라 마련
- CP*, CCM**, 공정거래 협약평가, 기업집단 공시제도 등이 ESG 경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검토

* CP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 CCM: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5. 소비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1 추진 배경

- **(소비환경 변화)** 비대면·모바일 거래 확산에 따라 나타나는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 **(알권리·안전할권리)** 코로나 상황에서 인포데믹(Infodemic, 거짓정보 확산) 등을 겪으며, 올바른 정보제공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2 추진현황 및 성과

- **(컨트롤타워 구축)**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17.10월)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수립·조정·평가 기능 수행
 - 소비자정책 간사부처로서 온라인·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정부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정책추진실적을 평가·공개
-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및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
 - * (예)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1년→2년, '18년), LED마스크 안전기준 마련('19년), 산후조리 도우미 자격기준 강화('20년),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 차단('21년) 등
- **(온라인 소비자지원 시스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피해 예방·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강화
 - 상품 선택부터 피해구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소비자24” 포털에서 비교·리콜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피해구제기관 연계를 확대
 -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추가부담 없이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18.4월)
- **(코로나 대응)** 코로나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제도개선 및 법집행
 - 방역대책에 따른 예약취소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 * '20.9월 음식점, '20.11월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자의 불공정행위 시정, 다수 인원이 집합하는 다단계·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 및 불법행위 시정 등

3 향후 과제

- **(추진체계 강화)** 범정부적 소비자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정부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 상시지원 체계(사무국 설치 등) 마련
 - 지역 소비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비자원 지방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
-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비자 이슈 대응체계 마련
 - 소비자 이익침해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 소비자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축적·관리·활용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비대면 거래 소비자보호)** 크게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모바일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강화 및 소비자 교육 내실화
 - 해외직구 등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피해 대응체계 강화
 - 소비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예) 청소년: 체험형 피해예방, 노인·저소득층: 디지털격차해소, 성인: 피해다발유형 등 교육
- **(소비자안전 대응 강화)**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역량확충
 - 제조물책임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공정위 역할 증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집행력 확보
 -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금융위원회

1.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및 금융불균형 완화

① 추진 배경

- **(가계부채 추세)** '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였으나, '20년들어 코로나19 대응, 자산가격 상승으로 증가세 급격 확대

* 증가율(전년동기비, %) : (16) 11.6 (17) 8.1 (18) 5.9 (19) 4.2 (20) 8.0 (21.2Q) 10.3

- **(잠재위험 요인)** 최근 가계부채의 실물경제 대비 규모 및 증가속도를 고려 시, 우리경제를 위협할 잠재위험 요인으로 부각*

- * ① 가계부채/GDP 비중이 '20년 들어 100% 초과(21.2Q 기준 104.2%)
- ② 가계부채/GDP 증가율이 주요국 비교시 매우 빠른 속도('16년말 → '21.6월말, %)
: (韓) 87.3 → 104.2 (日) 57.3 → 63.9 (佛) 56.2 → 65.8 (獨) 52.9 → 57.8 (美) 77.5 → 79.2
- ③ 향후 금리상승시 가계부담 확대 및 취약차주 중심으로 부실 현재화 가능성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가계부채 관리방안)**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 중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방안」('20.6월)

※ (주요내용) 주담대 실수요 요건 강화(처분·전입기한 6개월로 단축) 등

-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20.11월)

※ (주요내용) 차주단위DSR 대상을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1억원 이상 신용대출까지 확대 등

- 「가계부채 관리방안」('21.4월)

※ (주요내용) 차주단위DSR 단계적 추진, 비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등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1.10월)

※ (주요내용) 차주단위DSR 조기시행, 제2금융권 DSR 강화, 서민·실수요자 지원 등

- **(가계부채 진정 및 질적구조 개선)** 다양한 관리노력에 따라 코로나19로 급증한 가계부채가 '21.8월부터 다소 진정되고, 가계부채 질적건전성도 제고 중
 - 최근들어 가계부채 급증세 다소 완화
 - ※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1.1~7월) 11.3 (8월) 8.6 (9월) 7.8
 -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비중* 증가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 *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 ('16년말) 43.0 → (21.2Q) 47.5
 - 은행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 : ('16년말) 45.1 → (21.2Q) 54.1
- ⇒ 다만, 향후 경기급락·자산시장 조정 등 외부 충격시 급증한 가계 부채에 노출된 차주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이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위기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흔들림 없는 관리노력 필요

3 향후 과제

◇ 가계부채 관련 시스템리스크 촉발소지 차단 및 금융불균형 해소, 중단없는 실수요대출 공급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도모

- 금융권의 상환능력 중심 대출심사 확산 유도
 - 차주단위DSR 2·3단계 조기시행, 제2금융권 DSR 강화 등
- 최근 급증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선제적 맞춤형 관리
 - 상호금융 비조합원 예대율 개선, 다중채무자 카드로론 취급 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등
- 가계부채의 질적건전성 제고
 -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 전세대출 분할상환 유도 등
- 금융회사의 자체적 가계대출 관리시스템 내실화
 -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 내실화로 리스크관리 강화 및 책임대출 도모
-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도 취약계층·실수요자 보호 지속
 - 중단없는 전세·집단대출 공급, 중금리('22년 35조원)·서민금융('22년 10조원대 잠정) 공급 확대 등

2. 코로나19 취약계층 금융지원 및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①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매출감소, 자금난 발생 등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실물경기 악화에 따른 위기확산 가능성
⇒ 취약부문에 대한 충분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조치를 추진하되, 위기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부채 관리를 위해 질서있는 정상화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금융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 공급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금융지원조치를 신속히 추진

<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조치 주요내용('21.10.22일 기준) >

- ▶ **(소상공인 1차·2차 금융지원)**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위탁보증 대출, 집합제한업종 특별지원** 등 다양한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운영 → **1차 14.8조원, 2차 7.6조원 지원**
- ▶ **(소상공인·중소 특례보증)**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기업, 경기민감업종 기업 등 특례/신속·전액보증 등 → **신보 5.3조원, 기보 3.7조원, 지신보 9.2조원 지원**
- ▶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대출·보증상품**을 출시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우대보증** 실시
→ **보증 확대 7.1조원, 대출확대 45.2조원**
- ▶ **(만기연장·상환유예)**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 '20.4월부터 2차례 연장하여 만기연장 243.6조원, 원금상환유예 13.5조원, 이자상환유예 0.2조원 지원
-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시행

- **(자금지원)**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 40.6조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52.3조원 등 충분한 규모의 자금지원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짐

* 지원금액(조원, ~'21.10.22.) : (소상공인 1차2차 금융지원) 22.4 (소상공인·중소 특례보증) 18.2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52.3 (만기연장) 243.6 등

- **(지원 성과)** 이에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영위하여 재기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 마련

※ 개인사업자 폐업자수(만명) : ('17)83.8 ('18)83.1 ('19)**85.3** ('20)**82.8**

중소기업 업황실적(SBHI) : ('17말)85.2 ('19말)80.5 ('20말)79.6 ('20말)**66.0** ('21.9)**76.3**

3 향후 과제

◇ **코로나19 방역·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절한 시점부터 위기대응 금융지원조치를 질서있게 정상화**

- 위기로부터의 회복속도가 느린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위기극복 및 재기 지원을 충분히 하면서 정상화 유도
 - 대출 만기연장 등의 조치 종료시 차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상환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 등 지원조치 지속
- 잠재부실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조정 지원
 - 만기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권 채무조정프로그램, 프리워크아웃제도 등을 확대 지원
-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을 통한 충분한 유동성(약 4조원) 공급
 - * 산업은행 재무안정동행 프로그램, 기업은행 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밸류업 및 특례보증 등
 - 코로나 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 등에 대한 운영자금, 중소소상공인 등의 금융부담 완화 지원 추진
- 자영업자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자영업자 체질 개선 및 금융지원조치의 효과성 제고 방안 등 마련

3.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

① 추진 배경

- **(금융산업)** 디지털, 데이터, ICT 등을 기반으로 금융분야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산업자체의 경쟁력 강화
- **(금융이용자)** 핀테크 산업 육성 및 기존 금융회사 혁신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여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진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금융권 경쟁 촉진 >

- **(샌드박스)** 디지털금융 환경에 맞게 규제·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시행('19.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하고, 규제개선 결정시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시행('21.7월)
 - * 동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 + 1년 6개월 유예·면제
 - 제도 도입 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현재까지 총 15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94건의 서비스 시장 출시)
- **(진입장벽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본인가, 온라인 전문 보험회사 카카오 손해보험 예비허가('21.6월) 및 소액단기보험회사 자본금 요건 완화*
 - * 소액단기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 300억 → 20억으로 완화('21.6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금융서비스 혁신 >

- **(오픈뱅킹*)**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고자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19.2월) 및 오픈뱅킹 전면 시행('19.12월)
 - * 참여기관이 이체조회 등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방식(오픈 API)으로 제공하는 공동형 플랫폼
 - 더욱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마련('20.10월)
 - * 제2금융권 등 참가기관 확대, 선불잔액 등 제공정보 확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등

- **(마이데이터)**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발표('18.7월) 및 신용정보법 개정('20.2월)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기반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 받아 본인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종전 자유업을 허가업으로 전환
- '21.10월 현재 45개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
- **(핀테크 육성)** 금융-IT간 융합 및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추진중('21.6월~)
-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한 자금지원(연간 약 180억원) 및 「핀테크 혁신펀드」 등을 통한 핀테크 기업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체계 마련

〈디지털금융 인프라·제도 정비〉

- **(전자금융거래법)** 디지털 금융혁신 및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20.11월, 윤관석의원 대표발의)되어 국회 계류중
* [주요내용] ▲ 지급지시전달업·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및 소액후불결제 허용
▲ 디지털금융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 ▲ 디지털 리스크 관리·감독 선진화 등

③ 향후 과제

- **(샌드박스)** 샌드박스를 차질없이 지속 운용하여 새로운 혁신서비스 지속 발굴하되, 사업화 이전 단계의 핀테크 기업에도 실험기회* 부여
* (D-테스트베드) 초기 핀테크 기업 등이 사업화 이전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 사업성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의견 수렴채널 확대
- **(핀테크 육성)** 핀테크 육성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및 자금지원 지속
-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 확대,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근거 및 규율체계 마련 등 포함
-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한 투자 활성화, 해외 진출지원 등 지속 추진
- **(마이데이터)** 소비자 편의와 정보보호를 조화하여 제공정보 확대 등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자 보호방안 검토
- **(전자금융거래법)** 그간 논의를 통해 쟁점다수가 해소된 만큼,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 필요
- **(디지털금융 감독인프라 정비)** 국제사회 논의 및 국제기구 권고 등을 반영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감독·규율체계 정비 필요

4.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안전망 개선

① 추진 배경

-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상품 거래 시 판매자에 비해 관련 정보나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기반 확충 필요
- **(서민금융안전망 개선)** 서민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금융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할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3.25일 공포, '21.3.25일 시행)
 -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던 주요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 소비자보호 공백 해소
 - *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 권유 금지, 판매자의 설명의무, 허위·과장 광고 금지,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영업 금지 등
 - 판매규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 금융위 미등록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대한 형벌 부과 등 처벌 강화
 - 새로운 소비자 권리 신설* 및 소비자 사후구제를 위한 제도 확충**
 - * 소비자 청약철회권(일정기간 내 계약무효화 가능),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요구권
 - ** 판매자의 설명의무 위반상 고의과실 유무 입증책임 부과,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권 신설 등
-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고위험 투자상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종합방안” 마련('19.12)
 - ※ “고난도 금융상품” 개념 신설 및 관련 판매규제 강화(투자자 숙려제도 도입,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등),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강화(최소투자금액 1억원 → 3억원) 등
 -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21.10.21일 시행)
 - ※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 시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의무, 판매사·수탁사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불합리한 운용행위 감시의무 등 신설 등

- **(서민금융소외 방지)** 서민의 금융소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서민금융 공급 확대

- 법정 최고금리 2차례 인하를 통해 취약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7.9%→24%(‘18.2월)→20%(‘21.7월)까지 인하

< 법정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 >

- ▶ **(‘18.2월 인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이용차주(‘17년말 기준)의 약 81.4%인 113.9만명이 24% 이하 대출로 흡수(‘20.3월말 기준)
- ▶ **(‘21.7월 인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이용차주(‘20.3월말 기준)의 약 87%인 208만명이 20% 이하 대출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

-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를 통해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

* 공급규모(조원) : (‘17) 6.9 → (‘18) 7.2 → (‘19) 8.0 → (‘20) 8.9 → (‘21^e) 9.6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 일시적 소득감소로 인해 연체위험이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속 지원제도 마련 등

- **(서민금융범죄 대응)** 서민의 금융범죄 피해 방지 및 사후구제 강화

- ‘20.6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마련 →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TF* 운영

* 금융위는 TF 간사기관으로 금감원·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자 상담·채무자대리인 지원 및 국민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유튜브 「불법사금융 그만!」 운영 등) 등 추진

③ 향후 과제

-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안착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모니터링 및 현장소통 계속

- **(서민금융안전망 개선)** 연체채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소비자 신용법 제정안*」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정부안) 입법 추진

* 개인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연체이자 부담 완화(기한 내 원리금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부분에만 연체가산이자 부과) 등

** 불법사금융 6% 초과지급 이자 무효화, 불법사금융 처벌강화(벌금상한 : 5천만원 → 1억원) 등

5.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① 추진 배경

- **(국제기준)** G20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19.6월)하고, 각 국가에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
- **(법개정)**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20.3.24일 공포, '21.3.25일 시행)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의무*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
 - * 신고 요건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금융관련 법률 등 위반 후 5년 초과, 신고말소 후 5년 초과
 - ** 고객확인 의무(실명확인, 자금원천 등 확인), 의심거래보고 의무, 내부통제 마련 등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법시행 후 6개월(~'21.9.2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범부처 TF)** 국무조정실 주관 범부처 TF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21.5.28일)하여,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금융위), 블록체인 산업육성(과기부) 등을 위한 주관부처를 지정
 - 가상자산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조치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21.10.5일)
 - ※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제한, 거래업자·임직원의 해당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거래 제한 등 규정
 - 가상자산사업자 폐업에 따른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 발생시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공조
- **(설명회 개최)**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활한 신고 등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으로 신고설명회 및 현장컨설팅 등 진행
 - ※ ① '21.6.3일, 20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설명회 진행(국조실·FIU·금감원·과기부 합동)
 - ② '21.6.10일, 33개 사업자 대상 현장컨설팅 설명회 → 6.15일~7.16일 현장컨설팅 실시
 - ③ '21.9.6일 및 9.8일, 40여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신고설명회 진행(FIU·금감원)

- **(소비자경보)** 신고기한 전후로 신고요건 미비로 인한 사업자 폐업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지속 홍보
※ 보도자료 배포, 카드뉴스 게시, 유튜브 게시, 문화체육관광부 매체지원 선정 등
- **(정리계획 징구)** ISMS 인증을 획득 또는 신청한 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전부 또는 일부 영업종료시 대응계획* 징구(금감원, '21.8월)
 - * 고객 공지, 영업 및 입출금 종료, 이용자 피해구제, 이용자 잔여자산 처리절차 등 늦어도 '21.9.17일까지 영업종료(원화마켓/영업 전부) 공지후 9.25일부터 종료토록 안내
- **(명단 공개)** 신고준비 수준별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명단을 공개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자금인출 등 대응토록 유도('21.8.25일, 9.13일)
- **(피해센터 운영)**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 발생시 즉시 신고하도록 신고 직통번호(FIU, 금감원 등) 설치('21.8.16일~)
- **(사업자 신고 및 질서있는 영업종료)** '21.9.24일까지 총 42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접수
 - * 가상자산 거래업자 29개사(원화·코인마켓 4개사 및 코인마켓 25개사), 기타 13개사
 - 거래업자 중 코인마켓 영업만 신고한 25개사는 모두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미신고 36개사*의 경우 모두 영업을 종료
 - * 해당 사업자들의 '21.9.21일 기준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천만원 수준으로, 동 예치금은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고객에게 반환할 것을 사업자에게 권고
 - 정부의 영업정리 관련 안내에 따라 '질서있는 영업종료'가 이루어짐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③ 향후 과제

- **(사업자 신고심사)** 신고접수 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
 - *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 경우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 **(사업자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수리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

국 세 청

1. 다각적 세정지원을 통한 국민경제 활력 뒷받침

①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반적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차원의 지원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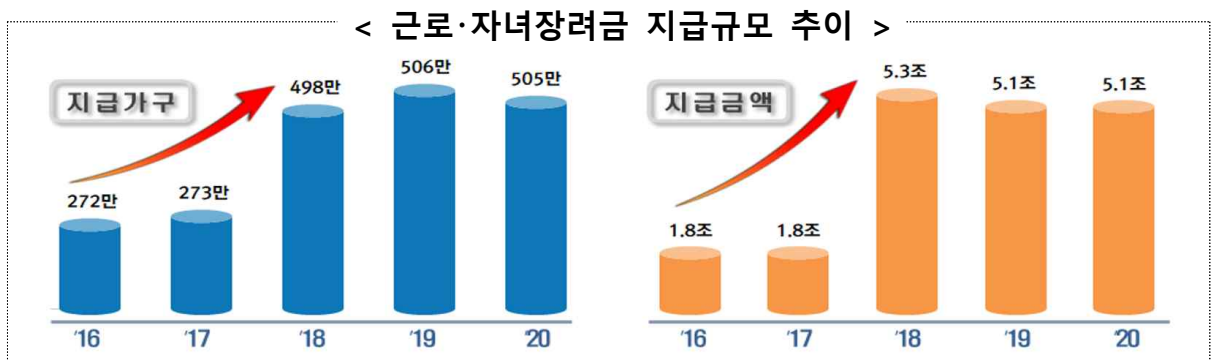
- **(적극적 세정지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맞춤형 세정지원 실시
 - 코로나19 피해납세자에 대해 조사유예 및 연기·중지를 적극 실시하고 전체 조사건수와 신고 내용확인을 축소 운영하여 세무검증 부담 완화
- ※ 전체 조사건수 : (코로나19 前) 16천여 건 → (코로나19 後) 14천여 건

< 국세청 연도별 세정지원 실적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9월	합 계
건수(만건)	43.0	32.7	38.9	825.5	1,080.3	2,020.4
금액(조원)	7.7	6.9	7.1	40.2	22.7	84.6

-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제도도입 이후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 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급대상 확대

※ '18년 근로장려세제의 대대적 개편으로 '19년도('18년 귀속분)부터 지급대상·금액 대폭 확대



- 노약자·장애인 신청 도움 제공, ARS 신청방법 개선, 모바일신청 시스템 제공,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 등 신청 편의 제고

※ 근로·자녀장려금 기간 내 신청률 : ('17년) 85.2% → ('21년) 92.6% (잠정)

- 대량지급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지급대상자에게 장려금 일괄 지급, 법령 개정을 통한 반기분 환수 최소화 등 수급자 편의 제고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운영)**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위해 전담조직인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 '21.9월부터 일용근로 등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제공

※ 자료전송 건수 : (일용) 406만 건, (간이(사업)) 71만 건

-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맞춤형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복지이음 포털 신설 등 소득자료 성실제출 적극 지원



3 향후 과제

○ **(지속적 세정지원)** 현장 중심 모니터링*을 통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

*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세정지원기준·방안 마련

○ **(장려금 제도개선)** 장려금 신청자의 수급요건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 평가방식 개선*, 결정통지서의 모바일 송달 도입 등 제도 개선 추진

*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 개선, 가상자산을 재산의 범위에 포함

- 손택스(모바일) 신청 기능 확대, 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 전산 시스템 연계 등 수급자 신청편의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 **(소득파악 대상 확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발맞추어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을 상용근로자, 기타소득자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2.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성실납세 지원

1 추진 배경

- 납세자가 세금 신고·납부 전 과정에서 편안하게 성실납세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

2 추진현황 및 성과

- **(신고지원 확대)** 주요세목별 맞춤형 안내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17년 대비 사전 신고안내 제공 대상 및 인원 대폭 확대

부가가치세 도움자료	'17년 138만 명 (90종) '21년 238만 명 (98종)	종합소득세 도움자료	'17년 612만 명 (61종) '21년 844만 명 (69종)	법인세 도움자료	'17년 15만 법인 (25종) '21년 25만 법인 (45종)

- 국세청 보유자료로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Pre-filled)', '모두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신고편의 제고
- 철저한 사전준비와 지원노력으로 종교인 과세('18년), 지방소득세 분리 신고('20년) 등 새로운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납세자 불편 최소화

< 국세청 소관 연도별 세수 실적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8월
세수실적 (예산대비)	255.6조 (106%)	283.5조 (110%)	284.4조 (100%)	277.3조 (102%)	241.9조 (79%)

- **(홈택스 서비스)** 납세자가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를 전면 확대*하고 민간인증서·생체인증 등 로그인 방식 확대

* PC 홈택스 750종 중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18) 98종 → ('19) 212종 → ('20) 705종 → ('21.9월) 722종

- 세금 신고·납부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과 간단한 질문·답변으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대화형 신고 도입

「홈택스2.0」 추진

편리한 접근성 -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 민간인증서·생체인증 도입	신고·납부 간소화 -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 대화형 방식 및 미리·모두채움 제공
상담·안내 체계 개선 - 스마트폰 알림(PUSH) 확대 - 실시간 챗봇 상담 제공	나의 세무 정보 세무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My홈택스 고도화

홈택스 내비게이션 구성 단계

- **(권익보호 강화)** 본청 내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독립성 강화, 납세자 보호인력 외부개방**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충실히 보호
 - * 지방청·세무서 위원회 처리결과 등에 대한 납세자 재심청구 심의('21.9월 현재 264건 중 87건 시정)
 - ** 지방청 7개 직위 중 4개(57.1%), 세무서 130개 직위 중 32개(24.6%) 개방('21.9월 현재)
- 권익보호 전용 누리집 「납세자권익24」를 구축하고, 권익보호민원 진행 상황을 문자·이메일로 실시간 전송하는 등 향상된 권익보호 장치 마련



3 향후 과제

- **(성실신고 지원 강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신고안내를 정교화 하고, 이용자 중심의 사전안내 체계 개편과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 홈택스 신고 프로세스 재설계 및 쉬운 말 안내문구 등 개선 추진
- **(조사권 감독 강화)** 세무조사권 남용으로부터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 하기 위해 세무조사 모니터링, 세무조사 입회 등 제도 개선 지속 추진

3. 공정세정 구현을 통한 국민신뢰 제고

1 추진 배경

-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역량 집중 및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과세형평 제고

2 추진현황 및 성과

- **(불공정탈세)**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신중한 세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되, 반칙과 특권을 통한 반사회적 탈세혐의자에 조사역량 집중
 -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와 불법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및 유통질서 문란업종 등의 탈세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 대기업 및 사주일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50개 업체 세무조사('18.5월)
- ▶ 유튜버·연예인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19.4월)
- ▶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등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조사('20.5월)
- ▶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호황업종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21.10월)

- **(부동산탈세)** 주택시장 과열지역 위주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다운계약 등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택지·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 집중 점검

▶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혐의자 302명 세무조사('17.9월)
 ▶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 자금출처조사('19.11월)
 ▶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 세무조사('20.9월)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1·2·3차에 걸쳐 총 828명 조사('21.4·5·7월)

- **(역외탈세)** 전략적 국제공조*를 통해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국적세탁, 해외 신탁·비밀계좌 등을 이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자에 강력 대처
 - * 금융정보자동교환('17년 시행, '21년 109개국), 정보교환 가능 국가('17년 137개 → '21년 152개)

▶ 조세회피처·역외계좌·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세무조사('18.9월)
 ▶ 빨대기업·Tax Nomad 등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19.11월)
 ▶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20.8월)
 ▶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21.7월)

< 국세청 연도별 주요조사 실적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조사건수(건)	8,612	10,156	10,029	10,354	39,151
부과세액(억원)	70,186	63,792	56,126	51,757	241,861

※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민생침해·자료상, 부동산·자금출처·자본거래, 역외탈세 분야

- **(체납 대응)**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징수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엄정한 현장 추적조사 전개
 - ※ '17~'20년 체납자 추적조사 징수·확보 실적 : 8조 974억 원
 -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하고, 감치제도** 도입 후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대상자 3명 선정
 - * '21.3월 1차 가상자산 강제징수 실적 : 2,416명, 437억 원 현금징수
 - ** (요건)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된 국세 합계 2억 원 이상 등

③ 향후 과제

- **(불공정탈세 엄정대응 지속)** 민생침해·고액자산가·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신종탈루유형에 적극 대응
- **(추적조사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징수활동 제약 극복을 위해 비대면 추적조사를 확대하고 가상자산 강제징수 지속 추진

관 세 청

1. 무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① 추진 배경

- 코로나發 경제충격을 조기에 극복하고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시장을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확실한 반등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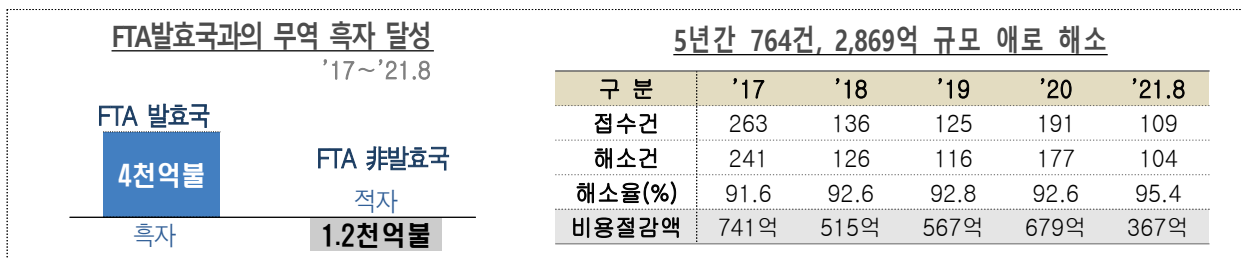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코로나19 극복)**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한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하고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자동차·면세·항공 등 주력 산업 총력 지원
 -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운영, 24시간 비상지원체제 가동(‘20.2~) 등을 통해 핵심 원부자재 및 방역물품 신속 통관지원
 - ※ 차량용 반도체 등 핵심 원부자재(10만건, 8.9조원 규모) 및 K-방역물품(진단키트 등 약 7조원 규모) 수출통관 지원
 -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특별세정지원* 실시(‘20.2~)
 - * 세정지원 실적 : 0.7조(‘17~‘19 연평균) → 9.6조원(‘20.2~‘21.8)
 - 면세*·항공**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침체된 산업계의 경제활력 지원
 - * 재고 면세품 국외 반송 허용 1.1조원(‘20.4~12) 및 국내판매허용 2,690억원(‘20.4~‘21.8), 특허수수료 감면 223억원(‘21.3~‘22.3), 납기연장 946억원(‘20.3~‘21.8) 등
 - ** 운휴여객기 활용 화물운송(‘20.6~), 무착륙관광비행 면세점 이용 허용(‘20.11~) 등
- **(통관·물류 혁신)** 변화하는 무역환경과 수출입 현장의 행정수요에 적합하도록 통관·물류 제도를 개편하여 우리 기업의 비용 절감 지원
 -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통관물류체계 개선

- ▶ 해외 배송의뢰 만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 구축(‘20.10)
- ▶ I-herb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국제물류허브(GDC) 유치를 지원하고 GDC 국내물품 반입 허용 규제 개혁



-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운영 특례 규정 신설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화물검사 비용 지원('20.7)
 -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의 보세공장 반입을 허용하는 한편, 선복부족·운임급등 등 수출입물류난 대응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시행('21.6)
 - **(국제협력 강화)**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도 우리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무역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실용적 국제협력활동 전개
 - 수출기업이 FTA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해소 지원*
- * ▲ C/O(원산지 증명서) 간이발급('17~) 및 24시간 발급('20~) 시행 ▲ '코로나19 원산지 국제검증 지침'을 제·50개국과 합의('20) ▲ 중소기업에게 FTA 활용 컨설팅·교육 제공 (13,519社, '17~'20.9) ▲ 해외기동팀·순회관세관 파견(총9회), 현지 관세관(13명) 활동 등
- ※ 코로나19로 현지 활동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FTA·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국 간 Hot-line 구축, 관세당국 간 통관애로 담당지정으로 중단없는 지원



- 우리기업이 무역하기 편리하도록 한국형 관세행정을 해외로 확산

▶ WCO 고위직 진출('19) 및 4대 지역기구 모두 유치 ▶ 전자통관시스템 수출(5년간 4개국, 8,054만불)
 ▶ EODES*(중국·인나) 및 AEO MRA(5년간 5개국 체결) 확대 ▶ 개도국 세관직원 교육(75회, 1,417명)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국가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③ 향후 과제

- **(전자상거래통관 인프라 구현)** 우리나라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관세행정 제도·시스템·시설 구축
- **(한국형 관세행정 확산)**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편리하도록 전자통관 시스템 등 우수한 우리 관세행정을 신남북방 국가로 확대 전파
 - ※ 내부적으로 전자통관시스템 운영의 공공성도 강화하여 품질제고에 노력
- **(관세무역데이터 개방 확대)** 국민이 무역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여 민간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방수준과 접근 편의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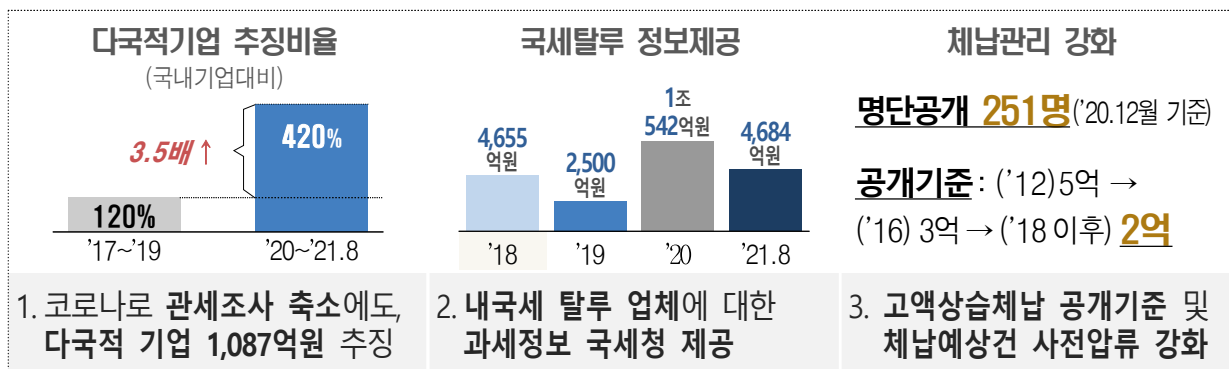
2. 수입물품에 대한 세수 확보로 국가재정 뒷받침

① 추진 배경

- 국가 세수기관으로서, 국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공정한 과세행정을 통하여 정부의 재정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세수관리)** 전체 국가세수의 약 19%인 60조원 소관(관세 8.3, 내국세 51.7조원 '21 기준)
- **(과세품질 제고)**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과세방식을 전환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성실납세문화 조성
 - 납세신고도움정보 등 납세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납세자 편의성을 높이는 모바일 앱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제공('21末예정)
 -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 환급) 기준 전환(원칙적 未발급 → '원칙적 발급', 정부안 상정 '21.9)
 -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의 법적 근거 강화*
 -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확대, 납세자의 장부 임의 보관 금지 등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설치하고 자진신고자 혜택 강화
- **(조세탈루 차단)** 불성실 다국적기업의 탈루행위, 고액·악성채납 등 악의적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



③ 향후 과제

- **(과세제도 개선)** 납세자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가격 평가기준 개선
- **(납세 편의성 강화)** 국민이 편리하도록 수입물품의 각종 세금(지방세, 부담금 등)을 통합징수하는 방안 강구

3. 수출입 관리를 통한 국민안전 보호

①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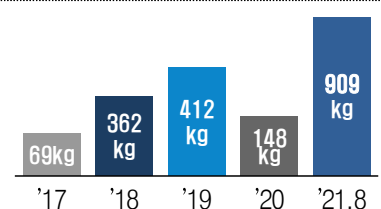
- **(국민안전)** 마약·불법약품 등 위해물품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코로나19 상황 속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긴급물품의 수급 안정화 도모
- **(디지털 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관세행정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안전 위해요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통관안전망 강화)**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위해물품의 단속 기반을 확충하고, 인력·자원 재배치 및 관련규정 개선
 - 식품·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업검사 및 시기별 집중단속 확대
 - * 집중관리 품목 700개 지정, 검사율 상향 → 국민안전 위해물품 매년 100만점 이상 적발
 - 코로나19로 여행자가 급감함에 따라 공항만 인력을 안전업무로 재배치
 - 첨단 측정장비 확충 등을 통해 방사능 우려물품 검사 강화
 - 코로나19 방역 상황 속 긴급물품 수급 안정화*로 국민 생활 안전보호
 - * 수입마스크 통관(3.2억장), 백신 국내 공급(약 6,479만회분) 등 24시간 긴급통관 지원, 밀수출·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출물량 국내유통 유도(1,700만장)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제도개선* 등 정책 추진기반 마련
 - * ▲폐기물·오염물질 원천 차단을 위한 하역제한 근거 ▲관세청장의 타부처에 대한 안전성 협업검사 요청 규정 ▲관세청장의 관계기관 보유 불법물품 정보 요청권한 신설 등(관세법)
- **(마약적발)** 지능적 마약범죄 단속 강화로 불법 마약류 국내유입 차단

< 관세청 마약 단속실적 >

▶ 필로폰, 코카인 등 주요 마약류 총 압수량 731kg 중
563kg(77%)을 관세청에서 적발('16~'20)



- 마약 직접수사 확대에 따른 **광역수사체계*** 운영 및 **전담조직(23명)** 신설
 - * 수사전담기관을 발송지(적발지)에서 수취지(범죄자 소재지) 중심으로 개편
- **글로벌 합동단속 프로젝트***를 주관하여 **합성마약의 국제거래 차단**
 - * 76개국이 참가, 3주간 총 937건, 6,780kg 적발(韓 관세청 27건, 60.8kg)
- **신종마약 증가, 비대면 방식 전환 등 밀수패턴 변화에 적기 대응***
 - * 신종마약 약 37kg(305건), 특송·우편 이용 밀수 약 99kg(469건) 적발(최근5년 연평균)

<사례> 국제 마약단속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 필로폰 적발(404kg)

- ▶ 한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마약환적을 시도하던 국제 마약조직의 필로폰 적발, 적발량 404kg(1.3조원)은 1,350만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양(1회 투약량 0.03g)
 - ⇒ 27조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발생(한국재정학회 연구자료 활용)

○ **(디지털 혁신)** 행정혁신을 위한 신기술 도입을 통해 **Smart Customs** 구축

- 빅데이터 조직 및 분석 모델 구축, R&D 사업 추진, ICT 미래인재 양성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적역량 확보
 - ※ '빅파인더', '무역외환 정보분석 지원시스템' 등 자체 개발 → 현장 활용

<사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파인더' 모델 활용 사례

- ▶ 동행자, 특송·해외 신용카드 사용 정보 등 활용 **우범 여행자 분석**(분석시간 120분→1분)
- ▶ 화주, 화물정보 등의 위험요소 분석으로 수입통관 시 **우범화물 식별**
- ▶ 국세청 세적자료, 국내 매출처 거래 관계 분석으로 **탈세목적 타인 명의 우회 수입자 적발**

- 네이버, 쿠팡 등 민간기업과 MoU로 상품·배송 정보 등 빅데이터 확보
- 기초과학연구원과의 AI 공동연구 등을 통해 신기술 적용 확대

③ **향후 과제**

- **(통관단일창구)** 수출입 요건확인 부처와 정보 공유·연계 확대 추진
- **(위험관리)**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통관·감시 위험관리체계 구축
- **(인프라확대)** 전자상거래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검사 시설·장비 고도화(통합 검사장 구축, R&D사업 추진) 등

4. 불법부정무역 차단으로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

① 추진 배경

- **(건전한 무역질서 확립)** 사회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무역기반 경제 범죄와 지능적 탈세 등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단속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무역범죄 단속)** 특별단속팀(17팀, 100여명)을 편성하여 국부유출·자금 세탁·가짜국산품 유통 등 반사회적 중대 무역범죄 단속('17 ~ '21.8)
 - 편법 승계, 회사자금 편취, 불법 해외부동산 구입, 분식회계 통한 투자금 유치 등 무역거래 기반의 경제 범죄 단속·적발
 - ※ 분식회계(4,494억), 법인자금 편취(6,575억), 편법승계(1,415억), 해외부동산 구입(75억), 총 1조 2,559억 적발
 - 가상자산 이용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적발 등 불법 외환거래 단속
 - ※ 휴대반출 신고위반(2,264억), 환차기(1조 6,929억), 자금 허위증빙 등(1조 3,529억), 총 3조 2,722억 적발
 -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 공공조달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부정납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 1.9조원 적발
 - ※ 관세청 "원산지 국민감시단" 국민참여 우수정책 선정('20년, 행안부)
 - 심평원·금감원 등과 협업으로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보조금 부당 신청 등 공공재정 편취 4,533억원 적발
- **(해외직구 안전망 구축)** 저가신고·되팔이 등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시행, 직구 대행업자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실시*
 - * 해외직구 대행업자 불법행위 처벌규정, 오픈마켓 조사결과 공표('20년), 세관등록제 시행('21년)

③ 향후 과제

- **(무역범죄 수사권 강화)** 사각지대가 없도록 수사영역을 확대하고 신종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
 - ※ SNS·다크웹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기·횡령·배임 수사권 확보 등
- **(범죄추적 신기술 도입)** 새로운 방식의 범죄 분석·예방 체계 마련
 - ※ 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 SNS·다크웹 분석 고도화,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 마련 등

조달청

1. 혁신조달 확산

① 추진 배경

-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조달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 혁신제품 초기 레퍼런스를 공공부문이 제공 → 시설·고용 추가 투자 → 기업·경제 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

* 기술선진국은 사회문제 해결로 신산업창출 기회 선점 위해 혁신조달을 핵심정책으로 채택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추진체계 구축)** 혁신조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합동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20.10) 등 범정부 협업 체계 구축
- * 혁신제품 수의계약 근거 및 절차 규정 마련(「국가계약법 시행령」, '19.7), 혁신구매자 대상 면책제도 도입(「조달사업법」 전면개정, '20.10)
- **(혁신제품 지정)** 패스트트랙 I·II·III 운영('19), 현장에서 유망 혁신제품을 직접 발굴하는 '스카우터' 제도 도입('21) 등으로 국민 수요 혁신제품* 발굴 확대

* 혁신제품 수(누적): ('19) 66개 → ('20) 345개 → ('21.9) 776개 (21년 목표 900개)

구 분		내 용	지정 건수	
혁신 제품	패스트트랙 I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240개	776개
	패스트트랙 II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281개	
	패스트트랙 III	NET·NEP 등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	255개	

- **(혁신구매 확대)** 혁신구매 활성화 통해 혁신제품 초기 시장 형성 지원
- 혁신수요 발굴부터 구매계약까지 지원하는 통합플랫폼 '혁신장터' 운영('20.2)
- 시제품 단계의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후 테스트, 상용화 해주는 '시범구매사업' 운영*으로 혁신제품의 첫 공공판로 개척 지원('19~)
- * 혁신제품 시범구매규모: ('19) 23.1억원 → ('20) 293억원 → ('21) 445억원 (15.9배 ↑)
- 모든 공공기관 물품 구매액의 일정비율*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 도입('20)으로, 공공부문 혁신구매 5,500억원 달성 추진
- * 혁신구매: ('20) 구매비율 1%, 4,690억원 → ('21) 구매비율 1.2%, 5,477억원(목표)

③ 향후 과제

○ 혁신조달의 전략적 확산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 혁신제품 지정·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약 1년간의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성공 판정을 받은 우수 혁신제품들의 본격적인 상용화 지원
 - ※ 성공판정을 받은 혁신제품('21.9월 기준 83개)의 추가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보류 판정을 받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꼼꼼한 피드백을 통해 기술 및 제품 보완 지원
- 전방위적 공공수요 및 혁신기업 발굴 등 현장 중심 업무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인 '혁신조달 전문지원기관' 설립·운영 추진
 - ※ '21년 지원용역 시범사업을 결과를 바탕으로, 「조달사업법」 개정하여 전문지원 기관 설립 등 법적 근거 마련(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21.6)

○ 우수성을 인정받은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지원사업 우대, 해외인증 취득, 전문인력 양성 등 혁신조달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해외 진출 및 수출 성과 창출 도모
 - ※ 수출지원 기반 정비·보강, 혁신조달기업·제품 인지도 제고, 원스톱 지원서비스체계 확립

2. 차세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① 추진 배경

- 연간 110조원 이상 거래되고 47만개 기업(중기 97%), 6만개 기관이 사용하는 공공조달 플랫폼 나라장터*를 개통 20년 만에 전면개편
 - * 재정, 조세, 금융 등 227개 외부시스템과 연계되고, 쇼핑몰, 벤처나라 등 26개 하위 시스템을 포함하는 대규모 전자정부 인프라로 '02년 개통(전자정부 11대 사업)
- 28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여 분산된 공공조달창구를 일원화(Single Window)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추진경과)** ('18) 정보화전략계획(ISP) → ('19) 예타 통과, 통합근거법률 시행 → ('20) 구축방안(ISMP) 수립 → ('21) 본사업 계약, 구축 전담조직 출범

- **(사업내용)**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축, 사업기간 3년('21.6월~'24.6월), 구축예산 1,000억원
 - (구조개편) 클라우드, 데이터, 문서유통, 인증체계, OS, UI/UX 등 기반구조 개편으로 장애·중단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
 - (All 디지털化) 모든 조달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하여 비대면 (조달청 방문 Zero), 종이서류 없는(Paperless) 조달행정 구현
 - (조달서비스 혁신) 빅데이터 분석·활용, 모바일(스마트폰) 나라장터 전면도입, 민간수준으로 쇼핑몰 전면개편 등 이용자 편의 극대화
 - (통합) 28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자체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여 기업불편* 해소, 중복투자 방지**, 보안강화, 공정성·투명성 제고
- * 나라장터 이용자와 95% 중복, 자체조달시스템은 오프라인 업무가 많아 기업 불편
- ** LH, 한전 등 28개 기관의 시스템 운영비용은 연간 약 320억원, 고도화투자비용은 52차례, 총 336억원('20년 ISMP)
- ※ 통합에 따른 기업편익 및 운영비용 절감의 정량적 기대효과는 연간 약 758억원('20년 ISMP)
- ※ 국회, 감사원, 기업 등에서 통합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전자조달법」을 개정('19년 7월 시행)하여 통합 근거를 마련

3 향후 과제

- 조달청의 역량을 집중하여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구축
 - 필요 예산 확보, 제도정비, 위험관리, 신기술 안정성 검증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24년까지 목표 시스템을 완성
 - ※ (구축일정) 분석·설계('21.7.~'22.4.) → 시스템 개발('22.5.~'23.4.) → 테스트('23.5.~'23.12.) → 시범운영 및 안정화('24.1.~'24.6.) → 개통('24.6)
- 차세대 나라장터가 구축되는 시점에 맞추어 기관별 여건을 반영하여 '24년~'25에 순차적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이용전환
 - 입찰·계약 등 기본 조달기능은 나라장터 공통기능을 이용하고, 특화업무 등 기관별 요구사항은 기관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구축
 - ※ 이용전환 후에도 기관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회계, 전자결재 등 각 기관의 내부업무시스템과 연계서비스도 제공

3. 사회적 책임과 국민안전을 우선하는 조달 구현

① 추진 배경

- 경기 침체,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약자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공적마스크 등 안전물자를 차질 없이 공급하여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사회적책임 강화)** 중소·약자기업의 부담 완화 및 성장 지원
 - 중소 약자조달기업 대상 보증금 할증·인증 폐지, 입찰가점 부여 등 입찰·계약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 조달 실적은 지속 증가 추세

- ▶ 부정당제재이력기업에 대해 최대 25% 할증하던 입찰·계약·하자보증금 할증 폐지('21)
- ▶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시 인증보유 개수에 따른 평점 차등을 완화(최대 6점→2점)
- ▶ 여성·장애인 등 약자기업 대상 소액수의계약 범위 확대(5천만원→1억원, 21.7)

<중소약자조달기업 공공조달 실적>



-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 운영('16.10~)으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1,781개 기업이 누적 2,160억원 공급* 실적 달성('21.9)

* 벤처나라 조달실적: ('18)128억원 → ('20)813억원 → ('21.9)674억원(전년동기대비 33%↑)

※ 벤처나라 등록기업 대상 보증수수료율 감면, 납품실적 요건 완화(창업 2년이내인 경우 제출 면제), 신인도 가점(2점) 부여 등 입찰혜택 제공

- 원자재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구리, 주석 등 비축원자재를 할인 방출*하여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

* 비축원자재 방출 실적: ('19) 39,882t → ('20) 52,252t → ('21.9) 84,452t(138%↑)

- **(국민안전 확보)**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필수물자 신속 조달
 - 공적마스크 유통을 직접 관리하여 총 11억 6,220만매 마스크 신속 공급으로 마스크 수급을 조기 안정화
 - ※ 전직원 1:1 대응, 나라장터 활용으로 단 2일만에 마스크업체 95%(125개사)와 계약
 - **코로나19 백신의 유통·보관·접종**까지 필요한 물자를 체계적으로 공급하여 전국민 백신 접종을 총력 지원
 - ※ 방역당국과 선제적 협의로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1억 8천만개), 초저온 냉동고 (270대), 콜드체인, 예방접종시스템 등 백신접종 관련 필수 물자 신속 계약 및 납품

③ 향후 과제

- **중소·약자기업 대상 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
 - 변별력이 낮은 인증, 서류 등 입찰·계약 관련 과도한 규제가 있는지 관리하고, 환경 변화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수주기회 확대
- **‘벤처나라’ 활성화 등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 확대**
 - 중기부 협업으로 ‘창업기업구매목표제’* 활용, ‘벤처나라’를 넘어 우수조달물품 지정,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등 추가 판로확보 지원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물품 구매총액의 8% 이상 창업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
- **급격한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조달기업 원자재 및 생산지원**
 -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경기침체 등 외부 환경 요인을 월별 점검하여 비축원자재의 다양화 및 방출 검토
- **국민 보건·안전물자 대상 품질관리 강화**
 - 국민 안전과 밀접한 조달물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엄격한 품질관리 실시

《 신규 추진 필요과제 》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 강화

① 추진 배경

- 176조원 규모(GDP대비 9%)의 공공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상생,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적 조달의 필요성 부상
 - 기존 효율적 재정집행에 한정되었던 전통적 조달에서 탈피하여,
→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이 강조
- EU의 혁신 및 사회적책임 조달 강조, OECD의 혁신·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달 활용 등 세계적으로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논의 확대

② 주요 내용

- ‘혁신, 사회적가치(ESG), 중소(여성)기업, 녹색’ 등의 지속가능성장 정책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 강화
 - (혁신조달) 정부가 선도적으로 기술개발과 혁신을 유도하여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혁신조달’의 확대
 - * 혁신조달의 범위와 대상을 서비스, 공사까지 확대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민간 상용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혁신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 (사회적가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의 조달 우대로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실현 유도
 - (약자지원) 중소·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약자지원을 위하여 산재되어있는 정부 의무구매제도를 조정·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 중기부, 고용부, 여가부 등의 우선구매제도와 조달정책을 연계하여 통합·조정
 - (녹색조달) 친환경제품에 대한 공공조달기준 제정, 입찰·심사기준 마련 통한 친환경제품의 조달 우대로 ‘탄소중립’ 실현 지원
 - * 단순 친환경제품 구매에서 더 나아가 입·낙찰과정에서 실질적인 환경가치 실현을 평가할 수 있도록 특화된 기준 및 녹색조달 정책 마련

⇒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국가·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개정 등 추진

통 계 청

1. K-통계체계 구축 추진

① 추진 배경

- **(데이터 가치 창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데이터 시대에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신부가가치 창출 필요성 고조
 - 반면, 유용한 공공데이터가 각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분리·관리되고 있어 데이터가 가진 잠재적 가치가 미실현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정보보안 연구개발)** 누구나 안전하게 공공데이터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신 암호기술 개발
 -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연계·분석할 수 있는 동형암호기술의 통계분석시스템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 ※ 동형암호 기반 국가통계분석 시스템 구축사업('21~'23, 과기부 ICT R&D)
- **(핵심데이터 확충)** 데이터 간 연계·활용을 매개하고 다양한 활용가치를 갖는 아동가구, 이민자·외국인 등 분야별 통계등록부 구축을 추진
 - ※ 아동가구 통계등록부 구축 완료 및 서비스 실시('21.8월~)
- **(연계·분석 활성화)**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한 증거기반 정책 지원을 위한 데이터 연계·분석 활성화 및 민관협력 확대
 -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및 신용카드 거래액, 모바일 통신정보 등을 연계한 Nowcast 포털 구축 추진

③ 향후 과제

- **(법제도 개선)** 통계자료 이용을 확대하고 데이터 간 연계분석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통계법 개정* 추진
 - * 통계등록부 구축, 통계데이터센터 설치·운영 등 근거조항 신설
- **(신기술 연구개발)**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데이터 보안 신기술 연구개발 추진
 - ※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연구개발('22~'24, 국회 예산심의 중)

2. 포괄적 연금통계 및 생애계층별 사회통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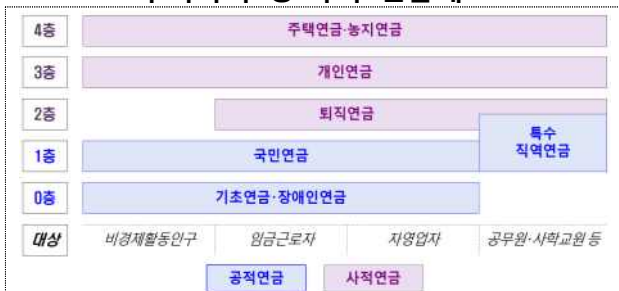
1 추진 배경

- **(포괄적 행정통계 개발)** 인구가구통계등록부, 주제별 DB 등 각 부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통계 작성
 - (연금통계) 초고령 시대에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 (생애계층별 사회통계)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계층별 고용정책 수립·평가를 위해 청년·노년층의 일자리, 소득수준, 노후대책, 주택소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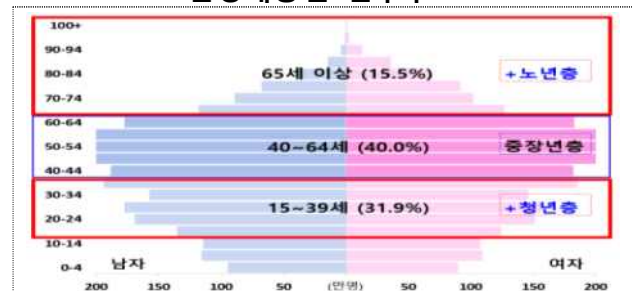
2 추진현황 및 성과

- **(연금통계)** 퇴직연금통계의 포괄범위를 모든 공·사적 연금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행정자료 수집·연계 및 지표시산('21~'22년)
 - ※ 퇴직연금 → 기초·장애인연금 + 국민연금 + 직역 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주택·농지연금
- **(생애계층별 사회통계)** 중장년층 행정통계 대상을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계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통계 시험작성('21~'22년)
 - * 중장년층(40~64세) → 청년층(15~39세) + 중장년층 + 노년층(65세 이상)

< 우리나라 공·사적 연금제도 >



<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



3 향후 과제

- **(부처협조)** 노후소득 및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작성을 위해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제공 및 데이터 관리 방안 마련 등 부처의 지속적 협조 필요
- **(포괄통계 작성 확대)**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하여 주요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시의성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간 연계분석 지속 강화
 - ※ 통계자료 이용 확대, 데이터간 연계분석 활성화 근거조항 신설 등 통계법 개정과 연계하여 추진

3. 사회 포용성 확대와 사회정책을 지원하는 통계 개선 · 개발

① 추진 배경

- **(고용통계 개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 청년고용대책 수립, 일자리 형태 다양화 등 대응을 위한 통계개선 수요 증가
- **(인구추계 모형개선)** 초저출산 지속,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인구통계 제공으로 정책 대응 지원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고용통계 개선)** 정책대상별 맞춤형 고용통계 확대
 - (고령층 연령 세분화) 65세이상으로 작성하던 고용통계를 65~69세 · 70세이상으로 연령구간을 세분화하여 공표('21.1.)
 - (청년 고용지표 제공) 청년기본법 정책대상 20~34세 고용지표* 신규 제공으로 청년대책 수립을 신속 지원('21.7.)
 - * 20~34세 인구, 취업자, 실업자, 고용률, 실업률, 첫일자리 평균 근속기간 등
 - (비임금특고·플랫폼노동) 비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 파악을 위한 시험조사 실시('21.8.)
- **(인구추계 개선)** 2020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모형 개선('21.1.~12.)
 - (예측력 제고) 비혼, 만혼의 확대 및 저출산 심화, 코로나19 영향 등을 반영하여 추계모형 개선, 통계학, 인구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추계방법 및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 ※ 출산의 지연과 회복 정도, 외국인 체류유형에 따른 입·출국 등을 반영한 추계모형 개선

③ 향후 과제

- **(고용통계 개선)**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을 확대하여 70세이상 연령 구간을 추가 세분화 추진('24년 공표)
 - 표본확대 지역에 매월 투입할 조사인력 및 답례품 예산 지원 필요 (소요예산 '22년 5.3억원, '23년부터 매년 11억원)
- **(인구추계 모형개선)** 2020년 기준 장래인구추계^{'20년~'70년} 결과 공표('20. 12~)
 - 전국 장래인구추계('20-'70년) 결과 공표('21.12.)
 - 시도 장래인구추계('20-'50년) 결과 공표('22.5.)

농촌진흥청

1.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 확산

① 추진 배경

- 기후변화·고령화·식량문제 등 농업현안의 해결과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으로 전환 필요성 부각

※ 농진청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 보고(4차산업혁명위원회_데이터특위, '21.3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데이터수집·활용)** 빅데이터·AI 기반의 디지털 농업기술의 개발·고도화

- (수집) 주요 품목의 생육, 환경 등 전주기 데이터의 수집 확대 및 표준화 추진

※ 데이터 수집('21, 15품목 300농가), 단체표준 제안(5품목), 기자재 KS 제·개정 중(6건)

- (활용) 생육단계별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및 농업인 대상 시범서비스**

* 생산성 향상 모델(AI) 적용: 스마트팜농가 대비 30% 생산량 증대(4.7톤/10a → 6.0)

** ('21) 스마트팜 최적 환경설정 서비스 → ('22 ~) 발작물 물관리, 작황 예측 등

- (확산)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데이터 기반의 농업기술 생태계 조성

※ AI학습용 데이터 개방(21종), 데이터·기본모델 등 민간에 기술이전(17건)

- **(노지디지털)** 디지털기술의 노지 확산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벼) 드론·자율주행 등 농업의 편리성을 높이는 자동화 기술 개발

※ (드론) 비산저감 AI노즐 개발(30%이상 비산저감), 방제노력 87% 절감(vs 동력분무기)

- (작물) 밀·콩 생육단계별 정밀 수분 관리를 위한 지능화 기술을 개발하고, 위성·드론을 활용하여 배추의 작황 예측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 (젓소) 국산 로봇착유기 개발 및 유방염 조기진단 체계 구축

※ 착유우의 실시간 생체정보 수집 및 데이터 분석(설치비: 외산의 60% 수준)

< 요소기술(자동·지능화)을 적용한 디지털 농업기술 현장실증('21, 11개 품목) >

▶ 품목: 식량(벼, 밀, 콩), 원예(양파, 배추, 사과, 국화), 축산(한우, 젓소, 돼지, 가금)

③ 향후 과제

- **(디지털 기반)**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등 단계별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드론·자율주행기술 등 기초기반 디지털 농업기술을 고도화
 - 다중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및 농업전문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확충
- **(노지디지털)** 식량·원예·축산 등 분야별 실증을 확대하고 농산업 분야에 신속 확산을 위한 현장·수요자중심 기술 개발
 - 벼 재배 전 과정 AI 진단기술 및 밀·콩의 양·수분 정밀관리 기술 개발
- **(정책지원)** 생산·소비 정책을 지원하는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 작목발굴·추천 및 생산·재배, 저장·유통 등의 전 과정 지원

2. 식량안보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보급

① 추진 배경

- **(여건)** 기후변화, 코로나19, 식량자급률 하락 등 글로벌 식량위기에 취약
 - ※ 곡물자급률(%): ('10) 27.6 → ('19) 21.0, 식량자급률(%): ('10) 54.1 → ('19) 45.8
 - ※ 식량안보지수: ('12) 21위 → ('19) 29, 국제곡물가('21.6): '20 대비 밀 24%·콩 49% ↑
- **(정책)** 밀·콩 중심으로 공공비축 확대 및 자급률 목표 수립('21.9, 국가식량계획)
 - ※ 밀/콩 자급률 목표(%): ('19) 0.7/26.7 → ('21) 1.7/30.9 → ('25) 5.0/33.0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식량자급)** 벼 자급률 유지 및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 등 생산 확대
 - **(벼)** 수량과 품질이 우수한 품종의 개발·보급 및 일본품종 대체
 - ※ 일본품종 재배: ('17) 83천ha(11.0%) → ('21) 50(6.8) ※ 이천지역 고시히카리 완전 대체('20)
 - **(밀·콩)** 고품질 품종·맞춤형 재배기술 및 이모작 작부체계 확대보급
 - ※ (밀) '백강'쌍용/'새금강'면용 확대 보급: ('20) 538ha/611ha → ('21) 1,186/1,649
 - ※ (콩) 장기재배 품종 대체('대원' → '선품'·'대찬'): ('17) 0.2% → ('19) 8.4 → ('21) 26.4

- **(원예·축산)**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경쟁력을 갖춘 품종 보급 및
신품종 확대지 분양 활성화 등을 통해 **국산품종 점유율 확대**
※ (원예) 국산품종 보급률(딸기 등 주요 14개 작목): ('17) 25.8% → ('20) 30.2
※ (축산) 농가 보급두수(누적): (~'17) 우리흑돈 163, 난축맛돈 285 → ('20) 581, 391
-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이상기상 피해경감 기술 개발·보급
 - 작물 재배지 변동·생산성 예측 및 국가 고유계수·저탄소농업기술 개발
※ 국가 고유계수 개발 및 검인증등록(누적): ('17) 13종 → ('19) 27 → ('21) 34(농업 28, 축산 6)
 -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보급 및 농장 단위 조기경보 서비스 확대
※ 기후적응 품종(누적): ('17) 239품종 → ('20) 289, 조기경보 서비스 ('19) 24시군 → ('21) 40
- **(그린바이오)** 유전자원 보존·활용, 그린바이오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
 - 체계적인 유전자원 국가 관리로 농생명 자원의 주권 강화
※ 유전자원 보유 현황: ('17) 294,731자원 → ('21) 327,209자원(세계 5위)
 - 국내 고유자원의 유전체 빅데이터 확보 및 고부가가치 기술개발과 이전
※ 국유특허 보유건수('20): 3,997건(점유 48.7%), 기술이전율: ('17) 40.1% → ('20) 43.5
- **(대체식품)** 식량안보, 윤리 이슈 해결 열쇠로서 미래 식량자원 연구 추진
 - 식물성고기 및 곤충단백질을 활용한 대체육 소재화 기술 개발

③ 향후 과제

- **(식량자급)** 밀, 콩, 옥수수, 사료작물 중심 생산 확대 기술 개발·보급
 - 우수품종·정밀 재배기술 및 해외적응 품종 개발, 북방농업 연구 등
- **(기후변화)** 이상기상·병해충 대응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탄소중립
대응 국가 고유계수 등록 확대와 농업 분야 저탄소기술 개발·보급
- **(그린바이오)**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기술 및
고부가 농생명 소재 등 그린바이오 혁신기술 개발·보급
- **(대체식품)** 배양육, 식물성고기, 곤충단백질 등 대체식품 연구 추진
 - 식물성·곤충단백질 소재·가공기술, 가축 줄기세포 배양 생산 기술 등

3. 농촌소멸화 대응 농촌 활력 제고

① 추진 배경

- 농촌은 UN에서 정한 **초고령 사회**로 既 진입, 농촌의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6.6%, 40세 미만 농업 경영주는 지속 감소(통계청, 2020)
 - ※ '00년 이후 농가수 매년 20천호 감소, 40세 미만 경영주는 '20년 1.2%에 불과('00, 6.6%)
- 전국 226개 시·군·구중 **소멸위험지역** 증가: ('13) 75곳 → ('18) 89곳
 - ※ 향후 30년 내 226개 시·군·구의 39%가 소멸 위기('18, 한국고용정보원)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지역특화)** 지역 여건·수요 등을 고려하여 69개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고, '21년은 **18개 특화작목**에 집중 투자 및 점진적 확대 추진
 - 육성정책 실천방안을 담은 국가 종합계획('21.2) 및 도별 발전계획 수립('21.5)
 - ※ 집중육성 예산(지방비포함): ('21) 18특화작목, 277억원 → ('22) 36, 334(20.6%↑)
 -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19.7.9.)
 - HMR(간편식) 등 가공상품 개발과 연계한 **특화작목 안정소비기반** 확보
 - ※ 충남(천안), 충북(충주), 제주 지역특화농산물 활용 제품화: 37종('20~'21)
- **(청년농)** 청년농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
 - **(네트워크)** 기술창업과 전주기 기술지원으로 **청년 4-H회원** 증가, 지역별 소규모 품목 모임체 육성으로 청년들 간의 소통 지원
 - ※ 청년 4-H회원: ('19) 6,134 → ('20) 7,026 → ('21.9) 7,651 → ('23P) 1만명 육성
 - ※ 모임체 현황: ('19) 중앙 5, 지방 89 → ('20) 중앙 8, 지방 92 → ('23P) 중앙 20, 지방 330
 - **(플랫폼)** 창농·법률·세무 등 **종합정보제공 One-Stop** 서비스 구축('21.12)
- **(치유농업)** 치유농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타 부처 정책연계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 농가의 지속적 소득 창출
 - 치유농업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치유프로그램 개발(20종) 및 치유농업 시설 구축(234개소), 전문인력 양성(양성기관지정 11개소)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 서비스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비즈니스모델**을 개발
 - ※ 보건복지부('20.7.), 소방청('20.10.)과 협약체결: 치유농업 프로그램 진행
 -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1.3.25.)

③ 향후 과제

- **(지역특화)**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화작목 확대·지원 강화** 및 작목별 장애요인 해소 연구개발, 특화작목 안정 소비기반 확보를 위한 **가공상품 개발**
 - ※ R&D, 사업화, 인력양성, 인프라 등을 포함한 지역농업 육성 대형사업 기획 등
- **(청년농업)** 청년농 지원을 위한 '**4에이치활동지원법**' 개정, 디지털 종합정보제공 체계 구축, 청년 협업공간 조성 등 **인프라 구축**
 - 지역별 소규모 품목 모임체 육성, 기술창업지도사 등 인력양성
 - ※ 협업공간 지원사업(누계): ('22) 10개소 → ('23) 30개소 → ('25) 100개소
- **(치유농업)** 복지·의료 서비스와 연계한 **치유농업시설** 육성, '**치유농업사**' 양성 확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R&D** 투자
 -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제 도입, 기술개발 및 산업화 모델 발굴

4. 한국형(K)-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

① 추진 배경

- 국내 농업 기술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외교정책에 부합하는 K-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국제사회 내 영향력 강화 필요
 - 농진청은 '09년부터 점진적으로 52개 개도국과 **공동 농업현안 해결**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다자 방식의 기술협력 중
 - 신남방·신북방 등 정부 정책과 연계된 개발 협력 추진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_KOPIA)** 22개 개도국 농업정책과 연계한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보급으로 한국 농업의 역할·위상 제고

- 밀 자급률 10% 확보(몽골), 저비용 오렌지 재배관리 기술로 생산성 114% 증가(우간다), 무병씨감자 재배기술로 생산성 50% 증가(에콰도르) 등
 - ※ (참여국) 아시아 8, 아프리카 7, 중남미 5, CIS 2 / (과제) 기술개발·시범마을 등 101개
 - ※ KOPIA, 유엔(UN) 산하 '팩토 글로벌 레드 에콰도르' 빈곤퇴치 분야 공로상 수상('20)
- **(대륙별 협의체_3-FACI)**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3개 대륙 48개 국가와 기후변화 대응 작물품종 개발 등 농업 부문 **공동현안 해결로 국격제고**
 - 이동성 병해충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아시아), 고품질 다수성 벼 품종개발(아프리카), 디지털 토양정보시스템 구축(중남미) 등
 - ※ (AFACI)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술전문보고서에 국제협력 우수사례 수록
 - AFACI 13개국의 토양 정보를 **FAO 토양 유기탄소지도(SOCmap)**에 반영('21)
 - ※ (참여국) 아시아 13, 아프리카 23, 중남미 12 국가 / (과제) 대륙별 현안 20개
 - ※ KOPIA·KAFAC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협력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21)

<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네트워크 현황 >

- ▶ **(KOPIA)**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양자협력)
 - 개도국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보급(22개국, '09년 착수)
- ▶ **(3-FACI)**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다자협력)
 - **(AFACI)**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13개국, '09년 출범)
 - **(KAFACI)**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23개국, '10년 출범)
 - **(KoLFACI)**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12개국, '14년 출범)

③ 향후 과제

- **(국익제고)** 신남방·북방, 중점협력국 등을 대상으로 **KOPIA, 3-FACI 확대**
 - 품종, 농자재, 재배기술 등 K-농업기술을 바탕으로 부처 간 협업사업 발굴
- **(역할강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식량안보 등 **글로벌 현안 공동 해결**을 위해 **FAO,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추진
 - G20 농업수석과학자회의 등 국제농업 전문가 그룹참여, FAO와 농업지식 플랫폼 구축,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추진
- **(협업확대)** 사업성과의 확산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ODA) 관련 부처 간 사업 연계 강화 및 기관 협업 확대 추진

산 림 청

1. 산림조성과 일자리·소득 창출

① 추진 배경

- **(산림정책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목표로 UN이 인정하는 대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산림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임업인 소득 증대)** 임업경영 환경 악화와 낮은 임업소득 개선을 위해 임업 경영여건의 체계적 지원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산림정책 전환)** 획일적 녹화관리의 양적성장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능별 특화 조림·숲가꾸기 등 질적성장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통한 탄소흡수능력 강화
 - 미세먼지 저감 조림·숲가꾸기, 도시숲, 내화수림대 등 정책사업

※ 경제림 육성률: ('17) 36.4%→('20) 39.7%, 목재자원화율: ('17) 34.9%→('20) 45.1%
- **(산림자원 순환)** 경제림 중심의 '벌채-이용-조림-가꾸기' 순환구조 구축과 친환경벌채 여건을 조성하여 산림의 경제 자원화를 촉진
 - 모두베기 효과성 공감대 형성과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친환경벌채기준 강화, 목재수확 관리·감독 강화, 산림경영 지원 위한 기반 조성 확대
 - ICT기술을 접목한 양묘시스템 도입*으로 고품질 종자·묘목 생산
 - * 양묘시설 도입('20년) : 스마트양묘시스템 1개소, 양묘시설 현대화 38개소
- **(목재이용 활성화)** 국산목재 공급 확대를 통한 목재 활성화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 '목재제품 신기술 세부기준' 마련으로 공정행정 확립('21.6월)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 위한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운영
 -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 ('20) 2개소 → ('21) 3개소 → ('27) 9개소

- **(일자리 창출)** ‘산림일자리 종합대책’(‘17.~’22.) 이행으로 산림분야 일자리 적기 공급
 - 산림일자리발전소(‘18. 신설)를 통한 지역중심 그루경영체 모델 확산
 -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운영지침 및 업무매뉴얼 개정(‘21.2월)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심의근거 마련
- **(신산업 발굴)** 산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20.6월)으로 나무의사 처방전 및 보수교육의 법적 의무화 등 산림분야 국가전문자격 신설과 민간분야 산림사업 활성화
 - ※ (‘21) 나무의사 346명, 수목치료기술자 2,825명, 목재교육전문가 126명
- **(임업인 소득증대)** 임업인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여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제고
 - 임업인 융자지원 확대(‘17년, 1,306억원 → ’21년, 2,939억원), 임산물 재해보험 품목추가(‘20년 호두) 등
 - 임업직불제의 원활한 운영기반 구축과 법률안 공포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 마련(‘21.10월 : 임업직불제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시행(‘21.1월)
 - 임업경영 안정망 강화를 위한 재해보험·복구 지원 강화 추진

③ 향후 과제

- **(임업인 재정지원)**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 또는 임업경영인은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
 - 임업직불제 외에도 조세감면, 임도개설 등의 재정적 지원책 필요
- **(국산목재 활성화)** 국산목재의 활용도 한계, 낙후된 임업현실로 목재 활성화가 시급
 - ’20년 지방으로 이양된 임도사업(간선임도 제외)의 통합예산 편성 필요
 - ※ 임도밀도 : 한국 3.6m/ha, 캐나다 12.8, 일본 13, 독일 46)
 - 목재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위한 용역 착수 및 단계별 추진전략 추진

2.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① 추진 배경

- **(삶의 질 관심)** 새로운 산림복지 수요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창출로 국민 행복 증진 및 숲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 우울상담 내방객 반려식물 보급 및 숲치유 프로그램 등 제공
 - 반려식물보급 2천명, 숲치유 프로그램 10,272명(대응인력 1,431명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산림 다중 이용시설 운영지침 준수 및 방역 철저
- **(도시숲 조성)** 생활권 내 다양한 도시숲 확충으로 도심의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폭염·대기오염 완화하여 생활 환경 개선 기여
 - ※ 코로나19 본격화 이후, 도시숲(공원) 방문 51% 증가(구글 이동성 보고서, '20)
 - 미세먼지 차단숲 등 다양한 기능의 도시숲을 조성*하여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확대에 기여('19. 11.5㎡ → '27. 15㎡ 예상)
 - * 미세먼지차단숲 103개소, 도시바람길숲 17개소, 자녀안심그린숲 50개소
 - 실내·외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원* 조성
 - * 정원 조성(누계) : ('17) 19 → ('18) 33 → ('19) 48 → ('20) 71개소
 - 도시숲 설계 공모 등 다양한 행사·홍보를 통해 도시숲의 인지도 관심 확산
- **(인프라 확충)** IC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숲체원) 조성 등 다양한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한 '국가 숲길' 도입('20)
 - ※ 산림복지시설 조성(누계) : ('17) 621개소 → ('21) 892개소

-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산림교육센터 지정을 통한 **산림교육 인프라 확충**
 - * 유아숲체험원 신규조성(6개소), 산림교육센터 추가 지정(2개소)
- 숲길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숲길 지정*** 등 **숲길 네트워크 구축**
 - * 국가숲길(4개소) 대관령숲길, 백두대간트레일, 지리산둘레길, DMZ편치불둘레길
- 장기체류형 산림치유 시설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추진
 - * 실시설계·시공 661억원, 실시설계 7~11월, 계약·착공 12월
- **(서비스 개선)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구축**(‘19, 숲나들e)으로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유형 확대 등 **맞춤형 지원 확대**
 - 유형 확대(‘20.4월) : ▲(기존) 6종류(휴양림, 치유원, 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치유의숲, 산림욕장) → ▲(확대) 4종류(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 ※ '21.9월 기준 자연휴양림 통합 현황: 총 164개소(국립 45, 공립 109, 사립 10)
- **(혜택 강화)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제고 및 비대면 숲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 (‘17) 15천명 → (‘19) 35천명 → (‘21) 44천명
 - ※ 이용권 사용률 : (인원) 28%(11,128명), (금액) 22.3%(893백만원)

③ 향후 과제

- **(도시숲·정원 확대)** 생활권 내 다양한 도시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정원 관련 사업 확대 필요
 - 국유지 도시숲, 도심 공기 순환, 자녀안심 그린숲, 미세먼지 차단 등 다양한 기능의 도시숲을 조성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습공간 내 숲 조성 확대**
 - 실내·외 정원, 산업단지 스마트가든 등의 **생활밀착형 숲 조성**과 **국가정원 확대**
 -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에 **녹화운동 등 국민참여 활성화**
 - ※ 1인당 생활권 도시숲면적 확대 : (‘17) 10.1㎡ → (‘19) 11.5㎡ → (‘27) 15㎡

3. 산림재해 예방 및 보전 · 복원

① 추진 배경

- **(국민 안전)** 이상기후의 위협으로부터 재난에 대한 국민 안전확보가 핵심 이슈로 대두되어 **대형 산림재난에 선제적 예방·대응 체계 필요**
- **(그린 연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범지구적 산림협력 증대 요구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산림녹화·경영 경험 활용으로 산림이슈 선도 필요
※ 韓, 전 세계 산림경영 성과 분석결과 임목축적 증가율('90~'15) 세계 1위('20, FAO)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재해 예방)** 첨단기술 접목으로 산불, 산사태 등 재난대응 기반 확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체계 확립
 - ICT 기술 활용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운영, 산불드론 감시단(32개단 211명), 드론 산불진화대(10개팀) 구성 운영
 - 동해안 지역의 대형산불 발생시 공조체계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치('18.11월 개소)
 - '19년 중앙산림재난상황실(7명),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5명) 신설
 - 산지태양광발전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산지관리법' 정비*
* 평균경사도 기준(25°→15°) 강화('18), 보전산지내 설치금지('19), 산지태양광발전 시설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및 전문기관에 의한 정기점검('20) 등
 - 선제적 예찰·조사 및 방제로 재선충병 피해발생 저감 노력
※ 피해본수 감소 : ('19) 490,693본→('21) 307,919본
- **(재난 대응)** K-산불·산사태 방지대책 추진과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드론, 확산예측시스템, 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한 산불상황 공유
※ 안동산불('20→'21) : 진화시간 47시간→20시간, 산림피해 1,944ha→307ha

- 산사태 위험지도 및 조기경보 체계를 포함한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로 산사태 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 지원
 - * 산사태 경보 예측정보 조기제공 개선(1시간전 → 12시간전, '21.7월 시범운영)
- 생활권 중심 산사태취약지역을 확대('17. 24,075개소→'20. 26,484개소)하여 산사태 피해 예방 최소화 노력
- **(산림 보전·복원)** 숲의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복원 관련 법률 개정과 세부지침 제정('20.9월)으로 산림생태축(백두대간, DMZ 등) 복원과 산림 생물자원 보전 강화
 - '산림자원법·백두대간보호법' 개정 및 제1차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20~'29), 21년 산림복원 시행계획 수립 공표('21.3월)
 - 3대 핵심 생태축 중심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원사업 확대*
 - * 산림복원현황(ha) : ('17) 54.5 → ('18) 46.3 → ('19) 27.4 → ('20) 58.0 → ('21안) 78.0
 - GIS/RS 기술과 드론을 활용한 불법 산림훼손 단속강화 및 산림 생물다양성 유지·증진 기반 구축
- **(유휴 토지)** 섬 지역 산림의 관리를 강화하고 유휴공간에 산림 조성을 확대하여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편입
 - 중장기 도서지역 산림관리 종합대책 수립('20), 섬지역 산림복원(40ha)

3 향후 과제

- **(보전·복원 강화)** ICT, GIS&RS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산림훼손지역의 보전·복원 지속 강화
 - 북한 산림황폐화 상황(262만ha 훼손) 및 산림복원의 장기성을 감안, 향후 관계개선에 대비한 국내 협력기반 조성에 집중
 - 산림생물다양성 건전성을 위해 산림피해지 또는 훼손지의 보전·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

《 신규 추진 필요과제 》

산촌 육성으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① 추진 배경

- **(귀산촌 관심)** 청년층 감소와 고령화로 산촌이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하여 폐교와 빈집이 증가하는 한편, 최근 웰빙확산 및 원격 근무 보편화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산촌에 관심 증가
 - 귀산촌 인구 추이가 계속 증가('18년 56,339명 → '20년 59,294명)

② 주요 내용

- **(귀산촌 정주여건 개선)** 공용사무 공간과 산림형 에너지자립마을 로써 의료시설, 교육공간, 도로정비 등 산촌 주민 정주여건 개선
 - 공유사무실 공간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 산촌내 폐교 등을 목재로 정비,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 활용 난방과 에너지 자급
 - 산지연금, 산지은행제도 도입으로 임업인 경영여건 개선
 - ※ 산지연금 : 사유림매매, 임대차, 매입비축 후 산지를 원하는 전문임업인에 제공
 - ※ 산지은행제도 : 산을 담보로 국가가 매월 일정 수익을 제공하는 제도
- **(산촌지역 균형발전)** 미래형 산림사업과 관광개발로 자생력을 강화하여 산촌의 고유성을 살린 자족기반의 산림타운 조성
 - 산림자원 활용 바이오산업 육성, 전통마을숲 복원 등과 연계한 사계절 산촌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소득원 제공
 -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산림일자리 창출

특 허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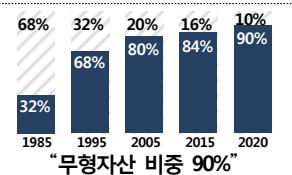
1. 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식재산 인프라 마련

① 추진 배경

◇ 디지털 환경에 맞는 지식재산 제도 구축 및 디지털 경제 시대의 산업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신속한 심사·심판처리 필요

- **(기술환경)**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新지식재산*을 보호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제도 변화 필요
* AI 창작물 보호, 디지털 의료기술 보호, 온라인상 사용, 메타버스 등 가상환경에서의 보호
- **(산업환경)**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기업가치가 지식재산 중심의 무형자산*으로 이동하면서, 거래 가능하고 신뢰성 높은 지식재산권 창출 필요성 증대

- ▶ 미국 상위 500대 기업 자산의 90%(右 그림), 유럽 상위 350대 기업 자산의 75%가 무형자산(Ocean TOMO, '20년)
- ▶ 한국 시가총액 10위 기업 무형자산: 2.3조('09년) → 34조('19년)



- **(심사환경)**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급증하는 지식재산권 신청* 처리와 기업전략**에 맞는 적시 심사·심판 서비스 필요
* ('20년 韓 지식재산권 출원 557,256(↑ 9.1%), 주요국 특허출원(美 ↓ 3.9%, 日 ↓ 6.3%)
** 사업/자금조달 등을 위해 7~9개월(특허), 5개월(상표)의 심사처리 희망('19년 자재연 '21년 특허청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전담 심사조직 신설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등을 통한 지식재산 출원 年 60만건 시대('21) 개막

- **(특허)**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 신설('19.11), 세계 4위 특허출원 및 지식재산(특·상·디) 출원 年 60만건 시대('21) 개막
- 산업수준·기술수명주기별 특성을 심사에 반영한 맞춤형 특허 심사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특허 동향의 심층 분석 확대
- **(상표·디자인)** 디지털 상품(SW, 앱 등)의 온라인 전송·제공 보호(법안 계류 중), 물품과 독립된 '화상' 자체 보호('21. 10. 시행) 등 상표·디자인 보호 강화

- 디지털 환경에 활용이 증가하는 비전형상표(입체, 동작 등) 심사기준 강화, 온라인을 통해 모방이 쉬운 분야의 디자인 제품 신속 권리화 지원
- **(심판)** 디지털 기술 등 급변하는 기술분야 심판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허심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21. 10월)
- 융복합사건 및 중요사건은 5인 합의체가 담당하고, 구술심리 개최를 확대하는 등 사실심리 강화를 통한 심판품질 제고

3 향후 과제

◇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심사·심판체계 구축 및 지식재산 법·제도 정비

- **(심사)** 세계 4위 특허출원 및 지식재산 출원 年 60만건*에 걸맞는 주요국 수준**의 심사역량 확보를 통한 고품질 적시 심사서비스 제공 지속 추진
- * 최근 3년간('18년→'20년) 지식재산권 출원(48만건→56만건) 연평균 7.7% 급증
 ** 주요국 대비 최대 3.7배 많은 심사물량 처리[126%(日)~368%(유럽)]로 심사품질 제고 한계

	한국('20년)	미국('20년)	일본('20년)	EU('19년)	중국('19년)
특허출원 수	231,740	605,872	288,472	181,406	1,400,661
특허심사관 수	932	8,230	1,666	4,241	12,000('18년)
1인당처리건수(건/년)	206	73	164	56	94
1차 심사착수(개월)	11.1	14.8	10.1	5.5	14.9

- 융복합·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3인 협의 심사 확대 및 AI 기술을 활용한 검색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심사품질 및 심사효율성 제고
- **(제도)** AI 창작행위 관련 이슈(발명자·창작자 인정, 소유권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공론화를 통해 법령 제·개정 등 제도화 방안 연구
-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에 따른 새로운 거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특허·상표·디자인의 사용 및 침해유형 정비 추진
- **(심판)**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대비 심판품질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심리충실성 제고를 위한 증거조사 강화방안 마련, 지식재산 행정 심판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 및 심판참고인 제도 도입

2.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① 추진 배경

◇ 미-중 무역분쟁 등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 증대

- **(기술패권 경쟁)**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지식재산 보호 중요성 부각
 - 최근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
 - * (美) 산업스파이 수사처벌 강화, 기술수출 규제 등 (중) 5배 징벌배상, 수출통제법
- **(국가경쟁력 제고)** 만연한 지식재산 침해는 국가전반의 혁신을 위축
 - 지식재산 침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기업의 R&D 투자여지를 위축시켜 결국 국가경쟁력 강화에 악영향
 - ※ 영업비밀 유출의 경제적 피해는 GDP의 1~3%로 우리나라 적용 시 최대 60조원
 - ※ '21년 IMD 국제경쟁력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는 64개국 중 36위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손해배상제도 혁신)** 3배 징벌배상 도입, 기본배상액 현실화 등 법제정비
 -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에 개선된 손해액 산정방식이 적용*되고, 3배 징벌배상이 가능해져 강력한 보호환경 마련
 - * (종전) 피해자의 생산능력 한도 내 → (개선) 생산능력 초과분도 배상
- **(기술경찰 출범)** 기술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담조직 설치
 - 직제개편('21.7월)을 통해 기존 보호집행 조직이 기술특사경, 상표특사경, 부정경쟁조사로 전문화되고 수사·조사인력 증원
 - * 직제개편: (종전) 1과 47명 → (확대) 3과 58명(기술·상표특사경·부정경쟁조사)
-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출범('20.11월)
 - 주요국의 분쟁정보 모니터링, 소부장 기업 대상 분쟁대응 중점지원 및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감시·대응

3 향후 과제

◇ 해외 기술유출 방지 및 우리 기업의 지재산 보호 수준 강화

- **(기술유출 방지)** 산업스파이 처벌 및 기술범죄 처벌 강화
 - ‘외국 정부·기관·국영기업 등을 위해 해외 기술유출하는 자’를 산업스파이로 정의 및 공소시효 특례** 마련
 - * 해외유출에 관여한 내국인 포함 / ** 형소법 규정보다 시효 장기화 등
 - 기술범죄로 얻은 재산 등을 몰수 또는 추징, 법인의 조직적 인력·기술 유출행위에 대해 가중처벌(개인 대상 벌금형의 3배)
- **(지식재산 분쟁지원)** 해외기업과의 분쟁대응 지원, 현지 분쟁대응 강화
 - 해외기업과의 분쟁발생 시, 기존 ‘특허·상표·디자인’ 분야에서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분야까지 분쟁대응전략* 지원 확대
 - * 분쟁위험조사, 경고장·소송대응·라이선스 등 상황별 대응전략 제공 등
 - 해외 현지에서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확대* 및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강화**
 - * (‘21) 중국(6), ASEAN(4) 등 총 17개소 → (‘26) 중동·중남미 지역에 추가 개소
 - ** (기존) 중국·베트남·태국 → (개선) ASEAN 전체 국가로 확대
-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 증거수집제도 개선,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 증거자료의 은닉, 허위 제출 확인을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 증언 녹취 및 증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는 자료보전명령 등 신설
 - 영업비밀 침해자에게 구체적인 실시행위를 입증하게 하는 의무 부과
-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자의 영업방해 행위 또는 수요자 기망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제재
 -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명령제도 도입, 온라인 위조품 근절을 위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방지 의무 부과*
 - * 온라인사업자가 상표권 등 침해를 알고도 방조한 경우, 형사책임 부과 등

3. 지식재산 빅데이터 활용 강화

①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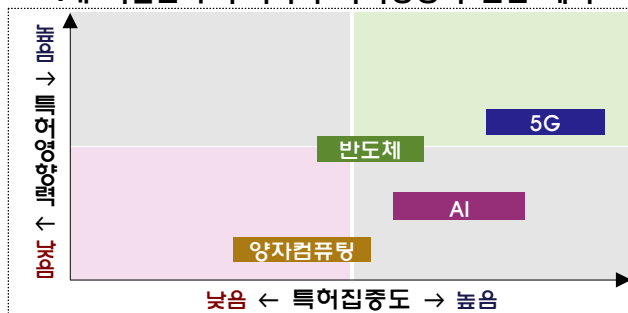
- **(특허데이터 중요성)** 특허데이터 활용의 경제적 효과는 年 30조원으로, 기술패권 시대 우리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자원으로 부상
⇒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국가 R&D 전략수립, 기업 연구개발 지원, 민간 서비스 개발, 자금 조달 등 새로운 환경 대응 필요

▶ 특허 데이터는 기업, 연구소 등의 노력·비용으로 만든 연구결과의 핵심 결정체로, 국제표준에 따라 구축·관리되어 전세계 기술분석·활용에 용이
* 특허DB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기술정보의 90% 이상이 담겨있고(Zha&Chen, '12), 신지식의 75%가 특허문헌으로만 공개됨(막스플랑크연구소,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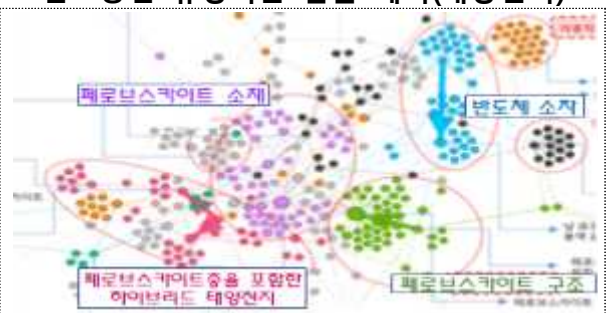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정부 R&D 지원)** 국가 중요산업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기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부 R&D 효율화 지원('19~)
* 반도체·5G·AI·양자 4대 핵심분야의 특허경쟁력 진단, 탄소중립 주요분야(태양광·수소차 등)의 유망기술 발굴 및 산업혁신 전략 제시('21)

<4대 핵심분야 우리나라 특허경쟁력 진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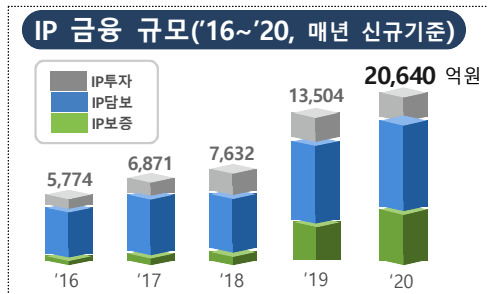


<탄소중립 유망기술 발굴 예시(태양전지)>



- **(소부장 IP-R&D)** 일본 수출규제 계기로 소부장 기술자립·분쟁예방을 위해 소부장 핵심품목(100+α) 정부 R&D사업에 IP-R&D 전면 적용*('19~)
* 소부장 분야 IP-R&D 과제 수 : ('19) 35개 → ('20) 299개 → ('21) 430개
- 일본 선도기업 등의 특허장벽에 대한 회피 전략 등을 제공하여 기술자립을 위한 핵심특허 630건 창출(~'21.上)
- 주요 연구과제에 IP-R&D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IP-R&D 지원 근거규정 마련(소부장특별법) 및 IP-R&D 지출비용 세액공제 도입('21.4)

- **(민간 특허정보 지원)** 민간의 특허정보 활용 지원을 위해 전세계 특허정보 DB 확보*, 대국민 특허검색 및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권 DB 구축('21.9월): 약 5.1억 건(국내: 0.6억 건, 해외: 4.5억 건)
- **(IP금융)** IP정보를 활용한 IP금융 시장이 2조원대로 대폭 성장('20)
→ 물적 담보가 부족한 低신용 혁신기업에 자금 제공 집중



IP 담보대출 기업별 신용등급 분포

신용등급	CCC이하	B	BB	BBB	A 이상
신용대출	비우량등급				우량등급
IP담보대출	74.4%				25.6%
	37개 (2.3%)	393개 (24.4%)	767개 (47.7%)	331개 (20.6%)	80개 (5.0%)

* '20년 IP가치평가 후 IP담보대출을 받은 1,608개사 분석 결과

3 향후 과제

- **(기술보호)** 특허빅데이터 및 공급망 분석을 통해 우리의 기술안보 관점에서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수전략기술 도출·육성·보호

▶ 필수전략기술: 산업안보상 매우 중요한 급소기술(choke point)
- 도출된 기술 중 未확보 기술은 R&D 투자·공동연구·기술도입 등을 통해 빠르게 기술을 획득하고, 既확보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

- **(IP-R&D 강화)** 탄소중립·BIG3 등 新산업분야 특허 분석을 확대*하여 유망 R&D 과제를 도출하고,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IP-R&D 지원 강화**

* ('20) 재생에너지, 자율주행 등 5개 → ('21) 반도체, 바이오, 태양광, 수소, 친환경차 등 12개 분야 분석보고서 발간 및 관계부처·R&D기획 기관에 제공

** '21년 디지털·그린뉴딜 등 100여개 R&D 과제 지원

- **(특허분석시스템)** 전세계 기술·산업동향 분석을 위한 고품질 특허데이터 DB 구축 및 특허·산업·경제 데이터가 연계된 실시간 특허분석시스템 개발

* (예) 해외 권리자 변동정보 → 해외 기업의 최신 특허전략, 보유현황 파악
실험데이터 DB → 백신, 신약 등 연구개발의 속도와 효율성 개선

- 지식재산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범국가적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 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IP금융 확대)** IP 평가·거래 DB를 구축*하고, 유망 IP 보유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적극 활용하여 IP 금융규모를 '24년까지 6조원 대로 확대

* IP투·융자연계 평가정보, IP실거래정보 등 DB 구축('20년 5만건 → '24년 20만건)

기 상 청

1. 예보소통 및 방재대응 지원 강화

① 추진 배경

-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이상기상 발생으로 기상예보의 불확실성 증가 및 재해피해 대응을 위한 위험기상정보 요구 급증
※ ('18) 역대 최고 폭염(홍천 41.0°C), ('19) 60년만에 7개 태풍 영향, ('20) 역대 최장 장마철 기간
- **(만족도 한계)** 매년 상세해지는 예보정보, 다양한 전달수단 이용에도 불구하고 방재 사각지대 존재 및 기상정보 체감 만족도 상승 둔화
※ '19년 대비 '20년 기상예보에 대한 기대 충족도: 일반국민(1.6% 상승), 전문가(1.6% 하락)
- **(기술혁신)** 삶의 방식 변화, 기술혁신과 코로나 이후 사회·과학기술 변화상을 반영한 다양한 기상서비스 및 전달방식에 대한 수요 증가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재해대응역량 강화)** 선제적 방재대응을 위한 기상재해 예측·대응 역량 강화
 - 특보기준 개선·세분화 등 국민체감형 특보체계 전환으로 방재대응 지원
※ 호우특보 기준 개선('18.6.): (주의보/경보) 6시간 70mm/110mm → 3시간 60mm/90mm
※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기준 개선 및 서울특보 구역 세분화('20), 해상특보 세분화('21)
 - 정확한 태풍예보와 선제적 정보제공으로 재난대응 및 피해 저감 지원
※ 태풍 '초강력(54m/s)' 등급 신설 및 지역별 영향시점 제공('20), 태풍 전주기 통합 정보 제공('21)



- 예측정확도 향상 및 기상기술 자립을 위해 2011년부터 개발한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정식 현업운영('20.4.) 및 예측성능 지속 개선
※ 세계 9번째 자체 모델운영으로 기상선진국 진입/기존 영국모델 대비 98.9% 예측성능 확보('20)

- **(맞춤형 정보제공)**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 지역·분야별 **영향예보 제공 및 전달수단 확대**를 통한 피해 저감 지원
 - ※ (영향예보) 폭염('18~'19) → 한파('19~'20), (전달수단) TV 자막 음성방송, 재해문자전광판 등
 - ※ 온열질환자 수 감소(출처: 이상기후보고서): ('18) 4,526명 → ('19) 1,811명 → ('20) 1,078명
 - **상세하고 알기 쉬운 날씨정보 제공**으로 국민안전과 생활편익 증진
 - ※ 초단기(10분 간격 제공), 단기(1시간 단위 및 최대 79시간 예보), 중기예보(강수확률 제공)
- **(소통강화)** 급변하는 날씨상황을 언론·국민들과 소통하여 국민편익 증진
 - 언론인 대상, 위험기상 대비를 위한 **예보브리핑 신설** 및 위험기상 (태풍)에 대한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국민과 양방향 소통**('21.)
 - ※ 언론 부정기사 감소(전년대비 4배 감소, 215건→54건) 및 시청자 긍정적 반응

③ 향후 과제

- **(예보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보기술 개발 및 예측 역량 제고
 - (지능화 예보) 위험기상 판단·예보를 위한 **지능화 기반의 예보체계 정립**
 - ※ 알파웨어(AI 예보지원 솔루션)와 연계한 위험기상 판단과 예보생산 및 예측모델 개발 등
 - (수치모델) 관측자료 활용확대 및 초단기부터 연장된 중기(30일)까지 이음새 없는 기상재해 **조기경보체계를 위한 기술 개발**('20~'26년)
 - ※ 해상도 1km까지 상세화: ('20)12km → ('22)단일해상도 8km → ('26)가변해상도 1~12km
 - (예보기법 개선) 예보 난이도 높은 국지적 이상기상현상 대응을 위해 **현상·지역별 맞춤형 정량 예보기법 개발**
- **(사각지대 해소)** 의사결정 지원 대상별 영향정보 발굴 및 전달체계 구축
 - 방재 유관기관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방재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발굴 및 영향예보 콘텐츠 개선
 - 기상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취약집단 관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영향예보 전달체계 구축 및 개선**
- **(소통체계 개선)** 예보소통 강화를 위한 방재기상다면플랫폼 구축
 - 재난 상황별 기상정보와 재난 융합서비스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 정보 및 실시간 소통체계 구축**
 - 탈 중앙화·개인화로 대표되는 소통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전통적 소통과 더불어 **뉴미디어(영상콘텐츠, 그래픽 중심) 소통체계 구축**

2. 국가기상관측망 관리체계 강화

① 추진 배경

- 최근, 교통·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기상관측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기상장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정부, 지자체 등은 기관의 목적에 따라 기상관측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나 기관의 전문성, 통합관리 부족으로 비효율 발생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법·제도개선)** 국제표준에 맞춘 관측시설 등급 기준 개선('17.10.), 관측자료 신뢰성 강화를 위해 형식승인제도* 시행('21.4.) 등
* (21) 온도계, 강수량계, 풍향계, 일사계 등 10종 → (23~25) 시정계, 운고계 등 6종 추가
- **(제도 준수)**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관련 제도개선 등에 직접 참여, 표준화제도 관심·준수 제고
- **(자문·기술지원)** 지자체 등 관측기관의 설치환경 적합성 검토, 관측시설 평가, 관측자료 품질관리 지원 등을 위한 현장지원반 운영

③ 향후 과제

- **(표준화·공동활용 의무화)** 현행 제도의 '협의·권고' 성격을 '의무' 부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
- **(사전 조정기능 강화)** 설치계획 단계부터 기상청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관측장비 중복설치 문제 해소
- **(관리 전문성 강화)** 운영관리 전문성을 강화하여 비효율적 관측장비 운용실태 개선
 - 기상전문기관이 관측장비 운영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장비운용에 참여하는 민간 위탁관리업체의 자격요건 강화
- **(평가 강화)** 평가대상을 개별 시설에서 관측기관의 종합적 운영역량으로 확대하고, 평가결과 공개로 관측기관의 제도 준수율 제고 유도

3.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상세 기상기후자원정보 생산

① 추진 배경

- **(배경)** 경제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7.)
 -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25년까지 30조원 투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8.)
 -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계획으로 ‘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 추진(‘21.9.)
- **(필요성)**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신속한 전환 필요
 -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상기후자원정보 지원 체계 구축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기술개발)** 국가정책 지원을 위한 태양광·풍력 기상자원기술개발 추진
 - ‘09년 당시 국가의 주요 정책인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처리기반의 기상자원지도(2종) 개발 및 대국민 공개(‘10)
 -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바람환경 관측 및 분석(~’17)
 - 제주 탄소제로섬 지원을 위한 발전단지(동북, 행원, 봉개) 태양광·풍력 기상자원 관측 및 분석(~’20)
 -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을 위한 기상자원지도 필요성 대두로 모델기반의 고해상도(100m) 풍력·태양광 기상자원지도 생산 기술개발(‘21)

- **(정보 생산 및 제공)** 규모상세화 수치자료 산출체계 기반의 신규 기상자원지도 생산 및 제공
 - 고해상도 태양광 및 풍력 기상자원지도 작성('21.8)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한 정보(풍속, 풍향, 일사량 등 7종) 제공
 - ※ 제공실적: ('19) 1,212건, ('20) 2,777건, ('21.8) 2,183건
- **(미래기상자원전망)** IPCC(AR5)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미래 일사 및 바람 전망 정보 산출 및 분석('17)

3 향후 과제

- **(기술개선)**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기후자원지도 개선 및 기상자원예측기술 고도화
 - 공간적 고해상도(AI 기술 등 활용) 기후자원지도 기술개발('22~'23) 및 서비스 제공('24~)
 - 기상자원 초단기·단기 예측정보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22~'23) 및 서비스 제공('24~)
 - 신규 기후변화 시나리오(SSP) 기반의 미래(2030년 이후) 일사 및 바람 전망 정보 산출 기술 개발('22~)
- **(활용도 강화)** 신재생에너지 수급·조정·관리 시 기상정보 활용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추진
 - 한국전력거래소 등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강화
 -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상 분야 지원방안 기획연구 추진('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강화

① 추진 배경

- **(도시기능 강화)**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해소,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 기능 강화 필요
 - 국회분원 및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추진으로 행정효율성 향상, 도시 정주환경·인프라를 지속 확충 및 대학·기업 유치로 통해 자족기능 강화
- **(도시계획 변경)** 행복도시건설 완성단계의 시점에서 추진 성과의 평가 및 현실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개발계획 변경 추진
 - 국회세종지사당 등 신규 도입되는 도시 주요기능을 반영하고, 정책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제시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국회세종지사당)**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대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의결(9.28)되어 국회세종지사당 설치 근거법을 마련
 - 국회세종지사당 건립기본계획 용역(국회사무처 주관) 적극 지원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사전협의 진행('21.9~)
 - * 기획재정부(수시배정 해소, 총사업비 협의), 행정안전부(국회건립 인력증원) 등
- **(정부부처 이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따라 행복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등 **43개 기관**(중앙 22, 소속 21) **이전완료**('12~'21)
 -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정부 세종신청사 건립 중*으로 부처 간 업무교류 활성화 및 정부 업무효율성 향상 기대
 - * 예정공정대로 공사 진행 중(공정률 35%, '22.10 준공) :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심의('18.5) → 설계공모 완료 및 설계 착수('18.10) → 착공('20.4~)

- **(정주여건 조성)** 행복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및 문화여가 공간 확충 등 차별화된 도시 정주환경·인프라를 지속 확충
 - '30년까지 행복도시 내 20만호 공급계획*에 1.3만호 추가공급 발표 (정부 2·4대책)를 반영해, 주택공급물량 총 21.3만호 공급계획 추진
 - * '30년까지 총 20만호 목표 대비, 12.5만호 착공(62.5%), 10.7만호 준공(53.5%)

▶ **(문화·공원)** 중앙공원 1단계 개장('20.11), 도시상징광장 1단계 개장('21.5), 아트센터 준공('21.5), 금강보행교 준공('21.12 예정), 박물관단지('27년 목표, 5개 박물관 건립중)

- **(자족기능 강화)** 다수의 대학·연구기관이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공동캠퍼스 조성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도시 성장 동력 확보
 - 행복도시법 개정('17.10) 등을 통해 제도 기반 마련 및 공동캠퍼스 입주 대학 승인*('21.2), 건축허가('21.8) 등 대학 유치 가시화
 - * 서울대, 충북대, KDI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 6개 대학
 -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 '15년 지정) 내 약 330개사 기업 유치·운영
- **(도시계획 변경)** 도시계획 변경의 완성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부TF·외부협력체계·자문단 등 계획변경 추진을 위한 관련 체계 구축
 - 도시완성에 대비한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변경(안)을 청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용역을 통해 계획변경(안)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부문별 계획의 변경방향 도출

③ 향후 과제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일정('27.上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행복도시 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안) 마련 및 관련 절차 지원
 - 세종의사당 주변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주거계획 등을 반영
 -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 위치 및 건물 규모 등이 행복도시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행복청 상호협력
- **(자족기능 강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미착공 기업 대상 지속적 행정 지원 등을 통해 기한(입주계약일로부터 2년) 내 착공 및 입주 독려

2. 광역상생협력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

① 추진 배경

- 충청권 4개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와의 지속적인 행복도시권 동반성장정책 추진을 통해 균형발전 모델 제시
 - 주요 교통거점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구축을 통해 행복도시와 주변도시간 접근성을 강화하고 상생발전의 기반 마련
 - 행복도시 건설 효과 확산 및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인근지역과 광역계획권을 형성하여 지방소멸 등 미래 국토변화에 공동 대응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광역도시계획)** 행복청, 대전·세종·충북·충남이 상생발전 협약 체결('19.5), 충청권 4개 시·도와 연계하여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중
 - 초광역적 협력네트워크 형성, 기존 광역계획권 중첩에 따른 비효율 해소 등을 위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을 통합·확대('21.4)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지정(4.19) >



- ▶ (기존) 충청권 광역계획권 9개 시군(258.3만명, 3,597km²)
- ▶ (확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통합·확대 22개 시군(460.3만명, 12,193km²)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 기존 광역계획권 중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권·청주권·공주역세권을 통합하고, 내포권 일부(예산·홍성·보령) 및 천안·아산·서천 지역을 추가

- **(상생협력사업 추진)** 지자체 개별 추진 사업간 시너지 제고, 교통·환경 등 광역적 이슈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상생협력 선도사업 선정·추진
 - 1차 상생협력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신규 상생협력 사업 추가 발굴*(2차, '21.9)
- * ①가속기 클러스터(ACE) 구축 ②금강수변축 특화관광벨트 조성 ③관광도로 도입 ④기후위기 통합 대응 ⑤수소충전소 협력 ⑥MICE산업 육성 ⑦광역교통망 확충

< 1차 상생협력 사업(10건, '19.8) >

- ▶ ① 첨단 바이오·소재 벨트 구축 ② 통합 관광프로그램 개발 ③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 도입
④ 청주국제공항 광역 버스노선 확대 ⑤ 청주국제공항 시외 버스 노선 증차 ⑥ 청주국제
공항 연결도로 건설 ⑦ 정안IC~내포신도시 연결도로 건설 ⑧ 행복도시~공주 탄천(KTX
공주역) 연결도로 건설 ⑨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 ⑩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 **(광역교통망)** 전국 주요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광역도로 21개 노선**(164.9km) 건설 추진
- 현재 10개 노선(83.4km, 50.6%)을 개통하였고,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20.5) 시 추가 반영된 신규노선(3개)*은 예비 타당성조사 추진 중
- * (예타 중)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예타 추진) 정안IC~내포신도시, 행복도시~탄천

< 행복도시 광역도로망(21개 노선, 164.9km) >

운영중 (10)	행복도시~대전 유성('12), 행복도시~오송역('12), 행복도시~정안C('13), 행복도시~대덕테크노 밸리('15), 행복도시~남창주C('16), 행복도시~창주('16), 행복도시~공주1구간('17), 오송~청주공항('19), 오송~청주1구간('20), 오송~조치원('20), 행복도시~공주2구간('21), 행복도시~부강역('21)
추진중 (8)	행복도시~조치원('23), 오송~청주2구간('23), 외삼~유성복합터미널('24), 행복도시~ 공주3구간('26), 조치원 우회('26), 회덕C 연결('25), 행복도시 동측우회('27), 금남~북대전C('27)
향후 (3)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예타 시행), 정안IC~내포신도시(예타추진), 행복도시~ 탄천(예타추진)

③ 향후 과제

- **(초광역권계획)** 초광역 협력을 위한 초광역권계획* 법제화 추진에 따라,
행복청이 초광역권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 개정
- * 둘 이상의 시·도가 해당 지역의 장기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계획(공간전략, 협업사업 등)
- 광역거버넌스 운영 내실화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
- **(광역상생발전)** 광역도시계획 구체화 및 연계 발전방안 등 집행·관리,
상생협력 선도사업 발굴·공동 추진 등 지속적 광역상생협력 성과 창출
- **(광역교통망)** 단계별 건설계획에 따라 잔여 11개 노선(추진중 8개,
신규 3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 신규 3개 노선의 조속한 착수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

3. 그린·스마트도시 조성

① 추진 배경

-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전략 등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 기반 그린·스마트도시 조성 필요
 - 미래지속가능한 모범도시 조성 등 정책목표에 부합하고자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
 - 친환경 생태도시로 건설 중인 행복도시가 정부의 저탄소 전환정책에 맞추어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 역할 수행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스마트시티)** 행복도시는 '30년까지 3단계*'로 도시전체를 스마트 시티로 조성 중이며, 리빙랩 사업 등 시민참여형 도시모델 구현

* 1단계(1·2생활권, ~'17년), 2단계(3·4생활권, ~'20년), 3단계(5·6생활권, ~'30년)

- 방법·교통·방재 분야 스마트 인프라 구축('19.11~'22.5) 및 주민 수요 맞춤형 신규 스마트 서비스 발굴·구축 추진('21.9~)

※ 지능형 CCTV,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미세먼지 지도, 스마트포털(세종엔) 고도화 등

- 주민들이 직접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 추진(2차, '21.8~, 행복도시 전체)

※ 1차 사업(1·4생, '18.10~'20.3)으로 교통·생활 분야 4종 서비스 발굴·구축 추진

- 스마트시티 관련 국내·외 인증 획득·수상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 ▶ 국제표준화기구(ISO)주관, 영국표준협회가 심사하는 스마트시티 '성숙도' 분야 유일 국제표준인 스마트시티 국제인증(ISO37106) 세계최초·유일 4단계 획득('20.12)
- ▶ '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 공공안전분야 수상('20.6.1, IDC주관)
- ▶ '세계스마트시티 기구 어워즈' 특별상 수상('20.11.17, WeGo주관) 등

-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선도모델 구현을 위한 국가시범도시*(5·1생) 지정('18.1) 후 도시계획 수립 및 부지조성 공사, SPC설립지원 등 추진

* 공유교통수단·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블록체인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헬스케어·교육·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되는 미래형 도시모델

추진경과	2018년	2019년	2020년
	국가지범도시 지정 시행계획 수립	서비스로드맵 수립 행복도시계획 반영	부지조성공사 착수 SPC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10), 우선사업협약* 체결('21.1)을 거쳐 예비사업자 승인(국토부, '21.4)을 완료, 민간 주도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 사업법인 설립 전 국가지범도시와 공간구조적으로 유사한 지역에서 교통분야 6개 서비스에 대한 리빙랩형 종합실증을 통해 사업실효성 검토

- **(탄소중립)**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21.7) 및 세종시·LH와 MOU 체결('21.9)로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한 기틀 마련

- * ① 제로에너지도시 건설 ②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 ③ 그린에너지 도입·확산 ④ 탄소배출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⑤ 시민참여 및 인식제고

- 도시 인프라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누적 189.5MW) 도입, 수소충전소 2개소('20.8월 1-5생, '21.9월 3-1생) 조기 구축으로 친환경교통 이용편의성 제고

- 자전거도로 인프라는 전국 최고(면적 대비 연장(km/km²) : 행복도시 4.85, 서울 1.39, 인천 0.39)이며, 공유자전거 서비스(어울링)*도 최상위 수준**

- * 현황 : 운영센터 1개소, 대여소 604개, 자전거 3,000대, 전기자전거 400대(1~4생) 어울링 이용건수 : '17(191,065건) → '18(213,257건) → '19(582,408건) → '20(1,223,397건)

- ** 인구 1만명당 공공자전거 대수('19) : 세종 76.2대, 서울 25.7대, 창원 40.7대, 대전 19.6대

③ 향후 과제

- **(스마트시티)** 교통·방법·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실증하여 스마트시티 인프라 고도화
- 한국형 스마트시티 브랜드로 타도시 확산 및 해외수출 추진
- **(국가지범도시)**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 모델 및 민간부분 서비스 구축을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비즈니스 창출, 산업 생태계 조성
- **(탄소중립)**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실행계획 수립 및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등 전략의 구체성 및 제도적 기반 강화

새만금개발청

1.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및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① 추진 배경

- **(탄소중립)** 기후변화 위기 등에 대응하여 정부는 ‘한국판 뉴딜(‘20.7)’ 및 ‘2050 탄소중립(‘20.12)’을 선언
 -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통해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목표 실현을 위해 대표 프로젝트 부지로 새만금지역 결정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출처: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안)) >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재생에너지)** 육상태양광(0.3GW)은 건설 중으로 '22년 말부터 발전개시 예정, 수상태양광(2.1GW)은 기본설계 후, 1단계*(1.2GW) 사업자 공모 중
 - * 한수원(0.3GW), 전북·군산·김제·부안 지역주도형사업(0.4GW), 투자유치형사업(0.5GW)
- **(스마트그린산단)**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21.4)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5·6공구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계획 발표
 - 새만금 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구현 실증 산단조성(~'23)
 - * 전력망, 스마트 공장, 스마트 물류·교통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국가시범산업 단지로 추진하고, 민간투자확대를 위해 산단 내 장기임대용지 확보

③ 향후 과제

- **(재생에너지)** 총 2.6GW 중 '22년부터 1단계 사업*인 1.7GW의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을 개시하고, '25년 이후 2단계** 0.9GW 추진
 - * 1단계 사업 : 수상태양광 1.2GW, 육상태양광 0.3GW,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 ** 2단계 수상태양광 0.9GW 사업은 투자유치형 발전사업과 연계하여 민간공모 방식 등으로 추진 예정(농식품부는 수상태양광 0.4GW 사업 별도추진)
- **(스마트그린산단)** 국토부 지침(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21) 후 국가시범산단 지정 신청('21.12) 및 지정 승인('22.上)
 -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안)」('21.11. 고시예정)
 - 기업의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산단 구현을 위해 선도사업(30MW)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인프라 구축*
 - * RE100 선도사업(30MW)에서 생산한 전기를 산단(5·6공구)에 직접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22년 실시설계 이후 '23년 착공 후 '24년 준공 예정

2. 새만금 교통인프라 조성

① 추진 배경

- **(균형발전)**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인 새만금의 내부개발 촉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공항·항만 등 기반시설의 적기 구축 필요
 - 국가균형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공항·항만·철도가 연결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 추진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도로)** 주변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건설 중
 - ※ 동서도로 개통('20.11), 남북도로 공사중(~'23.7),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중(~'24년), 내부 지역간 연결도로 예타중(~'22.2)
- **(공항)** '19년 국가균형발전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19.1)되어 사전 타당성조사 완료('19.6) 후 '22년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행정절차 진행 중
 - ※ (사업규모) 활주로 2,500m 1본, 계류장(5대), 여객터미널, 주차장, 부대시설 등

- **(항만)**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19.8)에 반영되어 가호안·매립호안 공사 준공('21.2) 및 진입도로·방파호안·관리부두 등 공사중
※ (접안능력) 2~3만톤→5만톤, (선석수) 18선석→9선석, (사업기간) '09~'30→'19~'40
- **(철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16.6)되어 사전타당성조사 조사용역('19.5, B/C 1.11)을 완료 후 예비타당성조사 중(~'21.12)
※ (사업규모) 47.6km(새만금-옥구신호소 단절구간 29.5km + 기존철도 전철화 18.1km)

③ 향후 과제

- **(도로)** 새만금 용지간 접근성 향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간 간선 연결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2년上)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예비타당성 조사('22.2월) → 기본계획 수립('22년말) → 기본 및 실시설계('23년) → 착공('24년) → 준공 및 개통('28년)
- **(공항)** '28년 준공을 목표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추진(국토부)
※ 기본계획 고시('22년) → 기본·실시설계('22년~'23년) → 공사착공('24년) → 준공('28년)
- **(항만)** 새만금 내외지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한 잡화부두 2선석 우선 완공('25년) 추진하고 향후 7선석 건설 추진(해수부, ~'40년)
※ '25년 준공을 목표로 2선석 공사발주('21.9),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추진 예정('22년)
- **(철도)** 새만금 신항과 연계하는 인입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국토부)
※ 기본계획 등(~'22년下) → 기본·실시설계('23년~'24년) → 착공('25년) → 준공('29년)

3.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등 공공주도 사업 추진

① 추진 배경

- **(균형발전)**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스마트 수변도시', '항만배후도시' 등의 선도 사업추진
 - 민간투자에 의존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의 주도로 사업시행

2 추진현황 및 성과

- **(스마트 수변도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9.5),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19.8), 통합개발계획 승인('20.6) 및 착공('20.12),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추진 중(새만금개발공사, ~'23.6)

※ (사업기간) '19년~'24년, (면적) 6.6km², (인구) 2.5만명, (총사업비) 13,476억원
(내용) 주거·산업·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 개발

- **(항만배후도시*)** 항만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항만배후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진행 중(새만금개발공사, ~'21.12)

* 신항만과 항만배후도시를 연계한 경제특구 개발을 통해 외투기업, 국내복귀기업 등의 투자거점지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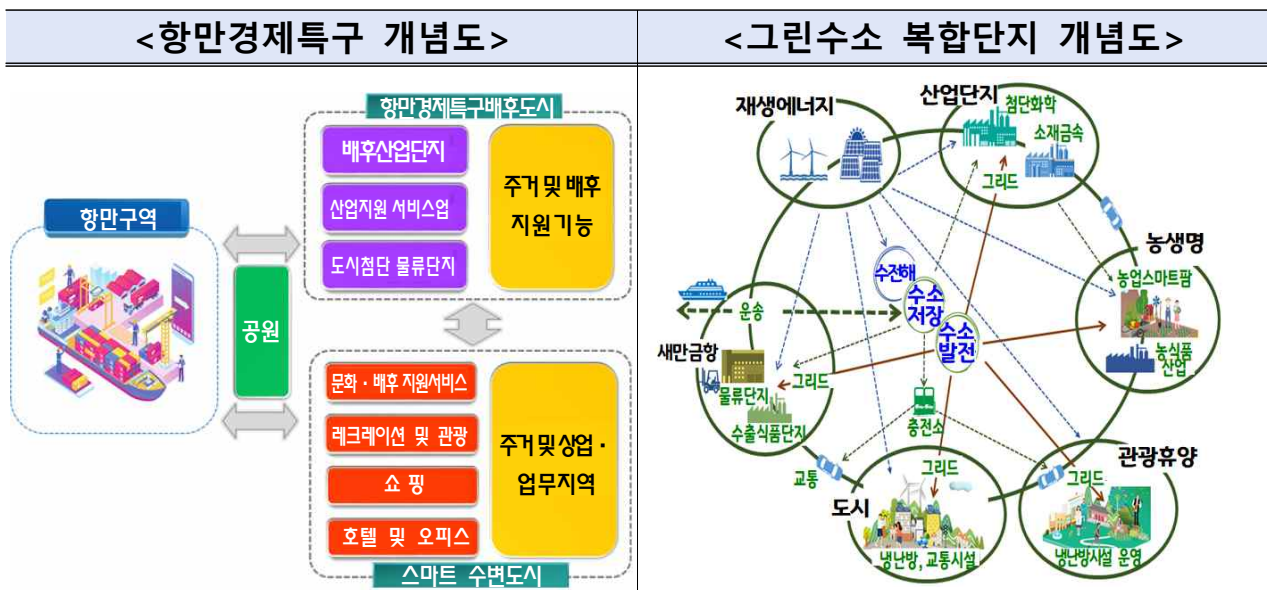
3 향후 과제

- **(스마트 수변도시)** 혁신형 스타트업 및 인재육성·정주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24.12월 1단계 공사완료를 목표로 '23년상 매립공사 준공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단위 최초 탄소중립 기본구상 수립 중(~'22.6)

- **(항만배후도시)** 항만거점의 복합형 경제공간 개발을 위해 타당성조사(~'21.12)를 마무리하고, '22년상 통합계획 수립 착수 예정

- **(그린수소복합단지)** 그린수소 및 신기술과 도시·산업이 연계된 복합형 생활·산업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2년下 타당성조사 추진 예정



사회·문화 분야

1. 교육부	191
2. 법무부	203
3. 행정안전부	215
4. 문화체육관광부	229
5. 보건복지부	241
6. 환경부	254
7. 고용노동부	264
8. 여성가족부	275
9. 국가보훈처	285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95
11. 식품의약품안전처	299
12. 경찰청	305
13. 소방청	309
14. 문화재청	315
15. 질병관리청	320
16. 해양경찰청	328
17. 원자력안전위원회	333

교 육 부

1. 교육비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① 추진 배경

- **(교육기회 보장)**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온전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며 능력과 의지에 따라 마음껏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 **(안정적 교육 환경 제공)** 저출생, 맞벌이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돌봄 걱정 없는 양육 여건을 마련하고 생애 출발선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 필요
-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중 ('15) 39.6%→('19) 51.4%(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교육비 부담 경감)**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교육단계**에 걸쳐 교육비를 두텁게 지원하여 가정의 학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 (유아)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지원금을 방과후 과정비 포함 1인당 월 33만원으로 인상('13~'19년 29만 → '20년 31만 → '21년 33만)
 - (초·중·고)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21.3)로 연 160만원 학비 경감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수준 대폭 인상('17년 대비 '21년 평균 420%)
*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에 지원('17 → '21년 보장수준 변화 : [초] 4.1만원 → 28.6만원, [중] 9.5만원 → 37.6만원, [고] 9.5만원 → 44.8만원)
 - (대학) ▲서민·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 지원* ▲취약 계층 학생의 생활비·등록금 대출이자 상환 부담 경감**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18) 및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22)
* '17 → '22년 지원금액 인상 : [서민·중산층] 67.5~168만원 → 350~390만원 [기초차상위] 520만원 → 첫째 700만원/둘째이상 전액, [다자녀가구] 8구간 이하 셋째이상 450~520만원 → 전액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에게 생활비 대출 (연 300만원) 무이자 지원, '22년부터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재학 중 등록금 대출이자 추가 면제
 - (대학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원생을 위해 기존 학부생에게만 적용됐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대학원생에게도 지원*('22~)
* '22년에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전문기술석사부터 우선 적용·시행

- **(돌봄안전망 강화)**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를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 조성
 -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2,352학급 확충('18~'20) ▲강화된 건강·안전 분야 평가 기준을 적용한 '학부모 안심유치원' 전국 확대('20) ▲모든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로 공평한 유치원 선발기회 보장('19~)
 - (온종일돌봄) 초등돌봄교실·마을돌봄기관을 확충하여 '22년까지 53만명 규모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초등돌봄의 질 제고 추진*
 - * 돌봄시간 확대,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발표('21.8)
 - ※ 코로나19 상황 속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 운영('20.6월 기준 187,300명 참여)
 - (장애학생) 대학 연계 예비특수교사 지원('21년 1학기, 579명)을 통해 돌봄 및 교육활동 지원, 관계부처 협업으로 안정적인 돌봄 제공 기반 마련
- **(아동 안전 보장)**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관계부처·전문가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조기 대응* 및 학생자살 예방 노력
 - * 복지부·교육청 위기아동 정보공유 제도화('21), 비밀전학 제도개선 인근학교 학습 지원 추진(~'22.3월)
 - (학교폭력) ▲학교폭력사건 인지 즉시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분리하는 제도 도입('21.6월)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확대('19년 48개소→'22년 56개소)
 - (자살예방) ▲24시간 모바일 비대면 상담을 지원하고 자살위기 징후 시 긴급 지원체계 가동 ▲민관협업으로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보조(1인 300만원)

③ 향후 과제

- **(교육비 지원 확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의 교육비 부담 지속 경감
 - 유아학비 지원 규모를 표준 유아교육비* 기준으로 점차 상향하여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에 이어 유아교육 단계까지 학비 부담 해소
 - * 사립유치원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20) 월 557천원(2020년 표준유아교육비 개선방안 연구)
- **(돌봄서비스 개선)** 수요자가 원하는 운영 규모 및 시간에 부응하면서, 더욱 다양하고 특색있는 활동을 제공하여 돌봄의 질적 향상 실현
 - ※ 학교돌봄·마을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시설 환경 개선, 돌봄사업간 연계 강화 등 추진
 - 돌봄 거점센터 운영 등으로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돌봄을 확대하여 학교 내 가용공간 부족으로 인한 돌봄 공급 문제를 해결
- **(안전 사각지대 해소)** 피해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사이버 괴롭힘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하고, 아동 안전에 대한 모든 유형의 위협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 확립

2. 미래교육으로의 체계적 전환 추진

① 추진 배경

- **(맞춤형 교육)**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모든 학생이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가지고 필요한 역량을 계발해나갈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역할 강화 필요
- **(디지털 전환 대응)** 코로나19 확산과 기술혁신을 계기로 초·중고·대학 원격 수업 실시, 재택근무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의 혁신을 촉진하면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 제공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학교교육 혁신)** 미래 사회 환경변화 및 불확실성에 대응해 미래역량과 자기주도성을 함양할 수 있는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을 구현
 -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학교·교사의 자율성 강화, 교수·학습의 혁신 등을 담은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마련
 - ※ 추진일정 : ('21.下)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 ('21~'22) 국민 의견수렴 및 시안 마련 → ('22.下) 교육과정 확정·고시 → ('23) 교과용도서 개발 → ('24~) 단계적 적용
 - **(고교학점제)** 학생 개개인이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과목을 선택·이수하는 '고교학점제' 도입('25년 전면 적용)
 - ※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고교학점제 법적 근거 마련('21.9), 연구·선도학교 확대 운영('21. 1,457교 → '22. 1,965교 예정(전체 고교의 83%)) 등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 **(미래학교 전환)** 학교교육에 디지털·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전과 친환경·탄소중립 가치를 반영하여 미래 변화를 선도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해 디지털·친환경 기반으로 교육과정·교수·학습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미래학교로 전환
 - ※ 5년간('21~'25년) 총 18.5조원을 투자하여 노후 학교시설 약 1,400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조성('21년 사업물량 484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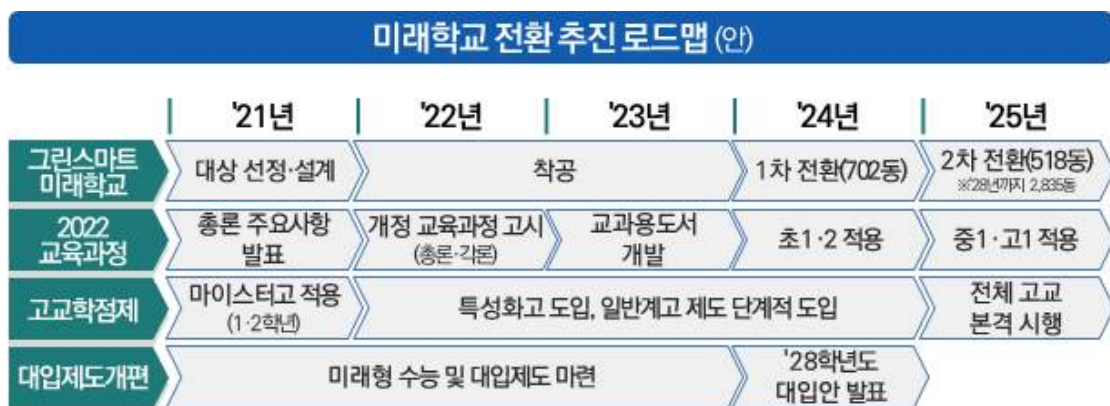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대 구성요소 >

공간 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 학교	학교 복합화
· 크와 쓰임이 유연한 공간 · 선택학습, 창의융합수업 · 활성화 · 휴식소통을 통한 인성 함양	· 디지털 기반 스마트 · 학습환경 · 블렌디드/활동중심 수업 · 확대	· 탄소중립 및 유해물질 · 없는 친환경 공간 · 체험 중심 환경생태교육 · 확대	· 지역과 학교시설 공유 · 지역사회 공동체와 연대 · 강화

- (디지털·AI교육) 양질의 원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원격교육법」 제정('21.9), 초·중등 교육과정에 AI 과목 도입*
 - * '인공지능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 신설('21.9), 초중고 인공지능 내용 기준 개발·보급('21.3)
- (인프라) ▲미래형 교수학습의 기반이 되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23년) ▲초·중·고 전 학습공간에 기가급 무선망 설치(~'22.2)
- (교원) 교·사대 미래교육센터(28개소)에서 예비교원의 원격수업 역량을 제고하고,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원 전용 플랫폼* 구축('21.8)
 - *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 : 공공·민간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 노하우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운영, 콘텐츠 저작 및 재구성 도구 제공, 다양한 교육 서비스 연계 등

③ 향후 과제

- **(미래교육 실현)**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24~),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 새로운 교육제도와 연계한 대입개편안 마련('24) 등 미래학교 전환 로드맵 이행



- 유연하고 다양한 학교공간, 스마트·친환경 학습환경, 지역사회 연계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핵심요소가 모든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
- 「원격교육법」에 근거해 정규 교육과정으로 온·오프라인 융합수업을 운영하고, (가칭)「인공지능교육법」을 제정하여 AI교육 활성화
- **(에듀테크 확산)** 기 구축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메타버스, VR 등 신기술을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감형 콘텐츠 개발·운영 및 장비 지원
 - ※ (예시) VR을 활용한 재난안전교육 및 직업계고 실습, 특정 시대와 장소를 가상으로 방문해보는 역사·지리 수업, 메타버스 공간에서 현지 학생들과의 실시간 영어토론 등
- K-에듀 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축적된 학습활동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별 수준 진단 및 교육과정 재구성 등 맞춤형 학습 지원 고도화

3.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평생교육 혁신

① 추진 배경

- **(혁신인재 양성)** 급변하는 기술 산업에 대응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인재 양성의 구심점인 대학의 역할 강화 필요
- **(평생학습체제)** 학령인구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추세 속,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지역사회 협력 및 체질 개선)** 대학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과 사회가 함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체계 마련 지원
 - (자율 혁신 지원)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18)하여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출범
 - (규제 완화) 재정지원사업 훈령 통·폐합 및 간소화, 원격교육 운영 자율성 확대, 법령 외 규제별 재검토 기한 설정 등 고등교육 규제 완화 추진
 - (지역인재 육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20~)을 통해 대학의 지역 혁신 선도 기반 마련 ▲지역인재 의·약·간호계열 입학 기회 확대**
 - * '21년까지 8개 지자체 4개 플랫폼 구축(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충북)
 - **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지방대육성법」 개정, '21.3),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비율 상향
 - (국립대 지원 강화) 국립대가 고등교육 기회 보장과 지역인재 양성 등 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의 교육·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결산기준) : ('17) 16,266천원 → ('20) 18,552천원
 - 국립대학 기회균형선발 학생 비율 : ('17) 13.9% → ('21) 16.4%
- **(맞춤형 인재 양성)** 미래사회에 필요한 신기술·첨단분야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집중 지원 체계 마련 및 제도 개선 추진
 - (첨단분야 인재 양성)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21~)을 통해 공유·협력 바탕의 신기술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첨단분야 정원·학과 확대** 유도
 - * 신기술 분야별 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원 공유 및 교육역량 결집('21년 8개 분야 46개 대학 참여)
 -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제정('20.8)
 - '22학년도 첨단학과 정원 조정(33교, 2,003명) 및 재학생 대상 융합학과 신설(15교, 1,535명)
 - (연구인력 지원)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20~'27, 매년 1.9만명), 기초 연구 지원을 통한 석·박사급 연구인력 및 신진연구인력 지원 지속 확대

- (기술인재 육성) ▲전문대 중심의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21.4, 5교) ▲신산업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 신설('21.5, 12교)
* 「고등교육법」 개정('21.3)을 통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산업수요 대응) LINC+ 사업('17~'21)을 통해 산학연계 교육과정, 사회 맞춤형학과 등을 운영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등 지원
* 산학연계 교육과정('21.2): 2,424개 / 사회맞춤형학과('21): 60개 대학, 465개 협약반
- (평생학습 지원)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평생학습 접근성 강화
- (평생교육 바우처)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를 도입하고('18), 「평생교육법」 개정*('21.6)을 통해 전 국민으로 지원대상 확대
*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급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22~)
※ 지원인원: ('18) 5,361명 → ('21) 21,000명 / 예산: ('18) 23.9억 → ('21) 73.8억
- (K-MOOC)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다양한 K-MOOC 강좌 지속 개발*
▲세계 석학**의 인문교양 강의 '위대한 수업' 운영('21~, EBS방송 병행)
* K-MOOC 강좌 현황(누적) : ('17) 324개 → ('18) 510개 → ('19) 745개 → ('20) 999개
** 유발 하라리, 재러드 다이아몬드, 마이클 샌델, 리처드 도킨스, 폴 크루그먼, 조지프 나이 등
- (맞춤형 평생학습) 평생교육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학습이력을 통합·관리하는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21~)
* ('21년) ISP 수립 → ('22~'23년) 플랫폼 구축 → ('24년~) 온국민평생배움터 서비스 개시

③ 향후 과제

- (대학 혁신 지원) 대학 간 균형있는 발전으로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 지원 대폭 확충과 안정적 재원 확보 체계 마련
※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지원 규모를 현행 0.6%에서 1.0%(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 검토 등
- 대학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모델을 마련할 후 있도록 RIS를 전 지역에 구축하고, LINC 3.0('22~)을 중심으로 전 분야의 산학협력 활성화 지속 지원
-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과 지역 사회에서의 공적 역할을 지속 강화하고,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역할·지원 체계화
- (국민 평생학습권 확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콘텐츠 지속 확충
- 대학이 재직자, 지역주민 등 성인학습자의 재교육을 위한 평생·직업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개선 등 추진

4.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① 추진 배경

- **(공정 요구 증대)** 공정, 평등 등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대응하여 교육 분야의 기회 균등, 과정의 공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보완
- **(교육신뢰회복)** 교육현장에서 공공성·투명성 관련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공정한 기회 보장)** 진학, 입시 등의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입·대입 등 관련 제도 전반적으로 보완
 - (고교체제 개편) 자사고 등과 일반고 입시 동시 실시('19~), 자사고 등의 '25년 일반고 일괄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을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추진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사고·국제고·외고 설치 근거 규정 폐지('20.2)
 - (대입 공정성 강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2022 대입제도 개편방안'('18.8),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19.11) 마련·추진
 - ※ 대학입학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20.7),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21.8) 등
 - (입시 투명성 강화)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대입 사전예고제(4년) 및 블라인드 평가 도입*, 입시 부정행위 시 입학허가 취소 근거 마련** 등 추진
 - *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개편을 통한 대입전형 전 과정 블라인드 평가 도입 유도('20~)
 - ** 「고등교육법」('19.11) 및 시행령('20.6) 개정
- **(고졸 취업 활성화)** 고졸인재들의 취업 기회 보장을 위해 중앙취업지원 센터 설립('20),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확대** 추진
 - * ('19, 도입) 1인당 3백만원 → ('21) 5백만원 / ** 9급 공무원 고졸 채용: ('18) 396명 → ('21) 692명
- (직업계고 혁신)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얻을 수 있도록 직업계고 학과개편 지원,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설** 추진
 - * ('20) 마이스터고 1학년 도입 → ('22) 특성화고 1학년 도입 → ('24) 직업계고 전학년 도입 완료
 - ** 지역별 전략·특화산업 중심 인재양성 협력체계 구축('21.3, 5개 지구)

- **(교육 공공성 확보)**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법·제도 점검·보완 추진
 - **(종합적 제도 개선)** 사학 부정·비리 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19.12)하고 후속 제도개선** 추진
 - * 사학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과제 도출
 - ** (법률개정) 교육부장관의 외부 감사인 지정 임시이사 제도 개선 사립교원 징계제도 정비 등 (행정입법) 회계부정임원 승인취소 기준 강화 개방이사 자격요건 강화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등
 - **(유치원 공공성 강화)** 유치원 3법* 개정(‘20.1),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도입** (‘20.3) 등을 통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
 - *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금지(「사립학교법」),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의무화(「유아교육법」), 유치원 급식 식재료 품질 및 위생·안전 관리 기준 강화(「학교급식법」) 등
 - ** (‘19) 도입 희망 유치원 1,320개원 → (‘20) 모든 사립유치원 3,584개원 전면 도입
 - **(사립대 공공성 강화)** 대형 사립대(16개) 종합감사 실시 및 사학기관 회계 감리 확대, 사학혁신 우수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사학혁신 지원사업’ 신설(‘21, 5교)
- ※ 종합감사 : (‘19) 2교 → (‘20) 7교(누적 9교) / 회계감리 : (‘17) 20교 → (‘21) 50교

③ 향후 과제

- **(교육 공정성 지속 제고)** 교육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공정성 강화 정책의 지속 추진 및 현장 안착 유도
 -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 일반고 전환 지원*을 통해 ‘25년 고교체제 개편을 완성하고, 모든 고등학교에서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 일반고 전환 지원금 확대(10억원 → 15억원) 등 / **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과특성화학교 지정 등
 - 고등교육 기회의 실질적 균형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통합 전형 운영 등 대입 공정성 강화 정책 지속 추진
- **(고졸 취업지원)**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상대적으로 취업여건이 어려운 직업계고 졸업자 대상 취업지원 정책* 지속 발굴
 - *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확대, 현장실습 채용연계 취업지원금 신설 등
- **(사학혁신 체계적 지원)** 한계사학에 대한 재정진단을 통해 대학별 상황에 맞는 구조조정 촉진, 자발적 해산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5.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사회정책 협력 기반 마련

① 추진 배경

-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안정성·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관점의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교육거버넌스 개편 필요
- **(사회분야 정책 협력)** 사회의 복잡화·다양화에 따라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사회부처 간의 유기적 정책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 증대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
 -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회의' 우선 설치('17.9)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향과 주요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협의 추진
- * 대입제도 개편 방향('19),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향('20), 미래형 교원양성체제 방향('20) 등
-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 완료('21.7) 및 설립 준비단 발족('21.9)을 통해 2022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반 마련

< 국가교육위원회 개요(「국가교육위원회법」 규정사항) >

- ▶ **(법적지위)**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 (인사·예산 독립성 인정)
- ▶ **(위원 구성)** 위원장 1명(장관급, 상임), 상임위원 2명(차관급) 포함 21명
- ▶ **(위원 임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
- ▶ **(소관 사무)**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 **(교육자치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연계하여 유·초·중등 교육 사무의 단계적 시도교육청 이양을 통해 지방교육자치 강화*
 -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구성운영('17~), 권한 배분 과제 131개 발굴('18~) 및 125개 정비 완료('21.6)
- **(사회정책 협력 체계 마련)** 분야별 사회정책의 유기적 협력·추진을 위해 사회부총리 중심의 사회정책 총괄 및 현안 조정 체계 구축
 - (사회정책 비전)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18.9),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19.2)을 통해 정부 사회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연간 사회정책 방향* 마련
 - * 사회정책 여건을 분석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2021년 사회정책 방향' 최초 수립·발표('21.1)

-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 사회정책 협력과 조정의 총괄 기제인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개최 횟수 확대** 등 추진

* 월 2회 개최, 의제 발굴 및 사전 조정을 위한 실무조정회의 운영 등 체계 확립('20~)

** 개최 현황 : ('18) 13회, 35건 상정 → ('19) 18회, 45건 상정 → ('20) 22회, 56건 상정

- (사회현안 조정)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TF 운영 등을 통해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실효성 높은 범부처 대책 마련

※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21.5),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대책('21.5),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방안('21.5) 등

- (사람투자 확대) 인재 양성에 대한 범정부 협력을 위해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마련('19.4)하고,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 운영('19.5~)을 통해 관련 아젠다** 발굴

* 정부, 노사, 지자체, 전문가 등 참여, 사회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로 운영(위원장: 사회부총리)

** 3대 신성장 핵심산업(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및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인재 7만명 양성(~'25)을 위한 'BIG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등

③ 향후 과제

- (새로운 거버넌스 안착)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국가교육위원회가 취지에 맞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 결정

* 위원의 구체적 자격요건과 기준, 위원회 구성 및 추천·지명 절차, 소관 사무 세부적 사항 등

- 학교자치 실현* 등 지방교육자치 지속 강화와 함께, 교육격차 해소, 학생 건강·안전 보장 등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 지속 발굴·추진

*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권 및 교과서 선택권 강화 학교의 예산 집행 자율성 확대 학윤위 학생 참여 제도와 등

- (실질적 사회정책 조정) 교육·문화·여성·복지 등 분야별 사회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운영 체계 지속 정비

- 사회부총리의 사회분야 현안 협의·조정 기능에서 나아가, 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수단* 마련

* 사회정책 영향평가 도입 등 사회부처 간 정책협력 제도화를 위한 「사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 범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사회전략 수립·추진을 위해 연도별 사회정책 방향 수립 정례화, 주요 과제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등 추진

《 신규 추진 필요과제 》

1. 코로나19 교육결손의 완전한 회복

① 추진 배경

-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일수 축소** 과정에서 발생한 **학령기 결손**이 개인의 삶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종합적 회복 지원 필요**
 -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21년 OECD 국가의 71%가 전년 대비 교육투자 증액, 미국은 「미국 가족계획」을 추진하며 '22년 교육예산 33.5조원(전년 대비 41%) 증액 요구
- **양극화**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교육기회**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교육격차 해소** 노력 절실
 - ※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집단이 교육분야 지표에서 상위 20%에 속할 가능성이 2010년 대비 2020년에 더욱 감소('20 KEDI 「교육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

② 주요 내용

- **(교육회복 완성)**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학습, 심리 등 결손을 학생 맞춤형으로 종합 지원하여 모든 학생의 결손 회복 집중 추진
 - 교사 추천·학생 희망에 따라 방과후·방학 중 교과보충 집중 지도 및 '튜터링' 활용해 교대·사대생 등 대학생이 학습보충·상담 등 지원
 - 유아 발달, 직업계고 학생, 다문화·탈북학생,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 제공
 - 학교일상의 복원을 넘어,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
 - ※ '19년 학급 당 학생 수 : (한국) [초] 23.0명, [중] 26.1명, (OECD) [초] 21.1명, [중] 23.3명
- **(책임교육 확대)** 국가가 보장하는 학업수준과 교육기회의 범위 확장
 - 최소 성취수준 달성을 의미하는 기초학력*에 더해, 중하위권 학생의 전반적인 학업 의지와 흥미도 향상을 목표로 '기초학력+α'를 보장
 - *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기초학력보장법」)
 - 지역사회 연계를 바탕으로 방과 후 예체능교육과 현장학습·견학 등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 가정환경에 따른 문화적 경험의 격차를 완화

2. 국가차원의 인재양성정책 추진

① 추진 배경

- 디지털 산업 발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으로,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중심의 체계적 인재양성 필요
 - ※ 인적자본 축적이 노동생산성 증가율('01년~'18년)에 기여한 정도는 30%에 달하며,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해 특히 **교육의 질적 향상**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 (한국은행, '20)
-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평등이 가중되는 산업구조 전환기에, 개개인이 소외되지 않는 지원이 중요

② 주요 내용

- **(신기술 인재양성 지원)** 대학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체계를 갖추고,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학(원) 신·증설 및 정원확대 전폭 지원을 통해 근거리에 배움터를 제공
 - 공동교육과정, 학생설계전공 등 학사제도를 유연화하고,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진로·전공설계 지원 및 진로-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 발굴
 - ※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중·고교 시기 이후 대학생(청년)에 대한 진로·취업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진로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전공의 조기결정에 따른 미스매치를 최소화
- **(공유 협력 확대)**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간, 대학-사회 간 협업 기반 구축
 - 학생들이 여러 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업과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공유대학의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 대학원-기업 간 공동연구 추진 및 사업단 운영으로 인재를 매개로 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실무형 고급인재양성 확대
 - 마이스터대 모델 확산 등 전문대학 혁신을 추진하고 온라인·모듈화 교육과정 운영, 민간-공공 연계 직업훈련 활성화 등 전문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인재양성 비전)** 부처별로 추진되는 인재양성 사업이 기본적인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며 연계 추진되고, 국민에게 손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업 강화
 - ※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등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인재양성 정책의 정합성 제고

법 무 부

1.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완비

① 추진 배경

- **(수사권 개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 및 민주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
- **(법무·검찰 업무개선)** 새로운 형사사법 시대를 선도하는 인권친화적 검찰상 확립을 위한 검찰 조직개편 및 수사업무 개선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수사권 개혁)** 검·경 수사권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21.1.)

< 개정 주요 내용 >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 제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검·경 상호협력 규정 도입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및 검사의 사법통제 신설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보장 확대 등

-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근절과 검찰권한 분산을 위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1.) 및 공수처 출범 지원
- **(검찰 조직개편)** 전국 검찰청 31개 직접수사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여 직접 수사기능 대폭 축소('19.10. ~ '20.1.)
-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 등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설치('21.7.)
- **(인권친화적인 수사환경 조성)**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의 엄격 제한, 별건수사 금지 등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19.12.)으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강화
- 형사사건의 공개범위 구체화·공개의 객관적 기준 설정, 사건관계인의 반론권 보장 등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수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21.8.)

- 인권감독관에게 ‘인권보호관’의 지위를 정식으로 부여하고 전국 고검과 5개 지청에 확대 배치하여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권보호수사규칙」 개정·시행('21.6.)
-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기존 검사 중심의 법무행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법무행정 수행으로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
- 법무실장('17.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17.9.), 인권국장('17.9.) 등 기존 검사가 보임하고 있던 71개 직위 중 39개 직위(55%) 탈검찰화 추진

③ 향후 과제

-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되도록 검·경 수사권 개혁 등에 따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하위 법령 등 관련 법령 정비 지속 추진

2. 민생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

① 추진 배경

- **(서민 생활안정)**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영업권을 보장하여 공정 사회 기반을 조성하고 서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필요
- **(청년 스타트업 등 지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 등 격변기 청년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하여 청년 스타트업·벤처 법률지원 필요
- **(1인가구 급증)** 최근 1인가구 비중의 급격히 증가('00년 15.5% → '21년 3분기 40.1%)에 따라 다가구 중심 현행 제도 근본적 개선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임대차 보장기간 연장(기존 2년 → 4년), 전월세 인상을 상한제(5% 초과 불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7.)

-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 단축, 임대차분쟁조정절차 자동 개시('20.12.),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금액 확대('21.5.)
-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21.7.)
※ 금융위의 「대부업법 시행령」과 동반 개정
- **(청년 스타트업 등 법률지원 강화)** 스타트업·벤처·중기 대상 법률지원·자문단 운영*, 특허청·카이스트 등과 기술창업지원 업무협약 체결('21.6.)
*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변호사 171명),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152명),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243명)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법률지원 수요가 높은 정보기술·지식 분야 전문변호사 21명 확충('21.9.) 및 원스톱 창업 법률정보 제공이 가능한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 진행('21년 말)
- **(1인가구 지원 법제 발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TF' 구성('21.2.), 국민 참여를 통한 5대 분야(보호·상속·유대·주거·친족)별 중점과제 발굴
-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이상 상속),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을 위한 민사법 개정(유대),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친족) 등

③ 향후 과제

- **(소상공인·채무인 보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채권의 추심행위를 제한하는 「채권추심법」('20.12. 국회제출) 및 코로나19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21.9. 국회제출) 등 적극적인 국회 대응을 통한 입법 추진
-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 시 법원이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을 결정하는 일명 '구하라법'('21.6. 국회제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21. 10. 국회제출) 등 제도 개선 추진

3. 건전한 공정경제 질서 기반 조성

① 추진 배경

- **(경영투명성 제고 및 거래환경 개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지배구조와 공익법인 운영 등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
- **(부동산 투기·가상자산 범죄 대응)** LH 부동산 투기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 증가 추세에 따라 공정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 확산
- **(국가 송무체계 개편)** 급변하는 송무 환경에 효율적·통일적인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가송무체계 마련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 실시로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의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및 소수주주권 규정 개선 등 「상법」 개정('20.12.)
- **(전자어음 대상 확대 및 시민공익위 설치)** 전자어음 의무 발행대상을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는 「전자어음법」 시행령 입법예고('21.10.),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공익법인법」 개정 추진('21.7. 국회제출)
-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집단소송 제도를 확대·적용(증권분야 → 모든 소비자 분야)하는 「집단소송법」 및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5배 한도로 배상하는 「상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21.10.)
- **(부동산 투기·가상자산 범죄 엄정대처)**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및 검찰청별 전담수사팀을 편성·운용(부장검사 47명, 검사 214명, 수사관 380명)하는 등 감경 협력 및 수사역량 집중
 - ※ '21.10. 기준 (검찰 직접수사) 79명 인지(19명 구속), 283.3억 원 보전조치, (경찰수사 협력) 2,375명 송치(56명 구속), 1,374억 원 보전조치
- 가상자산 관련 5억 원 이상 투자 빙자사기·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범죄 전담수사체계 구축(28개 청 전담검사 99명)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 ※ '21.10. 기준 투자 빙자사기 등 총 38건, 68명 기소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관련 일정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로 규정하는 ‘기준식’ 도입 추진
- **(통일적·합리적 국가 송무체계 구축)** 전국 검찰청에 분산·위임된 법무부장관의 국가소송 승인 및 행정소송 지휘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고, 기존 법무실 1개과(국가송무과)를 1관 2과(송무심의관·국가소송과·행정소송과)로 확대·개편(‘20.12.)
-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협력 체계 개선)**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제정(‘19.4.) 및 법무부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함으로써 국제투자분쟁 대응 및 예방역량 강화(‘20.8.)
- 법무부-코트라 외국인투자유치부즈만 업무협약 체결(‘21.4.), 정책유형별 투자분쟁대비 사례집 발간(‘21.4.),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개정(‘21.10.) 등을 통해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선제적 협력체계 구축
- * ‘19년 정부 국제투자분쟁 첫 승소(미국투자자 사건)

③ 향후 과제

- **(어음거래 환경 개선)** 전자어음 의무 발행대상을 모든 법인사업자로 단계적 확대(‘23년),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의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22년)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
- **(범죄수익환수 제도 개선)** 현행 ‘열거식’이 아닌 ‘기준식’을 채택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 중으로 해외 연구·분석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 논의 적극 지원
- * 홍익표·조용천 의원(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박주만·소병철 의원(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 기준식 도입 개정안 각 발의
- **(국가 송무역량 강화)** 1단계 국가송무체계의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검찰, 행안부, 기재부)과 협의하여 송무체계개선 2단계 방안 추진
 - ※ (1단계)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20.12.28.) ⇨ (2단계)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예정)
- 국제투자분쟁 대응 및 예방 역량 강화 지속 추진하고, 법무부 내부 전문가 양성 및 ISDS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

4. 실효적인 범죄대응 체계 마련

① 추진 배경

- **(재범 고위험군 범죄 발생)** 최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방지 강화
- **(아동·여성대상 범죄 대응)** 아동·여성 인권 관점에서 형사사법 전반의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내 특별기구 운영*
 - *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21.2.),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21.7.) 구성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고위험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21.6.), 우수 직원을 집중 투입한 ‘고위험군 전담제’ 실시('21.9.)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24시간 신속·엄정한 대응 위한 신속수사팀* 설치('21.10.)
 - * 서울·인천·대전 등 13개 기관에 수사 전담요원 78명 배치(3.5 ~ 4교대 체제 운영)
- 고위험자 신상정보 제공 확대 및 전자감독 수사 관련 특이사항 공유('21.9.) 등 관계기관과 공조 강화*
 - * 사건발생 112 통보 시 훼손사실 외 대상자 구체적 신상정보 등 제공
-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출소 전 부착명령 및 맞춤형 준수사항 신청, 집중 심리치료, 가석방 원칙적 제한 등 선제적 개입 관리
-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기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분석, 아동학대 대응주체의 판단오류·개입회피 방지 대책 마련
- 아동학대 살해죄 및 피해아동 국선변호 의무화 신설('21.3.), 현장조사 거부 과태료 상향(500 → 1,000만 원) 등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21.5.)

- 검사와 경찰·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아동학대 대응주체들 간의 협업체계 구축* 및 교육 강화

* 사건관리회의 활성화('21.7. 대검, 일선청 지시), 보호관찰관·아동보호기관 간 협업(고위험 가정 방문·점검), 권역별 합동교육('21.4.~8. 전담검사 등 총 316명) 등

-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규정 불비의 입법 공백 보완, 가해자 처벌 강화 위한 「성폭력처벌법」, 「형법」 등 법령 개정('20.5.)

< 개정 주요 내용 >

- ▶ 의제강간 기준연령 상향(13세 미만 → 16세 미만)
- ▶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 불법 성적 촬영물에 대한 소지·시청죄 등 신설
-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가중처벌 규정 신설
- ▶ 불법촬영물 제작 등 범죄기간 중 취득한 재산의 범죄수익 추정 환수 규정 신설

- 전국 18개 검찰청 및 6개 대규모 지청에 전담수사팀 설치('20.3.),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검찰 사건처리기준 정비('21.2.)
- 여가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디지털성범죄에 특화된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 '21.8. 시민사회·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③ 향후 과제

- **(재범 고위험군 관련)** 재범 고위험 범죄자 밀착 관리 및 신속수사팀 설치, 심리치료 대상 증가에 따라 전문 인력증원 추진

-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음주여부 상시 감독을 위한 장치 개발 및 실행을 선고받은 주취·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도'* 국회 논의 지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21.2. 송기현 의원), 법사위 1소위 논의 중('21.3.)

-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대한 개별치료·사후관리 강화 및 유지과정 등 추가과정 확대 운영

- **(아동·여성대상 범죄 대응체계 개선)** 사건관리회의 추진상황 점검 등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및 중대 아동학대 사건 분석 후 대응체계 개선방안 마련

-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구형 및 양형기준 강화, 성착취 영상물 삭제 기관 효율화(방통심위 심의·삭제 → 수사기관 직접 삭제)

5. 인권 친화적인 법무행정 추진

1 추진 배경

- **(인권정책 방향 제시)**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범정부적으로 인권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실질화)** 현재는 법원의 구속영장심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국선변호인의 조력 가능, 인권보호 사각지대 해소 위해 피의자가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필요
 - ※ 현재 과밀수용 위헌 결정('16.12.), 인권위 대책 마련 권고 결정('18.12.)
- **(대체복무제 도입)**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
 - ※ 현재, 「병역법」 제5조(병역종류조항) 헌법불합치 결정('18.6.)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1. 국방부·병무청) → 대체복무제 시행('20.10. 법무부)

2 추진현황 및 성과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인권위와 정부·지자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 정부 인권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 제고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법무부-인권위’ 공동소관으로 입법추진하며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 법무부장관 인권위원장 면담('21.6.)

<「인권정책기본법」 주요 내용>

- ▶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명시
-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장의 인권정책책임관 지정, 지자체의 인권기구 설치 근거 마련 및 학생, 공무원 등 대상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 ▶ 국제인권기구 권고 사항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노력 의무 규정 등

- 입법예고('21.6.), 규제심사('21.9.) 완료, 법제처 심사 진행 중('21.10.)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사법지원일원화 TF’ 운영(‘20.10.), 국회·대한변협·법원 등 유관기관과 제도 도입 논의(‘21.4.~6.),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진행 중(‘21.7.)
 - * 법무부 내 법원·대한변협·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설치하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법률구조제도 통합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 **(교정시설 과밀해소)** 서울동부구치소 이전·강원북부교도소 신축(1,270명) 및 12개 기관 리모델링·증축(380명)을 통한 수용공간 확충(‘17년~‘20년)
 - ※ 일평균수용률 : ‘17년(119.8%) → ‘18년(114.5%) → ‘19년(113.8%) → ‘20년(110.8%)
-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5% 완화 시행하는 등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 방안 마련(‘21.7.)
 - ※ 가석방 출소율 : (‘20년) 28.7% → (‘21.10) 33.8%
-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시행)**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제 시행(‘20.10.)으로 병역과 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정시설 정비 및 합리적 복무관리 방안 마련
 - ※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및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정·시행(‘20.10.)
 - ※ 서울구치소 등 13개 교정기관 생활관 리모델링 및 교육센터(영월) 신설

③ 향후 과제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사전영향평가 및 정부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법안 국회 제출 추진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유관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설득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법안 국회 제출 추진
- **(수용공간 확충·개선)** 교정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을 반영하여 수용공간 신설, 증·개축 사업 지속 추진 및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노력
 -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 진행 중(‘21.8.)
 - ** (주요 내용) 국고보조금 지급, 부담금 면제·감경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
- **(대체복무제 정착)** 정책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 도모

6. 엄정한 국경관리, 미래를 준비하는 이민정책

① 추진 배경

- **(국경안전·국민안심)**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 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의 불법체류 증가, 테러 등에 선제적 대응 필요
- **(미래사회 준비)** 저출산·고령화 등이 가져올 미래시민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국적·이민정책을 준비할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감염병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을 활용한 입국 전 탑승 차단, 91개국 무비자입국 정지, 비자 발급시 PCR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등을 통해 **코로나19 해외유입을 적극 차단**
 - *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 승객의 정보를 전송받아 탑승가능 여부를 통보하는 시스템
 - 벌집촌, 식자재마트 등 외국인 밀집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점검 제도, 격리위반자 강제퇴거 등 엄정 조치
- **(전자여행허가제)** 코로나19 상황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49개) 국민 및 무비자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63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21.9.)
 - 비자 발급을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 절차 생략, 입국신고서 제출 면제 및 전용심사창구 이용 등 **입국시 인센티브 제공**
 - 신청 수수료(인당 1만 원 상당) 수입을 통해 새로운 세수창출에 기여*
 - * 코로나19 이전 무비자 입국자(824만 명) 기준, 연간 약 800억 원의 수수료 수입 창출 예상
- **(대포폰방지 출국정보 연계 강화)** 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외국인 명의 대포폰 악용 방지를 위해 부처 간 협업하여 **외국인 출국 즉시 휴대폰을 차단, 휴대전화의 부정사용을 방지**('21.4.)
 - ※ '21.4.1. ~ 9.30. 총 120,239건의 외국인 휴대폰을 차단 조치
- **(포용적 동포정책 추진)** 법령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의 범위를 확대하여 4세대 이후 동포를 포용('19.7.), 상대적으로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이 어려운 중국·구소련 국가 출신자에 대한 자격부여 대상 확대*
 - * 중국·구소련 재외동포(F-4) 자격 비율을 64.8%('12.) → 85.5%('21.9.) 확대

- **(체류유형별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조기적응을 위해 단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보완, 동포·유학생 등 이민자 집단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21. 10.)
-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국내 입국한 특별기여 아프간인과 그 가족 392명*의 초기 안정, 필수 물품 지원 연계 및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을 위한 부처 및 민간 협업을 총괄 관리
* 391명의 특별기여 입국자 중 산모가 '21.10.28. 여아 1명을 출산

3 향후 과제

- **(우수 외국인재 유치)** 국내 체류 석·박사 유학생, 연구원 등 우수인재 정주 유도를 위한 국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국내 체류외국인(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등)을 농어촌 계절근로자로 활용
- **(불법체류 아동 보호)** 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인권·가족결합권을 고려해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대상 아동 요건 완화를 검토
* 현재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으로, 15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중·고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한정
- **(적극적 난민정책)** 취업 지원 등 진정한 난민에 대한 지원 강화 및 허위 난민신청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난민법」 개정 추진, 재정착난민* 확대 수용 등 국가 위상에 걸맞는 적극적인 난민정책 추진
* 해외 난민캠프 등에서 임시 정착 중인 난민 중 우리나라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국내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이민통합기금 마련)** 외국인이 부담하는 출입국 관련 수수료·범칙금 등을 재원*으로 사회통합 교육·홍보에 활용, 국민의 반외국인 정서 해소 도모
*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정성호 의원발의안('20.7.) 국회 계류 중
-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재발방지 계획)**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을 개정,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관련 규정을 도입, 보호장비의 사용 절차와 요건, 방법 등에 관한 직무교육 조치와 함께 대안적 보호시설 건립을 추진

《 신규 추진 필요과제 》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미래 법무서비스 조성

① 추진 배경

- **(차세대 법무서비스 준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인공지능 등 데이터·신기술을 반영한 미래 법률서비스의 기반 구축 필요

② 주요 내용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현행 종이 기반 업무를 전자화·지능화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절차 구현
 -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 및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9. 국회 통과)
 - 전자문서 사용을 지원하고 첨단 IT 기술을 형사절차에 접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추진('21.11. ~ '24.10.)
- **(스마트 교정시설 구축)** 수용생활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수용생활기록부', 의무관의 현장 의료업무 지원을 위한 '순회진료 프로그램' 등을 개발('21.12.)하여 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 가능한 모바일 업무 환경 조성
 - 수용자 스마트밴드·활력징후 감지 레이더 등 수용자 활력징후 감지 시스템을 도입('22. 상반기)하여 수용자의 자살 및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여 수용자의 생명을 보호
- **(인공지능 법률구조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축적한 빅데이터(법률상담 연간 140만 건, 소송대리 연간 15만 건)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연계·융합하여 24시간 AI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제공 추진('24년)

행정안전부

1. 자치단체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

① 추진 배경

- **(범정부 지원역할 수행)** '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대본 2본부로서 범정부 지원을 총괄하여 복지부·질병청·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
 - 특히 현장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 지원 역할 수행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빈틈없는 방역체계 운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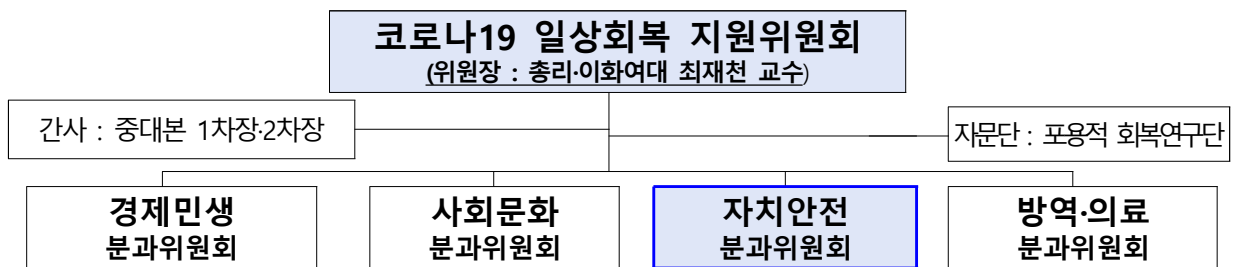
- **(자가격리자 관리)** 행안부로 자가격리자 관리업무가 이관('20.2.9.)된 이후 전담반 운영,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 추진
 - 지역담당관 (17개 시·도) 및 현장지원반 파견으로 자가격리 관리체계 정착 지원, '자가격리 앱' ('20.3월~) · 안심밴드 ('20.4월~) 개발·운영
 - ※ 현재 84,459명, 누적 3,518,507명 자가격리자 관리(10.31. 기준)
- **(자치단체 방역인력 지원)**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 신규인력 816명 배정*('20.9월), 지자체 수시경채(410명) 등 의료인력 확충
 - * '21.9월말 기준 배정한 816명 중 746명(91.4%) 정원조례 반영 완료
 - 8·9급 공채시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하여 9월중 보건소 등에 2,118명(보건소 1,692명, 본청 등 426명) 조기 배치 완료
- **(특별교부세 지원)** 코로나19 방역활동·백신접종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569억원* 교부('21.1~10월)
 -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폭염대책,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이동편의 제공 등(539억원) 자발적인 임시검사소 운영 비수도권 지자체 인센티브(30억원)
- **(생활치료센터 확보·운영)** 확진자 발생추이 및 센터 가동률을 고려, 생활치료센터가 추가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 확보·운영*
 - * 10.31. 기준 총 90개소(자치단체 운영 80, 중수본 운영 10)
- **(방역실태 점검)** 17개 시·도 '이행점검단' 운영('21.9월~)을 통해,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지원

〈 백신 예방접종 지원 〉

- **(접종역량 강화)**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 자치단체의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3분기 전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 달성에 기여
 - 지자체별 예방접종센터(282개소) 설치·운영 등 예방접종 인프라 조성
 -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단계별 맞춤형 지원*, 이·통장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방문 안내 등 접종편의 지원 및 홍보강화
- * (예약) 가가호호 방문, 동의서 징구 → (이동) 단체이동 버스 임차비 지원(재난안전 특교세) → (접종) 문진표 작성, 접종절차 안내, 휠체어 이동 보조 등
- **(예약정보 안내)** 국민이 접종시기를 놓치지 않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토록 국민비서가 민간 앱(네이버앱·카톡·토스)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
 - ※ (접종안내) 3,930만명, (발송건수) 2억 4,096만건('21.3~10월)
 - 시·군·구 및 읍·면·동 예약 전담자 지정

〈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

- **(추진체계 구축)**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출범('21.10.) 및 '자치안전 분과위원회(위원장: 행안부장관)' 구성·운영
 - 시·도 일상회복 추진단 구성, 지역 축제·행사 등 일상화 방안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추진과제 설정



③ 향후 과제

- **(일상회복 지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로드맵 및 일상회복 시행(11.1)에 따라 단계별 과제* 선정 및 추진
 - * 즉시 시행과제(11월 내 착수), 단기과제(12월 내 착수), 중·장기과제('22년 실시)
- **(예방접종센터 후속 관리)** 자치단체 예방접종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예방접종센터를 공공 문화·체육시설로 환원
 - 접종예약, 인플루엔자 접종, 위탁의료기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78개소, 12월 27개소 운영

2.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① 추진 배경

- **(신종재난 등장)**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출현 등 재난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비 역량 강화 필요
- **(안전수요 증대)** 어린이·보행자 등 취약계층 대상 안전사고 빈발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 증가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각종 위험요인 조기 진단·정비
 - IoT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처 사업을 통합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 * '20년부터 3년간 170개소, 총 510개소 설치
 - **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펌프장(행안부), 하수도(환경부), 하천(국토부)을 함께 정비
 - 위험·핵심시설을 중심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범정부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확대*
 - * 학교, 전통시장, 소방 등 25개 타 부처 소관 안전정보도 연계하여 공개
- **(현장 중심의 신속한 재난대응)**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상황관리
 - 풍수해 대비 겨울철(11.15.~3.15.), 여름철(5.15.~10.15.) 특별대책기간 운영, 재해우려지역 전면 재조사, 시설통제* 및 사전 주민대피 적극 실시
 - *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21~22년 173개소),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20~21년 67개소)
 - 경찰·소방·지자체 등 재난관련기관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 구축 완료('21.3월/「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
 - * (前) 지역별 통신망으로 근거리 통신 → (後) 전국망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통합적 지휘 가능
- **(실질적 복구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의 피해 지원체계 구축
 - 공공임대 주거 지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등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간접지원 항목 발굴·확대*(15→30개, '21.6월)
 - * 일반재난지역(9→18개) 및 특별재난지역(6→12개) 전파사용료 감면 과태료 유예 등 항목 추가
 -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상향*하고, 피해위험이 높은 지역의 집중가입을 유도**하는 등 보험 활성화 추진
 - * 주택온실(52.5→70%), 소상공인(59→70%) ** 재해위험지구 內 주택 우선 가입 등 집중 홍보

- **(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보행자·어린이 안전의 제도적 기반 구축
 - 「보행안전법」을 개정(‘20.12.)하여 보행안전기본계획(‘22~’26), 보행안전지수 개발, 보행안전 연구센터 지정 및 보행우선도로 설치
 -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초등학교 통학로 등 설치
 - 「어린이안전법」 시행(‘20. 11.)에 따라 5년 단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실시
- **(기후변화 등 신종위험 대비)** 한파·폭염·가뭄 등 신종재난 대비태세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 및 법·제도 정비**
 - * 급경사지 등록 대폭 확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처리가능 강수량) 상향 등
 - ** 5년 단위 가뭄종합대책 수립, 지역별 폭염·한파대책 수립·제출 의무화 등
 - 신종감염병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범정부 재난안전 R&D 지속 확대

③ 향후 과제

- **(예방 사각지대 해소)**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전국 급경사지 일제조사(‘21~’25년)’를 통한 신규 급경사지 등록 및 붕괴위험지역 추가 지정 등 잠재 위험요인 발굴·해소
 - ※ ‘25년까지 약 5만 개소 신규 발굴, 현재 전국 급경사지 15,732개소 관리 중
- **(재난 피해 회복력 강화)** 복구 지원체계 개선 및 선제적인 피해지원 강화
 -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신 유통·물류 ICT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급망·창고·통합물류관리시스템(‘21.8~’23.7.)
- **(생활권 안전환경 조성)** 보행자·어린이 등 안전약자 친화환경 조성
 - 어린이안전 5개년(‘22~’26) 종합계획 수립(‘21.12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사업 지속 확대
- **(재난안전통신망 운용 활성화)** 단말기 보급 및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통합적 재난관리 지원 및 다양한 서비스 개발
 - 연말까지 단말기 약 15만대 보급, ‘22년까지 약 22만대 보급 추진
 -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12.9)에 따른 통신망 사용기관 범위, 민간사업자 통신자원 사용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
- **(미래재난 선제적 대비)** 새로운 재난 대비 제도정비 및 투자 확대
 - 국민체감, 현장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재난안전R&D 지속 확대
 - * (국민수요) ‘20년 77억원→ ‘21년 105억원, (지역맞춤형) ‘20년 49억원→ ‘21년 86억원

3.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 구현(자치분권 2.0)

① 추진 배경

-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년 경과, 성숙해진 지방자치 여건에 맞춰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단체자치’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
- 자치단체에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저성장·인구감소 등 난제를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지역주도의 발전으로 국가성장 견인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주권 구현, 지방의회 역할강화, 국가-자치단체 간 수평적 관계설정 등 성과(‘22.1.13. 시행)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 지방자치법의 목적 및 주민의 권리로 ‘주민참여’ 명시 ▶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 참여연령 인하(19세 → 18세) ▶ 주민투표로 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선택 근거 마련
자치단체 역량강화 및 자치권 확대	▶ ‘보충성원칙’ 등 사무배분 원칙을 지방자치법에 규정 ▶ 특례시 및 시·군·구에 특성에 따른 특례 근거 신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 ▶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 마련 ▶ 특별지방자치단체 근거 구체화

- **(주민참여 확대)** 주민주권 구현 및 주민 감시·견제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조례발안’ 도입
 - ※ 「주민조례발안법」 제정(‘21.10.19. 공포, ‘22.1.13. 시행)
 - 주민의 행정참여 강화를 위해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추진
 - ※ 「주민투표법」 개정안·「주민소환법」 개정안 국회제출(‘20.12.)
 - 읍면동 단위 주민의 상시적 참여수단인 주민자치회 실시지역 대폭 확대
 - ※ (‘13~‘17) 78개 → (‘18) 95개 → (‘19) 408개 → (‘20) 626개 → (‘21.9.) 887개
- **(지방의회 역할 강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역할 및 책임성 확대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인사 자율성 및 전문성 향상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지방공무원법」개정('22.1.13. 시행)
-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윤리심사지문위 설치 의무화 등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
- **(자치단체 권한 확대)** 주민과 가까운 곳에 권한을 확대하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삶과 밀접한 영역에 대해 자치단체 자율성 부여
 - 주민 생활과 밀접한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를 자치단체로 일괄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2.)
※ (주요 이양기능) ▲가격표시의무자 지정 및 준수여부 검사 ▲개발부담금 결정·부과·징수 및 감면 결정 ▲지방관리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등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지역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 도입('20.12. 법개정, '21.7. 시행)
※ 전국 17개 시·도에 18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출범('21.7.)
 - 정부의 법령 제·개정 시 지방자치권 보장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개선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19.7.)
※ 3,655개 법령안 검토, 90개 법령안 개선권고 → 제·개정 법령(72개) 중 90.3%(65개) 반영
- **(연대·협력 강화)** 자치분권·균형발전으로 국가와 자치단체 시너지 확보
 -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화
※ 「중앙-지방협력회의법」제정('21.7. 공포, '22.1.13. 시행)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체화, 부산·울산·경남 초광역협력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22.1분기)

③ 향후 과제

- 현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22.1)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 지원
-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통한 자치분권 2.0 완성
※ 「주민투표법」개정안, 「주민소환법」개정안,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 등
-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강화
※ 장관 지역별 강연, TV 출연 등을 통한 자치분권 2.0 설명회 추진

4. 재정분권 추진

① 추진 배경

- **(재정불균형)** 중앙-지방 간, 지방-지방 간 재정 및 기능(사무)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에 한계
※ '16년 중앙·지방 재원비율: 세입 76:24 / 세출 34:66, '16년 재정자립도: 55.8%
- **(국정과제 추진)**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 및 추진('17.8월~)
*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19년~'20년 1단계 재정분권 이행 완료 >

◇ 국민 세부담 증가없이 연간 지방세수 8.5조원 확충, 지방재정 순확충 3.2조원

- **(지방소비세) 10%p 인상** ('19년 4%p + '20년 6%p, 8.5조원)
※ (기준) 부가가치세의 11% → ('19년) 15% → ('20년) 21%
 - **(기능이양) 3.6조원 규모 국고보조사업**(균특사업 등) 지방이양
※ 급격한 재정충격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3년간('20~'22년) 한시 비용 보전
 - **(재정격차 완화)** 지역별 가중치 적용 소비세 배분, 수도권 상생기금 출연
※ (가중치) 시도 소비지수에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 = 1:2:3) 적용 → 수도권 30% 배분(상생발전기금) '20년부터 수도권 지방소비세 인상분(10%p)에서 출연(연간 0.9조)
 - **(소방안전교부세) 25%p 인상** (재정중립: 소방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 지원)
※ (기준)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 → (개정)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 (+0.5조원)
- ⇒ 1단계 재정분권 결과, 국세-지방세 비율 '18년 78 : 22에서 '20년 74 : 26으로 개선

< '22년~'23년 2단계 재정분권 합의·추진 >

◇ 국민 세부담 증가없이 연간 지방재정 5.3조원 확충, 지방재정 순확충 2.2조원

- **(지방소비세) 4.3%p 인상** ('22년 2.7%p + '23년 1.6%p, 4.1조원)
 - (기초단체 세입확충) 지방소비세 인상분 일부가 시군구에 직접 배분
※ 기능이양 비용을 先 보전한 후 잔여 소비세를 광역-기초 간 6:4로 배분하고, 조정교부금 제도에 따라 광역분의 약 30% 기초로 추가 이전 → 최종 광역:기초 4:6 수준

- **(기능이양) 2.3조원 규모 보조사업 지방이양** ('22년 1.03조 + '23년 1.22조)
 ※ 급격한 재정충격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한시 비용 보전(~'26년),
 1단계 기능이양 사업 보전기한 또한 4년 연장('20년~'22년 → ~'26년)
- **(지방소멸대응기금) 낙후지역 중심 자율적 투자재원 연 1조원 확충**(10년간)
 ※ 지방세 확충효과가 크지 않은 지역에도 재정분권의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기금 신설
- **(국고보조율 인상) 기초연금 등 대응지방비 부담 완화 0.2조원**

⇒ 2단계 재정분권 결과, 국세-지방세 비율 향후 72.6:27.4로 개선 예상

< 국세·지방세 비율 추이 >

구분	'18년 결산	'19년 결산 (4%p 인상 후)	'20년 결산 (6%p 인상 후)	'23년 추정* (4.3%p 인상 후)
비율	77.7 : 22.3	76.4 : 23.6	73.7 : 26.3	72.6 : 27.4

* '20년 결산수치 + 지방소비세 4.3%p 인상분(4.1조)으로 추계

<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효과 > <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율(%) >



③ 향후 과제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수도권-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나, 주요 재정형평화 수단인 교부세율은 '06년 이후 유지

* (수도권-비수도권 예산 비중) '11년 39:61 → '20년 41:59

※ (교부세 법정률) '83~'99년 13.27% → '00~'04년 15.0% → '05년 19.13% → '06년 19.24%

⇒ 교부세 법정률(19.24%) 인상을 통한 '차기 재정분권' 추진

- **(복지사업 국가책임 강화) 기초연금 등 국가주도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저해

* ('17~'21년 평균 증가율) 지방예산 6.4% < 5대 복지사업 지방비 8.1%

⇒ 국가 최소 보장적 복지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부담 확대 필요

5. 지역활력 제고

① 추진 배경

- **(지역경제 위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발생, 지역 소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
- **(균형발전·인구감소)** 수도권 인구의 전국 대비 50% 초과('19년) 등 불균형 현상 심화, 국가 총인구 감소 시작('20~)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지역일자리)** '17년 0.8만명(212억원) → '21년 14.7만명(6,668억원)
 - 청년 취업난 해소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설('18년 추정~), 비대면·디지털 분야(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일자리 확대('21년)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희망근로 지원사업' 확대(고용·산업위기 지역 → 전 지자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일자리사업 신규추진('21년)
 - ※ 예산규모(국비, 억원):('17년) 212 → ('18년) 1,469 → ('19년) 3,925 → ('20년) 15,628 → ('21년) 6,668
 - 참여인원(만명):('17년) 1.2 → ('18년) 3.8 → ('19년) 8.0 → ('20년) 35.1 → ('21.10월) 14.4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지원 개시('18년~)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판매규모 증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원 강화
 - ※ '18년 고용위기지역 지원시작(4개지역 100억원) → '19년 144개 지자체 2.3조원 발행지원(4%) → '20년 230개 지자체 9.6조원 발행지원(4~8%) → '21년 232개 지자체 20.2조원 발행지원(2~8%)
 - (제도적 기반)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20.7월), 운영자금 안정화를 위해 자치단체 직접 관리 의무화('21.10월 개정)
 - (유통질서 건전성) 전국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 운영 등 단속 강화
 - ※ '21년 상반기 일제단속 추진('21.3.16.~31. / 112건 단속) / 하반기 일제단속 진행중('21.10.1.~30.)
- **(인구감소지역 지원)** 법·제도 및 재정적 지원 기반 마련
 - (인구감소지역 지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완료('21.10.19 시행)
 - (기금 신설) 2단계 재정분권 방안과 연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연1조) 도입으로 지자체 재정지원 및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23.1월 시행)
- **(지역균형 뉴딜 추진)** 지자체 및 주민·공동체 주도의 창의적이고 효과성 높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행·재정적 지원 추진
 - (사업발굴) 지자체 주도 뉴딜 사업 등 '22년 정부예산안 內 지역균형 뉴딜사업 반영(13.1조원), 우수사업 공모 및 특교세 지원(6월, 300억)
 - (사업지원)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지방재정투자심사 지원(34건 1.81조), 규제개선(82건 발굴 → 24건 개선) 등 행정적 지원

③ 향후 과제

- **(지역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단계 추진('22년~)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지역맞춤형 일자리 발굴·추진
 - ※ (1단계) 지역정착지원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민간취업연계형/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 (2단계) 지역혁신형/상생기반대응형/지역포용형

세부유형	2단계 사업내용
지역혁신형	지역경제구조변화 대응 및 혁신성장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지역정착 유도
상생기반대응형	기업기반이 약한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창업·성장 정착 지원
지역포용형	지역사회공헌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지역정착 유도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개선 추진
 - (단기) 부정유통 일제단속, 상품권법 시행령 개정 및 표준 조례안 마련
 - (중·장기) 가맹점 정보공개 시스템 마련, 부정유통 상시 감독체계 구축 등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 **(인구감소지역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인구활력 계획 수립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추진
- **(지역균형 뉴딜 추진)** 지역 수요 맞춤형 추가 필요사업 발굴과 주민 체감 성과 확대를 위한 집중적인 행정지원 추진
 - (사업발굴) 주민·공동체 주도 뉴딜 사업 발굴(특교세 150억원), '23년 국비 반영 필요사업 지원, 지자체간 협력사업 발굴·지원
 - (사업지원) 집중 추진사업 선정(68개, 시·도별 4개)하고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홍보·성과관리와 더불어 맞춤형 지원 추진
 - ※ 자원 확보(국비, 지방비, 민자 등)가 예정된 사업 가운데 집중 지원을 통한 성과창출 극대화 가능사업

6.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

① 추진 배경

- **(디지털 전환)** ICT 발전, 스마트폰 이용의 보편화 등 사회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의 디지털 전환* 추진 중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19.10.29. 국무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20.6.23. 국무회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14. 비상경제회의)
- **(코로나19)** 코로나19 위기는 전 분야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했고, 일상화된 위험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의 역할이 대두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총괄 >

- **(국제 평가)** OECD 디지털정부평가 1위('19년),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 1위('19년), UN 전자정부평가 2위('20년) 달성
- **(국민만족도)** 종이없는 민원처리, 모바일 서비스 확대, 사용자 인증 절차 간소화 등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의 만족도·신뢰도 향상
※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98.1%이며, 이유로 '일을 빠르게 처리(64.9%)',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56.7%)' 등 응답('20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일상을 지속**하는 데 전자정부 서비스와 디지털 정부혁신이 핵심 역할 수행
* 전자증명서로 공적마스크 대리구매('20.3월), 민·관 협업으로 긴급재난지원금('20.5월) 및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1.9월)의 신속 지급, 잔여백신 예약('21.5월) 등
** 정부24로 비대면 민원신청, GVPN·영상회의로 원격근무, 온라인 교육 확대 등

< 국민 서비스 편의 향상 >

- **(국민비서)** 백신접종·국민지원금 등 개인맞춤형 행정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으로 미리 안내하여 편의성 향상
※ 1,350만명 이용 중이고, 백신접종 2억 4,096만건, 국민지원금 1,409만건 등 알림 발송('21.10월)
- **(인증편의)** 공공웹사이트 이용 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간편인증 서비스 구축 및 적용 확대*
* ('21.1월) 홈택스·정부24 등에 시범적용 → ('21.9월) 28개(누적) → (~'21.12월) 55개(누적)

- **(마이데이터)** 정보주체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본인 또는 제3자)에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실시
* ('21.2월) 8종 시범서비스 실시 → ('21년) 24종 (누적) → ('22년) 35종 (누적)

〈 정부 업무역량 제고 〉

- **(모바일 공무원증)**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21년),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비대면 신원증명 서비스 개시
- **(클라우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민간 클라우드로 전환('21년 430개 → ~'23년 5,748개 → ~'25년 10,009개)
- **(영상회의)**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여 온나라 PC영상회의 동시접속자*를 확대하고, 모바일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21.12월)
* ('21년) 회의별 최대 300명, 동시접속자 5천명 → ('22년) 회의별 최대 500명, 동시접속자 1만명

〈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 〉

- **(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국민편의를 향상하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활용**
* 개방 건수(목록 기준, 누적): (~'18년) 2.8만개 → ('19년) 3.3만개 → ('20년) 5.5만개 → ('21.9월) 6.3만개
** 활용 건수(누적): (~'18년) 753만건 → ('19년) 1,314만건 → ('20년) 2,084만건 → ('21.9월) 3,085만건
- **(데이터활용)**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20.6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구축('20년) 등 추진기반 마련
- 공공분야의 주요 현안·이슈에 대해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 실시·지원
* ('20년) 초등돌봄 수요예측 등 → ('21년) 연관부서 자동식별, 위기 소상공인 사전예측 등

③ 향후 과제

- **(공공서비스)** 종이·우편 방식 고지서 업무(교통·생활·운전면허·과학수사 등)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간편하게 납부
- 운전면허증('22년)·국가유공자증('23년)·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하나의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서 제공
- **(업무역량)** 범정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 전환·통합 완료, 4개 청사·17개 광역시·도의 업무망을 5G 국가망으로 전환

7. 지속 가능한 정부혁신

① 추진 배경

- **(낮은 체감도)** 그동안의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정부와의 소통이 부족하고 정부신뢰도·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
 - ※ ('17년) 정부혁신의 문제점 조사: 국민과 소통이 적은 일방향적 혁신(59.5%)
(‘17년) OECD정부신뢰도 32위(최하위), OECD 평균(42%)의 절반 수준(24%)
(‘18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180개국 중 51위(100점 만점에 54점)
- **(환경변화)** 비대면·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일상적 상황 대응을 위해 민첩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부혁신 필요
 - * PC영상회의 개설(건) : ('19년) 70,942 → ('20년) 126,740
정부원격근무서비스 이용자(명) : ('19년) 19,425 → ('20년) 185,909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추진현황 >

- **(경과)**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받기 위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마련('18.3.19. 정부혁신전략회의)
 -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연도별 「정부혁신 추진계획」 수립·추진('19년~)
 - ※ 매년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부혁신컨설팅을 통해 지원
- **(추진체계)** 국민이 주도하는 민·관 협력 정부혁신을 위해 '정부혁신 추진협의회' 및 '정부혁신국민포럼' 구성·운영('18.10월~)

< 주요성과 >

- **(참여와 협력)** 국민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국민-정부가 협력하여 함께 사회문제 해결 추진(도전.한국, 주민참여리빙랩 등)

- ▶ '광화문1번가' 누리집 이용자 : '19년 4만명 → '21년 46.4만명(9월 기준)
- ▶ 국민참여예산 : '19년 38개 사업 928억원 → '22년 71개 사업 1,414억원(국회심의중)
- ▶ 「청원법」 전면 개정('20.12월), 시행령 제정,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추진
- ▶ 도전.한국 : 1,130개 국민 공모과제, 5차례 공모에 4,623건 아이디어 접수(누적)
- ▶ 주민참여리빙랩 : 민·관 협력 도시재생 및 청년 친화 마을 조성, 유휴공간을 학부모가 직접 놀이터로 설계·조성, 사물인터넷이 탑재된 쓰레기통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해결 등

- **(공공서비스)**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맞는 서비스 혁신 추진

- ▶ 생애주기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 : 7종(임신·출산·전입·초등돌봄·보훈·상속·청소년) 제공
- ▶ 보조금24(300여종 서비스 확인) : 누적 185만여건 조회·이용(9월말 기준)
- ▶ 국민비서 : 백신접종 예약정보 3,913만명(2억 3,315만건), 1,569만건 생활정보 알림 발송(10.11. 기준)
- ▶ 전자증명서 활용('21.10월 / 150종 서비스) : 발급 1,455,659건, 제출 236,634건

- **(일하는 방식)**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디지털 기반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공직사회의 인적 다양성 확대

- ▶ 최초의 종합규정인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마련('19.8월)
- ▶ 공익 목적에서 국민이 적극행정을 요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21.7월)
- ▶ '데이터3법' 개정('20.1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2월 시행)
- ▶ 청년 관련 위원회의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기본법」, '20.8월 시행)

- **(국제적 인정)** 지난 4년간의 정부혁신 노력을 통해, 정부신뢰도·부패인식지수·글로벌 혁신지수 등 다양한 국제적 평가지표 상승*

- ▶ 정부신뢰도 변화 : ('15년) 26위 → ('17년) 32위 → ('19년) 22위 → ('21년) 20위
- ▶ 부패인식지수 변화 : ('15년) 43위 → ('17년) 51위 → ('19년) 39위 → ('20년) 33위
- ▶ 글로벌 혁신지수 : 세계 5위, 아시아 1위 달성(81개 세부지표 중 정부 온라인 서비스, 전자정부 온라인 참여 등 9개 세부지표 1위)

- 국민참여 확대, 투명성 제고 등 열린정부 성과를 인정받아 열린 정부파트너십(OGP) 제11대 의장국으로 선출

[3] 향후 과제

- **(체감서비스 확대)** '국민비서', '보조금24', 생애주기 원스톱 통합 서비스 등 국민생활 체감서비스 제공 분야·대상 지속 확대
※ 국민비서('21.9년) 9종 → ('22.4년)38종, 보조금24('21.4) 305종 → ('22년) 2,500종 등
- **(성과 확산)** 제7차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 서밋 개최(12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개최 등으로 정부혁신 주요 성과 국내외 확산
* 정부혁신 민관협의체(78개국, '21년 의장국)
- **(어젠다 발굴)** 디지털전환 가속화, 포스트 코로나19, 시민사회 성숙 등 국내외 정부혁신 경향 분석을 통한 중장기 혁신 어젠다 발굴

문화체육관광부

1. 전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① 추진 배경

-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문화활동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 확대 필요
 - 코로나로 인한 문화활동 위축은 사회적·문화적 취약집단에 더 크게 작용*
 - * '19년 대비 '20년 문화예술관람률 격차('20.12월, 문광연) : 소득에 따른 격차 40.8→50.6%p, 지역에 따른 격차 12.7→17%p, 연령에 따른 격차 47.5→63.8%p
-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확대)** 주52시간제, 1인가구 증가('10년 23.9%→'20년 31.7%) 등으로 인해 개인의 여가와 행복,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 변화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문화소외계층(기초·차상위, 6세 이상)의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액 상향, 사용분야 추가* 등으로 저소득층의 문화비 부담 경감과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 통합문화이용권 연도별 지원내역 >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연간 지원액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수혜 인원	145만명	152만명	159만명	163만명	175만명	197만명

* ('17년) 도서, 영화, 공연 등 → ('19년) 케이블TV, 전자책구독, 지자체 문화체험 시설 등 → ('20년) 온라인 사용처 발굴(오디오북, 웹툰, 영상공유서비스(OTT), 온라인 문화체험) 및 가맹점 확대 ('19년 294개소 → '20년 780개소)

-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도서·공연비('18.7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7월~), 신문구독료('21.1월~)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으로 국민의 문화소비 및 문화 향유 확대

-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국민의 문화예술 감수성 향상과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인문 프로그램 지원

- 유아, 청소년, 청장년, 중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시행

< 문화예술교육 시행 내역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10월
수혜자 수	261만명	269만명	272만명	250만명	242만명

- 도서관·박물관·문학관 등 전국 지역 문화기반 시설을 문화복합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인문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 참여 문화기반 시설확충 내역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시설수	523개	585개	577개	570개	622개

③ 향후 과제

- **(생애주기별 문화패스 도입)**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생애주기별* 문화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문화패스' 도입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획기적 확대 및 순수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임산부, 초등학교 1학년(만 6세), 성년(만 19세), 노년(만65세)에게 문화 활동 비용 지원 검토

-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로 문화비 지출 경감에 대한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 제고 및 관련 산업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적용대상안)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입장료, 신문구독료 → 영화관, 체육시설, 관광 등으로 확대, (수혜대상안)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모든 근로소득자, (공제율안) 30% → 40% 확대 검토·추진

- **(통합문화이용권 내실화)**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확대*를 통한 보다 튼튼한 문화안전망 구축 노력

* '22년 연 10만원 정부안 추진 → '26년까지 점진적 확대

2.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

① 추진 배경

- **(지역문화분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흐름에 따라 각 지역마다 실질적 문화권 보장 및 문화의 사회적 가치실현 요구 확산
- **(지역문화위기)** 지방소멸 가속화로 지역문화 위기 초래 우려
 - 지역간 문화격차 완화와 지역문화 고유성 보존 등을 통해 지방소멸과 지역문화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지역문화 문제점 : 격차(34.2%) > 획일화(27.7%) > 부조화(16.4%) ('19년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지역주민 문화향유기반 확충)**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작은미술관 등 지역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의 조성 지원으로 문화향유 기반 구축

< 지역 문화향유 기반 확충 내역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9월
생활문화센터	23개소	13개소	50개소	152개소	182개소
공공도서관	66개관	54개관	123개관	190개관	147개관
작은미술관	7개소	8개소	9개소	14개소	15개소

*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등 일부 문화기반시설 건립지원 사무 지방이양(2019)

- **(문화도시 통한 지역문화 브랜드화)** 지역고유 문화자원 활용, 주민 참여에 기반한 문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의 문화창조력과 브랜드 가치 증진

< 문화도시 지정 내역 >

제1차 문화도시('19.12월)	제2차 문화도시('21.1월)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충북 청주시, 부산 영도구, 제주 서귀포시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전북 완주군, 강원 춘천시, 경남 김해시

* '21.12월 제3차 문화도시 지정 및 제4차 예비 문화도시 선정 예정

-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 생활문화센터 운영프로그램 지원, 지역 생활문화 동호회, 예술 동아리 지원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 속 문화향유환경 조성

< 생활속 문화향유 환경 조성 내역 >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생활문화센터 운영프로그램지원	65개	57개	73개	88개
생활문화동호회	1,450개	1,840개	1,550개	1,520개
예술동아리	-	980개	1,128개	1,080개

- **(지역문화진흥 기반강화)**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지역문화진흥법 개정, '20.12월)*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주요 내용)** 문체부와 시·도에 정책심의 등을 위한 지역문화협력 위원회를 설치, 지역문화 정보 관리·활용을 위한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 문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

③ 향후 과제

- **(문화기반시설 특화지원)**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관리*,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기반시설 조성 지원
 *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등
 **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지원방안 연구용역 추진 등
- **(포스트 문화도시 추진)** 지정된 문화도시 성과확산,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문화도시의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 문화도시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 중
 : (연구기관) 문화관광연구원, (기간) '21.6월~12월, (내용) 문화도시 중장기 지정계획 등
- **(문화취약지역 지원)** 소멸위기에 놓인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확대*
 * 취약지역 대상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사업('22년부터 46억원 정부안 추진)

3.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

① 추진 배경

- **(불공정 환경 개선)** 문화예술분야 구두계약 관행 근절 및 공정한 활동과 경쟁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정 상생 기반 조성 필요
- **(열악한 창작환경 개선)** 예술인의 소득은 매우 낮은 편이나,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직업적 특성*상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 존재, 경제적 이유로 중단 없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예술인 연평균 수입 1,281만 원 응답자 중 72.7%는 월수입 100만 원 미만 전체 예술인 중 프리랜서 예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6%('18년, 예술인 실태조사)

※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누적 매출액 피해규모 7,229억원, 사업체 고용피해 2,596억원,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피해 4,292억원('20.1월~'21.9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권리보장)**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완료('21.9월)*

* 예술계의 염원을 담아 예술인-국회-정부가 협력해 만든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21대 국회를 통과, 준비 기간을 거쳐, '22.9월 시행 예정

-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20.12월~), '21.10월 현재 가입자 82,595명 돌파

* 제도 설계 시부터 현장 예술인의 의견 적극 반영(50만원 미만 다수 계약 합산액도 인정)하여, 예술인 특성에 맞는 제도로 출범 →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안내서' 및 '고용보험 간이 계약 양식' 개발·배포('20.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전담기구 설치 등 가입자 편의 제고

- **(예술인복지 확대)**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의 창작자금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사업을 대폭 확대('17년 120억원/4,014명 → '21년 694억원/24,000명)*하여 예술창작 안전망 구축

* 경력 없는 청년 예술인을 위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1인 200만원)' 신설('21년 60억원 3,000명)

- 제도권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설('19년~, '21년 240억원), 코로나 특별융자 시행('20년, '21년)

* 예술인 대상 소액 생활자금, 전월세 자금 등 목적으로 저금리 대출 시행

-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의 기초가 되는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예술인의 복지사업 신청 편의성 제고
 - * 코로나19 상황 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 증명제도 도입 및 온라인 활동 인정(‘21.3월), 분야별 인정 범위 확대(전시횟수 기준 완화 등) 및 증명방법 다양화 추진
- **(서면계약 문화 정책)** 문화예술 분야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조사권, 시정명령권, 사업주의 계약서 보존의무(3년) 신설(‘20.6월)로 예술인의 공정한 계약을 위한 서면계약 활성화 제도기반 마련 완료
- 미술 11종(‘19.3), 공예 5종(‘21.7월) 제정, 공연 분야 개정(근로·용역, ‘19.8월)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 확대
- **(예술행정 개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에 호선제 도입(‘21.5월), 문화예술기금 보조금 지원사업 공정성 확립을 위한 지원심의 음브즈만(‘17.3월), 공정심의 평가관(‘20년~) 도입 등 공정 행정체계 마련
- 문체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채택(‘21.3월)으로 자율과 책임의 원칙의 공정한 예술창작 지원체계 확립

③ 향후 과제

- **(제도 운영)**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2.9월)에 대비, 조직정비, 교육확대 등 준비, 예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발표 등을 통한 제도 정비 지속*
 - * **(권리보장법 후속)**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2.9월), 권리보호 전담기구 구성(예술인 권리보장과 등), 제도 교육 확대(콘텐츠 및 강사 발굴, ▲분야별/대상별/특성별 맞춤형 교육 실시, ‘22.5월~)
 - * **(예술인복지종합계획)**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첫 기본계획 발표(‘22년 상반기)
- **(사업 확대)** 예술인 창작준비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예술인 권익 보호 교육·홍보, 상담 기능 확대** 등 지속적인 복지 안전망 확충 노력
 - * 저소득층(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지원 단계적 확대
 - ** (가칭) 지역 예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검토
- **(재원 확보)** 문예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신규재원 발굴, 기업 문화예술 후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노력 지속

4.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① 추진 배경

- **(한류 지원기능 내실화)**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강화 필요
- **(한류의 지속가능성 확보)** 소비재·관광 등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및 지속가능한 한류 기반 구축

- 한류의 급속한 해외진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 인식도 완화할 필요*

* '20년 反한류 공감도는 24.4%로, 주요 원인은 '지나치게 상업적'이 25.9%, '자국 콘텐츠 산업의 보호 필요'가 21.8%임(2021년 해외한류실태조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한류 진흥체계 마련)** 문체부 주도 '범부처 한류협력위원회' 출범*(20.2월) 및 문체부 내 한류 지원 전담부서인 '한류지원협력과' 신설(20.6월)

- 관계부처 합동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20.7월) 수립·발표, 한류 확산을 위한 청사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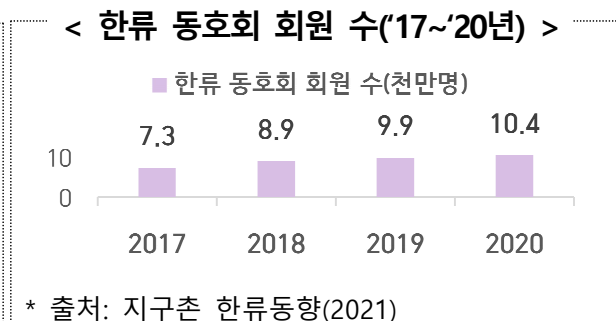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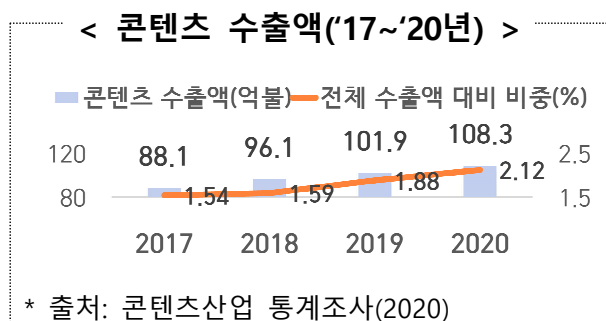
* 문체부 장관 주재, 13개 부처 및 12개 공공기관 참여

- **(민관협력 추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 콘텐츠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연관산업 해외진출 지원

* 콘진원·무역협회 협력 K-콘텐츠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20.6월, '21.6월) 등

- **(한류 경쟁력 제고)** BTS, 드라마 '오징어게임', 영화 '기생충' 등의 전 세계적 인기로 우리 콘텐츠의 저력 입증,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급증*

*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규모 : '20년 상반기 10.1억 달러 → '21년 상반기 19.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달성('21.9월, 한국은행)



③ 향후 과제

- **(한류의 저변 확대)** 대중문화에 편중*되어 있는 한류 콘텐츠를 예술·전통문화 등 한국문화 전반으로 다양화
 - * 우리나라 포함 세계 16개국의 '관심있는 한류 콘텐츠'(복수응답)는 한식(61.5%), 영화(50.1%), 대중음악(45.4%), 드라마(39.6%) 순('21년, 해외문화홍보원)
- **(연관산업 동반성장 추진)** 한류로 제고된 국가이미지 활용, 부처협업으로 식품·뷰티 등 K-브랜드의 해외 진출 본격화*('22년 신규 추진)
 - * 해외홍보관 조성, 한류 연계 마케팅, 한류박람회 등 유관부처 공동 추진
- **(신한류 기반구축)** 국가별 특성에 기초한 정부 간 협력 강화 및 쌍방향 문화콘텐츠 교류*를 통해 한류 인지도 및 호감도 제고
 - *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개최, '코리아 시즌' 운영, 한-아세안 영화·시각예술 협력기구 신설 등 협력사업 강화

5. 국민 스포츠클럽 신장

① 추진 배경

- **(체육참여 불균형)** 소득 격차 등에 따른 건강 및 체육참여 불균형 문제 심화*에 따른 국민의 체육활동 증진 방안 마련 필요
 - * 저소득층의 체육참여율은 48.4%로 전국민 평균 60.1% 대비 11.7%p 낮음 (출처 : '20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 **(유·청소년 지원 미미)**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 참여 증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수요 대비 지원 규모가 미미*한 바 확대 필요**
 - * 저소득 유·청소년 약 58만명 중 11.2%(6.5만명)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
 - ** 저소득층의 학교체육 외 스포츠강습경험 7.8%/ 미참여 이유(1순위) : 금전적 문제
지원기간(8개월) 종료시 체육참여 중단 및 지원금액(월8만원) 부족으로 인한 참여제약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생활체육 참여 여건 개선)**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대폭 확대 및 생활SOC복합화와 병행 추진('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인원 증대**
 - * ('97~'17년) 20년간 235개소 → ('18~'21년) 3년간 374개소
 - ** ('17년) 약 4만명 → ('20년) 약 6.3만명(2.3만명 증가)

-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기본법」 제정으로('21.8월 제정, '22.2월 시행)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써 스포츠권이 법제화*되고, 국무총리 소속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신설로 스포츠 진흥 정책의 부처간 연계 및 위상 강화
 - * (스포츠기본법 주요 내용)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여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인 '스포츠권'을 가짐, 스포츠진흥기본계획수립(5년 주기), 스포츠 분야별 시책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등
- **(스포츠클럽 지원 법적근거 마련)**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21.6월 제정, '22.6월 시행) 스포츠 문화 향유의 핵심인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정 및 등록 스포츠클럽 제도 등 도입
 - * (스포츠클럽법 주요 내용)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 지정 스포츠클럽 운영,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 선수 육성 지원, 지정 스포츠클럽의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③ 향후 과제

-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저소득층 유 청소년 지원 대상자 및 기간·금액 확대*
 - * 지원기간/금액 : '22년 10개월/8.5만원 (정부안) 추진 → '27년까지 점진적 확대
월평균 강좌 수강료 약 13만원 고려시 지원금 현실화 필요('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실태조사)
- **(스포츠클럽 활성화)** 스포츠클럽 등록제 도입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공익목적의 지정스포츠클럽 선정 등 차별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27년까지 5천개 등록, 5백개 지정)

< 해외 사례 >

- ▶ (독일) 스포츠클럽 11만개, 2,750만명 가입(인구의 약 34%)
 - 자생적인 지역중심 스포츠클럽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스포츠불평등 해소, 전문선수 육성, 사회통합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
- ▶ (영국) 스포츠클럽 15만개, 930만명 가입(인구의 약 15%)
 - 스포츠클럽과 지역 커뮤니티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주민 참여형 스포츠 환경 조성

- **(국민체력 국가책임제)** 지역 체력·건강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의료 처방과 연계한 운동 처방 제공('27년까지 72만건), 생애주기별(유아기-유소년-청소년-성인가-노인가) 체력측정 및 인증 체계 구축
 - * 국민체력인증센터-지역스포츠과학지원센터-보건소-지역 의료기관(1차~3차), 보건복지부, 공공기관(건강증진개발원 등), 금융.보험.영양 민간기업과의 협업

6.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① 추진 배경

- **(전통적 관광사업체 혁신성장 필요)** 관광분야 혁신적 벤처기업 발굴 및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저변 확대,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필요
- **(관광산업 환경 변화)** 변화된 관광환경에 맞는 서비스 및 산업혁신 필요
 - 코로나19는 관광산업 디지털 대변혁을 촉진하나 관광업계 기술활용 미흡*
 - * 기업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지수는 음식·숙박업 45.5%, 사업지원서비스업 54% / 전체 평균 68.4%, 금융은 91%(‘18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관광산업 영세성·방한관광객 의존성으로 관광산업 위기극복 여력 부족*
 - * 매출 10억원 미만 사업체 89%, 종사자수 10명 미만 사업체 83.1%(‘19년, 관광사업체 조사)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관광기업 육성)** 혁신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으로 일자리 창출(1,472개) 및 관광기업 성장지원 정책 본격 추진(‘20년부터 145개 기업 지원)
 - (관광벤처기업 발굴) 총 666개(‘17~‘21.9월 기준)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일자리 1,472개 창출(‘17~‘20년 기준)
 - (관광기업 성장지원) 투자유치, 해외진출, 혁신활동, 기술융합 등 관광기업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20년~)하여 145개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320억원, 일자리 345개 창출(‘20년 기준)
- **(관광두레 발굴)** 109개 지역 대상 총 791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발굴(~‘21.9월)을 통한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및 1,330명 지역관광 일자리 창출(~‘20년)

- **(관광거점도시 육성)** 국제관광도시(부산), 지역관광거점도시(강릉·전주·목포·안동)* 등 5곳 공모·선정('20.1월), 도시별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사업 추진('20년~, 5개 도시 258억), 도시별 5개년 기본계획 수립(~'20.12월)**
 - * 도시별 국비 500억원 범위내 지원(국비, 지방비 5:5), 총 사업규모(잠정) 5,785억
 - **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추진 중('21.2.~11./ KDI)
-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20년 스마트관광도시 1개소 시범조성(인천), '21년 3개소 조성(대구,수원,여수) 중으로 지역의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및 관광산업 혁신 강화

③ 향후 과제

- **(관광기업 해외진출)** 지역기반 관광기업 창업·성장 지원 기반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 '24년까지 광역단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14개소 구축('21년 4개소 운영 중)
 - ** 관광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지원거점 운영('22년~)
- **(관광두레 자립 기반마련)**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질적 성장 지원* 및 지자체 협력 강화를 통한 주민사업체 성장 및 자립기반 마련**
 - * 주민사업체 1,059개 발굴(~'22년 누적) 및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22년~)
 - ** 관광진흥법상 관광두레 법적 근거 마련('22년~)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
- **(관광거점도시 전략적 육성)**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 인프라 등 입체적 지원으로 세계적 수준의 관광거점도시 육성* 및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중('21.2월~11월)으로, 해당 절차 완료 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연차별 사업규모 및 기간 조정 예정
- **(스마트 관광도시 확산)** 스마트관광 확산을 위한 스마트관광도시 전국 확대*, 스마트관광도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축적, 공유를 위한 데이터 저장소 운영, 지역의 자율적 스마트관광화 유도 등 추진
 - * '22년 스마트관광도시 지역 유형별 특성 반영한 6개소 확대

《 신규 추진 필요과제 》

문화기술 육성을 통한 콘텐츠산업 디지털 역량 강화

① 추진 배경

- **(신성장동력)** 콘텐츠산업은 수출, 고용 등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신성장동력 산업

* 콘텐츠 수출액은 '19년 101.9억 달러, 10억원당 고용유발계수는 11.5명(전산업 평균 7.3명)

**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9년 126.7조원으로, '15~'19년간 연 평균 6.0% 성장

- 확장현실(XR)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문화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 선점 필요

* 실감콘텐츠 세계시장은 '17년 32.6조원→'23년 411조원 추정(연평균 52.6%)으로, 메타버스 세계시장은 '30년 기준, 1,700조원 규모로 성장 예측(Statista, Global Industry Analysts, PwC, '19년)

② 주요 내용

- **(투자강화)** 확장현실(XR),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최첨단기술을 콘텐츠 산업 전반에 접목할 수 있도록 문화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강화* → 콘텐츠 산업 세계 시장 선도

* '21년 정부 전체 R&D 27.4조원 중 문체부 R&D 규모는 0.41%에 불과
'26년까지 정부 전체 R&D 예산의 2%(약 5,000억원)까지 확대 필요

- **(전담 연구원 설립)** 최첨단 문화기술 개발을 전담하는 국책 연구기관 설립 필요* → 연구 기반 강화를 통한 콘텐츠산업 디지털 역량 제고

* 현재, 문화기술 전담 연구기관 부재로 인해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에 따른 체계적 연구수행과 문화산업에 특화된 연구인력 양성 등 연구역량 축적에 한계

보건복지부

1. 코로나19 대응

- **(방역대응)** 코로나19 환자 조기 발견 및 적극적 전파 차단으로 추가 확산 방지
 - (진단검사)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대상 확대 * 1일 최대 53만건의 검사 역량 확보
 - (역학조사) 역학조사관 확충 및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한 효율적 조사 추진 및 5개 권역 질병대응센터 운영
 - (해외 입국) 모든 입국자 대상 PCR 음성확인서, 진단검사, 14일 격리(격리면제자 제외) 등 해외유입을 엄격하게 관리
- **(의료대응)**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적정치료 제공으로 피해 최소화
 - (병상) 생활치료센터와 전담치료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전국의 병상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코로나19 유행에 대응

< 중증도별 병상 현황('21.10.31. 기준) >

구분	경증		중등증		준-중증*		위중증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 병상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9,437	11,603	10,056	5,508	455	194	1,071	604
수도권	13,517	6,992	4,655	1,519	276	79	655	284

*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상

- (인력) 코로나19 환자치료·검사를 위해 필요 의료인력을 적시 지원하고, 공공·민간 의료인력 모집 등 대응 가능 인력을 지속 확보
- * (10.31. 기준)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의료인력 2,574명 현장 파견 중
- (손실보상)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 대상 병상, 진료비·영업 손실 및 직접 투입비용 보상*

* '21.9월말 기준 총 2조 9,516억원 지급

- **(사회대응)**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최대한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확진자 수, 방역상황, 국민수용성 등을 감안한 단계 조정 및 위험도에 따른 시설·행위별 방역수칙 구체화·운영
 - (정서지원) 코로나 우울 확산에 대응하여 '통합심리지원단(21.129)' 운영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20.8, '21.2)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심리지원 제공

2] 그간의 대응평가 및 개선방향

- **(확진자 발생 억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703.7명(OECD 국가중 3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6명(OECD 국가 중 2위) (10.31.기준)

< 국가별 비교 ('21.10.31. 기준) >

(단위: 명, %)

구분		우리나라	미국	덴마크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스라엘
확진자	누적	364,700	45,953,186	389,132	1,723,327	7,262,178	9,062,710	4,608,512	1,327,126
	10만명당	703.7	13,876	6,731	1,362	11,171	13,674	5,566	14,938
사망자	누적	2,849	745,668	2,715	18,268	118,612	140,981	95,734	8,085
	10만명당	5.6	225.2	47.0	14.4	182.5	212.7	115.6	91.0

- **(개선방향)**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손해 가중 등 경제민생·사회 문화 피해 심화 ▲인력·병상 등 자원 집중 투입에 따른 방역·의료 체계 부담 가중 등을 고려, 일상회복 안착 필요

3] 향후 과제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행 및 안착(방역체계 전환)

- **(검토배경)** ▲델타변이 확산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경제침체와 피로감 증가 및 ▲백신접종률 상승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대응전략 필요
- **(이행방안)** 접종자 중심으로 단계적 완화조치를 통해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고, 의료·사회·방역 대응의 지속가능한 체계 확립
 - (거리두기) 예방 접종자를 중심으로 방역적 위험이 낮은 분야 부터 단계적, 점진적으로 규제 완화하되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
 - (방역대응) 예방접종 여부 등 위험도에 기반한 진단검사, 역학 조사, 격리 방식의 개편으로 방역대응의 효과성 제고
 - (의료대응) 중환자 중심 관리, 사망 최소화 등을 위한 중증 환자 진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 및 재택치료의 단계적 확대 추진
- **(추진계획)** 충분하게 국민 소통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 논의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

2. 의료 · 건강안전망 강화

① 추진 배경

- 급속한 고령화, 공중보건위기 상시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필수의료 격차 해소로 의료접근성을 높이면서 의료비 부담은 완화, 아프기 전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 국민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큰 중증질환 중심으로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

* (의료비 경감규모) 약 12.1조원, 약 39백만명 혜택('17.9~'20, '21.5월까지 공단 지급자료)

- ▲3대 비급여* 해소 ▲뇌·뇌혈관 MRI, 심장 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등 추진

* 선택진료비 폐지, 병원급 이상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확대

- 소득 하위 50%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연소득 10% 수준), 전체 질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강화

* 소득 1분위 122만원 → 80만원, 2~3분위 153만원 → 100만원, 4~5분위 205만원 → 150만원

- **(공공의료 및 감염병 대응기반 확충)** '공공 의료체계 강화방안'('20.12.)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21.6.) 등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지역 공공병원 투자 확대* 및 신속 설립** 추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추진

* 지역 공공병원 기능보강 예산 : ('17) 468억원 → ('21) 1,239억원

** 지방의료원 신축 예타면제 : 대전의료원, 서부산의료원('21.1)

-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 수립('21.1.)을 통해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 제시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및 비대면 건강관리* 확대 ▲건강지원을 위한 주민건강센터 확충[(‘17) 55개 → (‘20) 120개] 등 추진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자 약 42만명, 참여기관 3,721개소(‘21.8월)

- **(마음건강 지원)**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21.1.),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21.6.) 수립·이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 단위 확충[(‘17) 243개 → (‘21) 260개] 등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제고

- 대규모 재난 시 국가 차원 심리지원체계 구축 위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설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심리지원 근거** 마련

* 국가 트라우마센터(‘18.4.), 권역 트라우마센터 5개소(∼‘21.6.) 설치/ ** 감염병예방법개정(‘20.9.)

③ 향후 과제

- **(보건의료 노정 합의 이행)** 보건의료노조와 노정합의(9.2)*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 합의사항 이행

* ▲생명안전수당 도입 ▲코로나 대응 간호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전문병원 신축확대 ▲공공병원 확충 ▲간호등급제 개편 ▲교대제 개선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등

- **(공공의료 확충)** 지역 공공병원 확충,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및 중앙 감염병병원 건립(‘26년 말 완공 목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등 추진

* (교육부 공동) 공공임상교수 도입[지방의료원 파견순환근무, 공공부문 부원장 신설 등

- **(의료전달체계 개선)** 질환·중증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 기능 세분화, 지역 중심 연계협력 강화, 인력·병상 적정수급 방안 마련 등 자원관리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척추 MRI, 갑상선 초음파 등 국민 요구가 높은 비급여의 급여화 및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보고체계 도입 및 표준화 방안 등)

- ▲안정적 국고지원 방안 논의 ▲지출 합리화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

- **(건강증진 기반 서비스 확대)** 보건소 기능 재정립 및 인력 확충*,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추진,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등

* 보건소 기능개편 연구용역을 실시(∼‘21.12월)하여 중장기 조직·인력 개선 방안 마련

- ▲자살시도자 및 유족 대상 사후관리사업 확대* ▲비정신과 의원 내 고위험군 정신과 치료 연계 시범사업 시행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 (시도자) (‘21) 88개소 → (‘22년 정부안) 104개소, (유족) (‘21년) 16개소 → (‘22년 정부안) 75개소

3. 소득안전망 강화

① 추진 배경

- **(경제·사회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과 시장소득 양극화*가 심화
* 시장소득 5분위 배율 : 10.88배 ('16년) → 11.56배 ('19년)
- **(기존 소득안전망 한계)** 제도의 양적 확대에도 공공부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잔존하며,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보장성 확대도 필요
* '18년 기초생보 비수급빈곤층은 73만명 수준 (차상위 포함 시 131만명)
- **(코로나19 충격)**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기침체로 저임금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소득 및 고용이 감소
* '20.4Q 근로소득 증감(전년 동기비) : 1분위 △13.2% 2분위 △5.6% 3분위 0.0% 4분위 0.0% 5분위 1.8%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산형성지원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등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추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21.10월)를 통해 '21년까지 약 18만명 신규 지원
 - (코로나19 피해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한시생계지원('21.6월) 및 추가 국민지원금('21.8월~) 추진**
*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최대 140만원 상당 상품권(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한시생계 65만 가구(3,019억원) 및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2,960억원) 지원
- **(인구특성별 지원 확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소득지원 강화
 -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도입('18년 10만원) 및 확대('19년), 영아수당 단계적 도입 추진
* ('18) 90%이하, ~6세(195만명) → ('19) 100%, ~7세(269만명) → ('22년, 정부안) ~8세
 - (노인) 기초연금액 인상* 및 노인일자리 확충**을 통한 생계지원 강화
* 25→30만원('19년), 소득하위 40→70%('21년) ** 18년 51만개 → '21년 82만개
 - (장애인) 장애인연금 확대*, 일자리 2,500개 확충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20만명) → 전체(28만명)로 확대

- **(근로연령층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립지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추진
 - (자립지원 강화) 자활일자리 확충*,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등 자산형성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
 - * (자활일자리) 4.5만개('17년) → 4.65만개('18년) → 4.8만개('19년) → 5.8만개('20년)
 - ** (청년희망키움통장) 중위소득 30%이하 청년 대상, 3년간 1,500만원 마련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돌봄서비스 확충 및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17~'22년 간 총 34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 * *국공립 보육교사: ('21)63,070개 *아이돌보마: ('21) 40,478개 *노인돌봄서비스: ('21) 33,203개 등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21.12)로 위기가구 지원('20. 29.5만→'21. 40.6만건)
 - * 재산기준 완화, 위기사유 확대, 동일 사유 재지원 제한기간 축소 등
 - (위기가구 발굴) 휴·폐업자, 실직 일용근로자 등 위기가구 발굴 확대('21년),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및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개통
 - * 전국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 설치('22년), 현장 공무원 1.5만 명 확충(~'22년)

③ 향후 과제

- **(소득보장 강화)** 기 추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外 의료 급여 등 추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통해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필요
- **(상병수당 도입)** 상병기간 국민들의 보편적 생계지원을 통해 빈곤을 예방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 추진
 - * ('22~'24) 상병수당 시범사업, ('25~) 상병수당 제도 확정 및 시행
- **(일자리 지원 강화)**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통한 자립 및 소득보장 강화
 - 노인·장애인 일자리, 자활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에 대한 투자 확대로 사회참여 고취 및 소득안정 지원
- **(위기 지원 내실화)** 코로나19 등과 유사한 경제·사회적 위기사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한시생계 지원 등을 내실화

4. 돌봄안전망 강화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펜데믹)** “돌봄이 없으면, 사회가 멈춘다”의 경험적 입증
 - * 교육, 의료와 같은 **보편적 필수서비스**로서 ‘돌봄’의 사회적 효용성 인식, 생산인구 경제활동의 기반
- **(인구·사회구조 변화)** 가족 보호를 위한 사회적 돌봄의 보편화
 - * 맞벌이부부 양육부담 : (‘20년) 전체 유배우가구(1,230만가구) 중 절반(약 560만가구, 46%)
 - * 노인부양·돌봄부담 : (‘25년) 노인인구 1천만,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의 20% 이상) 진입
 - * 치매노인(명) : (‘15) 63만 → (‘20) 84만 → (‘25) 108만 → (‘40) 217만 → (‘50) 302만
- **(사회 양극화 해소)** 양질의 돌봄 일자리는 계층격차 해소 역할 기대

2 추진현황 및 성과

-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
 - (보육) 기본·연장 보육체계 개편 안착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공보육이용률 40% 달성 추진(~’22년, ’21.6월 기준 34.9%)
 - (초등돌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추진계획(18.4월 발표)’을 통해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
 - * 학교(초등돌봄교실 보편화 등) / 마을(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 (노인) 치매국가책임제 발표(’17.9월) 이후 치매 인프라 확충, 치매인식 개선 위한 치매용어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 병행
 - * (치매환자 관리율) ’18. 44%→’21.5월 54.9%, (치매전담 요양시설) ’17. 42→’21.8월 274개 (치매안심센터) ’17. 4→’19. 256개(전국설치), (치매환자 1인당 본인부담) ’17.10월 126만원→’21.8월 54만원
 - **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 계획(’18.11월) 및 선도사업 추진(’19.6월, 16개 지자체), 노인맞춤형 돌봄사업 통합(’19)
 - (장애인) ‘장애등급제’(’19.7)를 폐지하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1.8월 발표)’을 수립하여 장애인 돌봄 확대

- (긴급·틈새돌봄 제도화)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 간헐적 돌봄수요에 대응가능한 탄력적 상시 돌봄체계 구축 추진

* 긴급돌봄 대체인력 수급, 본인부담을 통한 출근 전·늦은 퇴근 연장돌봄 제도화 등

○ **(질 좋은 돌봄)** 돌봄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한 생태계 혁신

- (공급자)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1.8.31 통과, ’22.3월 시행 예정)

- (종사자) 안정적 고용, 적정임금, 적정 업무량 등 처우개선 향상 추진

- (인프라) 중앙-지방정부와의 협업 체계 구축(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등), 평가관리 강화 등 추진

③ 향후 과제

- **(아동)** 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질적 제고를 위해 '25년까지 공공 보육이용률 50%*를 달성하고, 초등학생 대상 돌봄 결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마을에서 방과 후 저녁 7시까지 온종일 돌봄 검토

*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 **(노인)** 삶터 중심 노후를 위해 의료-요양-돌봄의 연계* 및 지역 사회 중심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적용을 통해 수요에 맞는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추진

** 보건소 기능 강화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통합건강증진사업 맞춤형 지원, 1차의료기관-보건소 간 연계로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주치의 사업 등 수행

-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을 원하는 시설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주거·건강·돌봄 등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정착 지원*

* 10개 지역(공모) 총 200명 주거환경개선, 보조기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22~'24)

- **(돌봄 생태계 구축)** ▲(공급자) 소규모 개인시설 규모화·투명화·법인화 지원 등 공공성 강화 ▲(종사자) 수요 기반 분야별 전문 인력수급·양성체계 구축 ▲(인프라)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5. 글로벌백신허브화 도약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기반 조성

1 추진 배경

- 바이오헬스(제약·의료기기·화장품·의료서비스) 산업은 미래 성장성과 일자리 효과가 크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유망 신산업
 - * 성장률(~'30) 전망(%) : 바이오헬스 4.0 > 조선 2.9 > 자동차 1.5% [산업은행 등]
 - * 생산 10억원 증가 시 고용효과 : 바이오헬스 16.7명 > 전 산업 평균 8.0
- 바이오헬스 비전 선포('20.5) 통해 반도체, 미래차와 3大 중점산업으로 육성
- 코로나19 계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 감염병 대응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병행 추진

2 추진현황 및 성과

- ◇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20년 기준 수출 217억불('17년 대비 74.8% ↑), 일자리 95만명('17년 대비 14.3% ↑) 등 지속 약진
 - ▲ 수출(억불) : ('17) 126 → ('18) 149 → ('19) 157 → ('20) 217
 - ▲ 일자리(만명) : ('17) 83.1 → ('18) 87.3 → ('19) 92.0 → ('20) 94.9

< 혁신 생태계 조성 >

- **(규제합리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20.1월) 등 통해 DTC 허용 범위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등 규제 혁신 추진
- **(인력양성)** 바이오헬스(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데이터·AI) 전반에 걸친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과정 정비·신설*, 인력 수급 통계 마련('21~) 등 추진
 - * 바이오공정인력양성(한국형 NIBRT), 임상시험전문인력양성, 제약·의료기기 산업 특성화 대학원, 의료AI 융합 대학 과정, 융합형 의사과학자 육성 등 14개 사업 추진
- **(창업활력제고)** 유망기업 발굴·상담, 사업화, 투자유치 등 전주기 사업화 지원

< 유망 산업분야 전략 지원 >

- **(의약품)** 신약 연구개발(R&D) 지원 강화('21~'30, 2.2조원)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통해 블록버스터 제약 기업(연매출 1조원 이상) 육성 추진
- **(첨단재생의료)**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시행('20.8),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21~'30, 총 6천억원)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기술 개발 촉진
- **(의료기기)**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시행('20.5월), 전주기 의료기기 개발('20~'25, 1.2조원), 의료기기 실증·보급 등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 **(화장품)** 현장 수요기반 미래 신기술 확보 지원(~'22),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21~'25, 9개국 8,200명) 통해 개인 맞춤형 화장품 개발 기반 마련

< 바이오 빅데이터 연계 · 활용 강화 >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고부가가치 의료 데이터의 개발·공유·연계 통해 한국인 맞춤형 질환 예측 및 정밀의료 기반 구축
*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 시범사업('20~'22), 데이터 중심 병원 운영('20~, 41개 병원) 등
- **(생태계 조성)** 가이드라인 제·개정('20.9~), 결합전문기관 지정('20~, 4개소) 추진

<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 조성 >

- **(의료 마이데이터(PHR))** 공공기관에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 조회·저장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 출시('21.2)
- **(스마트병원)** 환자안전 강화 및 의료 질 제고 위한 선도모델 개발·확산

< 코로나19 계기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

-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복지부·과기부) 통해 세계 3번째 치료제 개발('21.2., 셀트리온), 백신 임상3상 진입('21.8., SK바사) 등 성과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추진위원회 및 허브화 전략 수립·추진('21.8월~)
* 美싸이티바社 투자 유치(5천250만불('22~'24)), 한미 기업·연구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21.9월, 8건),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개최(한-미, 9.21/ 한-EU 10.8) 등 추진

③ 향후 과제

- **(신약·백신)**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지원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제1호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집중 지원
 - 미래 신변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시장 선점 위한 mRNA 백신, 신속·범용 백신,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필요
- **(데이터)**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추진
 - 향후 공공기관 데이터 연계 범위 확대 및 의료기관 진료기록, 웨어러블 기기 등 민간정보 연계 확대로 개인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
- **(인재 양성)**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의사과학자, 바이오공정인력, 임상시험, 의공학자 등 분야별 전문가 집중 투자·육성
 - *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바이오공정인력센터 정식개소('24), 의료-인공지능 융합교육 신설 등 추진
- **(연구 투자 확대)** 기초 의과학 연구성과를 실용화 연구와 연계하는 중개연구 투자 확대

6. 인구구조 대응역량 강화

① 추진 배경 : '인구지진' 현실화 우려 심화, 미래 대응 중요

- **(초저출산 현상 지속, 초고령사회 가시화)** '20년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출산율 1명 미만은 전 세계 유일(OECD 평균 1.63명, '18년)
* 2025년 노인인구 1천만,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의 20% 이상) 진입 예정
- **(인구 오퍼스 시기 도래)** 2020년대('19년 5,178만명)를 정점으로 한국은 인구수 지속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급증시기 도래
* (인구규모) 전체 인구수 및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 저출산 장기화로 인구감소도 장기화
** (인구구조) 삼각형 →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 가속화(생산가능인구 < 노인인구 비중 높음)

<참고> 총부양비; 생산가능연령(15~64세) 인구 1백명당 부양인구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구분 (중위 시나리오)	1970	1980	1990	2000	2010	2017	2020	2030	2040	2050
총부양비	83.8	60.7	44.3	39.5	36.9	36.7	38.6	53.0	77.5	95.0
유소년부양비	78.2	54.6	36.9	29.4	22.0	17.9	16.9	14.7	17.4	17.4
노년부양비	5.7	6.1	7.4	10.1	14.8	18.8	21.7	38.2	60.1	77.6

- **(지역별 인구격차 심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심화, 청년인구 유출과 지역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 구조 형성, 지역소멸 우려 증대
* ('20) 수도권 인구(2,596만명) > 비수도권(2,582만명) : 직업, 대학 진학이 수도권 주요 전입 사유
- **(인구변화의 영향)** 사회 각 영역별 공급-수요 간 수급 불균형 발생·심화
 - ▲ (경제) 성장 잠재력 저하 및 재정부담 심화(세입 감소 및 복지비용 증가)
 - ▲ (교육)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 및 대학 인프라 공급과잉 현상 확대
 - ▲ (의료) 전반적으로 건강관리 및 의료수요, 관련 인력수요 증가
 - ▲ (고용) 인력 고령화 심화로 노동시장 미스매칭 심화, 중소기업·농업 등 인력확보 어려움
 - ▲ (주거) 전체 둔화추세에서도 수도권 쏠림, 1인가구 증가로 지역·노후주택 빈집 증가 우려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제4차(2021 ~ 2025) 기본계획 수립('20.12월)
 - (영아기 집중투자) 젊은 부모들에게 아이양육에 필요한 '시간(육아휴직 활성화)'과 '비용(예산지원 및 돌봄 확대)'을 함께 보장할 필요

< '21년 중점 추진과제 :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지원 예산('22년) >

- ①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 돌봄서비스 또는 직업육아 비용 사용
- ② (첫 만남 꾸러미) 첫만남 이용권 도입(200만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60→100만원)
- ③ (부부공동 육아휴직 지원 확대) 3+3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소득대체를 인상 등(고용부)
- ④ (공공보육 강화) '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어린이집 확충)
- ⑤ (방과 후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 '22년 53만명까지 확대 목표(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 (다자녀 지원 확대) 3자녀가 아닌 2자녀 기준으로 지원기준 확대 등
 - * 셋째 자녀 대학진학시 대학등록금 전액 무료, KTX 할인 확대, 공공주택 우선권 등
- (법정혼 중심 사회규범 인식 개선)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제도개선 등
-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삶터 중심 노후, 노인돌봄 확대
 - * 노후 소득 다층적 보장체계 강화,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존엄한 마무리 지원 등

- **(법정부 인구TF 논의)**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등 사회영역별 조정과제 논의
 - * 기재부 주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정부 협의체 : ① 저출산 기본계획과 미중복 과제 ② 인구변화 관련 핵심적·구조적 과제 ③ 재정투입형 보다는 제도개선 과제 중심 운용
- **(주거, 고용 등 청년정책 강화)**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및 방안** 추진
 - * 국조실 청년정책실 신설(6월), 각 부처 청년정책 담당 전담인력 배치(9월) : 제1차 청년기본계획(21~25) 수립: 5개 분야 43개 과제(① 일자리 ②주거 ③ 교육 ④ 생활(복지) ⑤참여권리)

[3] 향후 과제 : 과감한 사회적 투자 및 인구변화 대응 정책역량 강화 필요

- **(완화 : 선진국 수준 사회적 투자)** 영아기 집중투자(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도입 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아동가족지출 분야 투자* 확대로 출산율 반등
 - *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 현황 : '17년 기준 GDP 대비 아동가족지출 투입 비중은 프랑스 2.9%, 스웨덴 3.4%, 일본 1.6%, OECD 평균 2.1%, 우리나라 1.1%('18년 1.2%로 상승)로 경제규모 대비 매우 부족한 수준
- **(적응 : 사회영역별 조정역량 강화)** 사회적 합의 수렴을 통한 경제 및 사회 각 영역별 범정부 차원의 기존 사회제도 조정 전략 수립·추진
 - * 사회보험(국민연금 등)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동시장(정년연장, 이민정책 등), 교육시스템 개혁(대학 수, 교과 등), 군인력 지속 감소 대응 + 수도권 집중 완화 등
- **(정책의 지속성·효율적 실행 담보 방안)**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기획 및 집행력을 담보할 컨트롤타워 재구축으로 인구변화에 따른 보다 강력한 대응체계 검토 필요

《 신규 추진 필요과제 》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① 추진 배경

-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및 적정성에 대한 관심 증대
-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지적자시점은 2042년, 기금소진시점은 2057년으로 전망
 -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국민연금 제도 개편, 기금 수익성·안전성 제고 등을 통한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② 주요 내용

- **(연금제도개편)** 수지불균형 구조 해소 등 적정 부담 - 적정 급여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성 제고 대책 마련 추진
 -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계산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재정추계, 제도발전, 기금운용발전 3개 분야), 장기재정추계 및 대책 마련('22~'23)
 - *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재정추계 실시, 제도 및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선제적 정책 수립에 활용('98년 도입, 매 5년마다 실시)
 - 재정추계 및 대책에 대한 사회적 협의 도출 추진
- **(기금운용개선)** 기금운용 수익성과 전문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일관성 있는 자산 배분이 가능하도록 장기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ESG 책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투자자로서 안정적 기금 운용
 -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를 통한 △투자정책, △위험관리, △책임투자 분야 기금운용 전문성 제고

환 경 부

1.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추진

① 추진 배경

- **(글로벌 의제)** 파리협정 발효('16.11) 이후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의제로 대두,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증대
- **(탄소중립 선언)** 탄소중립 국제적 논의 확산(기후행동정상회의('19.9), COP25('19.11))에 따라 전지구적인 행동 동참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 2030 NDC 상향($\Delta 26.3\% \rightarrow \Delta 40\%$) 계획 발표 등 탄소중립 행동 및 의지 표명
 - ※ 기후정상회의('21.4), 한미정상회담('21.5), P4G 서울정상회의('21.5), 주요경제국포럼(MEF, '21.9) 등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법적 기반)**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시책 ▲이행기반 등을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9.24 공포, '22.3 시행)
 -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
- **(온실가스 감축)** '18년 온실가스 배출정점 이후 지속 감소(석탄발전↓, 배출권거래제 안착),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탈동조화 강화
 - *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 : '18년 727.6 → '19년 699.5 → '20년 648.6(잠정)
 - 배출권거래제(국가 배출량의 73.5%) 배출허용총량 삭감* 및 감축 인센티브 강화로 **多배출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
 - * 3차 배출권 계획기간('21~'25) 배출허용총량은 기준시기('17~'19) 배출량 대비 $\Delta 4.7\%$
 - 생산·유통·소비 자원순환 전 과정에 걸친 순환 경제 고리를 완성하기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안)** 마련
- **(녹색전환)** ▲녹색융자·펀드 조성('25년까지 총 2.1조원) ▲녹색분류체계 초안 마련('21.6) ▲지역별 녹색거점단지 육성을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정**('21.6)
- **(국민실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가정·기업·학교)” 발간('21.8), 그린카드·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이행 추진**
 - * ('20년 기준) 310만 가구, 자동차 5,465대 참여, 총 111만톤 CO₂ 감축

③ 향후 과제

- **(이행기반 확충)** 탄소중립을 위한 탄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후변화영향평가 설계·시행,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
 - 자발적 기후변화대응 활동 촉진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구성·운영
 - 기후변화·미세먼지 통합 대응을 위한 인벤토리·연구조사 융합·강화
 -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통합 및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감축지원 확대
- **(탄소흡수원)** 국가 탄소흡수원 관리 체계화
 - 산림의 현명한 이용과 국토의 탄소흡수 능력을 최대화하는 통합적 관리로 전환하고,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대
 - 국가 탄소흡수원 통합 관리계획 수립 및 종합적 평가체계 마련
 - 산림·하천·도시숲으로 이어지는 탄소흡수원 기능 강화
- **(녹색전환)** 녹색산업 육성, 기후테크 확산 및 녹색소비·녹색금융 활성화
 - 녹색융합클러스터 전국 거점 설치, 녹색융합 기술인재 집중 양성
 - 녹색제품 구매액 소득공제, 부가가치세 감면 등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및 LCI DB*·탄소발자국 산정방법을 국제수준으로 향상
 - * 전과정 목록(Life Cycle Inventory Database):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수송-유통-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 투입되는 양과 산출되는 양을 목록화한 데이터
 - ESG 확산을 통해 친환경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녹색금융 제도 기반 강화
- **(탄소협력)** 국제탄소협력 체계 공고화 및 글로벌 리더십 제고
 - 국제적 메탄 감축 협력(분야별 메탄 감축계획 수립 등) 동참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국외감축사업 추진
 - 그린뉴딜 ODA를 통한 기후대응 선진국 도약
 - 남북 기후·환경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
- **(탄소중립 그린도시)** 감축형·적응형·융합형으로 구분, 지역 특성을 살린 탄소중립 그린도시 100개소 조성

2.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감축

① 추진 배경

- **(높은 농도 수준)**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12년 이후 정체·악화되어 OECD 중 농도 1위 수준('16 OECD 더 나은 삶 지수 발표 등)
 - 특히 중국 등 국외유입 영향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공동대응 필요
- **(국민건강 피해)**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2조원('16, 대기환경학회), 특히 어린이·어르신 등 민감계층 건강피해 집중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대응 기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 추진 기반 마련
 - ▲세계 최초 “사회재난” 지정 ▲특별법 제정('18), 추경 편성('19, 1.3조), ▲8개법* 제·개정('19) ▲미세먼지특위('19.2)·국가기후환경회의('19.4) 설치 등
 - * 대기관리권역법, 항만대기질법, 대기환경보전법, 재난안전법, 실내공기질법, 학교보건법 등
- **(부문별 핵심배출원 관리)** 3차례 범정부 대책('17·'18·'19) 등을 바탕으로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4대 핵심배출원 집중 저감

* **(발전)** 노후석탄발전소 6기 폐지, 발전 상한 제약('17~), **(산업)** 배출기준 강화('19.1~), **(수송)** 경유차 폐차('19~'20년 100만대·저감장치 부착('19~'20년 15.5만대), **(생활)**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 **(무공해차 보급)** 전기차 24.9만대(충전기 9.3만기), 수소차 1.7만대(충전기 116기) 누적 보급(~'21.9)
 - 무공해차 관련, 제조사 보급목표(4~10%) 및 공공부문 구매의무(80%) 신설
 -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한 인·허가 의제 도입('21.7) 및 입지규제(GB 등) 완화
- **(계절관리제 도입)** 고농도 시기 특별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최초 도입(1차: '19.12~'20.3), 국내배출 감축·고농도 완화 성과*
 - * 전년동기 대비 33→24 $\mu\text{g}/\text{m}^3$ (27%↓), 고농도 최대(세종) 7.5 $\mu\text{g}/\text{m}^3$ ↓, 나쁨일수 최대(충남) 9일↓
- **(한-중 협력)** 한-중 청천(晴天)계획*('19.11) 합의·이행으로 중국 농도 개선 유도(中 베이징 미세먼지 농도 추이: '14년 86 $\mu\text{g}/\text{m}^3$ →'20년 38 $\mu\text{g}/\text{m}^3$)

* 청천계획: 기존 조사·연구사업 위주 협력에서 통합 한·중 협력 플랫폼으로 확대
(예보정보 공유, 기술협력·정책교류, 예방·저감 사업 등 3대 부문 6개 사업)

- ▲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한·중·일 등 6개국) 출범('18)
▲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18.6) ▲ 한·중 정상급 회담(4회) 등 추진

*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 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③ 향후 과제

○ (푸른하늘) 선진국에 걸맞는 미세먼지 농도 개선

- '2030 중장기 미세먼지 감축 전략'('30년까지 $10\mu\text{g}/\text{m}^3$ 로 개선) 수립
- 주요 배출원별(산업, 발전, 수송 등) 감축 로드맵 마련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감시 드론 ▲ 이동측정차량 ▲ 미세먼지 데이터 센터 등 스마트 관리체계 확대
-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 관측을 통한 동아시아 대기질 감시체계 구축

○ (미래차) 친환경 미래차 시대로의 전환 가속화

- 무공해차 보급목표 달성 시까지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세제 지원 유지
- 무공해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시설 10배 이상 확대(現 15만기 → '30년 152만기)
- 무공해 차종 확대(화물차· 시내버스·택시·어린이 통학차), 무공해 렌터카 보급 등 생활 주변 이동수단 무공해화 추진
- 무공해차 100% 구매 의무화 등 공공부문 전환 가속화
- 내연차 구매(LPG, CNG 등),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단계적으로 폐지, 경유차 조기폐차 및 무공해차 보급사업으로 전환

○ (한·중 협력) 양국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대책 추진 공조('21.11~) 등 저감 협력 지속 확대

* 한·중 국장급 계절관리제 회의('21.11), 고농도 예상 시 고위급 핫라인 운영 등

○ (국제 공조) '제2차 아시아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20~'24, 한·미·유럽), 환경위성 자료 공동활용 플랫폼(판도라 프로젝트) 구축('20~'22, 아시아 13개국)

3.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① 추진 배경

- **(화학안전 대두)**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 화학물질·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불안 확산,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생활안전 체계 강화 급선무
 - 화학물질은 “정보 없이 시장 출시 없다(No Data, No Market)” 원칙 하에 등록토록 하여, 유해성 정보를 확인·공개하고 안전성 검증 등 추진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화학물질 안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 등록('19.1, 화평법 개정·시행)
 - ※ 신규화학물질(기존화학물질 이외의 모든 물질)은 제조·수입 전 등록
 -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
 - * 791종('17년 누계) → 2,241종('21.6월 누계)
- **(화학제품 안전)** 살생물물질·제품은 시장 출시 전 위해성을 사전 검증하여 안전한 경우 판매 허용하는 사전승인제* 도입('19.1,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
 - * 유통 중인 기존 살생물물질은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3~10년 승인 유예
 -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불법제품 유통 모니터링 및 시장 퇴출* 추진
 - * 시장감시단 운영, 6,833개 제품 안전성 조사로 기준 위반 1,647개 제품 회수('17~'21.9월)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1.12 시행 예정), 살생물제품 피해발생 시 구제급여 지급, 원인기업 분담금 부과* 등 구제제도 신설
 - * 사용자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 「제조물책임법」 상 결함(제조·표시·설계)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원료물질 사업자 제외)에게 부과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17.8 제정 및 2차례 개정*),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 마련('17.9), 특별구제제도 조성** 등 피해구제 체계 및 기반 확보·강화로 피해 인정자 수 및 지원액 증가
 - * △정부출연금 추가(225억원) △'포괄적 건강피해' 규정, △인과관계 추정요건 완화, △사업자분담금 추가징수 규정 마련(법 35조의 2 신설) 등
 - ** 기업분담금('17~'20, 1,250억 원), 정부출연금('19~'21, 225억 원) 확보

<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현황 >



- (지원 다양화) ▲취약계층 신청서류 발급대행(21, 119명) ▲법률지원(21, 146명) ▲건강·심리 상담(21, 117명) ▲피해자 찾기 및 제도홍보 등* 다각적 지원 추진
- * 긴급의료지원, 소송가이드라인 발간, 피해질환-제품과의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발간 등

③ 향후 과제

- **(화학안전)** 화학규제 수용성은 높이고, 건강과 안전은 보장
 - 참여 플랫폼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합리적 개선,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강화
 - 일률적인 화학규제에서 사업장 규모 및 물질 특성에 따라 차등 관리
 - ※ 화관법 영업허가자에 대해 사용 취급물질 종류·양에 따라 이행기준 차등화
- **(피해예방·구제)** 환경피해로부터 안전한 나라 구현
 - 환경피해 장기역학조사·연구·예방 역량 강화
 - 생활 속 화학제품 노출 피해 전방위 감시 및 신속 대응 체계 마련
 - 환경피해구제-조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소음·진동 등 일상화된 피해는 신속 구제·조정 될 수 있도록 개선
- **(환경정의 구현)**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 「분쟁조정법」 및 「피해구제4법」* 전면 제·개정,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환경정의, 기후정의 구현
 -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 공정한 전환을 위한 중소기업 ESG 기반 확대 지원
- **(지역 및 건강의 회복)** 환경열악공간을 생태·건강·지역회복 모델로 재탄생
 - 익산 장점마을, 김포 거물대리 등 환경오염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 ①오염정화, ②생태복원, ③탄소중립 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회복
 - 폐쇄된 산업공간을 인공습지, 사육곰 등 야생동물 보호시설, 생태탐방로 등이 어우러지는 생태공간으로 복원하여, 지역 관광명소로 탈바꿈
 - * (예) 서천 장항제련소 부지, 폐쇄된 석탄발전소, 염전, 도심지 농업용 저수지 등

4. 통합물관리 체계 완성 등 물환경 개선

① 추진 배경

- **(수량-수질 일원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물관리기본법(제정), 물산업진흥법(제정), 정부조직법(개정)) 처리로 수량-수질 통합물관리 체계 마련('18.5)
- **(하천관리 일원화)** 기존 국토부 소관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합물관리 체계 완성('22.1.1. 시행 예정)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통합물관리 조직 체계 구축, 장기 비전·계획 수립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19.8~),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신설('21.6)
 - 향후 10년간 물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 수립('21.6,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확정)
- **(깨끗한 먹는물 공급)**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먹는물 체계 마련
 - 낙동강 상·하류지역 맑은 물 확보를 위해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20.12), 낙동강유역물관리위를 통해 심의 및 의결('21.6.24)
 -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19.11)' 및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20.9)' 수립·이행으로 수돗물 사고 사전 예방 체계 구축
- **(건강한 물환경 조성)** 우리강 자연성 회복 등을 통해 건강한 물 환경 조성
 - 다층적 거버넌스 논의를 거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의결('21.1), 안정적인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낙동강 하굿둑 개방 실시
 - *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지역(기수역)만의 독특한 생태계로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계
 -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19~'20, BOD→TOC), 경북 왜관수질측정센터 설치('19), 과불화화합물 오염물질 지정('20.11) 등 미량오염물질 관리강화
- **(안전한 물관리 체계)** 국민 물안전을 위한 홍수·낙조 등 물재해 대응 체계 강화
 - 중남부지역 홍수 피해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 '범부처 풍수해 종합대책' 마련('20.11), 환경분쟁조정 제도 등을 활용한 신속 피해구제 추진('21.7~)
 - 감시체계를 일원화하고, '여름철 낙조대책'에 따라 예방·감시·대응 전 과정 대응으로 조류경보 발령 크게 감소('17년 643일 →'20년 459일)

- **(물산업 육성)** 산업계 지원 확대 및 수열에너지 활성화로 미래 먹거리 창출
 - ▲물산업진흥법 시행('18) ▲클러스터 준공('19) ▲인증원 개원('19)으로 물산업 뼈대를 완성하고, 스타트업 지원 등 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댐 주변 RE100* 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등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추진
- * Renewable Energy 100%: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 목표

3 향후 과제

- **(이상기후 대응)** 이상기후에도 문제없는 홍수 대응력 확보
 - 디지털 트윈 기반 입체화된 공간 침수예보, 통합도시침수관제시스템 등 홍수 조기경보체계 강화와 집중 강우 대비 도시침수 방재체계 재정비
 - 하수관경·펌프장·저류시설 확대, 실시간 침수대응을 위한 스마트 하수도 도입 등 도시침수 예방, 홍수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후대응 체계로 대전환
 - 중점관리 필요 지방하천(1지류 등)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국가책임 강화
- **(물안전)** 하천에서 수도꼭지까지 맑은 물 보장
 - 폐의약품 성분 등 미량 유해물질 관리로 더 안전한 물 공급
 - ICT, AI 기반 저탄소형 상수도 생산·관리체계로 전환
 - 옥내급수설비업 신설, 급수설비 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등 수도관 말단까지 급수설비 관리 강화
 - 하수재이용 극대화를 통한 탄소중립형 공업용수 확보 체계 마련
- **(물순환)** 하나의 물, 더 큰 혜택을 국민께 환원
 - 도심하천 대상 홍수방지·생태복원 동시 개선사업(생태문화하천 사업) 추진을 통해 하구와 연안의 생태문화가 어우러지는 하구 생태도시 구축
 - 지역 맞춤형 물순환 관리 모델(수질·수량·수생태·재해 등 물관리 분야 연계) 보급
 - 도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물순환 선도도시 완성 및 물안심 도시 조성
- **(RE100 클러스터)** 댐 주변, 새만금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잠재량이 높은 물관리 시설 주변에 'RE100 클러스터 조성'

5.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① 추진 배경

- **(폐기물 발생 증가)**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폐기물 발생은 증가*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확대로 포장폐기물(택배, 1회용기 등) 급증**
 - * (폐기물 발생량) 14,661만톤/년('14년) → 18,149만톤/년('19년), 23.8% ↑
 - ** ('20년) 전년 대비 음식배달 78%↑, 폐플라스틱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 **(처리 애로)** 민간 중심 수거 체계*는 시장 침체 시 수거 중단 우려가 상존하며, 님비(NYMBY)현상으로 처리시설 신·증설은 제한
 - * 민간 소각시설은 허가용량을 초과 운영 중(가동율 106%), 매립시설 잔여연수 2.1년
- **(순환경제 대두)** EU* 등 선진국은 이미 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기존 선형경제를 폐기물 발생감량·순환이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 중
 - * 기존 순환경제 이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보완한 新순환경제 이행계획 발표('20.3)
(주요내용) ①지속가능한 상품, ②주요 품목 순환성 개선, ③더 적은 폐기물, 더 많은 가치, ④인간·지역·도시 순환성, ⑤범분야별 조치, ⑥글로벌 노력, ⑦모니터링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이행기반 마련)** 「자원순환기본법」 제정('18.1월) 및 중장기 자원순환 정책목표 및 방향 제시를 위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18.9월)
- **(폐기물 발생감량)** 다량배출사업장 성과관리*('18.1월) 및 재포장 금지제도 시행('21.1월), 1회용품 규제계획 마련('19.11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22.6월)
 - *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3,500개소에 성과목표(재활용률 및 매립률) 부여 → 미준수시 명단 공개
- **(수거·선별 체계 개선)** 고품질 재활용 자원 배출·선별체계 안정적 구축
 - 재생섬유 등으로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을 제도화* (공동주택('21년) → 단독주택('22년))하고, 선별 등급별 지원금 차등화(10~80원/kg)
 - * 전국 지자체 합동점검 결과(6.1~7.30, 1.7만 공공주택 단지) 별도 배출 96.6%, 별도 수거 93.3%
 - 플라스틱과 타 재질이 분리 불가능하게 혼합·도포·첩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종량제봉투에 배출토록 표시* 의무화('22.1~)
 - * '21.7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개정안 발령
 - 수거거부 등 기존 민간 수거 체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는 공공 책임 수거로 전환(~'24)

- **(안정적 처리 기반 확립)** 공공처리 체계 개선 및 시장관리 강화
 - 민간·지자체 처리가 어려운 재난·유해·불법 폐기물의 공공 주도 처리를 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제정('20.6월 제정, '21.6월 시행)
 -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지 않고 소각 잔재물 또는 분리·선별 후 불연성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직매립 금지 규정 마련***('21.7월)
 - * 직매립 금지 시점: 생활폐기물(수도권 '26, 비수도권 '30), 건설폐기물('30)
 - ※ 사·도별 전처리·소각시설 확충계획 등 세부이행 로드맵 마련(~'21.12)
 -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재생원료 공공비축 시설 확충***,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설치·운영('21.7~)
 - * 공공 비축시설 : '20년 1개소 → '21년 4개소 → '22년 6개소 → '23년 8개소

3 향후 과제

- **(버려지는 자원 최소화)** 포장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제품 출시 前 포장재 평가제도 도입, 수송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 1회용 비닐 등 시설별·업종별 1회용품 사용금지 목록 확대
 - 생산-소비-유통 전 과정 관리를 위한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
-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한 지자체 공공 선별시설 단계적 확충·현대화(기초자치체 당 평균1개 이상 ~'25) 및 로봇 선별기 등 인프라 확충
 - 폐비닐 등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도시유전(열분해시설), 도시광산(미래폐자원 수거 등), 에너지 회수(연료화, 원료화)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 화학적 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설비 실증 및 사업화 추진
 - 농수산 소분야 친환경 재활용제품 보급 등 재활용 정책지원과 건설폐기물 고품질 순환재활용 확대
- **(처리시스템 혁신)** 불법·재난·유해폐기물 처리를 위한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구축
 - 멸균분쇄시설 확대 등 팬데믹 시대 의료폐기물 신속·안전 처리 강화
 - 농촌과 함께하는 영농폐기물 분리수거 기반시설 확대
- **(환경자원 에너지화)** 음식물쓰레기·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 대폭 확대
 - 버려지는 쓰레기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블루·그린수소 생산 기반 확대

고용노동부

1. 코로나19 고용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

① 추진 배경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지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생계 지원,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 대책 추진
- 코로나19로 디지털·저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구조의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코로나 대응)** ①고용유지('20년 77만명) 및 실업급여 지원('20년 170만명)
②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생계지원('20~'21년 179만명),
③공공·민간일자리 창출, ④고용안전망 확충 등 집중 추진
- 신속한 고용안정 지원 노력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다는 평가*

* OECD 한국경제보고서('20.8.11): 한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으로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고,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타 회원국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

<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성과 국제비교 >

'19년 대비 '20년 고용지표 변동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미국
취업자 증감률(%)	△0.7	△0.8	△1.5	△5.2	△6.2
코로나 이전('20.2월) 대비 고용회복률(%)	99.0('21.8월)	99.8	99.1	100.0	96.8

* 출처: OECD 및 각국 통계청 / 고용회복률은 계절조정 취업자수 기준('21.9월 기준)

- **(일자리 기회 확대)**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으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청년) 「구직-채용-근속」 단계별 지원(①국민취업지원제도, ②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채용특별장려금, 6월~), ③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중소기업 매칭 강화 등
- (여성)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을 확대('17.12)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쉼사업장 적용('18.5), 가사·돌봄서비스 공식화(가사법, '21.5) 등

- (고령자)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인생 3모작(주된 일자리 - 재취업 - 퇴직 후 사회참여)'을 지원, 1,000인 이상 기업은 재취업지원 의무화 시행('20.5)

< 대상별 고용률 추이 >

고용률(%)	청년	여성	고령자
'16년 → '21.9월	41.7 → 45.3	50.3 → 51.7	66.2 → 66.2('20, 코로나 영향)

- **(디지털·저탄소 전환 대응)** 한국판 뉴딜('20.7)을 발표하여 디지털·그린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고용안전망·직업훈련 확충
 - 신산업·신기술 등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신기술 훈련*을 확대하고,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해 부처간 협업체계 강화**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17년 신설)" → '20년 "K-Digital Training"으로 확대개편

** 6개 신기술분야 관계부처 협업예산 편성 「민관 협력 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 합동 발표('21.6)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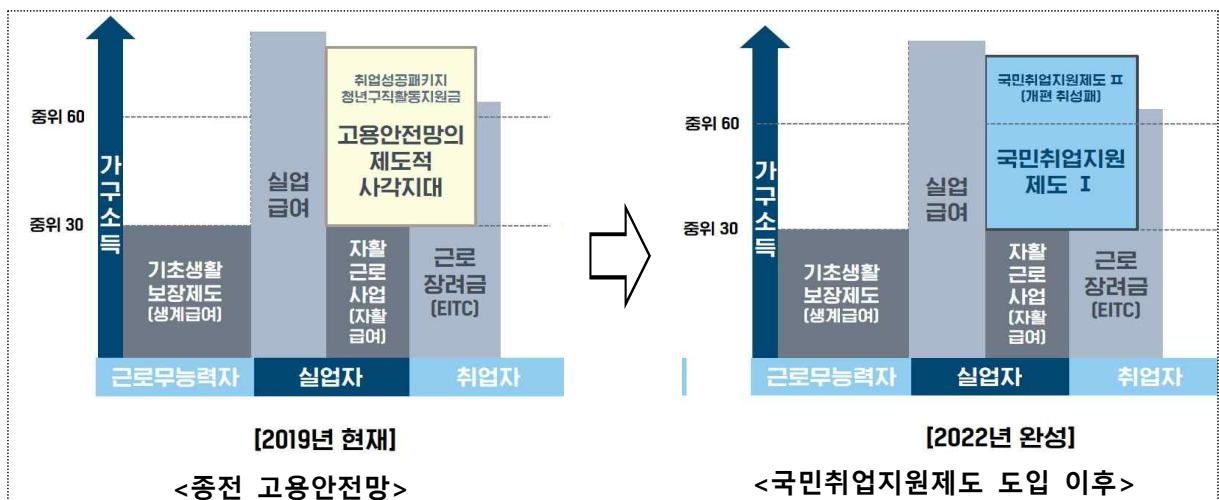
3 향후 과제

- **(포용적 고용회복)** 고용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완전한 고용회복을 달성하고,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 (청년) 민·관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모델 확대 및 경력직·비대면 채용 등 채용방식 변화에 따라 청년이 체감하는 어려움 해소 지원
 - (여성) 일·가정 양립지원 확대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 등 지속 추진
 - * 3+3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상향,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
 - (고령자) 고령자 고용활성화 및 계속 고용제도 등 고용연장 논의 추진
 - * 경사노위 고령사회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계속고용 등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22~) 준비추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 우수사례 확산 등
- **(신산업 일자리 창출)** BIG3, DNA*,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 제2의 벤처붐 확산 지원, 규제혁신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뒷받침
 - * ▲ (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 기업이 주도하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전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 등 전생애에 걸친 직무능력 향상 지원
 - 산업별 창출·소멸 직무 분석 등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 등에 따라 피해를 입는 기업·근로자·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

2.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1 추진 배경

- **(전국민 고용보험)**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빈번해지는 이·전직 및 겸업 추세 속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보험체계 구축 필요
⇒ 예술인·특고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확대 계획을 담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20.12.23.)
-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다수의 취업 취약계층이 고용안전망(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
⇒ 2차 고용안전망인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와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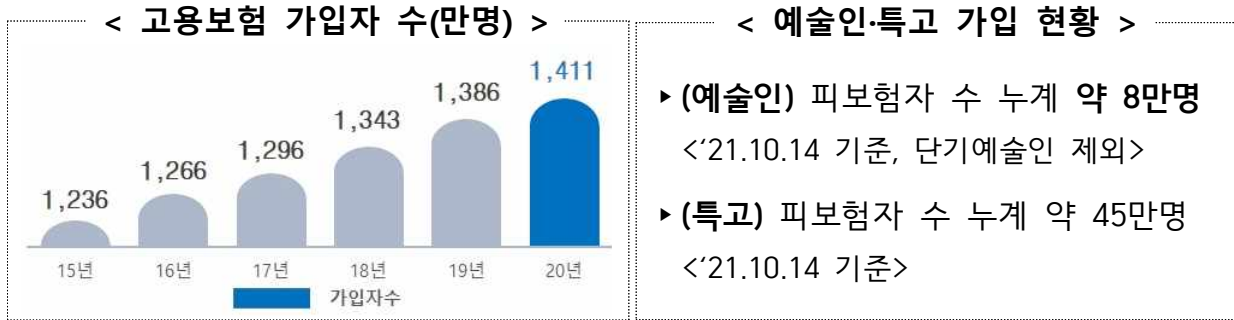
2 추진현황 및 성과

- **(전국민 고용보험)** 예술인('20.12월)·특수형태근로종사자('21.7월)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 12개) ①보험설계사 ②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③대출모집인 ④학습지 방문강사 ⑤교육교구 방문강사 ⑥택배기사 ⑦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⑧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⑨방문판매원 ⑩화물차주 ⑪건설기계조종사 ⑫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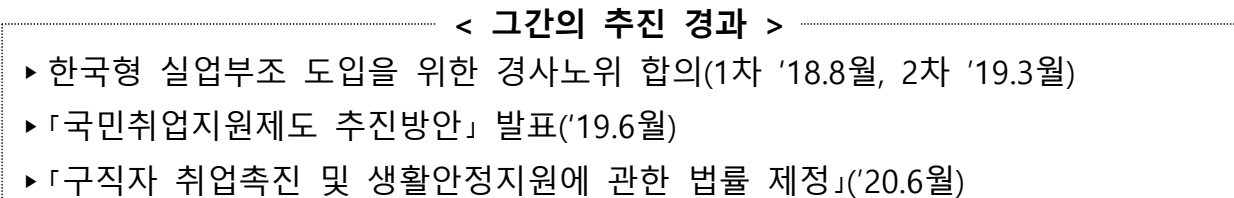
- '22.1.1. 적용 플랫폼 직종(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의견 수렴 등 세부 적용방안 마련 중(~'21.下)

⇒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등 안전망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취업 및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 총 36.5만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중('21.10.15. 기준)'



③ 향후 과제

- **(전국민 고용보험)** 특고·플랫폼 추가 적용('22.7월~)* 차질없는 시행·안착,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자영업자 단계적 적용확대(~'25년) 추진**

* 실태조사('21.5~11월),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특고·플랫폼 직종 선정 등
 ↳ 노동계 제안 직종(기타 직종: 가사종사자, 공공교육프로그램 강사, 구급차·견인차 운전기사, 여타 플랫폼 기반 직종) 중심

** 노사,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 운영('21.9.30~)

-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 징수체계 개편)**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형태에서 “소득”으로 변경,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모두 보호

* 겸업 여부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 사업장 단위의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개인별로 변경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조세-고용보험 간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고도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고도화·내실화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제고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 정착

3.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에 대응, 산업구조 변화를 뒷받침할 인력 양성 및 국민의 평생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 신기술·신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재편되면서 새로운 직무역량 함양 및 기존 산업 종사자의 원활한 이·전직 지원 필요성 증대
 - 전통적인 근로자·실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포용적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신기술 훈련기반 확충)** SW 등 신기술 분야 인력 부족 및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주도의 신기술 특화 훈련모델 추진
 - ❖ '17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 '20년 'K-Digital 훈련'으로 확대·발전
 - ▶ (K-Digital Training) 혁신적 훈련기관·방식을 통해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력 양성
 - ▶ (K-Digital Plus) 구직자·재직자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 제공
 - ▶ (K-Digital Platform) 공동훈련센터를 디지털 훈련 인프라로 구축, 지역 내 개방·공유
 - 폴리텍 등 공공훈련기관이 선도하여 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 및 관련 학과 신설·개편 지속 추진
 - * 신기술 특화훈련과정(하이테크 과정) 확대, 전용 훈련기관(융합기술교육원) 신설 등
-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기반 마련)** 국민내일배움카드('20.1.1. 시행)를 통해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개인의 생애 직업훈련 지원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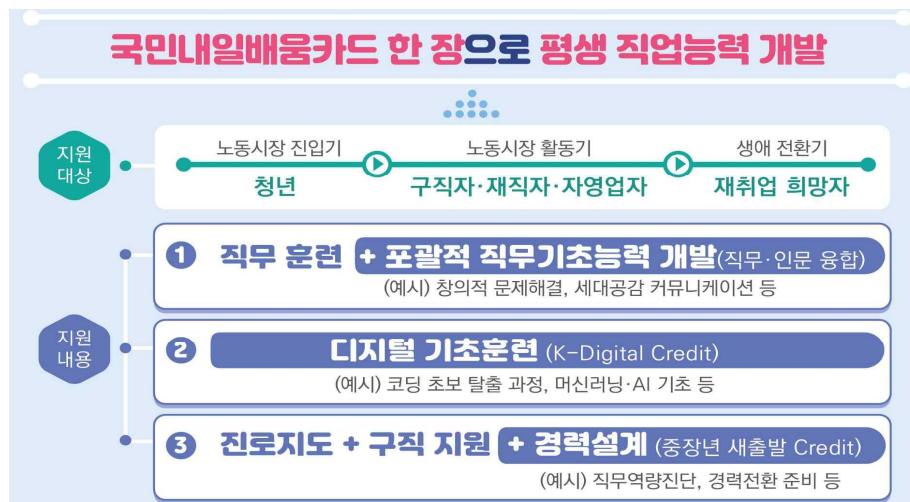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현황 >

발급 건수	'19년	'20년	'21.9월
(단위: 천명)	714	905	827(전년동기 대비 23.3% ↑)

- 「일학습병행법」을 제정('20.8.28. 시행)하여 일학습병행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재학단계 현장기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 * 학습기업(개)/학습근로자(명): ('19) 1,259/38,522 ('20) 1,234/34,339 ('21.8) 904/28,698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 모든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21.7.24. 국회통과)

③ 향후 과제

- **(전국민 평생 직업훈련 지원)** 모든 국민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활용한 훈련 참여기회 확대, 디지털, 창의·융합 등 새로운 직무역량 폭넓게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범위 지속 확대 및 사업주 훈련 활성화
- 교육·훈련 등으로 취득한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 통합 관리·활용



- **(미래 유망분야로 훈련체계 개편)** 민간 주도 신기술 훈련을 통해 인재 양성 및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 및 노동전환 지원
-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 지역·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우수한 훈련모델 지원·확산(K-Digital Training 등)
- 재직자 대상 디지털 융합훈련 및 이·전직을 희망하는 재직자 대상 현장 맞춤형 훈련 지원,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 교·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 **(훈련규제 혁신)** 자율·성과 중심으로 규제를 혁신하여 훈련의 질 향상*
- * 기업 실정에 맞는 자율적 훈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 훈련기관의 역량·자율·성과 중심 유연한 훈련공급체계 설계

4.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① 추진 배경

- 산업구조 전환은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明)'과 노동 집약·고탄소 산업의 정체·축소와 일자리 감소라는 '암(暗)' 공존
- 따라서,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노동자 등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21.7.22.)
-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지원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법안)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중
 - (인프라) 노동전환 지원센터 및 노동전환 분석센터 개소('22.1)를 위한 조직 및 기능 조율 등 행·재정적 준비
 - (모니터링) 부처간 협업체계 유지 및 상시적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기업·노동전환지원단('21.9.7)」 및 「노동전환 지원분과('21.9.15)」 출범
-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 부문 선제대응
 - 폐쇄가 예정('21.12월)된 호남 1·2호기 종사자들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하여 재취업·생계·주거대책이 포함된 지원방안 마련·추진

③ 향후 과제

- **(법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법률 제정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상향 등 여건 변화 및 지원방안 신설·보강 등의 내용을 반영한 「제1차 노동전환 기본계획」 수립
- **(예산)** 5개 부처*, 41개 사업, 총 1조 1,041억원 편성 확정시(정부안 기준)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현장 안착 노력 *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과기부
- **(인프라)** 노동전환 지원센터 및 노동전환 분석센터 활성화 지원
- **(추가과제)** 저탄소·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시장 여건 분석 및 지원방안 보완 발전

5. 청년인재 양성

1 추진 배경

- 우리 노동시장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계속되면서 청년 고용상황의 어려움 지속
 - *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 수요-공급 미스매치,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청년들의 쉼 생애소득·이력효과 등 고려한 취업준비 장기화 경향 등
- 특히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취업 준비기간이 장기화되고 구직 단념 청년들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이 가중

2 추진현황 및 성과

-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코로나19 이후 6차례 추경 편성 등 과감한 조치 시행
 - * 청년 일자리 대책('18.3),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19.7), 제1·2차 청년의삶 개선방안('20.3, '20.9), 청년의 삶 기본계획('20.12),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 청년특별대책('21.8)
- 코로나19 위기로 청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되기도 했지만, 적극적 지원을 통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
 - * '21.9월 고용률: 코로나 4차 유행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5.3%(2004년 이후 동월 기준 최고치)

3 향후 과제

- **(민간일자리 창출)** 디지털·그린 등 신산업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확대(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22) 신설 추진 등)
- **(인력양성)** 청년 대상 직무역량 강화 및 일경험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확산 지속
 - *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민·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직무훈련·일경험 기회 제공, 채용문화 개선 등 청년고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확산
 -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IT 등 신기술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기반의 SW 인재양성 대책」 마련, '25년까지 총 41.3만명의 SW 인재양성
 - 청년층이 선호하는 혁신훈련기관의 직업훈련 확대 등 제도 개선 병행
- **(인프라)** 채용트렌드 변화 적응 지원 등 고용서비스 강화

6.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① 추진 배경

- 산업구조 변화, 고용형태 다양화, 고령화 등으로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심화 우려 → 노동시장 공정성 제고 및 격차완화 노력 지속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직무평가 인프라 확대*, 임금정보제공 내실화**,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을 통한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 뒷받침
 - * 업종별 직무평가도구(11개, '21년 건설·조선), 활용 매뉴얼(8개), 활용 사례집 배포
 - **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규모·직종별 임금분포현황조사 실시('20년~)
 - *** 컨설팅 건수(건): ('17) 479→('18) 406→('19) 612→('20) 659→('21) 696
- 공무원의 공정한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논의 中 (공무직위원회)
-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한 대-중소 격차 해소 노력(공정거래질서 확립 연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22.4월~) 등
 - * 공동근로복지기금 수: ('17) 17개 → ('20) 182개, 10배 이상 증가

③ 향후 과제

- **(공정 임금체계 확산)** 직무평가 및 임금정보 인프라 지속 확대* 및 활용도 제고, 표준직무·임금체계** 발굴·확산(공공부문, 사회복지 분야 등)
 - ※ (기본원칙)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부합
 - * (직무평가) 업종 지속 추가, 업종별 매뉴얼 활용 사례 지속 발굴·기존매뉴얼 보완 등 (임금정보) 임금분포현황조사 내실화(표본확대, 항목세분화 등), 임금공시제 검토 등
 - ** 특정업종 대표 직무(key jobs)를 분석·표준화 → 개별기업 직무분석(범용모델) 활용
- **(중소기업 퇴직연금 보장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22.4월~) 차질없는 안착, 퇴직연금 의무화 및 특고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방안 검토
- **(원-하청 상생 거버넌스 확대)**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공동훈련센터, 일터혁신 등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 노사협의회 등 거버넌스 확대방안 검토

7.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혁신

1 추진 배경

-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 지속 추진

* 사고사망자(명)/사고사망만인율(‰): ('17) 964(0.52) → <목표> ('22) 505(0.27)

2 추진현황 및 성과

- 원청 책임확대 등 산안법 전부개정('20.1월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2.1월 시행)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재정지원 확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연계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컨설팅 지원 등

- '21년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21.7.1.) 등 인프라 강화

- 산재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20년은 소폭 증가(+27명)

* 다만, 사고사망만인율(‰)은 0.5 초·중반에서 '19년 0.4대로 진입, 지속적인 감소 추세



3 향후 과제

-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 혁신)** 현장 위험요인 중심 점검·감독 지속 강화
 - 민간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 안전공단 패트롤 점검 시,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 → 행·사법조치 확행
 - 중대재해 심층분석, 산재예방 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 → 안전관리체계 진단 등 예방 목적의 점검·감독 실시
- **(산재예방 지원 대폭 확대)**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집중 투입·지원
 - 중소·중견기업까지 클린사업장(안전투자혁신사업)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재정·기술지원 사업장 범위 확대((예) 現: 50인 미만 → 改: 300인 미만)

- 소규모건설현장 안전장치·시스템 비계 지원, 제조업 위험기계·기구, 위험공정 개선 등 지원 수준 강화
-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혁신)** 산업안전보건 정책연구, 교육, 감독 및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강화 추진
 - 現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기능·조직 등을 확대 → 중대재해 감독·수사 역량 강화 및 재해예방 조직의 기능 확충 추진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술·공학·의학적 연구 및 정책·제도 연구 강화, 산재예방을 위한 근로자·사업주 등 교육 혁신 추진(체험형, IT 융합 등 확대)

《 신규 추진 필요과제 》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익 확대 및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① 추진 배경

- **(고용형태 다양화)** 근로자-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있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 확대에 따라 기본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 「플랫폼종사자 보호방안」 마련('20.12월),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적 보호 강화 노력
- **(기존 노동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되고 있어 기본권익 보호 강화 요구 확대
 - * (적용제외 조항) 해고관련, 연차휴가, 근로시간, 휴업수당, 공휴일, 괴롭힘 등

② 주요 내용

- **(특고·플랫폼종사자 보호)**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제정 추진('21.5월 발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한 기본권익 보호 강화
 - * **(주요내용)** 플랫폼 종사자의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 및 기본적 권익 보호를 위해 서면 계약 체결, 일감배정 정보 제공, 안전·건강 조치 등 플랫폼 기업 및 소속업체의 책임 규정
 -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기본권익 보호 및 이익대변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추가 지원방안 모색·추진
-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논의 및 국민적 공감대(영세사업주 부담 등 고려) 등을 토대로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 방안 검토·추진
 - *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실태조사 진행 중('20.10~'21.10)

여성가족부

1.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

① 추진 배경

- **(성평등 사회 실현)**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과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위해 성차별 구조와 문화의 근본적 개선 필요
- **(여성 일자리 기반)** 고용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OECD 및 남성과의 격차가 큰 상황, 특히 의사결정 권한 직위로의 여성 진출은 저조
※ '19년 기준 남녀 임금격차(OECD data) : 32.5% (OECD 평균 12.5%)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중앙·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8개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19.5월)로 관련 영역의 정책개선
*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대검찰청, 경찰청
 - 지역양성평등센터* 설치, 여성친화도시** 확대로 지역 추진기반 강화
* 지역양성평등센터(~'21년, 5개소), 여성친화도시 : ('17년) 86개 → ('20년) 96개
- **(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 법령·사업·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정책개선 이행률 : ('19년) 41.7%(8,088건 중 3,373건) → ('20년) 44.7%(8,528건 중 3,811건)
- **(여성 대표성)**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18-'22)' 수립('17.11월) 및 이행점검으로, 주요 직위 여성 비율 20% 초과 달성('20년~)



- 협약 및 컨설팅 등 민간기업과의 협력,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 분석·발표('19년~) 등 인식개선 노력으로 기업 여성 임원 점진적 확대
*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 중 여성등기임원 선임기업('19년→'21년): 27개→85개(215%↑)(215%↑)

- **(여성 일자리)**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수립(‘21.3월)으로 점진적인 여성 고용 개선 및 여성일자리 체질 개선 기반 마련
- **(경력단절여성 지원)**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
 - 경력단절여성의 일경험과 정규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 지원대상 확대*** 및 장기 고용 유도를 위해 ‘**새일고용장려금**’ 신설
 - * 새일여성인턴지원 대상 : (‘17년) 6천명 → (‘21년) 10천명

③ 향후 과제

- **(OECD 수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노동시장 전반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 임금·임원 등 ‘**성평등 현황 공시**’ 개선 추진(‘22년~)*
 - * (가칭) 「성평등 현황 공시 및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가칭)성별격차 해소 움부즈만’을 신설, ‘차별신문고’ 운영(‘25년~) 검토
 - 민간부문 성별다양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및 청년여성 등의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진출을 위한 통합 지원 강화
- **(일하는 여성의 고용유지 기반 마련)** 공공·민간 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플랫폼 구축, ‘(가칭)여성경제활동진흥원*’ 설립 추진
 - *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수립, 훈련콘텐츠 개발·보급, 새일센터 서비스 평가 등 실시
-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양성평등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여성정책국을 양성평등정책실로 확대·개편 추진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제도를 총괄하는 성주류화 정책국 및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산하에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신설 검토
- **(양성평등 환경 조성)** 2030청년 주도의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 활성화 및 중앙·지역의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구성에 청년 포함 의무화
 - 국가기관 등 대상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추진(~’26), 지역 내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센터 확대 운영(5→17개소)
 - 공공기관 내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디지털 환경 대비 인공지능 윤리 준수를 위한 성평등 가이드라인 마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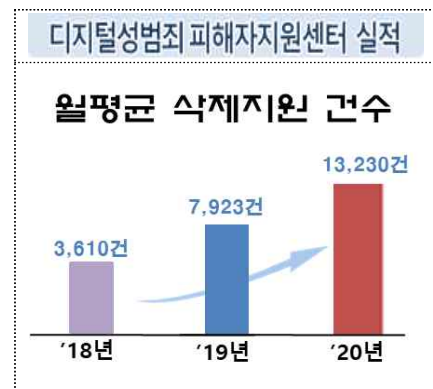
2. 성폭력 등 젠더폭력 근절

① 추진 배경

- **(젠더폭력 근절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분석 결과, 젠더 이슈 중 ‘여성폭력 안전’이 63%를 차지*하는 등 엄정 대응 및 지원 강화 요구
* 청와대 국민청원(‘17.8월~‘19.5월) 중 1만건 이상 동의 분석 결과(‘19.7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여성폭력)** 성폭력 등 개별법 중심 대응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 의무화(‘20년),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21년~) 등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17.9월, ‘20.4월)으로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및 양형기준 신설(‘20.12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18.4월~) 및 지역 특화 상담소(‘21년 7개소) 신규 운영 등을 통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지원 강화
 -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경찰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제도화,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 강화(‘21.9월~)
- **(성희롱·성폭력)** 미투 이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11차례), ‘성폭력방지법’(‘21.7월 시행)과 ‘양성평등기본법’(‘21.10월 시행) 개정*
*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의 여성가족부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중대 사건 현장점검 실시
 - 공공부문 2차 피해방지 지침 및 2차 가해 공무원 징계기준 마련(‘21년)
- **(스토킹)** 스토킹처벌법이 제정(‘21.4월)됨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원(‘21.4월~)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18.2월) 수립 : 1366-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상담 지원 및 1366 긴급피난처 일시보호(최대 30일) 지원



- **(가정폭력·성매매)** 가정폭력방지대책('18.11월) 기반, 처벌 강화('20.10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자립지원금 신설('19년~)
※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아닌 징역 부과,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법 체포 포함 등
-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21년 17개소)

③ 향후 과제

- **(디지털 성범죄 근절)** '(가칭)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응센터'를 통한 대응 강화 및 관련 법·제도 정비(단일 특별법 제정 검토 등) 추진(~'24년)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등을 통한 인식 개선, 지역 특화 상담소 확대(~'24년)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 디지털 성범죄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전국단위 실태조사 추진
- **(젠더폭력 대응 강화)**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법령 변경을 추진하여 사각지대 없는 대응체계 구축
 -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을 포함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22년), 여성폭력 통계 체계 공표('23년~) 등 통계 기반 체계 구축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력 강화 및 현장점검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사건 대응단' 운영 추진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인신매매방지법'시행('23.1월) 계기 인신매매 방지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추진
 - ※ 유엔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통합대응체계 마련 및 피해자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별 권익보호기관 신설 검토('23년~)
- **(아동·청소년 성문화센터 전국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시·군·구까지 설치 확대 추진
 - * 전국교육지원청(172개소) 별 1개소 설치하여 학교와의 협업 강화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회복)** 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 유산' 등재 추진 및 특수법인((가칭) '여성인권과 평화재단') 설치로 위안부 문제 조사·연구 및 기념사업의 체계적 아카이브화 추진('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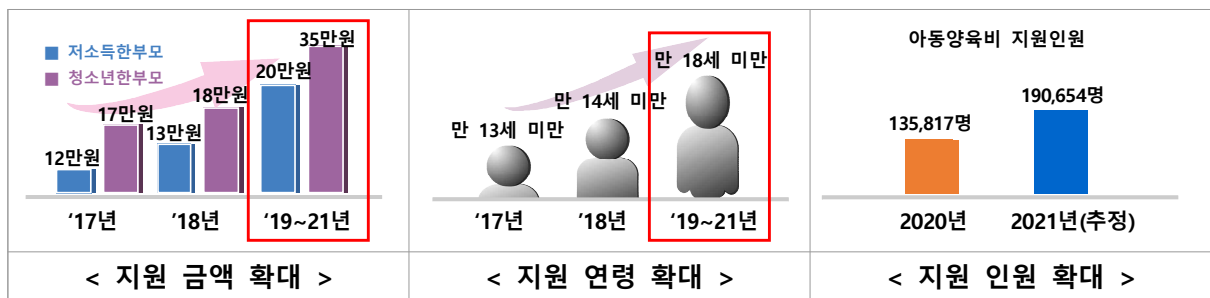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지원 확대

① 추진 배경

- **(가족 변화)** 가족형태와 가족생애 주기 다변화, 가족에 대한 인식 확장* 등 가족 가치관이 급변하고 있으나,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과 편견은 상존
* 혼인·혈연이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 동의 68.5% ('21년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다양한 가족 지원)** 다양한 가족의 자녀 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주거 등 자립 지원 강화(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1.4월 시행)



-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방안('19.11월), 다문화가족 포용 대책('20.12월),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 포용적 지원방안('21.12월) 마련으로 맞춤형 지원 강화
- **(보편적 가족정책 추진 기반)**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을 마련하고, 지역 기반의 통합적·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건강가정기본계획)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4차 기본계획(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21년~'25년) 수립
 - (가족센터 확대) 지역 단위에서 돌봄, 교육·상담 등의 가족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핵심 공간인 가족센터(생활SOC) 확대* 및 기능 강화
* (가족센터 건립 수) '17년 3개소 → '21년 96개소 → '22년 108개소(누적치)

- **(관련 법제 개선)**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양육비 이행 강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 '21.1월) 추진
 - * (개정내용)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 **(차별적 제도 개선)** 자녀 양육 의무 불이행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상속 제도(민법, 추진 중) 등 다양한 가족에게 차별적인 제도 개선 추진

③ 향후 과제

-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 * 특정 가족유형에 대한 정책적 차별·편견 유발할 수 있는 민법의 가족 범위 규정 개정, 돌봄 공동체 구성원 불편해소를 위한 법 제정
 - 가족유형에 따라 자녀를 차별 하는 제도* 발굴·정비
 - * 자택 출산·미혼부 자녀 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자녀姓결정방식 개선, 친자관계법령 정비 등
- **(가족센터 전국 확대)** 지역별 가족센터 확대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취약·위기가족 발굴, 가족문제 등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 다양한 가족서비스 연계 및 지역주민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추진
- **(1인가구 특별대책)** 1인가구 생활 기반별 특별대책 마련, 법·제도 정비와 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22년~)
 - * '1인가구 정책팀' 신설 검토 및 정보서비스시스템 포털 구축 추진
-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 한부모 가족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 강화('22년~)
 - *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 상설화, 양육비 이행지원 사무국 신설 등 검토
 - 소득기준 상향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근로소득 공제 도입, 청소년부모 사례관리('22년~)
- **(다문화 포용사회 실현)** ‘다문화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다문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다문화 영향평가, 차별금지 등 근거 마련
 - * 관련 연구, 교육 체계화를 위해 (가칭) ‘다문화사회통합지원재단’ 신설 검토
 - ‘이주배경청소년지원법’ 제정 추진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 성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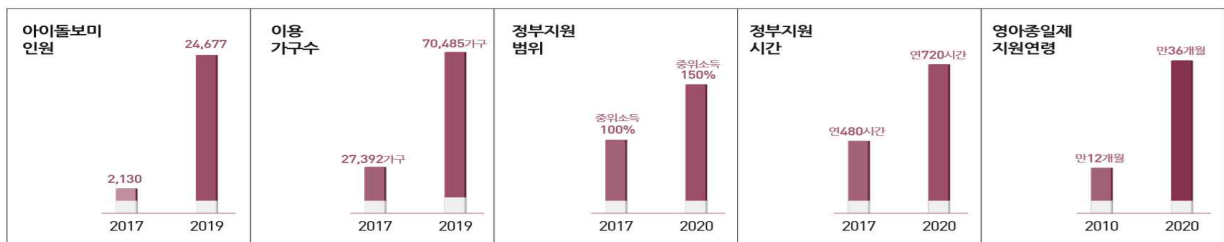
4. 촘촘한 돌봄 지원체계 구축

1 추진 배경

- **(돌봄 부담 증가)** 가족의 돌봄·부양 기능 약화, 돌봄 부담의 여성 회귀 및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 가중
- **(다양한 돌봄 수요 증가)** 다양한 가족의 생활 형태 및 감염병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유연한 돌봄 수요 증대

2 추진현황 및 성과

- **(지역의 돌봄 친화적 문화 조성)** 지역의 돌봄 친화적 문화 조성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확대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확대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수 : ('17) 160개 → ('19) 279개 → ('20) 331개
- **(아이돌봄 지원 강화)**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연령 및 지원시간 확대



3 향후 과제

- **(촘촘한 초등돌봄 체계 구축)** 마을 단위 초등 돌봄 공간 확충 및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 특화 시설 운영 등 초등돌봄 지원체계 강화*(~'26년)
* 예 : 공동육아나눔터 (가칭)'초등돌봄나눔터' 설치, 가족센터 중심의 돌봄 플랫폼 구축 추진
-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돌보미 처우개선 및 자격관리 강화 추진('22년~)
 - * 아이돌봄시스템 고도화 및 육아도우미 신원정보 DB 구축, 아이돌봄 전담조직(아이돌봄지원과) 및 '아이돌봄관리원' 신설 검토
- **(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 육아휴직 급여 상향, 중소기업 등의 육아휴직 사용 여건 조성을 통한 일하는 부모의 돌봄권 보장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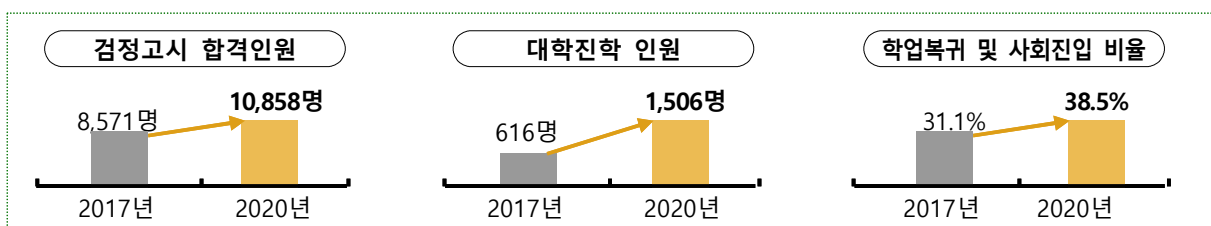
5.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① 추진 배경

- **(위기·학교밖청소년)** 가출·자살·폭력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지속 증가,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학업중단 청소년 수는 증가**
 -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청소년 자살률 및 10~20대의 자해·자살 시도건수 또한 지속 증가
 - * 청소년(9~24세) 사망원인(10만명당): 자살(9.9명), 안전사고(4.1명), 암(2.6명)順(2021 청소년통계)
- **(유해환경)** 디지털 환경의 보편화로 인한 **신종 청소년 유해환경** 출현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위협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사회안전망)** 청소년 사회안전망 공공성 강화 및 상담·복지 지원 강화
 - (지원체계 개선)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지원하는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구축
 - *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 ('19년) 5개소(시범) → ('20년) 9개소 → ('21년) 14개소
 - (자립 지원) 쉼터 입소 청소년 자립활동비, 퇴소 시 자립지원수당 신설('21년)
 - (여성청소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바우처 방식을 도입('19년)하여 청소년의 선택권과 편의성 증대('21년 약 11만 명 지원)
- **(학교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및 차별 개선
 - (차별 개선) 건강검진 확진검사('18년) 및 무상급식 도입('20년), 청소년 생활기록부 도입('20년), 장학지원('21년) 등 학생과 차별이 없도록 개선
 - (정보 연계)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추진('21.9.24.시행)



○ **(유해환경)** 청소년 매체이용환경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온라인 유해환경)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20.9월) 및 온라인 매체의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 강화
- (근로권익 보호)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해소 등을 위한 청소년근로 보호센터 확대('17년 1개 → '20년 5개 권역) 및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실시

3 향후 과제

○ **(학교밖청소년 보호)** 학교밖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전용공간 및 온라인 공간* 확충

* 꿈드림센터(가칭 '스마트꿈드림') 앱, 온라인 교육 플랫폼(가칭 '꿈드림 월드') 등

-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청소년 자살 예방)** 위기청소년 발굴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청소년 상담 1388' 운영체계 개선

* 통합콜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전화, 문자, 사이버 상담 통합운영

- 자살·자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강화 및 은둔형 청소년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

* 시·도별 자살·자해 중점 센터 지정(집중심리클리닉)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및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위기청소년 발굴·정보 공유 및 청소년 중심 서비스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21~'23년)

○ **(가정밖청소년 자립지원)**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 확대(연도별 10개소 이상) 및 운영 개선

- 가정밖 청소년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강화, 자산형성 지원, 자립지원 수당 인상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설 추진

○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치유 사업 확대('22년~), '(가칭)청소년보호환경재단' 설립으로 유해매체 차단 및 청소년 보호 강화(~'26년),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및 차별 철폐를 위한 교육·상담 강화

6.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강화

1 추진 배경

- **(청소년 활동)** 청소년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자기 주도적 활동 및 국제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2 추진현황 및 성과

- **(청소년 참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 확대('17년 189개소 → '20년 234개소) 및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처음으로 청소년위원(6명) 위촉('20년)
- **(국제역량)**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17.8월) 및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최초 개최('20년)

3 향후 과제

- **(미래청소년이 여는 녹색성장 실현)** 2050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소년 체험활동·참여·교육 지원 강화
 - * 탄소중립 관련 정책제안을 위한 청소년 서밋 등 개최
- 청소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각종 위원회(부처, 지자체)에 '청소년 위원' 위촉 의무화
- 지자체 주민참여 예산제에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우수모델 확산
- **(내 꿈 찾기 바우처 지원)** 13~18세 청소년에게 '내 꿈 찾기 바우처' 지급, 갭이어(Gap Year) 등 청소년의 진로탐색·체험 기회 확대
 - 전 세계 국가들과 청소년 교류약정 체결을 추진하여 국제역량 강화
 - 시·공간 제약 없는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해 '(가칭) 온라인 가상 청소년센터' 구축 추진
- **(2023 잼버리)**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전북 새만금) 성공 개최('23년)
 - *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개최 시 스카우트 대원뿐만 아니라 국내 청소년들도 활발히 참여토록 1일 체험 지원 추진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 소득 보장

① 추진 배경

- **보훈보상금 최고액**(상이 1급1항)은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어, 현재 선진국에 비견되는 수준 달성
 - ※ ('21. 기준 최고액) 미국 372.3만원 > 우리나라 316.5만원 > 캐나다 281.1만원
- 그러나 수급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7급 상이, 참전·무공수당 등은 월 50만원 미만에 그쳐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
 - 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 등이 박탈되는 사례도 발생
 - ※ 「유공자 수당 인상, 저소득층엔 생색내기용」(KBS, '19. 3.)
 - 「기초수급자 유공자 보훈급여 있으나 마나」(KBS, '16. 9.)
 - 유공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소득보장체계 구현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보상금)**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연평균 약 4% 수준 인상으로 보훈대상자의 실질소득 강화
 - ※ (보상금 인상률) '18. 5% → '19. 3.5% → '20. 5%
 - (물가상승률) '18. 1.5% → '19. 0.4% → '20. 0.5%
- **(참전·무공수당)** '00년대 5만원 수준의 소액으로 시작하였으나,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 고령 참전유공자 가구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정착
 - ※ ('18. 생활실태조사) 참전유공자 가구소득 중 보훈급여 비중 18.9%(공적이전소득의 44%)
 - 특히 '18년도에는 참전·무공수당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8만원)
 - ※ (참전) '17. 22만원 → '18. 30만원 / (무공) '17. 28~30만원 → '18. 36~38만원
- **(전상수당)** 20년 이상 2만원 내외에 머물러 있던 전상수당을 4배로 인상
 - ※ '10. 1.9만원 → '20년 2.3만원 → '21년 9만원

- **(생계지원)** 생활이 어려워도 금전적 지원이 미비한 보훈 사각지대 해소
 -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유가족 대상 생활지원금 도입('18.)
 - ※ (지원규모) '18. 1. 3,007명 → '21. 10. 20,324명(↑576%) / 연 729억원
 -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5.18·특임·참전·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생계지원금 신설('21. 8.)
 -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 일부 공제 추진 중
 - ※ 관련 법안 5건 국회 계류 중(박완수 의원 등) / '21. 10. 부처 협의 완료
- **(취업·대부지원)** 보훈가족의 자립을 돕는 취업·대부지원제도 개선
 - 국가기관 등 특별채용 비율 상향('20. 15% → '21. 16% → '22. 17%)
 - 보훈대부 이용자의 담보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보험제 도입('18.)
 - 독립유공자 생계곤란 자녀 대부지원 확대*('19.), '13년도 이후 8년간 동결되었던 대부 한도액 인상**('21.)
 - * (기존) 독립유공자 유족 중 1명으로 한정 → (개선) 중위소득 70% 이하 자녀 전체
 - ** 주택대부 6,000만원 → 8,000만원, 농토구입대부 2,500만원 → 3,000만원 등

③ 향후 과제

- **(보상격차 개선)** 보훈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수급액이 가장 적은 참전·무공·4.19수당 및 7급 상이 보상금 등의 집중 인상 추진
 -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수준으로 보상금 인상 기준(준거지표)도 개선
 - ※ (현행) 생활이 가능한 최저소득 → (개선)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충분한 소득
- **(참전배우자 생활보조금)** 참전유공자 사후 생계 곤란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 지급 추진 → 참전수당 중단에 따른 소득 단절 충격 방지
- **(보훈안전망 강화)** 국가유공자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
 -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 ※ 기초생계급여(복지부),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보훈처) 등은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보훈급여로 인해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 제도 수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2.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등 복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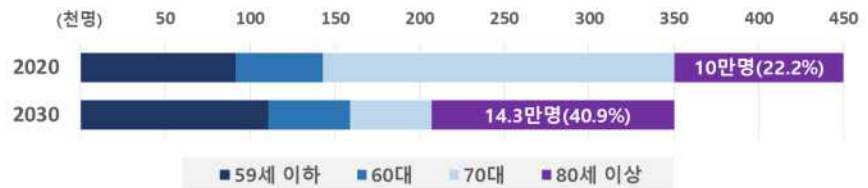
1 추진 배경

- 보훈대상자는 일반국민보다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 향후 10년간 의료·요양 등 복지 수요가 집중된 80대 이상 보훈대상자가 4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인구 구조 비교('20.) 》



《 보훈대상자 본인 인구 구조 변화 추계 》



- 특히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는 국가책임의 측면에서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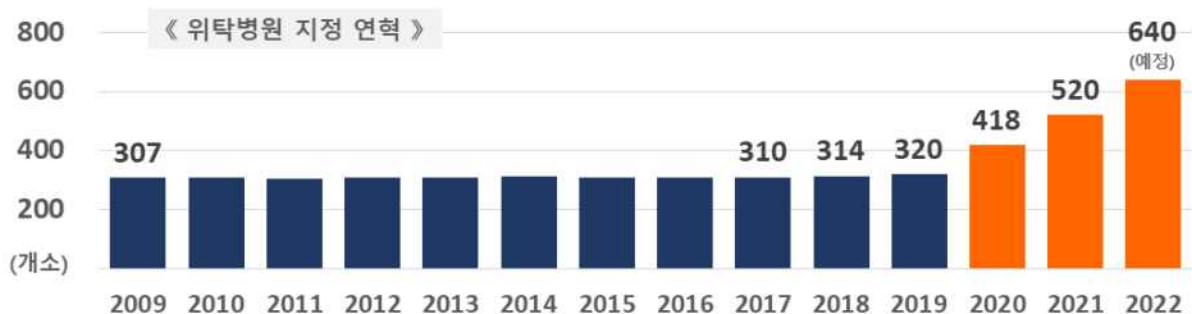
2 추진현황 및 성과

- **(감면율 상향)**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감면율 13년 만에 90%로 대폭 확대('18.)
 - ※ (감면율) '05.~'17. 60% → '18. 90%
 - (효과) 1인당 평균 의료지원액 2배 이상 증가(↑125%)

《 1인당 평균 의료지원액 》



- **(위탁병원 확대)** 300개 내외였던 위탁병원을 농·어촌 등 의료 소외 지역 중심으로 200개 이상 대폭 확대하여 의료 안전망 강화



※ 위탁병원 약제비 '22. 정부 예산안 반영

- **(보훈의료·요양 인프라 확충)**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진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인프라 확충 추진
 -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건립('21. 부산·광주),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23. 완공)

- 수도권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보훈병원 건립('18.), 종합병원급 시설로 인프라 확충 추진 중*
- * 병상 수 확충(137→260), 응급실·외래진료실·수술실·해부병리실 신축 등
- 원주보훈요양원 개원('20.), 전북권 보훈요양원 및 광주·부산 요양병원 건립 중

	전북권 보훈요양원	광주요양병원	부산요양병원
사업기간	2018. ~ 2022. 연내	2019. 3. ~ 2021. 연내	2019. 3. ~ 2022. 연내
규모	200병상	120병상	180병상
총 사업비	356억원	214억원	418억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인천보훈병원



원주보훈요양원

③ 향후 과제

- **(요양인프라 확충)** 유공자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요양 인프라 대폭 확충
 - 전국 5개 대도시에서 권역별 보훈요양병원 완비
 - ※ 서울, 부산(건립 중), 광주(건립 중) + 대구·대전보훈요양병원(신규 건립)
 - 요양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보훈요양원 대폭 확충 추진
 - ※ ('20. 12.) 70세 이상 보훈대상자 본인 중 46.5%(13.7만명)가 서울·경기·인천 거주
- **(위탁병원 제도 개선)** 고령 국가유공자의 만성질환 등 건강 관리를 돕는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
 - 폭넓은 의료 선택권 제공을 위하여 1차 의료기관의 위탁병원 지정제 폐지 추진
 - 참전유공자 등 감면진료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완화 추진
 - ※ (현행) 전액 국비진료자: 제한 없음 / 감면진료자: 75세 이상만 위탁병원 이용 가능
- **(장애인 복지 연계)** 상이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복지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추진
 - ※ 상이등급과 장애인 등록 기준 차이 및 등록 절차 조정, 원스톱 등록 체계 등
- **(이동권 보장 확대)** 보철용 차량 배기량 제한 폐지 및 보훈보상자까지 대상 확대, 택시비·주유비 교통바우처 등 일상적 교통비 지원 방안 마련

3. 국가유공자 장례·안장 서비스 강화

① 추진 배경

- 고령화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기 안장자의 50%에 달하는 약 16.4만명이 10년 내에 사망할 전망
 - 특히 안장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참전유공자는 10년 내 6·25가 94%, 월남은 39% 사망 예상
- ※ (6·25참전유공자) '20. 77,141명 → '30. 4,754명(△93.8%)
(월남참전유공자) '20. 190,761명 → '30. 116,882명(△38.7%)
- 애국 역사의 주역에게 마지막까지 최고의 장례·안장 서비스로 예우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사망 시 예우)** 유공자에게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장례와 의전 관련 다양한 서비스 신설('18.)
 - 장례의 품격을 높이는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개시
 - 국립묘지 의전단 신설로 안장 시 영현 봉송 및 안치 등 의전 서비스 확대
 - ※ 코로나19로 인한 국립묘지 운영 중지 기간에도 의전단의 묘소 헌화 및 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 제공
 -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장례지도서·물품, 차량 등) 제공*
 - * ('18. 신설 ~ '20.) 3년간 1,545명 25.2억원 지원
→ ('21.)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대상 확대
- **(국가관리묘역)** 전국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21.), 체계적인 관리 실시
 - ※ ('21. 10.) 서울 수유, 안성 사곡, 거제 일운 등 전국 7개 묘역(안장기수 총 403기) 지정
- **(생전안장심의제 도입)** 생전안장심의제* 도입('19.)으로 유공자 사후 심의로 인한 안장 지연 등 유가족의 불편 해소 및 예측가능성 부여
 - *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유공자 생전에 미리 심사

〈 대통령 명의 근조기 〉



- **(안장시설 확충)** 국립묘지 대폭 확충으로 급증하는 안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약 25만기)
 - **(조성)** 국립괴산호국원 개원('19. 10. / 2만기), 제주국립묘지('21. 12. / 1만기) 국립연천현충원(~'25. / 5만기)
 - **(확충)**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21. 5. / 4.9만기), 그 외 호국원 및 4·19민주묘지 확충 설계 중*
- * 이천 5만기, 괴산 2만기, 임실 2만기, 영천 2.5만기, 4·19민주묘지 600기



국립연천현충원



국립제주호국원



대전현충원 봉안당



이천호국원 봉안당

-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최고의 예우로 유해를 봉환,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 ※ ('00. ~ '21.)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총 75위 / ('21.)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③ 향후 과제

- **(국립묘지 확충)** 만장이 예상되는 국립묘지 사전 확충 및 기존 안장시설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신규 국립묘지 건립 추진
 - **(산청호국원 확충)** '23년 만장에 대비한 사업 착수 필요(사업기간 최소 2년)
 - **(강원권 국립묘지 신설)** 강원 및 인접 수도권 안장 수요에 대응
- **(국립묘지 관리체계 개편)** 서울현충원을 포함한 전국 13개 국립묘지 및 국가관리묘역 등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국립묘지본부 신설 등)
 - ※ (현행) 국립묘지의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는 10년 이상 정체
 - ('09. 국립묘지정책과 신설) 8개소 31.9만기 → ('25.) 13개소 61만기(↑91%)
 - (서울현충원) 별도 안장 체계 운영으로 비효율성 초래(연 평균 민원 이첩 251건)
- **(국립묘지 외 안장 지원)** 접근성 등을 이유로 국립묘지가 아닌 사설 묘지 등에 안장 시, 지원 대폭 강화 추진
 - ※ (현행) 소액의 장제비·묘비제작비 외에 지원 미비
 - (개선) 묘소단장비·봉안시설 이용료, 공설묘지와 연계한 근접 안장 서비스 제공

4. 보훈문화 조성

① 추진 배경

- 우리나라 보훈은 외국(제대군인부만 존재)과 달리 독립·호국·민주의 국가 정체성을 계승하는 고유한 상징기능으로 발전
- 그러나 독립·호국·민주 역사의 주역들은 10년 내 대부분이 사망*하고 유공자와 미래세대 간의 단절이 심화되며,
 - * (독립/6·25/민주) '20. 8.1만명 → '30. 0.8만명(△90.2%)
(월남) '20. 19.1만명 → '30. 11.7만명(△38.8%)
 - 유공자 본인을 중심으로 한 국가 주도의 선양 효과는 점차 감소 예상
- 국민 스스로 역사를 기억하고 보훈의 가치를 실천하는 「보훈문화」 조성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국가유공자 명패)** 국가유공자 35만 가구에 품격 있는 명패를 보급, 이웃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
 - ※ ('19. ~ '20.) 348,019명 / ('21. 1. ~ 9.) 92,982명(유족까지 대상 확대)



기관장 참여 명패 달아드리기



학생 참여 명패 달아드리기



군인 참여 명패 달아드리기

- **(학교보훈교육)** 미래세대로 보훈정신을 계승하는 학교보훈교육 활성화
 - 교육부 협업 **보훈 교과서 「나라사랑과 보훈」** 개발
 - ※ 교육부 예산 지원(4천만원), '22. 교육과정에 적용(경기 문산 수억고 등 희망교)
 - 보훈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원대 학교보훈교육센터** 설립('21. 2)
- **(국제보훈사업)** UN참전용사명예선양법 제정('20.), 22개국 현지 위로 행사와 방역 마스크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
 - ※ 재방한 초청 행사 22회 1,703명 / 현지 위로연 45,000명 / 방역마스크 300만장 지원

- **(보훈기념시설)** 애국의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기념시설 건립 및 국외 사적지 관리·지원 강화
 - (국내) 호남호국기념관 개관('20. 11.), 임시정부기념관 개관('22.), 세종 국가보훈광장('22.) 등
 - (국외) 카자흐스탄 홍범도 묘역 복원('21.), 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2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세종 국가보훈광장



추모의 벽 착공식

- (법령) 국내외 보훈기념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훈기념시설법」 제정 추진('20. 12. 발의)
 - ※ 기존 「현충시설」에서 제외되었던 민주 분야 기념시설도 포함

③ 향후 과제

- **(보훈문화 확산)** 정부 주도의 선양에서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통한 보훈문화로 전환하는 체계 마련
 - ※ 보훈문화진흥법 제정, 민간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 등
- **(독립운동사의 문화유산화)** 국내·외 독립운동사 연구 컨트롤 타워 구축 방안 마련, 독립운동사를 세계사적 문화유산으로 발전
 - ※ 국사편찬위원회·국가기록원·독립기념관 등에 산재한 독립운동 사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독립운동사 전담 연구기관 신설 등
- **(보훈기념시설 관리 강화)** 역사의 현장이자 보훈문화 확산의 거점이 되는 국내·외 보훈기념시설 관리 및 지원 강화
 - 지자체 소유 기념관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 관리 방안 마련
 - 보훈기념시설이 많은 중국·미국·러시아에 현지 조사·관리 협조망 구축
- **(미래로 이어지는 국제보훈)** 보훈으로 맺어진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발전하는 국제보훈사업 강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 확보
 - ※ 참전용사 후손과 유엔사 전역장병까지 초청 대상 확대, 참전국 초·중·고 역사교사 네트워크 구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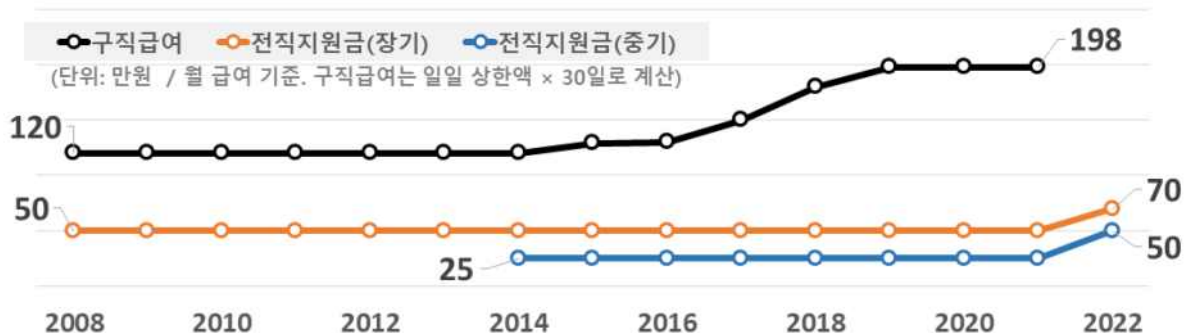
5. 제대군인 등 사회복귀 지원

① 추진 배경

- **(의무복무)** 군 복무가 당연시되지 않는 시대 도래, 국가 안보를 위한 개인의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해 사회적 보상 필요성 대두
 ※ ('19.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의무복무로 인한 개인당 경제 손실 4,047만원
 ('20. 제대군인 인식도 조사) 의무복무자 사회복귀 지원 필요 긍정 61.6% > 부정 6.7%
- **(직업군인)** 국가가 고용하였음에도 인력구조상 불가피하게 일찍 사회로 배출 → 취약한 경쟁력으로 전역 후 수년간 실업 경험
 ※ (제대군인 취업률) 전역 1년차 43.6% → 3년차 60.4% / 일반 국민 30~40대 고용률 77%
- **(경찰·소방)**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 하였으나, 공무상 상병이 없는 한 보훈 혜택은 미비한 실정

② 추진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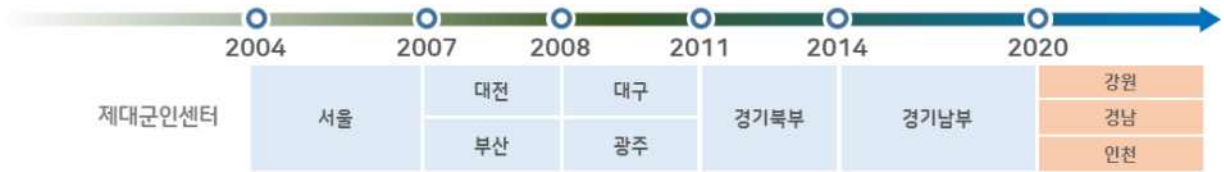
- **(전직지원금 인상 추진)** 제도 도입 이래 13년째 동결되었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추진 중('22. 정부 예산안: 중기 25→50만원, 장기 50→70만원)



※ (장기) 10년 이상 복무 / (중기)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

- **(의무복무자 취업·의료지원)** 의무복무자 취업지원 시범사업 도입('18.), 중증·난치성 질환 의료지원 확대
 - 취약계층 중심으로 취업지원 시범사업 추진, 점진적인 대상 확대 중
 ※ (지원 대상) '18. 취업맞춤특기병 → '19. 경상이자·모범장병 → '20. 전투경력자 (취업 실적) '19. 148명 / '20. 189명 취업
 - 의무복무 중 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도 위탁병원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허용
 ※ ('19.) 보훈병원만 이용 가능 → ('20.) 보훈병원 + 위탁병원 전체('21. 기준 520개소)

- **(취업지원 강화)** 강원 등 3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신규 개소(7개→10개), 연 7천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일자리 제공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 법제화('21. 6. 제대군인법 개정 완료), 제대군인 고용과 인재 육성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유도

③ 향후 과제

- **(의무복무자 지원 강화)** 의무복무자가 전역 후 아무런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전역 후 학업·직업훈련 등에 사용 가능한 역량개발비 지원
 - 호봉 및 승진심사 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의무화 추진
 - ※ (현행) 호봉·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 포함 가능
 - (개선) 호봉·임금 결정, 승진심사, 경력평가 시 군 복무기간 포함 의무화
- **(등급 외 상이자)** 공무상 상이를 입었으나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이자에게도 합당한 지원 방안 마련
 - (현행) 기준 미달 시 등록 불가, 상이처 한정 의료지원만 실시
 - (개선) 「등급 외 상이자(가칭)」로 등록, 일시금과 교육지원 등 일부 보훈혜택 제공 검토
- **(전직지원금 현실화)** 현역 복무 중 급여액과 민간 실업급여 금액 등을 고려하여 재취직 기간 생활안정을 돕는 현실적인 수준까지 인상 추진
- **(경찰·소방 지원 강화)** 장기복무 소방·경찰관도 제대군인에 준하여 보훈병원 감면진료, 취업·안장 등 보훈복지 서비스 제공 추진
- **(제대군인커뮤니티센터)** 제대군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사회 공헌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플랫폼 구축
 - ※ 의료·건강(체육), 법률·심리상담, 사회적응교육 등 실시
 - (유사 사례) 보훈회관,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체계 마련

① 추진배경

-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개인정보 법제 선진화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디지털 정보주권 강화)** 정보주체의 적극적·능동적 정보통제권 강화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공공 등 한정된 분야에 도입된 마이데이터를 **쏠 분야**로 확산
 - AI 등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 설명요구 등 **적극적 대응권** 보장
 - ‘동의 만능주의’ 관행 개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등 보호수준 제고
- **(규제합리화)** 이원화된 규제정비 및 신기술 성장기반 마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를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동일행위 - 동일규제**’ 원칙 적용
 -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안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 **(글로벌 정합성 확보)** 국외이전 규정 및 제재체계 정비
 - 국외이전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하고,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법 준수와 책임성 확보
 - ※ EU GDPR 적정성 관련, 초기 결정(21.3월) 및 EU 이사회 의견수렴 완료(21.10월)로 연내 최종 승인 추진
-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조성)** 자율규제 활성화 및 피해구제 강화
 - 민간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는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권리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강화

③ 향후 과제

- 국회 제출된 정부안(21.9.)과 관련 의원 발의안을 병합, 조속한 통과 추진
- 정보주체 권리 강화, 불합리한 규제 해소, 쏠 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등 보호와 활용의 균형 있는 규율을 통해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가속화

2. 코로나19 개인정보 보호 강화

① 추진 배경

- 코로나19 방역 대응 위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증가로 국민 우려 증대
- 신기술 확산 및 디지털 전환으로 온라인 상 개인정보 처리 급증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지속 발생에 따라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5대 분야 관리 실태 점검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코로나19 실태점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방역당국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
 - 개인안심번호 도입('21.2.), 수기명부 개선 등 보호 조치 강화
 - 방역당국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8개)상 보호 실태 점검('20.11월, '21.5월 등)
 -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정기 점검('20.8월 이후 매월, 243개 지자체 대상)
- **(민간분야 실태점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택배, 열린시장(오픈마켓), 배달앱 등 민간분야 실태점검 추진
 -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9개사) 보호 실태조사 및 위반사업자 제재('21.6월)
 - 주요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중('21.6~12월)
 - 택배사 대상 '운송장 개인정보 자율보호 방안' 협의(간담회, '21.8월)
- **(공공분야 실태점검)** 홈페이지, 지자체, 의료·복지·고용·부동산 분야 중점 점검
 - 홈페이지 분야 20개 기관 조사·처분('21.9월), 지자체(20개) 현장점검('21.9월)
 - 의료·복지·고용·부동산 분야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계획 수립('21.9월)

▶ 출범 후 총 251건(공공 50건, 민간 201건) 처분, 시정명령·권고 216건, 과징금 및 과태료 146억원 부과

③ 향후 과제

-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 관리 등 질병청 등과 합동 지속 점검
- **(민간·공공분야)** 온라인 분야 중점 점검으로 침해 예방 및 안전한 활용 기반 조성, 공공기관 보호실태 지속 점검으로 안전한 처리 유도

3.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① 추진 배경

- 데이터 경제 시대 도래, 디지털 신기술 환경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 도입(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0.8월)
- AI·빅데이터 등 新서비스 등장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위험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가명정보)** 가명정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5대 분야 7대 시범사례 등을 통해 활용성과 공유 및 인식 제고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및 고시 정비('20.10월),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 구축('20.11월),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21.7월)
 - 결합전문기관 21개소 지정('21.10월), 일반·금융분야 120건 결합 추진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 중
 -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 결합기간 단축(40일→20일) 등 제도개선('21.10월)
- **(개인정보 보호 신기술)**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민생활 밀접형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지원
 - 「AI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및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21.5~9월)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3개 분야 11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R&D 로드맵('22~'26)」 준비 중('21.3월~)
 - 개인정보 보호 신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1.3월) 및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발굴·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챌린지 개최('21.6~7월)

③ 향후 과제

- **(가명정보 활용 확산)** 2기 결합 시범사례 추진, 가명정보 활용 지원 종합플랫폼 및 권역별 지원센터 구축 등 인프라 확충으로 활용 본격 확산
- **(신기술 보호기준 마련)** 「R&D 로드맵 마련 추진('22~'26)」, 스마트도시 유무인자동차(자율주행차, 드론 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 마련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 신규 추진 필요과제 》

디지털 시대 국민의 권리강화

① 추진 배경

-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특히, 소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 심화에 대응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정보통제권 확대 필요
-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사회화로 정보주체로서 인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 노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 증가

② 주요 내용

- **(마이데이터 활성화)**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가치있는 활용을 위한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을 위해 제도 및 서비스 기반 구축
 -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 분야에 걸친 정보주체의 정보통제권 강화
 - 금융, 의료, 교육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플랫폼 구축
 -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종합적인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 추진
- **(디지털 취약계층 개인정보보호 강화)** 취약계층(아동·청소년, 노년층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
 - 디지털 취약계층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연령대별·상황별 보호 수칙 교육·홍보 강화*
 -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내용 확대 반영, 찾아가는 교육 등 확대
 -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 확대,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보완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1. 코로나19 대응 의료제품 적기 공급

① 추진 배경

- **(적기 공급)** 진단검사·예방접종 등을 통한 적기 방역 대응을 위해,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하는 신속한 백신·치료제·진단키트 등 공급 필요
- **(개발 지원)** 국내 백신·치료제의 개발기간 단축, 조속한 임상 진입을 위해, 개발 경험 부족, 임상참여자 확보 곤란 등 장애요인* 해소 필요
 - * 국내 백신 개발사 다수가 허가 신청 및 대량생산 경험이 부족한 벤처형 회사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임상 설계·품질관리 등 지원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위기대응 체계 구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 제정*(21.3.9) 및 백신·치료제·진단키트 등 방역 의료제품 신속 허가·심사 체계 구축**
 - *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신속심사, 긴급사용승인 등을 통한 신속 공급
 - ** 허가 전 사전상담, 신속심사 지원과 신속출하승인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확대
- **(신속 허가)** 백신·치료제 신속 허가·심사, 국가출하승인(백신 품질검정) 및 국외 도입 백신 긴급사용승인 등 적기도입* 지원
 - * 심사기간을 기존 **180일 → 40일**로 단축

- (허가) 코로나19 백신 4품목, 치료제 2품목 허가

분류	제 품
백신	▲아스트라제네카(21.2.10) ▲화이자(21.3.5) ▲얀센(21.4.7) ▲모더나(21.5.21)
치료제	▲길리어드 렘데시비르(20.7.24) ▲셀트리온 항체치료제(21.2.5)

- (국가출하승인) '21.2월부터 약 8,124만회분 승인* 완료(21.10 기준)

* 소요기간 20일 이내(통상 2~3개월 소요)로 단축

- (긴급사용승인) 국외 제품*의 국내 사용을 위한 약 712만회분 승인(21.10 기준)

* 외국정부(미·영·이스라엘·루마니아) 공여·스왑프 백신의 적기 공급 가능

- **(제품화 기술지원)** 방역 필수 의료제품 개발, 품질확보 등을 위한 제품·회사별 1:1 맞춤형 규제·기술지원 실시
 - (임상지원) 비교임상 적용으로 국산 백신(SK) 임상 3상 조기 진입('21.8.10), 신속 임상 심의를 위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출범('21.10)
 -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관계부처 및 심사·인증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업체 현장 지원 등으로 신속 제품화* 및 품질확보
 - * 국내인증 : 안전확보 + 인증심사기간 단축(통상 25일 → 3일)
 - (진단키트)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검사가 가능하도록 진단키트를 신속허가*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양한 검사법** 개발 지원
 - * 긴급사용 승인제도를 통해 허가에 필요한 시간 단축(80일 → 7일)
 - ** 한국 감염병 진단기법(PCR 검사 운영 절차·방법 등)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20.12)
 - (국제협력) WHO 긴급승인 백신 공동심사와 국제조달 품질관리 심사 참여 등 안전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계 방역대응에 기여

③ 향후 과제

-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중장기적 백신 수급 안정화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필요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 국산 제품 개발 지속 지원 필요
 - 임상 3상 신속 진입을 위한 설계·승인 지원* 및 mRNA 등 신규 플랫폼 백신 개발 지원, 안전성·효과성 평가기술 개발 등 추진
 -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로 백신 생산 세포주 관리를 위한 국가 백신 셀뱅크 구축, WHO·FDA 등 해외기관 인증 지원 교육 추진
- **(글로벌 백신 허브화)** 단기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생산 역량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자체 개발 등 기술력 확보로 백신 자주권 실현* 필요
 - * 범정부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전략 발표('21.8.5)
 - 글로벌 수준 제조·품질관리(GMP) 체계 확립 지원* 및 백신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공급 등 추진
 - * 국가출하승인센터 신설로 신종감염병 백신 검정, 수출 지원 등을 강화하고 고위험 병원체 시험을 위한 생물안전실험실, 무균실험실 등 시설·장비 확충

2. 생산부터 소비까지 체계적인 먹거리 안전 확보

① 추진 배경

- **(전주기 안전확보)** '생산단계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 구현
- **(소비트렌드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1인 가구 증가 등 배달 음식 소비 확대*로 인한 위생관리 불안 해소 및 식중독 사고 예방·관리 강화
*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1~7월 약 8.7조로 전년 대비 73.6% 증가('20.9,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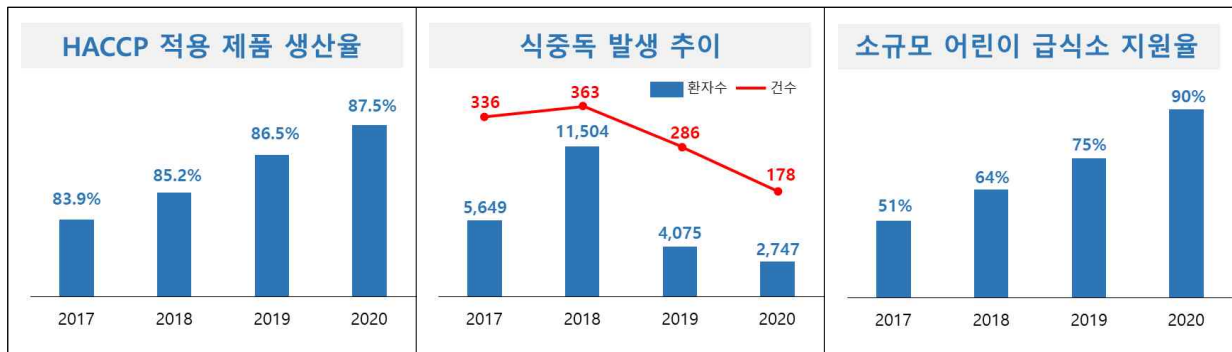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안전한 식품환경)** HACCP(즉석섭취식품 등 8개 유형), GMP(건강기능식품) 전면 적용('21.12)하고 수입식품·식육포장처리업도 HACCP 의무화*
* HACCP제품 생산비율(%) : ('13) 45.9 → ('19) 86.5 → ('20) 87.5
- 수입김치 HACCP 의무적용 조기 시행('22.10 → '21.10)과 통관·유통 검사를 강화하고, 마트 등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개소) : ('14) 52,966 → ('18) 119,338 → ('20) 171,000
- **(식품사고 예방)** 가정식을 대체하는 배달·급식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등으로 식중독 발생 지속 감소*
*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명) : ('16) 139 → ('18) 222 → ('19) 79 → ('20) 53
- **(농축수산물 안전강화)** 경매 前 현장검사*, 허용물질(농약)목록 관리제도 (PLS) 시행('19.1~),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 WTO 승소('19.5)로 수입제한 유지
* 공영도매시장 26개소에 현장검사소 설치(전체 도매시장 거래물량 97% 검사)
-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19.2) 및 선별포장 단계적 의무화('19.4~)
- **(취약계층 급식관리)** 어린이 급식의 위생·영양, 식습관 교육 등 급식관리 지원을 확대하여 어린이 식생활 관리 인프라* 확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개소) : ('16) 207 → ('20) 228 → ('21) 234(전국 시군구)

-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까지 급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급식관리 지원 등 지원범위 확대 기반** 마련('21.7)

* '19.7월부터 전국 7개 지자체에서 급식 위생·영양관리 시범 지원 중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7.27)



3 향후 과제

- **(비대면 소비 대응)** 비대면 식품 배달, 온라인 택배 거래, 해외직구 확대 등에 따라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한 식품안전시스템 고도화*
 - * 사이버조사단 확대·개편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안전조치 강화
- ▲배달음식점 주방공개 CCTV 설치 ▲배달플랫폼 책임 강화 ▲유통 온도관리 강화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감시 등 다각적 안전관리 추진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직구식품 위해정보 제공, 소비자 사용실태·피해사례 관리 전담기구* 설치, 관세청·방통위 등 관계부처 협업 강화
 - * 해외식품안전관리지원센터 설치로 정보 수집·분석, 연구, 교육·홍보 강화
- **(취약계층 급식관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으로 노인·장애인 등에게 위생과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관리 지원
 - * '22년에 전국 지자체 지원센터 50개소 추가 설치 추진 등 지속 확충
- **(통합 위해성 관리)** 개별 제품에서 사람 중심의 위해물질 총량 관리로 전환해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인체적용제품 통합 위해성 평가*
 -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21.7, 시행 '22.1)
- 제품별 노출 기여도에 따른 안전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위해성평가 결과 공개, 위해 우려 시 신속 차단 등 통합 안전관리* 추진
 - * 통합 위해성평가 수행 전문인력 확충 및 전담조직 운영 추진

3.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

① 추진 배경

- **(환자 중심)** 그간의 제품과 판매자 관점의 안전관리로는 환자 사용단계의 부작용 예방과 장기적 추적 관리에는 한계점 존재
- **(필수 의료제품)** 시장을 통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필수 의료제품은 국가 차원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위탁제조 공급 등 적극 역할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부작용 관리)**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범위 확대*, 임상참가자 보험가입 의무화('18.12), 인체이식제품 등 장기추적조사 체계 마련('20.12)
 - * 보상범위: ('15) 사망 → ('16) +장애·장래 → ('17) +급여진료 → ('19) +비급여진료
-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환자 장기추적조사 시행('20.8), 의료기관에 인체삽입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 의무화('21.6)
- **(필수의약품 공급)**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국가공급 시행('19.6),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19.3),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확대
 - *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개) : ('16) 109 → ('18) 315 → ('20) 503
- 수급현황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수의약품(결핵, 소아항암제 등)의 국내 위탁생산 확대, 필수의료기기의 공급중단 前 보고 의무화('21.10)
 - *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7개 의약단체와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
- **(안전관리체계 강화)** ▲해외 의약품 제조소 등록('19.12) ▲불순물 사전차단 입증('20.9) 의무화 ▲생리대 위해평가 및 유해성분 저감('18~) ▲의료용 마약류 사용내역 보고('18.5) 등 제조부터 처방·사용까지 안전 강화
 -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에 데이터 완전성평가, 윤리경영 원칙을 도입해 자료조작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및 허가자료 신뢰성 확보('21.10)



③ 향후 과제

- **(규제과학* 서비스 강화)**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산업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어,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는 규제기관**의 역량·전문성이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및 신뢰성과 직결
 - *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허가·사용까지, 규제적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모든 도구·기준·접근방법 등을 개발하는 과학
 - ** 코로나19 백신·치료제도 미국(FDA), 유럽(EMA) 등 규제기관의 역량이 확보된 국가 중심으로 신속한 제품화와 세계 각국의 제품 채택이 이루어졌음
- **(신속허가 인적기반 확충)** 심사자 인력확충·역량강화*와 병행, 민간 규제과학 인재양성을 위해 규제과학 대학 확대**와 현장전문가 교육 운영
 - * 규제기관의 심사 경험, 전문성 축적을 위한 공무원 심사 전담제 추진
 - ** 5년간('21 ~ '25) 석·박사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하고 의료기기 분야 등으로 확대(5→8개 대학) 추진
- **(범부처* 규제역량 강화)** 제품화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제품개발 국가 R&D는 기획단계부터 규제기준 정합성 진단·평가 지원**
 - *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의결('21.6.15)
 - ** 「규제과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규제과학지원센터 설치로 고품질 규제 컨설팅, 심사 품질관리 등 규제과학 서비스 지원
- **(첨단제품 개발 지원)** 국제 규제조화를 통해 글로벌 체계로 혁신과 제조품질관리(GMP) 상호인증 확대 등 선진 규제국가로 기반 마련
 - 설계 기반 품질고도화(QbD)* 실생산 예시모델 개발·보급 등 차세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체계 구축 지원
 - * QbD(Quality by Design) : 물질과 공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최적화된 공정설계와 품질기준 설정
 -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기준 허가·심사체계 확립 및 기술선진국 규제당국*과 의약품·의료기기 GMP 상호인정 확대**
 - * 스위스 GMP 상호인정협정('20.1 ~), 싱가포르와 GMP 상호인정 추진
 - ** WHO 인증 우수규제기관(WHO Listed Authorities, WLA) 등재 추진으로 국가 규제 시스템 위상 제고를 통한 의약품 수출확대 기반 마련

경 찰 청

1. 수사권 개혁

① 추진 배경

- **(수사권 개혁)** '20.1. 형사소송법 등 수사권 개혁 법률안 국회통과
→ 하위 법령·제도 정비(후속추진단) → '21.1.1. 제·개정 법령 시행*
* ▲(법)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행안부령) 경찰수사규칙 등
- **(국가수사본부 출범)** '21.1.1. 경찰수사 컨트롤 타워로 '국가수사본부' 설치, 경찰수사의 책임성·완결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 ▲(국수본) 본부장 중심으로 국·관 재편(4국·2관) ▲(시도경찰청) 수사부장 중심으로 직접수사부서 확대 및 수사심사담당관 신설 ▲(경찰서) 수사심사관실 신설 등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공정한 사건처리)** 경찰이 주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검사는 기소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공정한 사건처리 절차 확립, 국민 권익 제고
 - ▶ **(피의자신분 조기해소)**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는 경우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 해방(年 50만여명 추산), 사회·경제적 낭비가 줄어들고 인권보장 강화
 - ▶ **(이중조사 감소)**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추가조사 받던 관행 감소
- **(책임수사 기반 구축)** 역량과 경험을 갖춘 3만 3천여 수사인력이 '조직과 시스템'에 따라 수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받는 수사기반 구축
 - ▶ **(3중 심사체계)**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내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외부)」 내실화
 - ▶ **(중요사건 대응)** 국수본·시도경찰청 중심 수사체계 구축 및 수사지휘 내실화
 - ▶ **(자격관리)** '예비-일반-전임-책임 수사관'의 '자격관리제'('21년~)를 통한 보직운영

- 개혁법령 취지를 반영해 국민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

- ▶ (고소·고발 처리개선) △ 고소·고발장은 모두 '접수 절차' 진행 △ 반려 시 서면 동의서 수령 및 이의절차 안내 △ 반려사건 재수리 요청시 즉시 수리 등('21.10월)
- ▶ (舊 내사사건 관리개선) '내사' 용어를 폐지, 법령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입건 전 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수사사건에 준하여 처리절차·관리 및 외부통제 강화('21.8월)

○ (범죄척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각종 신종범죄에 대한 최적화된 수사시스템을 구축* 하여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일탈행위를 근절

*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추진단」(1월~) 및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 운영,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편성·운영(3월~, 1,560명 규모) 등

○ (사회적 약자보호) 스스로 보호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여성·아동 등) 대상 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사회적 안전망을 확충

- ▶ (성폭력) ▲ 음성인식 기술 활용 AI조서 작성(149개) ▲ 여청 강력팀 확대(149개서)와 스토킹처벌법 제정(10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9월)에 따른 적극적 수사
- ▶ (아동학대) 학대혐의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신속한 분리조치가 가능하도록 경찰관 출입·조사권 강화(1월) 등 제도 개선, 사·도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 신설

3 향후 과제

○ (책임수사 체계 확립) '인적역량 강화'→'시도청 중심 중요사건 대응' → '내·외부 3중 심사'로 이어지는 책임수사 체계를 완전히 정착*

* ▲ (인적역량) 자격관리제 전면도입, 법률전문가 채용 확대, 경찰수사연수원 인프라 확충 검토
▲ (중요사건) 시도청 수사범위 확대 ▲ (3중심사) KICS 시스템에 의한 심사체계 구축

○ (국민편익 확보) 형사사법 변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불이익 해소를 위한 제도·시스템 개선 및 구축도 조속히 추진

○ (인권을 최우선하는 수사환경 조성) 수사단계별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을 통해 약자 보호에 주력*

* ▲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확대 ▲ 범죄피해 평가제도, 회복적 경찰활동 내실화 ▲ 인권친화적 조사환경('23년 完) 및 유치장 환경 개선('27년 完)

2. 자치경찰제 내실화

① 추진 배경

- **(법제화 완수)** '20. 12. 9.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을 거쳐, '21. 1. 1. 공포·시행
※ 조직 체계를 유지하며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사무로 구분, 지휘·감독권을 달리하는 일원화 모델
- **(전면시행)** ▲시범운영(1.1.~6.30.) ▲시·도별 조례 제정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18개) 등을 거쳐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7.1.)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전면시행 이후 각 시·도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시책 시행, ▲치안-일반행정 연계 ▲주민 의견 반영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정책 >

- ▶ **(전남)** 도민 고령화 및 1인 가구 노인이 증가하는 특성을 반영, ▲어르신 지킴이단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피해 예방 및 회복 지원
- ▶ **(충북)** ▲농산물별 수확시기를 고려한 순찰 강화 ▲마을 CCTV 점검·개선 등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산물 도난예방 종합대책' 시행
- ▶ **(제주)** 휴가철 성범죄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공중화장실, 해수욕장 등) 점검, 가시적 순찰 활동 강화 등으로 안전한 피서환경 조성

③ 향후 과제

- **(자치경찰위원 구성 다양화)** 자치경찰위원 구성 시 성별 및 인권 전문가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대통령령 및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전국 위원회 간 정책협의 활성화)** 기 구성된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와 경찰청과의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비용)** 현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운영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시·도 지원 검토

3. 정보경찰 개혁

① 추진 배경

- **(개혁 법제화)** 지난 3년간 국회와 논의 끝에 정보활동 범위 명확화 · 정치관여 시 처벌규정 신설, 하위법령 정비 등 개혁 법제화 완료

- ▶ **(법률)** 「경찰법」·「경직법」(‘치안정보’ →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경찰공무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 자격정지) 개정(‘20.12월)
- ▶ **(하위법령)** 정보의 구체적 범위 등을 규정한 「경찰관 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大令, ‘21.3월)에 이어, 「정보경찰 활동규칙」(훈령, ‘19.1월 제정) 개정(‘21.6월)

- **(조직 · 사무 재설계)** ▲ 민생치안 분야로 인력 재배치 ▲ 대화경찰 도입 ▲ 정보분실 폐지 등 조직 개편 · 인력을 감축*하고 ▲ 준법지원계 신설 ▲ 업무 성격이 드러나도록 부서명칭 변경 등 정보활동의 투명성 확보

* ‘18년 대비 11.1% 감소(3,358 → 2,987명) / 지난 10년간 전체 경찰관은 24.8% 증가했으나, 정보경찰은 16% 감소 ⇒ ‘사실상 30% 이상 감축’ 결과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법적 · 제도적 기반 마련)** ‘法-대통령령-훈령’ 3단 체계 완성으로 ‘정보활동의 법적 · 제도적 기반’ 마련, 과거로의 회귀 원천 차단
- **(본연의 역할에 충실)** ‘국민 안전 · 위험 예방’ 중심으로 정보활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장 점검 · 모니터링을 통해 준법성 제고

- ▶ 정보경찰 개혁 취지를 반영하여 신설한 ▲ 대화경찰제(‘18.10월) ▲ 지역안전 예방 정보활동(‘20.12월) 등을 자체 핵심과제로 지정, 내실화에 집중
- ▶ ▲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 재난 · 안전사고 예방 ▲ ‘집회시위 자유’와 ‘공공안녕’의 조화를 도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노력 등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

③ 향후 과제

- **(전문성 · 준법역량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활동을 위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계적 준법 관리를 통해 준법문화 정착에 주력

소 방 청

1. 소방의 국가 책임성 강화

① 추진 배경

- **(소방업무의 성격)** 화재예방·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 구조·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 → 국가 책임성 강화 필요
- **(소방공무원의 처우)** 高위험·스트레스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유사직종 대비 사기가 낮다는 평가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 필요
- **(지역별 소방투자 격차)** 시·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인력, 시설·장비 등 소방투자 편차 발생 → 지역 간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 발표(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17.10.26.)

- ▶ (신분) 국가직으로 신분 단일화
- ▶ (인사) 시·도 소방공무원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본부장·지방소방학교장 제외)
- ▶ (조직) 시·도 소방기관 유지, 소방본부는 시·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

- 정부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18.10.30.)

- ▶ (재정)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
※ 소방안전교부세율 : 담배개별소비세의 20% → '20년 45%(약 3,459억원)
'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소방인력 충원, 인건비 인상 추이 등을 종합 감안하여 추후 검토

- 소방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6개*) 제·개정('20.4.1. 시행)

- *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 법률 ▲소방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 (정원) 법령(지자체 소방공무원 정원 규정, 시행규칙 제정) 및 조례에 정원 규정
- ▶ (회계) 시·도별 조례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소방특별회계를 법률(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로 격상, 안정적 소방재원 확보

- 하위법령 36건 제·개정(대통령령 29건·부령 7건, '20.3월 공포, 4.1. 시행)

-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국립소방병원 건립**(충북 음성)

▶ 사업개요 : '20~'24년(기본·실시설계 '20~'21년 / 공사 '22~'24년) / 총1,461억원
▶ 건립규모 : 302병상, 19개 진료과목, 연면적 39,200㎡ 급 종합병원

3 향후 과제

- **(소방사무의 국가책임성 강화)** 소방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사무로 규정하여 국비지원 등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 개정 필요

▶ 재난의 복잡·대형화 등 국가 차원의 재난발생,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역할 증대로 법령상 국가 및 공동사무가 주된 사무로 변화

※ ('91년) 국가·공동 36.5% < 지방 63.5% → ('18년) 국가·공동 66.2% > 지방 33.8%

- **(시·도 재난대응역량 제고)** 시·도 소방청을 시·도지사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시·도 소방청장(現본부장) 직급 상향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강화

▶ 소방본부는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 대형재난 등 신속하고 독립적 의사결정 애로, 문제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ex.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17.12.21.)

▶ 소방본부장은 법률에 따른 행정행위의 주체임에도 시·도청 소속 부서장에 불과

▶ 소방본부장 직급이 긴급구조지원기관장(軍·警 등)보다 낮아 총괄·조정 기능 한계

- **(시·도 소방 재정지원 확대)**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정이 열악한 시·도에 소방재정 지원 확대 검토 추진

▶ 재정여건이 어려운 도(道) 단위의 경우 지자체장의 적극적 협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사업비, 복지예산 확보에 한계(전체 소방예산 5.8조 중 지방비 85%, '20년 기준)

▶ 일반회계, 지역자원시설세, 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금, 소방안전교부세, 보통교부세 등 복잡한 시·도 소방재원의 단일화 필요('20년 국회 예정처)

- **(단일 지휘체계 구축)** 시·도 소속 소방정(소방서장급) 이상 임용권 조정(시·도지사→대통령)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 추진

▶ 현장지휘관(소방서장)의 임용권 이원화로 지휘체계 혼선 및 인적교류 미흡

▶ 고위직으로 갈수록 중앙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나, 특정지역 장기 근무로 지역위주 정책(시·도지사 성향)에 더 큰 관심

▶ 대부분 시·도 상위계급(소방준감) 부재로 유능한 지휘관의 승진기회 단절

2. 제2차('22년 ~ '26년) 화재안전정책 추진

1 추진 배경

- 소방시설법 제2조의3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제1차 화재안전정책(2017~2021년)의 저감 목표인 화재감소*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저감 목표로 전환 필요

* 최근 5년 화재발생 10% 저감 목표 달성 / '16년 화재발생 43,413건(100%) → '20년 38,659건(89.5%)

2 추진현황 및 성과

▶ 제1차 화재안전정책은 ① 안전한 제도 기반마련, ②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③ 국민안전 보호, ④ 안전한 미래 대비의 4대 전략을 지표로 설정 추진

- **(안전한 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세분화(3급 신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화재안전 제도를 개선
- **(안전한 생활공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법제화 및 시·도 조례 신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세분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신설, 재난약자 맞춤형 매뉴얼 개발 등 추진
- **(국민안전 보호)** 안전체험관, 소방안전체험교실(전국 64개소) 운영,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안전픽토그램 보급, 전광판·멀티비전 등 활용 예방홍보(360만건)

			'16년 판매시설(5,360개소) 보급 → '17년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으로 확대
물건적치 금지	경량칸막이	다중이용업소	

- **(안전한 인프라 조성)**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운영, 국립소방연구원 개설 등 R&D 기반 조성*, 소방안전관리자 온라인 교육 시행 등 화재안전 기반 확충

* '07~'20년까지 수행한 R&D 성과(특허출원 393건, SCI 149건, 기술공개 57건 등)

< 제1차 화재안전대책 기간 화재저감 성과 >

- ▶ 최근 5년간 화재는 다소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18~'20년) 추이*
 - '17년 기점으로 화재발생 연평균 4.34% 감소
 - * ('16년) 43,413건 → ('18년) 42,338건 → ('20년) 38,659건 / 5년 평균 41,738건

3 향후 과제

< 제2차 화재안전정책 추진 > ☞ “화재 사망자 10% 저감” 목표

※ 최근 5년('16~'20) 평균 사망자 344명(100%) → 향후 5년간 평균 310명(90%)

- **(화재안전제도 개선)**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화재 위험시설에 대한 합리적 안전기준* 마련

* 민간점검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 개선, 화재 위험성을 고려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 **(안전한 환경조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설치,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으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 '20년 80% 완료(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133만가구 중 107만가구) → '21년 90% → '22년 100% 목표

- **(화재예방 홍보·교육)** 체감·맞춤형 교육체계 확립, 소방체험시설 확충 등

구분	현재		확충 추진계획		2026년 목표
체험교실	72개소	⇒	'22년부터 매년 4개소	⇒	92개소
이동체험차량	53대		'22년부터 매년 5대		78대

-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IoT를 활용한 실시간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방정책 수립 및 현장대응 지원

< 법령 제·개정 >

- 소방시설법 등 법령 제·개정 추진으로 안전 환경 조성
 - 소방시설법을 「화재예방법(제정)」 및 「소방시설법(개정)」으로 분리
 - 화재취약시설의 조사방식을 사전통보에서 불시단속으로 전환
 - 「화재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개선 등
-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완료 추진(5개 부처)

* 94과제 中 71과제 추진완료(75.5%), 23과제 추진중

3. 구급처치 범위 확대로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①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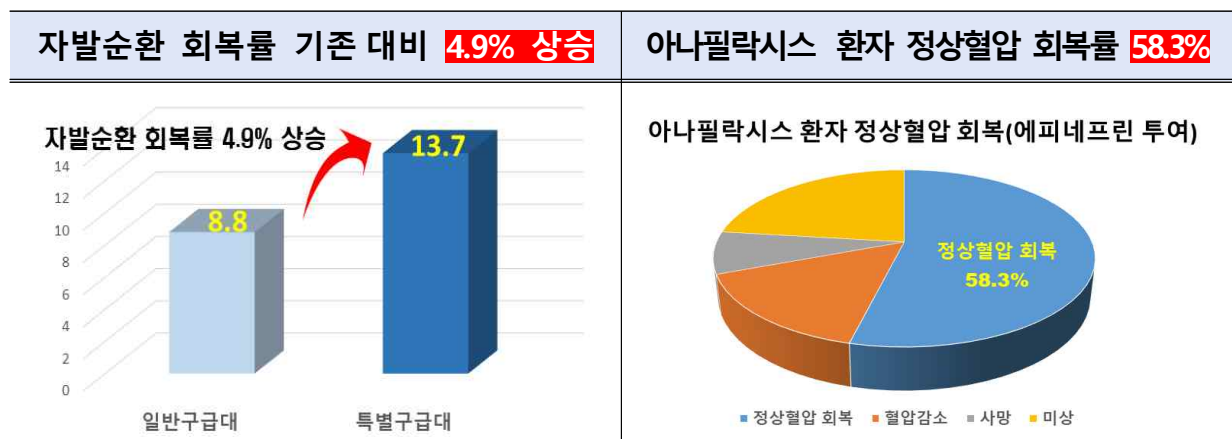
- 119구급대원은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의 제한으로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고 있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가 없어 응급환자 소생에 한계
 - * 심정지환자 에피네프린 투여, 임산부 태줄 처치 등 5종의 시범사업 항목
- 특히, 간호사 구급대원*은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 지속
 - * 간호사 자격자는 전국 119구급대원(12,732명) 중 23.6%(3,005명) 차지('21.1.1. 기준)
- 119구급대(응급구조사·간호사)는 병원 前 단계의 응급의료체계 대부분을 담당함에도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
 - ※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는 최초 규정(99.3.19.)된 이래 현재까지 기도유지, 산소투여 등 14가지로 고정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관련기관 및 단체 공동으로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1~9차 / '19.1.~'21.5.)
 - * 보건복지부 2, 응급의학회 2, 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2, 시민단체 1, 소방청 2
-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제도화*를 위해 국회 협의·설명
 - * 「119구조·구급법」에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규정토록 법령 개정(협의 중)
- 구급대원 업무범위 현실화를 위한 시범사업('19.7월~) 수행 중

구분	이전 응급처치 항목(14종)	확대처치 항목 추가(21종)
1급 응급구조사	○ 기도기 기도삽관 후두마스크삽관 등 ○ 정맥로 확보 ○ 인공호흡기 호흡 유지 ○ 약물투여: 저혈당성 혼수 포도당 니트로글리세린 기관지 확장제 ※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포함	○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및 전송 ①·② ○ 응급 분만 시 태줄 절단 ①·② ○ 급성 외상환자에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①·② ○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①·② ○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투여 ①·② ○ 산소포화도, 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 ② ○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② ※ ①1급 응급구조사, ②간호사, ③2급응급구조사

- (편성) 전국 특별구급대* 227개대 운영(소방서별 1개대 이상, 1,972명/’21.7.1.기준)
 - * 특별교육을 이수한 2인 이상의 전문자격자(1급·간호사)가 탑승한 3인 출동대
- (의료지도) 지도의사 427명 인력풀 구성*(대한응급의학회 등 추천)
 - * 전국 시·도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 : 8,960명 실시(’19.7~’20.12)
- (시행) 확대처치대상 환자 151,261명중 12,405명 확대처치(’19.7.~’20.12)
 - ※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성과평가 용역결과 모든 항목에서 부작용이 없었으며, 아나필락시스* 환자 에피네프린 투여 등에서 그 효과성이 확인됨



③ 향후 과제

- (제도화 추진)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의 지속적 확대 시행 및 평가를 통해 응급처치 항목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
 - 각계 합의가 이루어진 응급처치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구조구급법」에 반영
- (부처협의 등)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미비점 점검 보완
 -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단체와 법률개정 협의 공감대 형성

문화재청

1. 국민과 상생하는 문화재 보존

① 추진 배경

- **(보존과 개발 균형 도모)** 문화유산 정책범위의 확대 및 도시화의 가속화로 문화재 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국민과 상생하는 정책 요구* 증대
 - * 최근 세계유산 '조선왕릉' 주변 개발사업 추진시 조선왕릉 경관 및 가치 훼손 사례 지속 발생
-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문화유산을 지역재생의 원동력*이자 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자원으로 인식,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에 대한 공감대 확산
 - * 근대문화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고도(古都) 육성지구 내 주거·경관개선사업 등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규제완화)** 문화재 보존에 따른 규제의 합리적 완화 및 국민 부담 경감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주민 지원 확대로 문화재 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
 - * (조정)'15~'21년 1,561건 / (효과) '개별심의구역' 13% 감소, 규제완화 면적 23% 증가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비용 지원 확대* ▲보존유적 매입제도 시행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공공성 강화
 - * (지원비용) ('16)503건, 117억원 → ('21)751건, 207억원(지원건수 49%, 지원액 77% 증가)
 - ** (기준완화) ('19)발굴조사 연면적 제한 폐지, ('20)모든 민간공사 지표조사 비용 전면 지원
- **(지역 활성화)** 지역 내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지역발전 도모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및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등을 통해 주거환경과 경관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기여
 - * ('16~'21)800건/317억원 ** ('18~'21)군산·통영 등 8개소 등록 *** ('21~'23)밀양·전주/178억원
 - 낙후된 역사문화도시 보존·정비·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19.12.),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20.6.), 풍납토성 보존·관리 특별법('20.6.) 제정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사업>



- **(민간참여 확대)** 민간참여 기반을 강화하여 문화재 상시보존체계 구축
 -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및 법제화* ▲지역주민·청소년 등 다양한 지킴이 활동** 지원 ▲기업의 문화유산 사회공헌*** 등 민간참여 활성화
- * (돌봄대상/인력) ('10)691개소/91명→('21)8,665개소/774명, (법제화)문화재보호법 개정.시행('21.6.)
- ** (지킴이) ('21 누계) 68,778명 *** (기업 협약 및 후원규모) ('21 누계) 63건/380억원
- **(치유 회복가능)** 문화유산을 코로나 치유·회복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국민건강 증진
 - 조선왕릉 숲길·명승 옛길* 등을 국민의 안심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화유산 마음치유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심신 회복에 기여
- * (왕릉숲길) 태강릉 등 15개소 정비·개방('20~'21), (명승 옛길) 삼남대로 갈재 등 6개소 지정('21)
- ** 명주짜기 영상(유튜브 304만 조회), 고궁 문화유산(창덕궁 후원 등) 랜선 투어 프로그램(유튜브 273만 조회)

③ 향후 과제

- **(제도개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제도 개선(행위기준 재조정*, 문화재 영향평가** 도입 등)으로 문화재 보존과 개발 수요 간 균형 조정
- * 보존지역 내 행위 허용기준(총 1,865건) 전수조사 및 재조정(수도권 지역 우선 시행→전국 확대)
- ** 개발계획 수립 전 문화재 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도시계획과 문화재 규제 간 연계·통합 추진
- **(지원 확대)**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전면 지원 등 발굴공영제 실현, 전국토 정밀지표조사·정보 현행화를 통해 국민의 토지이용 예측성 제고
- **(지역 균형발전)** 전국 6대 역사문화권(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기초조사, 정비·육성사업 추진으로 지역 재생 및 균형발전 제고
- **(산업 생태계 구축)** 문화유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을 통해 문화재형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 문화재산업육성법 제정, 문화재 분야별·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복합산업단지 조성 및 문화유산 펀드 신설,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 구축
- **(문화재 교육)** 지역별 문화재교육 거점을 구축하여 세대별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통해 지역문화재 지킴이 양성 및 전국민 문화재교육 진흥

2.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전환

① 추진 배경

- **(보호대상 확대)** 보호대상 문화재 외연이 확장*되어 그간 중점보호주의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 필요**
 - * 근현대문화유산, 해양유산, 미래유산, 역사문화자원(비지정) 포함 / 점 단위 단일 문화재 위주에서 주변 환경·경관·조경·공간 등 면 단위로 확대 /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현황 : ('10) 2,539건 → ('21) 5,089건
- **(환경 변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디지털·그린문명 대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 **미래지향적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전환 필요**
 - *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융·복합 초연결시대 도래 ** 문화재 피해 패턴 변화로 예측 어려움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포괄적 보호체계)**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20~'24) ▲지정번호제도 개선**('21) ▲문화유산 현장 개정('20.12) 등 포괄적 문화재 보호체계 도입 추진
 - * ('20~'21)대구·경북·강원 등 29,495건 조사·DB구축 ** 지정번호의 대외적 사용 폐지
- **(디지털 대전환)** 문화재 보존·관리의 디지털 대전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 수립('21.6) ▲데이터 댐 구축·디지털 인프라** 전환 추진
 - * 문화재 3차원 원형기록 DB 구축 ('12~'20)287건→('21~'22)1,460건 / 데이터 세트 ('17)214건→('21)991건 / 3D 데이터 개방 및 활용 ('18)1,151건→('21)3,525건
 -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19),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플랫폼('21) 구축
- **(첨단기술 기반)** 문화재 보존·관리에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스마트 보존·활용 R&D 기술 개발**하여 **문화재 상시관리시스템** 구축
 - * 사물인터넷(IoT) 적용 문화재 감시시스템 구축('19~'21/75개소), 전기화재예방 ICT 시스템('21년 7개소),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건조물문화재 수리이력 관리('21년 27건, 50억원), 드론 활용 등
 - ** ('21)진단·분석기술 고도화, 전통재료 복원, 디지털 트윈, 재난대응 등 11개 기술, 79억원

③ 향후 과제

- **(법제 개편)** 문화재 정책의 원칙·기본방향을 담은 기본법과 문화재 유형별·정책기능별로 특성화한 **개별법***으로 문화재 법체계 전환
 - * (유형별)근현대유산법·자연유산법·수중문화재법 등 / (기능별)문화재산업진흥법·디지털문화유산법 등
- **(미래유산)** 미래가치가 있는 다양한 유·무형 유산을 **미래유산***으로 발굴·육성
 - *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 미래 무형유산 100종목('22~'26) 발굴 및 보존·육성

- **(연구개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문화유산에 접목하여 수리·복원·안전 등 분야별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신산업 발굴·육성
- **(기후위기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난환경에 대응 가능한 맞춤형 기술개발*로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 및 **친환경 문화재 정책**** 추진
* 문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 ** 자연유산 생태계 회복, 환경친화적 문화재 정비 등
- **(빅데이터 플랫폼)** 문화유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재현에 활용, 민간에 개방하여 관광·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 촉진
* 문화재 관련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모든 데이터를 수집, 축적,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3. 문화유산 가치 대내외 확산

① 추진 배경

- **(한류 확산)** 신한류의 확산으로 K-Culture 원천인 전통문화·세계유산에 대한 관심* 및 향유 수요 증대**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 기회 확대**
* 경복궁을 무대로 한 BTS 공연 국내외 공개('20.9./미국 NBC 및 유튜브 채널)로 약 6,800만 조회수 기록, 경복궁 서울 온라인 명소 1위 차지('20.11./서울관광재단)
** 문화재 향유에 대한 국민요구 확산('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
☞ 코로나19 종식 이후 선호하는 국내여행 (1위)자연경관(49.2%) (4위)역사유적지(6.0%)
- **(문화유산 강국)** 문화유산을 둘러싼 주변국의 역사왜곡·문화공정 등에 적극 대응하고 문화유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유산 분야 국제사회 내 선도적 역할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활용 다변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확대 및 다변화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대내외 홍보 강화로 관광 활성화 계기 마련
 - ▲ 지역문화재 활용*으로 문화향유권의 지역균형 제고 ▲ 취약계층 등 수요자 중심의 향유서비스 개선** ▲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글로벌화***
- * 문화재 야행 등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 ('16) 175건, 73억원 → ('21) 400건, 195억원
 ** 무장애공간 조성('19~'21, 궁능 4개소, 지역 17개소),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20~'21.9, 8,980명 참여), 비대면 입장시스템 구축('20~'21, 궁능 12개소)
 *** 궁중문화축전(총 7회/('17)35만명~('20)118만명), 문화유산 방문캠페인('20~'21, 110억원), 한복 등 홍보영상 해외 5개도시 전광판 송출 인천공항 전통문화 미디어 설치('21.3), 2020 두바이 엑스포 홍보관('21.10~'22.3)



- **(디지털 콘텐츠)** 비대면 소통·원격 문화활동 확산에 따라 디지털 기술 활용한 고품질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문화유산 향유방식 전환

- * ①화재 유형별 증강(AR)·가상현실(VR) 등 디지털 실감콘텐츠 개발
[('19) 6건, 10억원 → ('20) 60건, 64억원]
- ②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시대별 빅데이터 구축, 4차원 가상공간에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20~'22, 260억원)

<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다면영상실) >



- **(세계유산 등재·관리)** 유네스코 유산의 지속적 등재 확대*로 우리 유산의 우수성 전세계 홍보 및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 기반** 마련

* 등재 건수('95~'21 / 세계·무형·기록유산 52건), 최근 5년간 총 8건 등재, '21년 '한국의 갯벌' 등재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 특별법 제정('20.2월),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 수립('21.12월)

- **(국제협력)**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 확대·다변화*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 내 역할 분담**으로 영향력 확대

* ODA(분담금 포함) : ('15)24억원, 동남아 중심 → ('21)38억원, 중앙아·이슬람권까지 확대

** 세계유산 국제해석센터 유치 승인('19),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 3회 연속 당선('20~'24)

[3] 향후 과제

- **(한류 콘텐츠)** K-무형유산, 세계유산 등 문화유산 한류 콘텐츠 개발 및 타분야 콘텐츠 연계·협업*을 통해 신한류 지속 확산에 기여

* K-드라마, 영화, 웹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하여 K-문화유산 홍보·가치 확산 추진

- **(홍보 다각화)** 문화유산 향유방식의 전환으로 가상공간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확대* 및 온라인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 메타버스, OTT 등 다양한 플랫폼 활용하여 문화유산 콘텐츠 유통·보급 확대, AI 전시안내 로봇 도입

- **(국제위상 강화)** 문화유산을 둘러싼 주변국 갈등 관리, K-문화유산 세계적 확산을 위해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 내 선도적 역할** 강화

* 홍보기능 전문화·일원화, 국제업무 역량 강화(국제기구 전담), 민간채널·해외기관 협력 강화 등

** 국제의제 주도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등), 아프리카·중남미 ODA 확장 등

질병관리청

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

① 추진 배경

- **(접종목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② 추진현황 및 성과 (10.31일 기준)

- **(접종현황)** 접종완료 3,866.0만명(인구 대비 75.3%, 18세 이상 87.6%), 1차접종 4,113.6만명(인구 대비 80.1%, 18세 이상 92.2%) 접종
- **(접종성과)** 신속하고 높은 접종률로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 기반 마련
 - 완전접종군에서 감염예방 63.2%, 위중증예방 92.6%, 사망예방 94.8%의 높은 접종효과 유지
 - 전체 인구 대비 70% 접종완료 조기달성(10.23일)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

*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11.1~ 3차례에 걸쳐 단계적 완화)

< 접종자 추이(단위: 만명) >

시기		4월	6월	9월	10월
목표		300만명 (1차접종) (4.29 달성)	1,300만명 (1차접종) (6.15 달성)	3,600만명 (1차접종) (9.17 달성)	3,597.5만명 (접종완료) (10.23 달성)
실적	1차	333만명	1,534만명	3,935만명	4,114만명
	완료	-	504만명	2,571만명	3,866만명

3 향후 과제

- **(단기과제)** 추가접종(booster shot) 시행 및 미접종자 접종 독려
 - (접종률 제고) 연내 인구 대비 80% 이상 접종완료 목표로 추진
 - (추가접종) 델타변이 유행,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 시행
 - ▲ (1단계 : 10월~)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 ▲ (2단계 : 11월~) 50대 연령층, 안센백신 접종자, 기저질환자 등으로 대상 확대
 - ▲ (3단계 : 미정) 연구결과, 국외사례 등을 모니터링하여 일반 국민으로 확대 검토
 - (미접종자 접종독려)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미접종자(18세 이상, 약 509만명, 10.31일 기준)에 대한 접종 독려

< 주요방안 >

- ▶ 이상반응 대응강화 및 지원 확대
- ▶ 이상반응 및 접종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소통 강화
- ▶ 인과성 판정 관련 별도기구 설치 검토
-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미접종자 접종계획 수립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계한 제도 검토

- **(중기과제)** 주요 연구결과, 국외 접종동향, 제약사의 허가신청 등을 고려하여 5-11세 아동에 대한 접종여부 검토
- **(장기과제)**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리되는 감염병’으로서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플루엔자*와 같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포함하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정례화 검토

* 매년 9월에서 익년 4월 중 특정연령대(생후6개월~만13세, 만65세 이상, 임신부 등)에 대해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접종 추진 중

2. 코로나19 방역 대응

① 추진 배경

- **(발생현황)** '20.1.20 코로나19 첫 환자 확진 이후 4차례 대유행 발생
 - 누적 확진자 364,700명(총 사망자 2,849명) 발생, 최근 7일 간('21.10.25~10.31) 일평균 확진자 1,829.6명 발생('21.10.31일 기준)
- **(방역대응)** 환자발생 억제 및 사망 최소화를 위해 방역·의료 등 범정부적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 필요
 -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3T(Test-Tracing-Treat) 전략을 효율화 하고,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 체계 마련 추진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전세계적 유행에서 한국의 방역 상황은 양호, 봉쇄 없이 효과적으로 유행 억제 → 세계 최저 수준의 인구대비 확진자 수 및 치명률 달성
※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는 인구 10만명당 703.7명, 치명률은 0.78% ('21.10.31일 기준)

- **(조기발견)** 안정적 검사역량 확보·운영, 무료 검사 및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 확대 등 검사 접근성 강화
 - (검사역량) PCR 기반 日 최대 검사 가능량 약 53만건
 - * 일(日)검사역량: ('20.2월) 약 2만→('20.12월) 약 13만→('21.1월) 약 20만→('21.10월) 약 53만건
 - ** 검사기관: ('20.2월) 65개→('20.10월) 144개→('21.1월) 169개→('21.10월) 230개
 - (임시선별검사소)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찾아가는 검사소** 등 운영방식 다양화, 운영시간 연장(주중 18→21시, 주말 16→18시)
 - * (7.4. 기준) 전국 121개소 → 전국 198개소(10.31일 기준)
 - ** (서울) 가락시장, 강남역, 남부터미널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찾아가는 검사소 운영
- **(유행억제)** 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집단감염 발생 시 신속대응 강화
 - (고위험시설 집중관리)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교정시설, 입영장정, 학교 등 숙식을 함께하는 단체 생활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선제검사 지속*
 - * (취약시설 등) 총 1,756만 명 검사, 1,608명 양성 확인('20.5.~'21.9.)

- (신속대응) 5개 권역질병대응센터 중심 지자체 협력 체계, 유행지역·상황 위험도 평가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 (역학대응 효율화) 확진자 정보 입수 후, 이용시설 정보*를 일괄 조회하여 방문자를 5분 이내 파악 가능토록 시스템 운영 중('21.9월~)
 - * (조회 정보) GPS 위치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 QR 코드 전자출입명부 등
- (외국인 방역조치 강화) 외국인 예방접종률·검사 향상을 위한 지원·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주 등에 외국인 감염관리 강화** 의무 부여
 - * 외국인 밀집지역 방문 예방접종 및 검사 실시, 예방접종 부작용 지원 홍보 등
 - ** 근로자 인적사항 및 인력사무소 방문자 명부 관리 여부 점검 등

③ 향후 과제

- **(단기과제)** 역학 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 (방역 대응) 국가 역학조사 관리조직 정비 및 역학 대응 인력을 포함한 보건소 조직·인력 확대, 디지털 추적조사 확대하고, 선제적 검사법 개발 및 병원체 유전정보의 통합 관리·분석 시스템 구축
 - (단계적 일상회복)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등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및 미접종자 전파 차단 방안 도입 검토
- **(장기과제)** 또 다른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의료대응체계 재설계 검토 등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전략 고도화 필요

※ 우리나라의 K-방역 체계는 '03년 이후 SARS, 신종플루, MERS 감염병 대응에 대한 철저한 평가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 체계의 지속적 개선에 기인

- 現 방역체계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의료대응 체계 재설계 및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 전문교육체계 마련 등 또 다른 감염병 발생*시 안정적 대응을 위한 위기 대응 전략 개선
 - * 사스('02년), 신종인플루엔자('09년), 이후 메르스('12년), 에볼라('13년), 지카('15년), 코로나19('19년) 등 전세계적 규모의 신종 전염병 발생주기가 2~5년으로 짧아지는 추세(WHO)
- 지자체 역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보건소 등의 감염병 대응상시 조직화 등 방역 역량 유지 및 재교육 필요

3.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추진

① 추진 배경

- **(목적)** 국가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퇴치 기반 마련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 국가예방접종 사업 및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기반 마련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추진현황)** 어린이 17종*, 임신부 1종, 어르신 2종, 고위험군 2종 예방접종 비용 무료 지원(보건소: 백신비, 의료기관: 백신비+시행비)
- **(성과)** 어린이 8,886,270건, 어르신 6,236,055건, 임신부 105,173건, 고위험군 24,848건 **총합 15,252,346건**의 무료 예방접종 지원('21.10.30.기준)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만 12세 이하 어린이('08.1.1 이후 출생자)대상 17종 필수 예방접종* 접종비(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 전액 지원

▶ 결핵(BCG, 피내용), B형 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IJEV), A형 간염(Hep 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IV)

-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사업 민간의료기관 지속 확대 실시('21.~)**
 - 어르신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예방접종을 제고 등을 위해 접종기관을 민간의료기관 한시적 확대 운영('20.6.22~12.31.)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지원 대상 확대**
 - '16년도부터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대상자를 확대하여 만 13~17세 여아 및 18~26세 저소득층*까지 백신 지원 대상 확대 예정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0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국가 승인 통계 공표('21.7.26.)**
 - 2020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중인 만 1세, 2세, 3세, 6세 아동의 필수예방접종률 산출 후 전문가 자문 거쳐 통계청 KOSIS 등재
- ※ (완전접종률) 만 1세 97.0%, 만 2세 93.6%, 만 3세 90.9%, 만 6세 83.3%

○ **B형간염 주사기 감염 예방 사업**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대상 면역글로불린, 예방접종 및 검사비용 지원
- 신생아 면역글로불린투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정량검사 비용 지원*
- * B형간염 기초접종 후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최대 3차까지 재접종 및 재검사 지원

○ **매년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 지속 확대**

- ('19-'20절기) 생후6개월~만12세, 만65세 이상: 1,374만 명
- ('20-'21절기) 생후6개월~만18세, 만62세 이상: 1,900만 명
- ('21-'22절기) 생후6개월~만13세, 만65세 이상: 1,460만 명
- ※ '20-'21절기 3차 추경으로 한시적 확대대상: 만13~18세 약 284만 명, 62~64세 약 217만 명, 장애인 연금·수당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63만 명

○ **국가예방접종 신규 백신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 시 객관적·과학적 자료 구축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도입 대상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연구용역*** 완료

*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20.5월~'21.6월)

3 향후 과제

○ **(단기과제)** 인플루엔자 유행 전망, 백신 생산량, 우선접종 순위 등을 고려하여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 확대 추진

-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면 인플루엔자는 언제든지 유행할 수 있어 접종 대상자 확대*를 통한 전파 차단 및 중증도 감소 필요

* 인플루엔자 발병률이 높고 집단생활을 하는 만14~18세(중·고생), 면역력이 취약한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60-64세 어르신 등

○ **(장기과제)**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및 백신 안전접종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근거기반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확대 추진
- 또 다른 신종감염병 대응 및 임시조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을 대체하여 백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백신 유통, 이상반응 조사, 피해 보상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공공기관 신설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 등 추진

4.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① 추진 배경

- **(연구개발 지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조기극복을 위해, 국산 백신·치료제의 개발·생산을 통한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이 중요하나,
 - 국내 감염병 대응 기술은 선진국 대비 부족한 수준(80%)으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가 핵심 연구기관의 역할 강화 및 연구개발·지원 확대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연구소설립)** 질병관리청 개청과 더불어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 센터를 확대·개편하여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3센터(局) 12과, '20.9.)
 - 감염병 R&D 중장기 전략인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2~'26)」을 수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 심의·확정('21.10.)
 - * 포스트코로나 대비·대응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3대 중점과제 선정, 국립감염병 연구소 중심의 범부처 감염병 R&D 체계 확립
- **(국제협력)** 韓-美 협력강화를 통해 감염병 분야 원천 기술 확보 추진
 - 美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와 협력*의향 서신 교환('21.5.18.) 및 모더나社와 MOU 체결('21.5.22.) 등을 통해 mRNA 백신개발 등 감염병 분야 공동연구·협력 추진('21.6~)
 - * NIAID와 공동협력 연구 주제 도출 및 포괄적 협력의향서(LOI) 체결 예정('21.12.)
- **(임상지원강화)**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지원 등 확대
 - (백신)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①표준물질 제작·보급, ②시험법 개발 표준화, ③효능평가 인프라(시설·장비·기술·인력 등) 구축 등 추진
 - (치료제) 바이러스 변이 대응 치료제 개발 및 확보를 위한 ①광범위 효능 항체치료제 개발, ②치료물질 효능평가 및 ③국내 임상연구 지원

3 향후 과제

- **(단기과제)** 감염병 R&D 국제협력 및 협업 확대 및 범부처 감염병 R&D 연계·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감염병 연구기관 협의체’ 구성·추진
 - (국제협력) 美 NIAID와의 LOI 체결에 따른 공동연구 과제 도출·추진, 韓-美 민·관 협업 워크숍 등을 통한 국제협력 창구역할 확립
 - (협의체) 감염병 R&D를 수행하는 국가 및 민간 핵심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기관 간 성과 지향적 연구협력 체계 강화
- * (평시) 기관 역할분담 및 R&D 성과 공유로 연계·협력·활용(성과 이어달리기) 추진
(감염병발생) 방역·현장 수요에 따른 국가 주문형 연구 우선 수행을 위한 체계 마련

< 감염병 연구기관협의체(안) >



- **(장기과제)** 감염병 임상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인프라 구축 및 임상연구 지원 체계 확립
 - (조직·인프라) 감염병전문병원과 더불어 감염병 임상연구를 총괄하는 핵심 조직(가칭, 임상연구센터) 확충
 - * 감염병전문병원과의 연계·협력 강화로 실제 임상적용 가능한 기술개발 촉진
 - (지원체계) 치료법 개선, 임상가이드라인 제정 및 장기 추적 조사 등 감염병 정책에 필요한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 체계 마련
 - * 경제성 부족하나 감염병 정책 구현에 필요한 임상연구(부작용·이상반응, 교차접종, 치료법 개선, 적정의료기술 개발), 인구집단(코호트) 연구 및 연구자 주도 임상 등

해양경찰청

1. 주변국 해양력(해양패권) 확장 대비 우리나라 국가해양경비력 강화

① 추진 배경

< 해양패권 시대, 美·中 충돌 속 우리나라 쏠 해역 위협 가중 >

- **(국제정세)** 美·中 해양패권 경쟁이 동북아 해역(제주남방 대륙붕, 서해, 동해)으로 북상,
 - 국제 해양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우리 해역 내에서 상시화 될 우려 증대
 - ※ 中 '일대일로(진주목걸이)', '영유권 확대(남중국해 9단선)', '방어선 확대(1·2 도련선)' ⇒ 美·中 갈등 촉발
 - 日 주축 '인도-태평양 전략' ⇒ '쿼드 동맹' 과 英·佛·獨 동중국해 영향력 투사(군함 파견)로 연결



- ▶ 주변국과 경계 미확정 상태에서 中 공세적 동진(東進)과 日 전략적 서진(西進) 속 국가 해양전략 미약, 해양경비력 비대칭 심화, 전방위 해양분쟁 표출 임박
- ▶ 韓-中-日 EEZ가 중첩되는 '7광구 대륙붕'은 '25.6월'을 기점으로 해양분쟁의 뇌관이 될 전망
 - * 韓·日 대륙붕협정 파기 可 ⇒ 日 영향력 확대, 中 개입 본격화(유전개발)

< 주변국은 해양력 확장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해양 경비력을 강화 >

- **(中 회색전략)** 해경국 전력 대폭증강, 민병까지 활용한 해양전략 추진
 - '13년 국가해경국 출범(5개 기관 통합) 후 '18년 '무장경찰부대'로 이관
 - ※ 대규모 세력 증강 등 준군사조직화, 해경법 제정(관할범위 규정 無, 공세적 팽창 可)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자국 영유권 주장 해역에서 선박정보 통보 의무화, 불응시 강제조치 可)
 - 민간 어업인(18~35세)을 해상민병대에 의무적 편제(약 30만 명, 22만 척)해 군사지원(물자운송, 해상시위, 정보활동) 및 불법조업지 집단행동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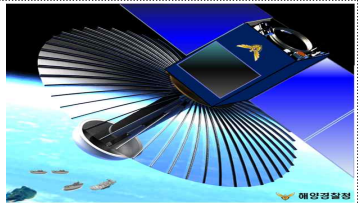
- **(日)** 국가수반 중심 해양전략 추진, 해양력 강화 핵심 수단으로 해상보안청 활용
 - '06년 독도 해양조사 분쟁 후 총리실 직속 '종합해양정책본부' 출범('07년), 내각정보회의 해상보안청 추가('08년) 등 국가 종합적 해양전략* 실행
 - * 국가안보전략('13년), 해상보안 강화방침('16년), 해양상황파악(MDA) 체계 강화 결정('18년) 등
 - 中 회색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 등 국제 우군확보에 해상보안청 활용*
 - * **White Hull Diplomacy(백색함대 외교)**: 比('98년), 臺灣('00년), 馬聯('05년), 베트남('13년), 印尼('14년) 해상치안기관 日 영향下 설립 → 해양재난 안보정보 제공, 영향력 확대
- **(美)** '회색전략' 견제를 위해 동아시아로 '해안경비대(해양경찰)' 활동 확대
 - '19년 최초로 中 견제·北 제재를 위해 해안경비대 경비함(버솔프함) 파견 후, 남중국해 → 서해까지 활동 확대 및 국제 합동훈련 강화

< 해양패권 시대, 세계 각국이 해양 경비력을 강화하는 이유 >

- ▶ 전면적 군사분쟁 우려 최소화
- ▶ 中 회색지대 전략(軍으로는 해상민병 등 대응 곤란)
- ▶ 국제규범(UN해양법 협약) 속 비난 회피(군사력 강화 < 인류 보편적 공공가치 강화)
- ▶ 국제 우군 확보(개도국 대상 공공 외교 강화, 해양안보 역량 및 해양 정보 교류협력 확대)
- ▶ 국가 해양집행력 효율적 활용(해양안보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및 치안 역량도 강화)

2 추진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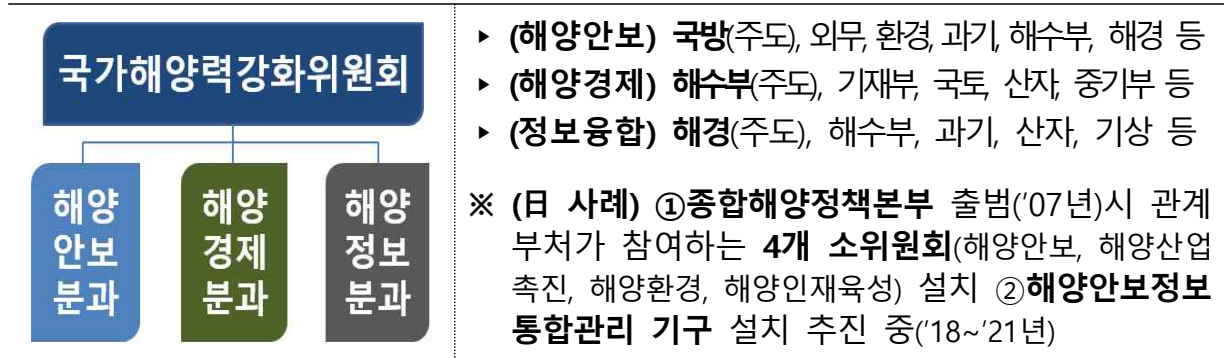
- **(인공위성)** 韓·美 미사일지침 개정('20.7)을 계기로 우리 해역 24H 상시감시 및 위기대응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 사업 진행('22~'30년)
 - * 국가안보 관련부처와 협업(예타심사 완료), '22년 사업 착수 및 '25년부터 위성 발사
- ▶ (사업 목적) 해양안보·재난·치안 등 해양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초)소형 위성 기반 상황인식 체계 구축
 - ▶ (개발 위성) (초)소형급(100~150kg급) SAR*위성 군집운영
 - * **Synthetic Aperture Radar(합성개구레이더)** : 전천후 관측


- **(드론)** 함정 탑재용 드론을 대형함정 8척에 순차적 배치(~ '21.12월)
 - **(대형함정)** 동해 북방해역 전담 함정(3,000톤급 / '24년 2척 배치) 및 서해 전력증강 함정(3,000톤급 '25년 1척 배치) 신규 건조 진행 중

3 향후 과제

○ (역량결집) 해양전략을 총괄할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 부처별 분산된 ▲안보 ▲경제 ▲정보 역량을 결집, 국가 해양경비 전략을 총괄할 '(가칭)국가해양력강화위원회' 신설 검토



< (해외사례) 美·日·中 국가 해양전략 체계 현황 >

- ▶ 美·日·中 등 해양강국은 '모든 위협은 해양으로부터 유입'된다는 개념을 설정
- ▶ 해양전략 컨트롤타워 설치, 정보융합을 통한 해양상황인식(MDA) 강화, 해양 치안기관(해양경찰) 역할·활용 확대 등 해양력 강화에 매진

구분	미국	일본	중국
컨트롤타워	· 백악관 국가해양위원회('10~)	· 총리실 종합해양정책본부('07~)	· 국가해양위원회('13~)
주요 정책 및 결정	· 해양보안전략과 MDA백서('01) · 국가안보대통령훈령 41호 (NSPD-41, '04) · 해양안보 국가전략(NSMS, '05)	· 해양기본법 제정('07) · 해양기본계획('08, '13, '18) · 국가안전보장전략('13) · 해양상황인식(MDA) 강화('18)	(명확한 자료 확인 어려움) · 해경법 제정('21) · 해상교통안전법 개정('21)

○ (현장대응) 주변국(中·日) 대응가능 수준으로 분쟁위기 해역 경비역량 확보

- 경비력(대형함·항공기)을 中·日의 37%에서 50% 수준으로 상향 하도록 대형함 9척 추가 확보, 무인헬기·장거리무인기(8대) 도입 검토

※ 부족한 전력은 일사분란한 지휘통솔체계 구축(경비작전본부 신설) 으로 보완 검토

< 한·중·일 해경 전력 비교 >

각 국 해상치안기관	대형함(현재 주변국 36% 수준)		항공기(현재 주변국 38.5% 수준)	
	2012년	2020년	2012년	2020년
한국 해양경찰청	33척	35척(+2)	22대	26대(+4)
중국 해경국	40척	130척(+90)	10대(추정)	50대(추정, +40)
일본 해상보안청	51척	66척(+15)	73대	85대(+12)

출처 : 외국 입법·정책 분석(국회 입법조사처, '21.8.19.), 日 해상보안리포트(2012~2020) 등

2. 민·관 협력에 의한 선진 해양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① 추진 배경

- **(국가주도 안전관리 한계)**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광활*한 우리 바다를 국가자원만으로 관리 한계 ▶ 민·관 협력 활성화 필요
 - * 대한민국 EEZ 면적 : 48만km², 연안해역 면적(12해리): 9만km², 해안선 : 14,962km
 - ※ ('19년) 항만물동량: 16억43백만톤, 어업생산량 383만톤, 해양관광이용객 2억68백만명
- **(선박/연안사고 지속)** 최근 3년간 선박사고는 연평균 3,366건, 사망자 164명, 연안사고는 연평균 700여건, 사망자는 120여명이 지속 발생
 - *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유조선 등 위험물운반선 등 증가로 대형재난 개연성 증가
 - * 도서개발 등에 따른 해양레저·관광객 등 연안이용객 증가로 안전사고 가능성 점증
- **(비효율적 예인체계)** 단순 고장선박 등 해경 주도 예인체계* 운영에 따른 대형재난 등 유사시 치안공백 우려, 민간예인산업 침체 등 초래
 - * 최근 3년간('18~'20년) 조난선박 예인건수는 6,202건, 이 중 해양경찰이 2,806건(45.2%)을 예인하였고 이 중에 해양사고가 아닌 단순고장 등 비긴급 예인이 2,618건(93.3%)에 달함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선박사고 관련 민·관 협력 〉

- **(민간해양구조대 운영)** 「수상구조법」 제30조 의거, 선박사고 발생 시 민·관 협력에 의한 사고 대응을 위해 민간구조대 9천3백여명('21년) 운영
 - * 최근 3년간 발생한 선박사고(11,032척) 중 민간자원이 22%(2,472척) 구조
- **(민간해양구조대 역량 제고)** 민간의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다방면의 민간자원* 확충 및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훈련체계 운영
 - * ('21.9월) 선박구조 5,376명 수중구조 1,043명 수상구조 610명 드론 533명 서퍼 136명 봉사 1,606명
- **(민간예인 활성화 연구)** 민간예인 체계개선 방향을 포함, 「(가칭)민간수상구조 등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위한 법제 연구용역* 실시 ('21년)
 - * 민간구조 활성화를 위한 예인체계 개선, 예인실비 보상체계 마련 등

〈 연안사고 관련 민·관 협력 〉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연안사고예방법 제17조 의거, '21년부터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주민 등을 연안안전지킴이(168명)로 위촉·운영 (5~10월)
 - 사고 다발지역 등 분석, 연안안전관리가 시급한 위험구역 84개소 배치·운영 결과, 인명구조, 안전계도 등 내실있는 성과 거양*
- * (5~9월 성과) 인명구조 12명, 사고위험자 안전계도 77,075명, 시설점검 13,298건
- **(연안안전지킴이 효과)** '21년 연안안전지킴이 168명을 배치·운영한 곳에서 최근 5년 평균 대비 연안사고 발생 14.2건, 사망자 28명 감소(5~9월)

〈 연안안전지킴이 배치 전·후 연안사고 증감현황(5~9월) 〉

구 분	배치 前 ('16~'20년)	배치 後 ('21년)	증감
연안사고(건)	63.2	49	14.2 ↓
사망자(명)	7.8	5	2.8 ↓

* 출처 : 해양경찰청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

3] 향후 과제

- **(법령 정비)** 민간구조자원의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및 활성화하기 위한 「(가칭)민간수상구조 등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 민간해양구조대 역량 강화, 국가지원보상체계 개선 등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완료('21.9월)
- **(민간해양구조대 효율화)** 민·관 협력 내실화를 위한 민간해양구조대 동원시스템 고도화, 구조교육·훈련 강화, 민간자원 확충 등 추진
- **(민간 예인체계 정립)** 해경의 조난선박 예인기준 검토 및 非긴급 선박 예인 시 수익자 부담원칙 정립, 민간예인산업 육성기반 조성
- **(연안안전지킴이 확대)** 사고 예방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위험구역 500개소에 연안안전지킴이 1,000명 배치 및 운영 고도화* 추진
 -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관리 훈령 제정, 관리시스템 도입, 전문 교육·훈련체계 마련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전 안전규제 신뢰성 제고

① 추진 배경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17.10), 월성원전 삼중수소 언론 보도('21.1) 등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국민이 직접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요구 증대
-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원자력안전규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확대 및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국민참여 정책수립)** 원안위의 비전·정책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묻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 수립
* (국민참여단 구성) 일반국민 120명, 관계자·전문가 50명, 국민기자단 30명
 - 국민참여단 숙의워크숍('20.10), 분과위원회('21.3~5)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담은 국민제안서를 작성하여 원안위 위원장에게 제출('21.6)
※ 원안위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종합계획 수립('21.12 예정)
- **(민간조사단 운영)** 월성원전 부지 내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 관련 언론 보도('21.1.7) 이후 비계획적 유출 여부에 대한 논란 확산
 - 원안위는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위한 '민간조사단'과 국민의 시각에서 조사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안을 제안하는 '현안소통협의회'를 구성·운영('21.3~)
 - 월성원전 삼중수소 조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조사현황을 공개하고, 「월성원전 삼중수소 제1차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21.9)
- **(정보공개 확대의 법적 근거 마련)** 「원자력안전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21.6공포, '22.6시행)

-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유센터를 구축·운영하는 등 국민 신뢰 증진의 기반 마련

< 원자력안전소통법 주요내용 >

구분	기존	개선
① 공개 주체	규제기관	정보생산자 (원안위, 사업자 등)
② 공개 대상	나열된 정보	모든 정보 (비공개 정보 제외)
③ 공개 방법	ON-LINE	ON・OFF-LINE (정보공유센터)
④ 공청회	사업자 주관	규제기관 주관 신설
⑤ 원자력안전협의회	법적근거 없음	법적근거 마련 및 역할 강화

③ 향후 과제

- **(국민참여 정책수립)** 정책수립과정에서 국민참여절차를 제도화하여 국민참여시스템을 원안위 전반으로 확산
※ 국민참여 정책 대상 확대, 국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마련 등
- **(민간조사단 운영)** 원전 현안조사에 대한 민간 참여가 필요할 경우 적기에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민간 조사단의 법적 근거, 절차, 권한 등
- **(정보공개 확대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 원자력안전정보, 정보공유센터 지정기준 및 운영 세부사항,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지침, 지역주민 제공 정보의 종류 및 방법, 협의회 구성·운영 등

2.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안전관리체계 구축

① 추진 배경

- 방사선이용기관의 지속적 증가(연평균 약 5%)와 라돈침대 사례 등으로 방사선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규제 수요 증가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방사선이용기관 수(개)	7,474	7,937	8,314	8,719	9,142	9,495

-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인접국 방사능재난에 대한 국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체계 강화 필요

2 추진현황 및 성과

- **(종사자피폭 저감)** 작업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 및 이용기관 안전검사 강화**, 피폭한도 근접 종사자 사전주의 통보(17년~) 등 다각적 정책으로 피폭선량 저감

* 전용교육장 운영(17~), 콘텐츠 다양화(17년 9종 → '21년 15종), 이러닝 및 심화교육 개설운영(20~)

** 취약분야(투과검사 등) 불시·특별 점검, 연속서면검사 제한(20~) 등

- 방사선위험에 취약한 투과검사 사업장 안전강화 법령정비('18, '21), 영세업체 안전장비 지원('18~20) 등 취약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종사자 평균 피폭선량 (mSv)	0.55	0.40	0.36	0.31	0.33
투과검사 종사자(고위험 분야) 평균 피폭선량(mSv)	1.24	1.02	0.69	0.57	0.59

-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대상 확대*, 산업현장 안전컨설팅 및 안전관리자 포럼 실시 등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추진('21~)

* 현직 2만명 → 퇴직자 포함 19만명

- **(생활방사선 안전강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개정('19.7월 시행)하여 원료물질 유통관리 및 가공제품 안전관리 강화

- 침구류·장신구류 등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결함 가공제품을 사전에 통제

- 실태조사(매년),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19.9~) 등을 실시하여 유통 중인 가공제품의 방사선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기준 초과 확인 시 수거 등 조치

※ '17년 이후 매트리스, 베개 등 안전기준 위반 제조업체(30개社) 대상 행정조치

- **(방사능감시 인프라 확충)**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 강화를 위해 주요 공항·항만에 방사선감시기 설치 및 운영 지속 확대

※ 감시기 수(누적) : ('17) 116대 → ('18) 122대 → ('19) 128대 → ('20) 134대 → ('21) 138대(예정)

- 전국토 생활주변 방사능 이상상황 감시 강화를 위하여 실시간 감시기 미설치 지자체에 감시기 신규 설치

※ '16년: 160대 → '20년: 194대 → '21년: 214대(예정)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비 해양 방사능 감시 확대 및 정보공개 강화

※ 삼중수소 분석지점 확대(22개→32개소) 및 조사주기 확대(연 1회→4회)

※ 우리나라 주변 해양 32개 지점에 대한 해수방사능 분석결과를 분석완료 즉시 공개

-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개편)** 대규모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개편
 - 방사능재난 지휘체계를 행안부와 공동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인 주민보호체계 구현('21.6월 방사능방재법 개정)
 - ※ 원안위-행안부 공동차장 체제운영, 행안부 소속의 주민보호지원본부 신설 등
 - 방사선피폭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을 기존 23개에서 31개('20년)로 확대

③ 향후 과제

- **(부처협업 강화)**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방사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 방사선방호 기본원칙 수립, 방사선방호정책 조정·심의 체계 마련, 방사선 안전 업무에 대한 범부처 협업·조정 활성화 필요
- **(광역현장대응체계)** 대규모 원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역별 광역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 추진
 - ※ 울주 현장지휘센터 준공('21.하반기), 한울권 현장지휘센터('22년 부지매입, '24년 준공예정), 한빛권 현장지휘센터('22년 부지선정 등, '23년 실시설계, 25년 준공예정)
- **(국내 해수방사능 감시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비 조사 강화
 - ※ (조사정점) ('21년) 32개소→('22년) 34개소(최남단 아래에 2개 정점 추가)
 - ※ (조사주기) (세슘-137) ('21년) 연4회(6개정점 월1~2회)→('22년) 연6회(6개정점 월1~2회), (삼중수소) ('21년) 연1회(6개정점 연4회) → ('22년) 연4회(모든 정점)

3.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① 추진 배경

- **(규제 독립성 강화)** 원자력 규제-진흥 분리 및 규제독립성 확보라는 국제규범 준수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11.10)
 - '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위원회 소속이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됨에 따라 '규제-진흥 분리'의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미흡한 상황
 - *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기본안전원칙에 국가의무로서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효과적 분리 강조, 국제 원자력안전협약 CNS(Convention on Nuclear Safety, 80여개국)도 원자력 규제와 진흥의 분리를 명시
 - ※ 총리는 과기부 「원자력진흥법」 제5조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장임

- **(상임위원 확대)** 원안위 위원 9명 중 비상임 위원이 7명(상임: 위원장 1, 사무처장 겸임 위원 1)으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안전의 심도있는 검토에 한계
 - 원안위 회의는 원자력시설 인·허가, 승인, 취소 등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관련 중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나,
 - ※ 원안위 회의 개최 횟수 : ('11.10~'12.10) 9회 → ('20.10~'21.10) 21회 (월평균 2회 개최)
 - 현재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 제외 시 유일한 상임위원이 사무처장도 겸임하고 있어 객관적·중립적 심의에 제약
 - ※ 방통위(상임위원 5명), 공정위(상임 5), 인권위(상임 4), 금융위(상임 4) 등 국내 위원회 부처들은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의 지위를 분리하여 운영 중

2 추진현황 및 성과

- 원안위 소속 변경 및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임 금지 등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
 - 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을 분리하는 원안위법 개정안 발의('20.9.21),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심사 및 의결('21.6.23)

3 향후 과제

- 원자력안전규제 독립성 확보 및 규제기관 위상 강화를 위해 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 확대를 통한 원안위 심의의 책임성 제고 추진
 - 원안위를 원자력진흥위원장인 총리 소속에서 분리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함으로써 원자력 진흥-규제 분리 및 규제 독립성 확보
 - 원안위 안전의 주도적 검토 및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원안위 상임위원 수 확대를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 ※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원자력규제기관도 상임위원제(5명)로 구성·운영 중

외교·통일·안보 분야

1. 외교부	341
2. 통일부	355
3. 국방부	365
4. 병무청	376
5. 방위사업청	381

외 교 부

1. 코로나19 대응(국민안전과 경제활동 보호)

① 추진 배경

- '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외국민(해외 일시체류 우리 국민 포함) 이동 제한(국경폐쇄, 통행금지 등) 및 현지 의료 서비스·물품 접근 관련 애로 해소
- 세계 각국의 외국인 입국제한 및 봉쇄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 비즈니스 활동상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필요성 급증

② 추진현황 및 성과 ('21.10월말 기준)

- **(국민안전)** ▲ 재외국민 귀국·현지복귀 지원* ▲ 세계 각국 입국제한 현황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 등 안전 관련 정보 제공**
 - * 재외국민 귀국 지원 122개국 62,734명(정부임차 전세기 7개국 2,000명 포함), 국내 일시체류 재외국민 현지복귀 지원 46개국 22,639명
 - ** 총 185개국 해외입국자 제한조치 상황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매일 공지, 전세계 국가·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20.3월~, '21.11.13까지)
- **(의료 지원)** 재외국민 대상 각 부처 의료서비스 제공 적극 협력, 의료·방역물품 해외이송 지원
 - **(의료서비스)** ▲ 비대면 원격진료 지원* ▲ 현지 공관 통한 의료정보 제공
 - * ▲ 국군의무사령부 「재외국민 화상의료상담서비스」 ▲ 소방청 「재외국민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 민간의료기관 「재외국민 비대면진료서비스(유상)」
 - **(물품 이송)** ▲ 마스크 반출 허가 지원(69개국, 150만장) ▲ 외교행낭으로 의료물품(산소발생기, 진단키트 등) 운송 지원

- **(기업활동 지원)** 해외진출 기업인·기업들의 신속한 출입국 및 기업 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 (기업인) 국가별·사안별 예외입국(23개국) 지원, 우리기업의 해외출장 수요가 많은 국가 대상 '신속통로'(6개국) 도입
 - ※ 우리 기업인 약 3만여명의 예외적 해외입국 지원('21.10월말 기준)
 - (기업) 재외공관의 「기업활동지원협의회」 활성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20년 131회, '21.10월 기준 106회 개최)
 - ※ (사례) 중국·인도의 봉쇄조치로 자동차 부품생산 업체 가동 중단 상황에서, 상대국과 즉각적인 교섭으로 부품 신속 확보·공장 가동 정상화 등
- **(방역물품 수입·수출)** 외교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속한 교섭으로 **코로나19 초기 방역물품 긴급 조달*** 및 우리 방역물품 해외진출 지원**
 - * ▲ R사 코로나19 검사 진단시약 100만개 확보 ▲ 중국산 마스크(N95 80만장 및 수술용 420만장) 확보 ▲ 인도네시아 위탁생산 방호복에 대한 인니측의 수출 금지 시행 후 2주 만에 해제 합의 등
 - ** 코로나19 방역물품 해외진출 지원 범정부 T/F 구성·운영 → **우리 방역물품 해외진출 효과적으로 지원**(~'21.8월 관세청 통관 기준, 190개국에 약 56억 달러 규모의 진단키트 수출)

③ 향후 과제

-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재외국민 안전 확보 및 경제교류 활성화 노력 지속
 - (재외국민 안전 확보) ▲ 영사콜센터 서비스 고도화 ▲ 본부·공관 합동 도상훈련 ▲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 담당인력 교육 등을 통해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 (해외여행 재개 대비) ▲ 대국민 안전여행 홍보 ▲ 여행업계·선교단체·기업 안전간담회 개최 ▲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스 참여 확대 등 해외여행객 급증 대비 안전의식 제고 노력
 - (우리기업 활동 지원) ▲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외교부 훈령, '21.9.24)' 제정에 따른 재외공관의 기업지원체제 정비 ▲ 본부·재외공관 경제담당관 교육 강화

2.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① 추진 배경

-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및 한반도상 군사적 긴장 지속 상황 해소 긴급요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토대 마련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 정부는 지난 4년간 역사적인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대화를 견인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여건 조성
 - (대화 여건 조성) ▲'17년 '베를린 구상' 등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이래 ▲'18년 北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로 대화재개 여건 마련
 - (정상회담 개최) 남북 정상회담(3회), 북미 정상회담(2회) 및 남북미 정상 회동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남·북·미 정상 의지 명문화 및 ▲남북·북미 관계가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 구도 창출 등의 성과 거양
- ※ '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4.27, 5.26, 9.18-20) ▲최초의 북미정상회담(6.12) '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2.27-28) ▲역사상 첫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6.30) 등

<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 주요 결과 >

- ▶ **(4.27 제1차 남북 정상회담 : 판문점 선언)** ▲남북관계 전면적·획기적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 확인 등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 등 확인
- ▶ **(5.26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 재차 표명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 등 재확인
- ▶ **(6.12 제1차 북미 정상회담 : 싱가포르 공동성명)**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동참 ▲4.27 '판문점 선언' 재확인 및 북한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력 공약 ▲유해 송환, 전쟁포로·실종자 유해 발굴 등 합의
- ▶ **(9.19 제3차 남북 정상회담 : 평양공동선언)**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 합의 ▲6.12 '북미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미측이 상응조치를 취할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추가조치 의사 표명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등 합의 및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 채택

- **(대화 재개 노력)** '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가 교착상태
이나,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화 재개 방안 모색중
- **(한미 공조)** 미국과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목표 달성 노력 지속
 -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21.5.21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외교적 기반 마련*, 이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 지속중
 -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 목표 재확인 ▲기존 남북북미 합의에 기반한
대화외교 중요성에 공감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확보
 - 미측도 ▲대북 적대시 의도가 없으며 ▲언제·어디서든 조건없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對北 메시지 지속 발신중
- **(종전선언 제안)** 대통령,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1.9.21)을 통해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완전한 평화의 출발점으로서 종전선언 재차 제안
 - 이후 한미 양국은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종전선언 관련
심도있고 진지한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중
- **(국제사회 건설적 역할 견인)** 중·러·일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양·다자
교류 계기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역할 견인 노력 지속

③ 향후 과제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노력 지속
- 한미간 완전히 조율된 전략 하에 북한의 대화 복귀·견인을 위한
노력 지속 경주
- 남북관계·북미관계가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 구도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실질적 계기 마련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주요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및 우리 정부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노력 지속

3.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 외교

① 추진 배경

- 주변 4국(미·중·일·러)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익 증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및 역내·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 추진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한미)**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반도·동북아 지역 안보 및 글로벌 이슈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조
 - * ▲ 정상회담 10회 ▲ 남북미 정상회담('19.6월) ▲ 외교장관회담 23회 등
- **(실질성과 달성)**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 미사일 지침 종료 ▲ 용산기지 일부 포함 16개 주한미군 기지 반환 합의 등 성과 도출
 - *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2회) 및 남북미 정상간 판문점 회동 실현
- **(당면과제 협력)** ▲ 백신협력 ▲ 기후변화 대응 ▲ 아프간인 이송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있어서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 강화
- **(한중)** 정상·고위급 전략적 소통 강화* 및 경제·보건·인적교류 등 각 분야 실질협력 진전**을 통해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 노력 경주
 - * ▲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합의 결과」 발표('17.10월) 및 대통령 방중('17.12월) ▲ 정상회담 6회, 통화 6회 ▲ 외교장관 회담 14회, 통화 5회
 - ** 코로나19 상황 하 **한중 신속통로 구축('20.5월)** 등 경제·인적 교류 활성화 노력 지속 → (양국 간 교역액) '21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증가 및 올해 3000억불 돌파 예상
- **(한일)** 對日 '투 트랙' 기조(사안별 분리접근) 下,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미래지향적 발전 노력 지속 경주
 - **(실질협력 지속)** 한일 정상 및 고위급 교류·소통*을 통해 양국 간 현안 해결 및 인적교류 재개, 코로나19 대응 등 협력 강화 노력 지속 병행
 - * '17.5월 이후 ▲ 정상회담·환담 7회 ▲ 정상통화 14회 ▲ 총리회담 2회 ▲ 외교장관 회담·환담 26회 ▲ 외교차관회담·환담 5회 ▲ 국장협의 22회 등
 - **(투트랙 전략)** 독도 및 과거사 관련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한일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다층적 교류채널 활성화

- **(한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신북방정책 핵심 협력대상국인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 공동번영에 기여
 - **(정상·공공외교)** 긴밀한 정상·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활발한 공공·국민외교**로 양국 국민간 우호협력 관계 심화
 - * 국민방려('18.6월) 포함 정상 회담 5회, 외교장관회담 7회 등
 - ** ▲수교 30주년 계기 「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 기념 문화행사 ▲한러 대화(민간) ▲한러 지방협력포럼(지자체) ▲신북방청년미래개척단(청년) 등
 - **(기간산업 협력)** ▲조선('17년 이래 11.1조원 수주) ▲인프라(연해주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 약정 체결) ▲에너지 등 「9개 다리」 전략* 下 실질협력 심화 및 新성장동력 창출
 - * ① 에너지 ② 철도인프라 ③ 조선 ④ 항만항해 ⑤ 농림수산 ⑥ 보건 ⑦ 투자 ⑧ 혁신플랫폼 ⑨ 문화관광
 - ※ 러시아 대상 '16년 대비 '19년 ▲교역 66% 증가 ▲인적교류 91% 증가

③ 향후 과제

- **(한미)**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방역지침 준수 하 대면 방식으로 ▲고위·실무급 협의 ▲양국 간 협의체 정례화 ▲전문가 대상 아웃리치 ▲의회 외교 등을 적극 추진
 - 한미관계 발전 및 역내·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한미공조 강화, 주한미군 기지 반환 등 국민 체감 외교성과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
- **(한중)** '22년 한중수교 30주년 계기 고위급 교류 및 실질협력 증진을 통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추진
 -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활용하여 양국관계 발전 방향 수립 ▲'한중 문화교류의 해('21-'22)'를 통한 양 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 및 상호 이해 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적교류 활성화 등 추진
- **(한일)** ▲고위급 교류 등 대화·소통을 지속하며 현안 해결 노력 및 양국 관계 관리 지속 ▲피해자 중심의 해법 도출을 위한 국내 의견수렴 노력 병행
 - 현안과 별개로,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며 인적교류 재개 및 실질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 **(한러)**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우호협력 관계 심화를 통해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와 안정적 발전 지속 추진
 - ▲긴밀한 정상·고위급 교류 강화 ▲「9개 다리」중점 협력분야 성과 거양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험 강화 ▲미래지향적 신규 협력분야 발굴 노력 지속

4. 신남방·신북방 정책

① 추진 배경

- 정부는 기존 미·중·일·러 4강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중
 - (신남방) 주요 교역대상국이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인 아세안·인도와의 상호 호혜적 협력강화를 위해 신남방정책 추진
 - (신북방) 평화와 번영의 신북방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을 위해 러시아 및 중앙아 5개국 등 신북방 14개국들과 협력 강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신남방)** ▲정상급외교 ▲인적·문화교류 ▲경제협력 ▲코로나19대응 등 다방면 성과도출 및 정책환경 개선
 - (정상외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19.11월) ▲신남방 11개국 정상 순방 완료('19.9월)
 - (인적·문화교류) ▲한-신남방지역 상호 방문객수 50% 이상 증가('16년 896만명 → '19년 1,345만명) ▲신남방 지역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
 - * ▲(베트남)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 ▲(인도 등 7개국)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 ▲제2외국어 채택 학교 수는 5년간 1.5배 증가('14년 4개국 157개교→'19년 6개국 243개교)
 - (경제협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20.11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20.12월) ▲한-캄보디아 FTA 서명('21.10월)
 - ※ 한-신남방지역간 교역액 28% 증가('16년 1,346억불 → '19년 1,719억불), 19년 해외 인프라 수주 비율 중 신남방 37.5% 차지
 - (코로나19 대응) ▲신남방 국가 코로나19 대응 지원(약 3,400만불 규모 진단키트, 방호복 등) ▲베트남·태국 백신 지원(총 186만회분)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 지원*
 - * 한-인니 기업인 출입국 간소화 도입('20.8월), 한-싱가포르 신속통로 도입('20.9월),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21.10월),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도입('21.1월) 등
- **(신북방)** 신북방 진출 활성화 방안 제시 및 중앙아 순방 경제 분야 후속조치 이행
 - (정상외교) 러시아 및 중앙아와 활발한 정상 교류를 통해 우리 신북방 정책에 대한 지지 및 협력 확보

- ※ **(러시아 5회)** ▲19.6월 G20 정상회의 계기 ▲18.11월 EAS 정상회의 계기 ▲18.6월 국민 방리 ▲17.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 계기 ▲17.7월 G20 정상회의 계기
- ※ **(중앙아 6회)** ▲우즈베키스탄 3회(21.1월 화상/19.4월 방문/17.11월 방한) ▲카자흐스탄 2회(21.8월 방한/19.4월 방문) ▲투르크메니스탄 1회(19.4월 방문)
- **(경제협력) ▲한·러/중앙아 교역액 88% 증가**(‘16년 154억불 → ‘19년 290억불) ▲투자 22% 증가(‘16년 215억불 → ‘19년 263억불) ▲대규모 조선·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 * **(러시아)**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행 약정 체결(‘20.12월) ▲쇄빙 LNG운반선 등 총 45척/11.1조원 수주(‘17년 이후)
 - * **(중앙아)** ▲카자흐 알마티 현대차조립공장 준공(‘20.10월) ▲투르크메 키안리 가스화학 플랜트 준공(‘18.10월)
- **(포럼 개최)** 우리 주도로 ‘07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통해 민·관 차원의 협력과제를 발굴, 제13차 포럼(‘20.11월) 장관급 격상 합의
- **(공공외교)** 청년세대의 유라시아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등 민간 공공외교 사업 실시
- **(기타)** ‘21.8월 카자흐 대통령 방한 계기 **홍범도 장군 유해를 봉환**, 애국지사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한-카자흐 양국민간 우의 증진 기여

③ 향후 과제

- **(신남방)** 신남방 정책 대상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 → 신남방 정책의 지속 추진을 통해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강화
 - ▲신남방 국가들과 고위급 교류 지속 등을 통해 양자관계 심화 ▲아세안 등 다자협력체 참여 지속 강화 ▲한-메콩, 한-해양동남아 등 소다자협력 강화
 - 신남방정책과 주요국 지역구상(미국, 호주, EU 등) 간 연계협력 가능 분야 및 실질 협력 사업 발굴 지속 추진
 -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측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간 시너지 강화 모색 등
- **(신북방)** 신북방 지역과의 지속적인 협력·교류를 통한 관계 강화 추구
 - 정상, 외교장관 등 코로나로 위축된 양자 고위급 교류 재활성화 및 한-중앙아 협력포럼(장관급) 개최를 통한 신북방 다자협력 지속
 - 한-유라시아 문화교류센터*(가칭) 설립을 통해 ‘신북방정책’의 효과성 제고
 - * 러시아·중앙아 등 구소련지역 12개국 대상(러시아 이외 여타 11개국과의 ‘22년 수교 30주년에 따른 신북방 협력 모멘텀 적극 활용)

5. 국제무대 선진국 외교

① 추진 배경

- 유엔 등 다자체제에 대한 기여 확대 및 글로벌 현안 관련 국제 협력 선도 노력 등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위상 강화*
 - * ▲ 정상 최초 5년 연속 유엔총회 참석·연설 ▲ UNCTAD 내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 변경 ▲ 2년 연속 G7 초청('20, '21) ▲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10위권 진입 등
- 강화된 위상·책임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통해, 민주주의·투명성·개방성 등 우리 핵심가치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 현안 논의 선도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포용적 국제협력 선도)** 다자주의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 연대 강화 및 다자주의 증진에 선도적 역할 수행
 -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국제협약·기구 탈퇴 등
 - 정상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코로나19 등 글로벌 위기에 대응한 '포용적 다자주의' 필요성 강조 및 국제 보건협력 증진 제안
- **(평화안보·인권)** 평화구축('19'22), 경제사회('20'22), 인권('20'22) 등 유엔의 핵심 이사국·회원국을 동시에 수임하는 등 평화안보·인권 분야 국제협력 논의 선도
 - 이밖에 ▲ 평화안보 분야 최대 회의인 '평화유지장관회의' 주최('21)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 추진('18~) ▲ 세계 신안보포럼 개최('21) 등 달성
- **(국제현안 주도)** G7 정상회의, G20 공동선언문 등 각 계기별로 ▲ 코로나19 ▲ 기후변화 ▲ 디지털 경제 등 국제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

< 계기별 국제현안 논의 내용 >

- ▶ **(G7 정상회의)** ▲개도국의 백신 접근을 위해 '22년까지 2억불 규모 지원 공약
▲해외 석탄발전 신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재확인, P4G 정상회의 성과 공유
 - ▶ **(G20 및 APEC)** ▲정상선언문에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제안 관련 내용 반영('20) ▲APEC 내 우리 주도 필수인력 이동 연구 최종 보고서 승인('21.9월) 등 국경간 이동 재개 포함 코로나19 대응 관련 논의 주도
 - ▶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19년, '21년)으로서 유사 입장국간 협력을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 ▲다자무역 체제 복원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국제 공조에 주도적 기여
- ※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19년, '21년), 동남아시아지역프로그램(SEARP) 의장국 ('18-'22년) 수임 및 'OECD AI에 관한 권고안' 마련 주도('19년), OECD 뇌물 방지협약 4단계 이행심사 수검('18년, '21년) 등

3 향후 과제

- **(국제기구 내 역할 확대)** ▲'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세계 신안보포럼 등 지속 추진을 통해 국제 현안 해결 논의 선도
 - 국제기구 분담금법 시행('221월)에 따른 전 부처 분담금 심의·조정을 통해 국제기구 재정기여가 국익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추진
 - 우리국민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고위직 진출을 위한 지원 체계화
- **(국제사회 기여 증대)** G20, OECD, APEC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에서 선도국으로서 기여를 증대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조화되는 국제 규범 창출 노력 지속
- **('25년 APEC 의장직 수행)** 우리나라 주요 관심사안을 의제화하여 이에 대한 APEC 역내 협력을 주도하고, 성공적 의장직 수행을 통하여 우리 국제 위상 제고 도모

6. 기후환경 대응 국제협력 강화

① 추진 배경

- **(기후외교 강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내적 모멘텀 제고* 및 우리나라의 선도적 기후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증대
 - * ▲ '20.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 ▲ '21.5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 '21.9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
- **(P4G 정상회의)** '21년 P4G 정상회의 개최* 계기, 녹색의제 주도를 통한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의 도약 및 녹색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강화
 - * '18년 제1차 P4G 정상회의 참석 계기 덴마크측의 차기 P4G 정상회의 개최 요청 및 '19년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의 P4G 정상회의 개최 발표
- **(COP26 정상회의)** 파리협정('15) 이행 원년에 개최되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계기 실질적이고 야심찬 기후행동 목표 발표를 통해 G7+ 국가 위상에 걸맞는 기후 리더십 발휘 추진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기후외교 강화)** 국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국과의 포용적 기후협력 강화
 - (기후협상 진전) 파리기후변화협약 세부 이행규칙 합의에 기여, COP26 통해 기후행동 모멘텀 유지 및 협상 추가 진전 노력
 - ▶ ('17~'19년) COP23~25(제23-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등 주요 공식·비공식 협상 등 참석
 - ▶ ('21년) 1차 UNFCCC 부속기구 회의(5.31.~6.17), COP26 사전총회(9.30.-10.2.), COP26(10.31~11.12) 등 참석
 - (정상외교) 대통령, 우리나라의 강력한 기후행동 의지표명 및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설적 제안 발표
 - ▶ (MEF) '21.9.17.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 참석,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의지 표명 ▲기후목표 상향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 기후 리더십 강화
 - ▶ (기타) 기후행동('19)·기후목표('20)·기후적응('21) 정상회의, G7 정상회의('21.6월) 및 G20('21.10월) 기후·환경세션에 이어 COP26 정상세션('21.11월) 참석

- (양·다자 협력) 주요국과 양·다자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 한미·한중·한일·한러 환경협력공동위,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21년 신설) 등의 정례 개최 및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참여

- (양자협정 체결) 국외감축 확보 기반 조성을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지원*

* 베트남(기체결, '21.5월), 페루·스리랑카(문안 협의중)

- **(P4G 정상회의)**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21.5.30.-31.)를 통해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서의 입지 공고화

※ ▲기후행동 실천에 대한 국제사회 의지를 결집한 '서울선언문' 도출 ▲우리의 강화된 기후행동 공약 발표를 통해 저탄소 녹색경제 전환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 ▲민·관 파트너십 강화 ▲정상회의 트로이카 체제 구축 등

- **(COP26 정상회의)** COP26 정상회의에 참석, ▲2030 NDC 40% 상향, ▲국제 메탄서약 가입 ▲탈석탄 가속화 등 발표 통해 경제, 기술 선진국에 이어 기후 선진국으로 발돋움 계기 마련

③ 향후 과제

- **(기후외교 강화)** 상향된 2030 NDC 발표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기후 행동에 적극 동참 및 온실가스 감축, 개도국 적응 지원 관련 기후 리더십 발휘

- 미국·EU가 공동 추진하는 '글로벌 메탄 서약' 참여를 통해 파리협약 목표 이행 및 기후위기 대응 논의 선도

- 향후 미국, EU 등 주요국 및 아세안 등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한 포용적 탄소중립 실현 노력 지속

- **(P4G 정상회의)** P4G 이사회 의장국('21-'23) 수임에 따른 P4G 관련 제반활동에 적극 참여 및 기여 확대

- P4G 의장국으로서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 논의 주도 및 정례 실무 협의 등을 통해 P4G 사무국 및 회원국과의 협력 기반 강화

- 개발도상국의 ▲포용적 녹색성장 ▲SDGs 달성 ▲파리협정 이행 등 지원을 위한 P4G 기여금(400만불) 지원

7. 신흥·핵심기술 관련 국제협력 강화

① 추진 배경

- **(주요국 기술경쟁 심화)** 주요국들은 산업경쟁력 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신흥·핵심기술 개발을 사활적 이익으로 보고 전력투구 중
 - 미국은 중·러의 첨단기술 정책적 육성에 대응하기 위해 우방국과의 공조* 강화를 추진 중인바, 전략적 접근을 통한 우리 국익 극대화 필요
- ※ '21년 ▲Quad 핵심·신흥기술 실무그룹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회의 출범
▲우리나라, 일본, EU와의 정상회담 계기 사이버·신흥기술 관련 협력 합의 등
- **(신기술안보 국제 논의)** 국제사회는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 기술 개발·사용 관련 규범 마련과 표준화 등을 적극 모색
 - ※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신기술의 영향' 유엔 안보리 비공식회의 개최('21.5월, 안보리 최초의 신기술 논의), 사이버안보 제하 최초의 안보리 공식토의 진행('21.6월)
- **(한미정상회담)** '21.5월 정상회담시 양국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백신, 양자·바이오 등 신흥핵심기술, 우주 분야 등 포괄적인 기술협력에 합의
 -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 및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AI, 5G·6G, Open-RAN 기술, 양자(quantum)기술, 바이오 기술 등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양·다자 협력)** 유사입장국(미국, 유럽 등) 및 유엔과의 논의에 적극 참여
 - (ICT) 미국 주도 프라하 5G 안보 컨퍼런스 참여, 한미 ICT 정책포럼 운영, 5G Open-RAN 기술 개발 협력('21.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추진 중
 - (사이버) 유엔 규범 논의 참여, 11개국 및 EU, NATO와 사이버정책협의체 운영, 한·미 사이버워킹그룹 신설('21.9월),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참여
 - (민감기술) 미국 주도의 민감기술다자행동(MAST)* 참여
- ※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0여개국 참여, 각국의 민감기술 보호 정책·제도 및 협력 가능방안 논의

- (백신)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전문가그룹* 출범(6.9), 이후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발표 및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발족(8월)

* ▲원부자재 공급 ▲R&D ▲기업간 협력 등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 관련 협력방안 논의

※ ▲9.21 한미 17개 백신 관련기업 및 연구기관 간 백신 공동개발 등 총 8건의 기업간 및 연구기관간 MOU 체결 ▲美 Cytiva社 국내 투자의향서 제출 성과

- (우주)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우주 외교를 적극 추진, 우주기술 축적 토대 마련 및 독자적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지원

※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21.5.26)을 통해 NASA와 달 탐사를 위한 기술협력 합의, 한미 위성항법 공동성명(5.27) 및 UN 국제위성항법위원회(ICG) 가입(10.19)을 통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자 및 다자협력 추진

- **(국제논의 선도)** 사이버, 신기술 등 새로운 안보위협 관련 열린 국제논의 선도를 위한 세계신안보포럼 출범('21.11.16.-17.)

-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등 민·관·학 인사 참여 예정

③ 향후 과제

- 미국 등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면서 중·러 등 다양한 진영이 참여하는 유엔 차원의 협력 확대

- 신흥·핵심기술 분야별 양·다자 외교 강화를 통한 국익 증진 추진

- (사이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사이버범죄 협약 성안 논의 참여('22년 개시 예정), 사이버범죄에 관한 부다페스트협약 가입 추진 등

- (백신) 한미간 백신협력 지속 강화, EU 등 선도국들과 기술 공동개발,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등 파트너십 확대

- (우주) 한미간 정상회담 합의내용을 토대로 협력 심화, EU 등 우주강국과도 우주기술 축적을 위한 전략적 협력 추진

- 매년 개최되는 세계신안보포럼을 열린 신안보 논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신기술안보 관련 국제논의에 기여 추진

- 과학기술거점 재외공관(40개)과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적극 활용, ▲정보 수집 ▲협약채널 강화 ▲민간협력 지원 등 추진

통 일 부

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

① 추진 배경

- 북한의 지속된 긴장고조 행위로 한반도 안보 불안 증대 → ‘평화’ 최우선 추구
-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남북대화를 통한 비핵화 추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북미대화 촉진자 역할 수행
 - 남북정상회담 3회, 분단 사상 최초의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19.6.30) 성사
 - ※ 남북정상회담('18.4, '18.5) → 북미정상회담('18.6) → 남북정상회담('18.9) → 북미정상회담('19.2)
 - 남북정상 간 친서교환, 고위급·분야별 회담, 공동연락사무소 개소·통신선 연락을 통한 상시 소통 등을 통해 정세 관리, 비핵화 및 평화정착 여건 마련
 - ※ 고위급·분야별 남북회담 36회 개최,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 23건 체결
 - 하지만 '19.2월 북미 간 하노이회담 미합의 이후 남북관계 경색, 교착국면이 지속
-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 지대화 등 '9.19 군사 합의' 채택·이행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 ※ 대남 침투 및 국지도발 대폭 감소(2020 국방백서 등)
 - 2000년대(241건) → 2010년~2017년(264건) → 2018년~2021년 10월(1건)
 - 다만,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서해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정세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
-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 ▲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18.12), 철도 현지 조사('18.11~12) 등 ▲ 체육·사회문화 등 분야 민간교류 추진

-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포괄적 인도협력을 일관되게 추진
 ※ △이산가족 상봉('18.8.) 개최 및 화상상봉 등 상봉 준비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주요 국제기구 공여를 통한 인도협력 △인도협력 추진을 위한 대북제재 유연화 협의 등

③ 향후 과제

-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인도적 협력 추진, 종전선언 논의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계기 마련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남북관계 복원** 추진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이 장기간 중단 중인 바, 국민이 일상적 경험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체감할 수 있는 **남북 교류·인도협력 사업 재개** 필요

2.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추진

① 추진 배경

- 보건·방역·민생·재난·환경 등 한반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서 **남북 주민의 상생을 위한 협력 필요성 증대**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총평)** 남북 경색 장기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제재 등으로 협력 진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력 추진 노력 지속
- **(남북합의 이행 노력)** '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보건의료·산림·농축산 분야 등에서 합의 이행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남북관계 소강국면 장기화로 **후속 협의 중단**
 * 남북 간 '산림 분야 협력 등 환경 협력,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 합의
- **(보건의료)** 분과회담('18.11.7) 및 실무회의('18.12.12)를 통해 ▲감염병 정보교환 ▲감염병 진단·예방·치료 ▲포괄적·중장기적 방역 협력 등 합의, 남북간 감염병 정보 공유 등 노력

- (산림) 두 차례 분과회담('18.7.4, '18.10.22)을 통해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양묘장 현대화 시범사업 ▲산불방지 공동대응 등 합의 및 후속조치* 실시
 - * ▲산림병해충 방제약품 전달 및 공동방제 실시('18.11, 개성) ▲산림기자재공장 및 양묘장 현장방문('18.12, 평양) 등
- **(국제기구 협업 강화)** WFP·UNICEF·WHO 등 주요 국제기구와 상시적 안정적 협력 추진
 - ▲5개년도 MOU 체결(WFP '20.6.3, UNICEF '20.12.16) ▲WFP 「영유아·여성지원사업」 1,000만불 공여('20.8.13) ▲WHO 「모자보건 의료지원사업」 500만불 공여 결정('19.12) 등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상주 국제기구 인원 철수로 사업 추진에 차질
- **(민간·지자체 협력 활성화 지원)** 긴밀한 민관 소통 및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도협력 기반 구축 노력
 - '12년 이후 중단된 「인도협력 민·관 정책협의회」(통일부차관-북민협회장 공동의장)를 7년 만에 재개('19.6.21), 정례적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 지속
 - 국내 민간단체·지자체 대상 북한주민 접촉, 물자반출, 제재면제 등 지원
 - 민간단체 ▲기금 지원 확대(50%→70% 지원 등 '21.1.4. 「인도지원 처리 규정」 개정)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100억원) 추진('21.9.24)
 - ▲모든 지자체(243개) 대북지원사업자 일괄 지정 ▲기금 지원 가능 명시 등 제도 개선('21.9.14, 「인도지원 처리 규정」 개정)

③ 향후 과제

-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조성을 위한 협력을 남북관계 등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체계 구축
- 시급한 코로나19 등 방역협력에서부터 시작, 보건·민생·환경 협력으로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남북 교류협력 기반 구축
- 협력 방식 다변화를 위한 창의적·적극적 해법 모색 노력 경주,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협력 방식을 유연하게 찾아 나가기 위한 노력 지속
 -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글로벌 어젠다를 중심으로 남북이 상호 이익이 되는 개발협력 분야 중심의 사업 발굴 모색

3.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제도화

① 추진 배경

-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토대 구축 추진
- 다양한 주체의 참여 하 안정성·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추진 기반 마련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총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창의적 해법을 모색
 - 남북관계 경색, 코로나19 상황 등이 제한 요인, 남북관계 개선 시에 대비한 남북교류 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
- **(교류협력 재개)** 남북 정상간 합의(「4.27」 / 「9.19」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북미 간 하노이 미합의 이후 미진전
 - (철도·도로) ▲ 현지 공동조사(‘18.11~12월) 및 착공식(‘18.12월) ▲ 관련 자료 교환(‘19.2월) ▲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추진 기념식(‘20.4월) 및 착공 예정(‘21년말)
 - (산림협력) ▲ 산림병해충(‘18.8월) 및 양묘장 현장방문(‘18.11~12월) ▲ 병해충 약제 및 양묘장 현대화 협력 방안 협의 진행
 - (사회문화) ▲ 남북 단일팀 구성 및 합동 훈련(2018평창동계올림픽·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등) ▲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및 아카이브 구축 ▲ 민족통일대회(‘18.10월),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19.2월) 등 공동행사 진행
 - (접경지역) ▲ DMZ 및 접경지역 실태조사(‘20.5월~) ▲ 한강하구 남북공동 수로조사(‘18.11~12월) 및 우리측 제작 해도 북측 전달 ▲ 한강하구 시범항행 실시(‘21.9월 기준, 3회) 등
-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 남북간 호혜적 협력공간 발굴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성사

- (개별관광) 북한 '개별관광' 제안('20.1월), 이산가족·실향민을 중심으로 금강산 지구 시범방문(2~3회),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모색
- (작은교역) 대북제재 하에서도 반출입이 가능한 물품 중심, 남북간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교역'을 통한 민간경협 재개 도모
- **(지자체·민간 교류 활성화)** 지자체·민간과의 소통·협력 강화, 다양한 주체를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 (지자체 협력) 남북 교류협력의 실질적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위상 확립 및 중앙정부-지자체 간 소통·협력체계 공고화
 - ※ ▲지자체가 교류협력 주체임을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21.3월) ▲「지자체 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법정기구화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용 ▲통일부-시도지사협의회 간 MOU 체결('19.7.24) ▲지자체교류협력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 및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 등
 - (민간 교류지원) ▲경협 등 피해기업 지원 ▲인적왕래·대북 물자 이동 제반 절차 지원 등
 - ※ (경협 등 피해기업 지원)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투자·유동자산 지원(93개사, 1,239억원) 및 대출 금리인하(0.5%p, 7.17억원 규모),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 ▲개성공단 기업 투자·유동자산지원(165개사, 648억원) 및 금융·세제·고용안정 지원 대책 지속 시행
- **(교류협력 제도적 기반 강화)**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전면 개정 추진
 - ※ 「남북교류협력법」 정부개정안 국회 제출('21.1.22), 상임위 계류 중
 - 제정 30주년 계기 변화된 교류협력의 수요 반영, ▲방북 승인 거부 사유 구체화 ▲협력사업 중단결정 절차 및 경영정상화 지원 근거 마련 ▲우수 교역업체 인증제도 신설 등 사항 포함

③ 향후 과제

- 코로나19, 대북제재 등 남북간 교류협력을 둘러싼 현실적 여건을 고려, 남북정상 간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 재개 및 정상화 여건 조성
 - 여건 조성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철도·도로 등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협력, 한반도 신경제 구상 본격 가동
- 분권·협치 기조 하 민간·지자체의 다양한 교류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지속
-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지원

4.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① 추진 배경

- 남북은 '18년 「판문점선언」, 「9.19 군사분야 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합의, GP 철수 등 구체적 이행조치 마련
- 비무장지대를 남과 북,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국제평화지대로 조성 제안, 3대 과제* 제시('19.9.29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 *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지정 ▲DMZ 지뢰제거 협력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총평)** 남북간 협의 중단으로 우리측이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 남북협력 모멘텀 확보 노력
- **(남북협력 동력 확보)**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조사를 위한 기반 조성, 남북공동유해발굴 여건 마련
 - 통일부·환경부 등 4개 부처 DMZ 남측지역 실태조사 실시('20.5월~), 한강하구 습지 생태조사('20.11월~'21.8월) 및 지자체 민간선박 시범항행 지원
 - DMZ 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우리측 지역 지뢰제거 우선 진행
- **(평화 공감대 확산)** 국민들에게 DMZ 및 접경지역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평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DMZ 평화의 길 개방 ▲판문점 JSA 견학체계 개편·확대 ▲남북출입사무소 및 철거 GP 활용,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21.9월)
 - ※ ▲(DMZ 평화의 길) '19.4월~9월 15,057명 방문 ▲(판문점 견학) '19.5.1 재개 이후 총 365회 15,556명 방문,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잠정 중단
 - DMZ의 생태·문화 정보를 종합한 웹기반 「DMZ 평화지도」, 노선 정보 안내 「DMZ 평화의 길 모바일앱」, DMZ 출입관리시스템, DMZ 종합정보 등 평화적 이용 관련 「DMZ 통합시스템」 구축(~'22)
- **(법·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 DMZ 관련 남북합의 이행 및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 지원법」('20.10.20, 전해철 의원 발의) 국회 입법 과정 지원

③ 향후 과제

- 우리측 독자적 사업 추진을 넘어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격적 남북·국제협력방안 모색

5.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① 추진 배경

- 북한인권법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선순환하는 방향에서 북한인권 증진 추진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민족 동질성의 회복 추진
- 탈북민 지역사회 통합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공고화, 남북 주민 상생 도모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북한인권증진)** 북한인권 증진 정책 수립,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감대 확산 노력
 - ▲ 제2차('20~'22)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4) 및 집행계획(매년) 수립
▲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참여 ▲ 유엔 제3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19.5) 계기, 북측이 우리측 권고 중 4개* 수용 ▲ 북한인권실태조사('17.1~) 매년 실시 등
 - *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 이산가족문제 해결 ▲ 장애인 권리 증진 ▲ 국제인권협약 비준
 - 다만, 북한인권재단 출범,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 등 관련 이견 지속
- **(이산가족 문제 해결)** 남북공동선언 이행 노력 지속,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국군포로·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도모
 - ▲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18.8.20~26, 170가족 833명 상봉)
▲ 국내 화상상봉장 개보수('19.4) 및 추가 증설('21.8, 7개소) 등 남북간 합의 이행 대비 강화

- ▲「제3차 이산가족 법정 실태조사」(‘21.4~10) ▲영상편지·유전자 검사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 등 국내 이산가족 교류기반 사업 지속 추진
- ▲남북간 협의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촉구 ▲남북
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 및 관련 단체 재정 지원 ▲「국립6.25전쟁
납북자기념관」 운영(‘17.11~)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 지속

○ **(탈북민 정착지원)**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추진, 주요 지표 개선

- ※ ‘17 → ‘21년 간 ▲월평균 임금(178.7만원 → 216.1만원) ▲평균 근속기간(25.2개월
→ 31.6개월) ▲한국생활 만족도(73.6% → 76.4%)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및 정착지원금 지급금 증액 ▲자립·자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취업·창업·영농지원 등) 추진
- ※ ▲보호결정 제외 완화(‘19.1월, ‘20.12월) ▲지자체의 정착지원 책무 명문화(‘21.1월)
▲창업지원 규정 신설(‘21.1월) ▲정착기본금 인상(‘19.1월~, 700 → 800만원)
- ▲탈북민 모자 사망 계기 취약계층 대상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
(‘19~‘21년 취약계층 전수조사 5회 실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시행(‘19.9.2) ▲남북통합문화센터 개설(‘20.5),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

③ 향후 과제

- **(북한인권)**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선순환 구조 창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한반도 차원의 남북인권 증진
- 정치적 합의 등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축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 추진
- **(이산가족)** 남북간 협의 재개 시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면회소
복구·개소 ▲대면상봉 정례화 및 고향방문 등 교류 확대 및 다각화
- **(탈북민 정착지원)** 지자체의 행정자원 유기적 연계·활용 및 지역
적응센터·지역협의회 등의 실질적 역할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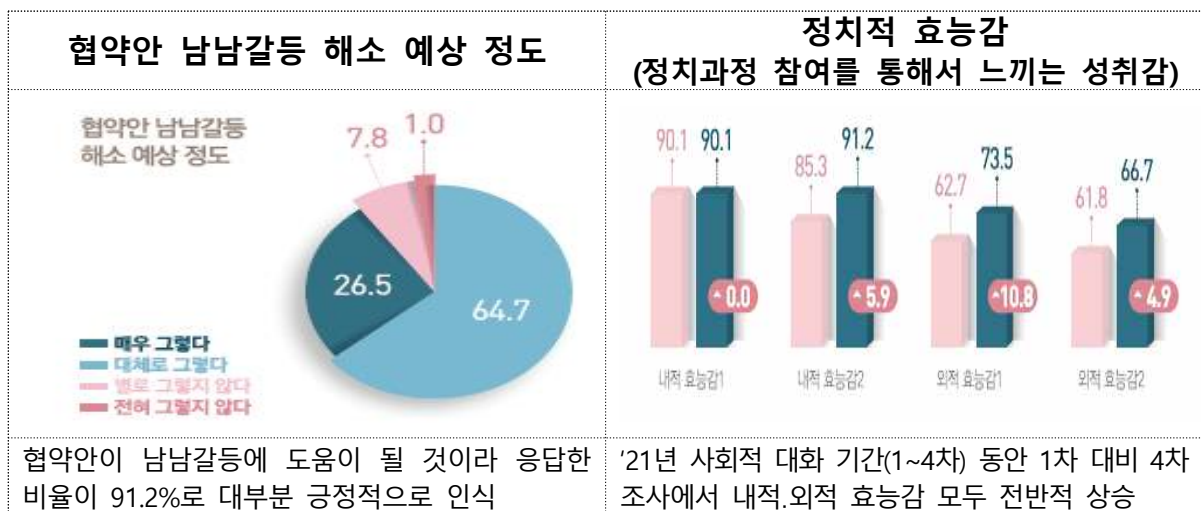
6. 통일국민협약을 토대로 전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

① 추진 배경

- 그간 통일·대북정책은 정부·전문가 주도로 수립,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
 - 통일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사회협약 형태로 공식화 추진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현황)** ‘민간주도, 정부지원’ 원칙하에 초정과 민간추진기구(통일비전시민회의) 주도로 ‘18~’21년간 60여회, 6,000여명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 실시
 - 서로 다른 이념 성향을 가진 시민들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 숙의토론을 통해 「통일국민협약안」 및 「권고문」 채택(’21.6.26)
 - ※ 시민참여단은 「통일국민협약안」과 「권고문」을 통일부 장관에 전달(7.5),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보고(7.8) 및 국회의장 보고(9.23)
- **(성과)** 남남갈등 해소와 국민적 합의 형성 기회를 제공
 - 참여자 인식조사 결과, 사회적 대화와 「통일국민협약안」이 남남갈등 해소 및 정치적 효능감 상승에 기여
 - 다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대국회 협조, 법제화 추진 등 미진



③ 향후 과제

- 대북정책과 통일문제에 관한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국민적·사회적 합의 도출, 국회 차원의 지지 및 전국민적 공감대 확보 노력

《 신규 추진 필요과제 》

새로운 대북·통일정책 수립·추진체계 구축

① 추진 배경

-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통일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의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및 객관적 북한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강화
-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 관련 국제사회와의 소통 활성화
-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국제사회와 북한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② 주요 내용

-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등)** 북한 관련 전체 자료를 빅데이터화 하고 AI 기반 분석 실시, 정책 수립 시 활용 및 대국민 공개
 - ※ '21년 현재 기본 인프라 구축 추진중(서버 구축, 분석모델 마련 등), '22년에는 인프라 확장 및 대국민 서비스 포털 구축 추진 예정
 - 한편, 국민들이 다양한 북한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한전문도서관 건립도 추진
- **(민관협업 플랫폼 구성)** 분야별(사회통합, 교류협력, 인도협력)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정책과제 발굴, 소통 및 추진방안 등 논의
 - ※ 분야별 플랫폼의 논의 내용을 '남북관계발전 정책포럼'(통일부 차관 주재, 전문가 참여)에서 종합,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등 정책에 반영
- **(통일공공외교 강화)** 남북관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증진, 우호적 국제 여론 형성을 위한 분야별·대상별 접근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및 해외 통일문화 공공외교 지원
-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추진)** 탄소중립·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여 북한이 관심을 표명한, 시급한 과제부터 추진
 - 대내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식량·농업 ▲보건·방역 ▲산림 ▲식수·위생 ▲재난·재해 등 개발협력사업 우선 검토
 - ※ 북한은 '21.7 SDGs 관련 VNR(자발적 국가보고서)를 발표, ▲기후변화 대응 ▲식량·농업 ▲식수·위생 등에 우선순위 부여

국 방 부

1. 북 핵·미사일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① 추진 배경

-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능력 구축
 - * 북 핵·미사일 대응 핵심전력 적기 전력화는 국방 전력증강 정책의 핵심 요소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전략표적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 ▲압도적대응으로 구분하여 핵심전력 확보 추진
 - (전략표적타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핵·미사일 등 도발 징후가 식별되는 경우, 실시간 핵·미사일 위협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 확보
 - * F-35A, 장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TAURUS) 등 도입
 - (한국형미사일방어) 한반도 지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복합 다층방어를 위한 탐지·지휘통제·요격체계를 확보
 -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전력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미사일 등 추진
 - (압도적대응) ▲특수전 부대의 독자적 은밀침투능력 ▲실시간 핵심 표적 탐지·표적정보 전파능력 ▲고정·이동표적 정밀타격능력 확보
 - * 현무 등 미사일전력, 특임여단 능력보강 등 전력화

③ 향후 과제

- **(핵심전력 전력화 추진)** 북 핵·미사일 관련 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하여 체계적인 대응능력 구축
 -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230mm급 다련장 ▲군정찰위성(전자광학), 3000톤급 잠수함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차기 이지스구축함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II), 패트리엇 성능개량 ▲백두체계(신호정부 수집기), F-35A 성능개량 등
- **(국방중기계획 준비)**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사력 건설을 위한 '23~'27년 국방중기계획 수립
 - * ▲북한 및 주변국 잠재적 위협대비 전략적 억제능력 확보 ▲지상·해양·공중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작전적 대응능력 확보 ▲사이버·우주, 테러·재해재난, 재외국민 보호 등 비전통위협 대응능력 보강 ▲혁신적 국방 R&D 강화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대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① 추진 배경

-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을 위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 조기 구축 필요
- 한미가 합의한 미래 연합방위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보다 강화된 연합방위태세 구축 필요
-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 우리 군과 국방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연합방위 주도 능력 확보)** 국방개혁 2.0과 연계 하에 방위력개선비 지속 증액(최근 4년간 연평균 8.7%) 등을 통해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핵·미사일 대응능력 조기 확보

< 연도별('13~'21년) 방위력개선비 편성 현황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편성액(조 원)	10.1	10.5	11.0	11.6	12.1	13.5	15.3	16.6	16.9
증가율(전년비,%)	2.2	3.9	4.8	5.7	4.8	10.8	13.7	8.5	1.9

- 향후 5년간 방위력개선비에 약 106조원*을 투자('22 ~ '26년 국방 중기계획)하여 핵심전력의 조기 확보 추진

* '22년(17.5조원), '23년(19.0조원), '24년(21.2조원), '25년(23.6조원), '26년(25.4조원)

- **(미래지휘구조 발전)**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구조 기본안 (현 연합사 체제 유지, 사령관 국적 변경) 확정
 - '18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 연합사 체제 유지, 한국군 4성 장성의 미래연합군사령관 임명 합의
 - '19년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성의 미래연합군사령관 임명' 합의
 - 미래연합사의 임무, 역할,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략문서 발전, '20.4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위한 전략문서 공동초안 합의

< 전작권 전환에 따른 연합지휘구조 변화 모습 >



- **(전환조건 평가)** 매년 한미 공동으로 조건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

* 한미 국방장관회담(‘21. 3월) 및 한미통합국방협의체(‘21.9월)

<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

- 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②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 ③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 **(미래연합사 검증평가)** 3단계 연합검증평가*를 통해 ‘미래연합사의 전구작전 지휘능력’ 등을 검증·보완

* 기본운용능력 (IOC) → 완전운용능력 (FOC) → 완전임무수행능력 (FMC) 검증평가

- ‘19.8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 시행
- 연합훈련간 미래연합사 주도 전구작전 예행연습을 병행(‘20.8월, ‘21.3월·8월) 하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시행여건 성숙

③ 향후 과제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추진)** 내실있는 한미 국방당국 간 협의체 운영 및 한미동맹 현안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 한미공조 강화
 - *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요 계기시마다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 추진상황 등을 설명
- **(연합방위 주도 능력 확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우리 군의 능력을 조기에 구비할 수 있도록 추진
- **(미래연합사 검증평가)** 우리 군 주도의 미래연합 지휘구조를 적용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적기 시행 추진
 - 적극적인 대미 정책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군의 의지 피력

3. 군 사법개혁

① 추진 배경

- 군사법원,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통해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군 사법제도 개혁 추진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군내 발생한 전체 범죄 피해자와 군 사망사고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운영('20.8월)
- **(영창 폐지)** 영창을 폐지('20.8월)하고 인권친화적인 군기교육으로 대체
* 병사에 대한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휴가단축, 감봉, 근신, 견책으로 다양화
- **(군사경찰 개혁)**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20.12.)을 통해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수사·작전기능 분리 추진
- **(군사법원법 개정)** 군 사법 개혁 내용을 반영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개정법률 공포('21.9.24.)

< 「군사법원법」 주요 개정사항 >

- ① 성범죄, 군인등 사망에 원인이 된 범죄 및 입대전 범죄(비군사범죄) 민간법원 이관
(1심 전국 지방법원 → 2심 고등법원, 재판 및 수사권 포함)
- ② 군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 (2심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 서울고등법원)
- ③ 평시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 폐지, 전시에만 운영
- ④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통합 설치
(국방부/육·해·공군 30개 보통군사법원 → 국방부장관 소속 5개 지역군사법원)
- ⑤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국방부/각군 79개 부대에 보통검찰부 운영 → 국방부장관/육해공군총장 소속 4개 검찰단 설치)
- ⑥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 등 군판사 독립성 및 신분보장

③ 향후 과제

- **(개정 군사법원 시행 준비)** 군사법원과 군검찰 조직의 독립성 제고, 군판사·군검사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향상 추진
* 군판사인사위원회를 통한 군판사 임명, 국방부 군사법원·각 군 검찰단 창설('22.7월)
- **(검·경과 군 수사기관간 협조)** 민간으로 이관되는 범죄에 대한 검찰·경찰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관련 수사절차 규정 제정

4. 장병 인권보장 및 생활여건 개선

① 추진 배경

- 장병 인권보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제도적 기반 구축 및 열린 병영문화 조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존중의 병영환경 구현
- 사회 발전수준에 부합하는 동시에 MZ세대 장병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병의 의·식·주 개선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병사 소통여건 보장)**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20.7월)을 통해 장병들의 군복무 적응 및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
- **(장병 인권보호 강화)** 군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 시행
 - 인권보호 기반 구축을 위해 ▲「’19~’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인권자문위원회’ 운영(’17년~) ▲군 인권 자문변호사 제도 도입(’20년) ▲각 군 인권센터 설치(’20년) 등 추진

< 군 내 인권보장에 대한 병사 인식도 조사 결과 >

- ▶ ’20년 군 인권실태조사 결과, 장병들은 군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상황도 다방면에서 개선 중

응답내용	’19년	’20년	개선정도
군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	86.2%	88.1%	1.9%p ↑
군 내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59.6%	65.3%	5.7%p ↑

* 한국국방연구원 군인권실태조사(병사 4,3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급식·피복 경쟁조달 전환)**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 물량을 ’21년 기본급식량 대비 ’22년 70%, ’23년 50%, ’24년 3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 ’25년 이후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
 - 또한, 보훈·복지단체와의 급식(피복류 포함) 수의계약 배정물량도 당해년도 배정물량 대비 ’22년 70%, ’23년 50%, ’24년 3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 ’25년 이후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
- * 다만, 복지단체와의 급식류 수의계약은 ’22년부터 폐지
- 장병 만족도를 우선 고려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품목인 급식·피복류의 점진적 축소를 위해 일부 품목(16개)은 ’22년 우선 제외 추진(중기간 경쟁제도운영위원회)

-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장병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21년 7월부터 기본급식비를 10,000원(기존 8,790원)으로 인상하여 집행중이며, '22년 기본급식비는 11,000원으로 인상 추진
 - * '22-'26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4년까지 15,000원으로 인상 추진
-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 추진)**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하는 현대화사업을 '25년 완료 목표로 지속 추진
 - * 현대화사업 목표 2,568동 중 2,481동 개선 완료, '22~'25년 87동 개선 예정
 - 그간 현대화사업 대상이 아니었던 교육생 생활관 또한 '21년부터 침대형으로 개선 착수('25년까지 68동 개선 추진)

③ 향후 과제

- **(장병 인권보호 강화)** 장병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병영환경 구축
 - 국가인권위 내 군 인권보호관 설치와 함께 국방부 내 인권전담 조직(인권국) 신설 추진 필요
 - 장병 제기 고충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각 군 협업을 강화하고, 각 군 및 기관에 기능별로 산재된 온라인 고충처리 체계를 모바일 중심으로 연계·통합 추진
 - ▲가해자·피해자 분리기준 구체화 ▲2차 피해 관련 처벌 규정 정비 ▲관계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 등 추진
-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여건)** 장병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급식·피복·시설 등 생활여건에 관한 획기적 개선 추진
 - 장병의 선호가 반영된 '先식단편성-後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경쟁조달 전환계획의 정상이행 추진
 - ▲조리병과 민간조리원을 증원하는 등 조리인력을 확충하고,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 확대
 - ▲장병 피복착용 체계를 개선하고 ▲장병이 선호하는 고품질 침구류(상용 이불류 등)로 교체 추진
 - 병영생활관 내 생활실 및 위생시설의 적정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군사시설 기준 개정 추진
 - ▲육군훈련소 7개 연대 생활관의 신·증축 추진('22년~) ▲노후하고 협소한 취사식당 환경개선 사업 지속 추진('27년 완료 목표)

5.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

① 추진 배경

- 코로나19를 계기로 재난·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발생 시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방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인식
- 기존 전통적 군사위협은 물론 비전통 위협 발생시에도 범정부적 대응 지원을 위한 국방의 역할 확대 및 대응체제 발전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추진계획 수립)**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체제 발전 추진계획」 수립('20.5월), 중·장기 정책방향 및 실행방안 구체화(3개* 분야, 11개 과제)
 - * ▲ 법률·체계 발전 ▲ 구조·편성 발전 ▲ 지원역량 강화
- **(법률·체계 발전)** 국방의 적극적 역할 정립 및 임무수행 여건 마련
 - 비전통위협 대응 관련 국방의 역할* 정립('20.8월), '국방재난관리훈령' 개정('21.3월), '국방 재난대응 공통매뉴얼' 제정('21.1월)
 -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체제 발전' 정책연구 실시('21.7월)
 - * 국방의 現 능력 진단, 국방지원 분야별 발전방향 및 법령 보완 소요 도출 등
 - 국방부·국토부·지자체 간 위기관리 상황공유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20.8월)
 - * 서울·용인시 ↔ 수방사·52·55·56 사단 시범사업 실시('21.1월)
- **(구조·편성 발전)** 재난테러 관련 국방 대응조직의 완전성 강화
 - ▲ 국가급 재난 발생시 현장지휘 및 초동조치를 위한 '화생방 특수임무단' 편성 심의·의결('20.12월) ▲ 의무사 신속대응과 신편('21.1월)
 - ▲ 국군지휘통신사 신속대응중대(위성소대) 창설('20.1월)
 - ▲ 대테러·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추가 지정*('20.7월) ▲ 임무수행 능력 평가('20.7월 ~ '21.12월) ▲ 첨단 장비물자 보강('21년 예산 650억원)
 - * 대테러 10개 부대 → 20개 부대(+10), 대화생방 1개 부대 → 13개 부대(+12)

○ **(지원역량 강화)** 국방의 대응역량 강화 및 재난대응시스템 발전

- 재난대응부대 장비·물자 관리 개선방안 정립 및 지침 하달('21.8월)
-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발생시 국방시설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21.3월) ▲군 병원(강릉·춘천·양주·고양) 내 음압격리 병상 확보 추진('21~'25년)

* 미래 비전통 위협 양상을 반영한 시설기준 개선 필요성 등 검토

- '국방신속지원단'의 임무·기능을 국방 재난대응공통매뉴얼 및 국방 재난관리훈령에 반영('21.3월)하여 운영체계를 제도화

* 군 가용 자산(인력·시설·장비)을 미리 준비, 지자체·민간기관 요청시 최단시간 내 One-stop서비스 제공, 신속지원협력관을 지자체에 파견하여 군 지원소요를 선제적 파악

< 범정부 코로나19 대응 지원 현황 >

▶ 범정부 대응 지원('21.10.26. 기준, 누적) : 인원 1,200,438명 / 장비 61,089대, 환자 치료 1,096병상, 생활치료센터 285실 지원

- 감염병전담병상(국군수도·고양·대전병원) 212병상, 생활치료센터(국방아학원) 285실 지원 중 (누적 1,096병상 및 285실)

- 환자치료 및 예방접종에 의료인력(군의원·간호장교) 322명 지원 중 (누적 105,138명)

- 역학조사, 임시선별검사소, 공항·항만 검역, 생활치료센터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인력 1,661명 지원 중 (누적 754,288명)

- 질병청 산하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설치('21.2월), 백신 수송·호송과 백신 공장, 물류센터 및 접종센터 등 경계 지원 중

※ 특히, 지난 6월 해군 함정(한산도함)을 이용하여 의료시설이 없어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있던 도서지역 주민 680여 명에게 해상순회 접종 실시

③ 향후 과제

○ **(비전통위협 대응 역량 기반 구축)** 재난 상황의 초기 대응 시부터, 국방 부문에서 적극적·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량·기반 구축

○ **(관·군 통합정보체계 구축)** 국토부 주관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관군 통합정보공유체계 구축 사업 확대(108개 통신망) 추진

○ **(감염병 대응 군 시설 확보)** 향후 대규모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군 병원(4개) 내 음압격리병상(병원별 10개 내외) 확보 추진(~'25년)

* 군 감염병 연구능력 강화를 위해 생물안전방호 3등급 수준의 의학 연구시설 신축 추진

6. 국방 AI·무인체계 발전 추진

① 추진 배경

- **(미래위협 대비)** ▲병역자원 부족 심화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전장 환경 급변 등 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적시·적극 대응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용한 무인체계 발전 필요
 - * 주요국들은 미래 전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율 무기체계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국가적 역량 집중
- **(민간산업 견인)** 상용드론에 대한 군의 수요 창출이 드론 산업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는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상용드론의 성능 향상으로 연결되어 민군 간 선순환 구조 구축 가능
 - * 드론 산업은 항공, ICT, SW, 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성장 잠재력 풍부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추진체계 정립)** 「국방 AI/무인체계 발전협의회」(국방차관 주관) 운영(21.9월~), 기관별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기관의 역할 정립
 - * 국방과학연구소 내 「국방인공지능기술센터」개소(21.6월), 국방분야 범부처 ICT R&D사업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내 「국방ICT 지원단」 신설(21.7월)
- **(소요발굴 및 사업화)** 국방운영 효율화 및 전력증강을 위해 첨단기술이 적용된 전력지원체계와 무기체계의 소요발굴 및 획득절차 개선
 - ‘국방비전 2050’과 연계하여 국방AI의 전면적 활용 및 상용드론 구매 확대를 위한 중·장기 소요 종합계획 수립 중
 -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획득을 위해 신속 획득시범사업 활용 증대 및 다부처 협력 확대
 - * ▲22사단 신속시범사업획득(21.7~22.6월) 추진 ▲신속시범획득사업 예산을 '21년 302억원에서 '22년 614억원으로 약 2배 확대 편성
- **(민·군 협력 강화)** 상용드론의 군 사용을 확대하고 민간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무인 전투체계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
 - 민간 연구소·대학 중심의 특화연구센터 지원을 통해 민간 전문 인력 활용한 국방AI 기술개발 추진
 - * KAIST 내 「육군 데이터 랩」 개소(21.4월)

- 민·군이 참여하는 DnA포럼(Defense and AI)을 운영('21.11월~)하여, AI 기반 무기체계 고도화 과제 도출 및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정책 개발
- 상용드론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여 민간업체도 활용하는 실증 시험장 구축 추진
 - * 31사단 드론 테스트베드 시범부대 선정, 남양주 육사훈련장 내 드론시험 검증시설 구축 중
- **(법·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무인 전투체계 발전을 위해 정보보호, 컴퓨팅·네트워크, 인재양성 측면에서 미래지향적 제도개선 추진
 - ▲안전한 AI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 AI 보안가이드라인' 수립 중 ▲상용드론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상용키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 추진
 - 전군 공통의 AI 서비스 기반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 지능화 센터' 구축 및 국방 광대역통합망 개선 추진
 -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21.7월)하여 국방 및 국가 혁신을 선도하는 국방AI 전문인력을 양성

③ 향후 과제

- **(국방 AI·드론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유관기관의 협조를 토대로 국방 운영혁신과 첨단 군사력 건설을 위한 「국방인공지능 발전전략」 및 「국방드론 발전전략」 수립 필요
 - 아울러 「국방AI 기술로드맵」('21.12월) 및 「국방드론 기술로드맵」('21.12월)과 연계하여 Top-down 방식의 소요발굴 지원
- **(다부처 협력을 통한 상용드론 획득)** 군이 원하는 우수한 성능의 상용 드론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 강화
 - '공공혁신조달과 연계한 무인이동체 개발사업'(과기부, 산업부) 지원 및 '혁신장터'(기재부, 조달청) 활용 확대
- **(국방데이터 개방성 확대)** 국방AI의 지속적 기능개선에 필수적인 국방 분야별 데이터 단계적 개방 및 활용성 증대 필요
 - 데이터의 선별, 공개를 위한 역할 정립, 공유 방안 검토 및 제도마련

《 신규 추진 필요과제 》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

① 추진 배경

- 세계 주요국들은 우주의 안보·상업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우주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우주 탐사, 군비 경쟁 등) 가속화
- 우리나라도 우주의 안보 중요성을 고려, 우주안보 역량 강화 필요성에 따라 미사일지침 종료('21.5월) 등 계기 국방우주력 발전 추구
- 국방우주력 발전은 국가우주역량 강화 및 미래 안보위협 대응에 기여

② 주요 내용

- **(정책기반 구축)** 국가우주개발 연계下 국방우주력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령·제도 정비, 우주정책·전략 및 작전개념 등 발전
 - 국가우주위원회 격상(국무총리),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21. 11. 11. 시행)에 따라,
 -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합동군사우주전략 및 합동 우주작전 구체화 추진 필요
- **(운영체계 발전)**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조직·인력 보강과 교육·훈련 강화 추진
 - 우주작전대 창설('19년), 국방대 우주정책 교육과정 신설·운영('21년~), 국방부·합참·각군 우주관련 조직·인력 보강('20년~) 등 운영체계 지속 발전 필요
- **(우주전력 확충)** 우리 군의 우주작전 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관련 우주전력을 적시에 확충
 - 우주영역인식(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등), 우주정보지원(군 통신/정찰위성 등), 우주통제(우주자산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 우주전력투사(우주발사체 등) 분야별로 전력화 추진 필요
- **(대내·외 협력 확대)** 대내적으로 민·군 협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동맹국과의 국방우주협력 심화, 우방국과의 국방우주협력 확대 추진
 - 범부처 우주위협 대비 훈련 참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 개최(연 2회) 중이며, 인도 등 우주선진국 대상 국방우주협력 다변화 본격 추진 필요

병 무 청

1. 공정한 병역이행

① 추진배경

- 정확한 병역처분, 병역면탈 예방·단속 등으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통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
-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양심과 병역의 조화를 통해 인권 존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첨단 의료장비 구입, 신체검사 항목 개선 등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체계를 확장하여 정확하게 병역처분
 - MRI·CT 등 첨단 의료장비 확충 및 전문의 등 전문인력 증원
 - * (장비) MRI 9대 CT 12대 등 총 1,702대 / (인력) 병역판정전담의사(157명), 임상심리사(42명) 등 282명
 - 병리검사 확대 및 심리검사 개선으로 군복무곤란자 선별력 제고
 - * 병리검사 : '17년 이전 20종 → '21년 27종(고지혈증, C형간염, 혈당검사 등 추가)
 - ** '17년 인성검사 개선 : 문항 203개 → 271개, 게임중독 등 검사척도 추가
 - *** '21년 인지능력검사 개선 : 문항 58개 → 89개, 평가영역 4개 → 6개(시각추론 등 추가)
 - 입영 후 군이 하던 신체검사를 입영 전에 병무청이 하도록 전환하여 신체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입영 후 귀가로 인한 불편 해소
 -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수행을 위한 병역법 시행('21.6.23.), '21. 8. 4. 최초 실시
- **(병역면탈 예방·단속)** 특별사법경찰(40명)의 첨단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병역면탈 범죄 과학수사 및 예방 활동 강화로 불공정 행위 차단
 -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17년), 면탈조장정보 DB 구축 등 수사체계 구축
 - * 면탈범 311명 송치('17년~'21.9월), 기소율 상승 : '17년 68.6% → '21.9월 83.3%

-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 및 병역면탈 예방 교육
 - * 조장정보 삭제 : 연평균 2,400여건, 병역판정검사 시 면탈범 처벌 규정 등 교육
- 국외이주 병역회피자 단속 및 국적변경자 국내 취업제한 등 추진
 - * 국외이주 병역연기 후 국내 장기체류·영리활동자 285명 의무부과('17년~'21.9월)
 - ** 병역미필 국적변경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공직임용·국적회복 제한 등 법제화 추진
- **(사회관심자원 병적 별도관리)** 연예·체육인, 고위공직자, 고소득자에 대한 병역이행 관리로 병역면탈 예방 및 성실 병역이행 유도
 - 연예인 등 사회관심자원 병적 별도관리제도 도입(병역법 시행 '17.9.22.)
 - * 29,287명 관리('21.9월): 연예인 1,595, 체육인 19,694, 공직자 4,775, 고소득자 3,223
 - 병역이행 과정 집중 모니터링 및 관리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 * 고의 손목수술 등 면탈범 6명 처벌, 질병연기 후 경기출전 선수 4명 연기제한('21.9월)
 - ** 해외활동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를 관리대상에 추가(병역법 개정 '21. 4. 13.)
- **(대체역 제도 안정적 운영)** 과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공정한 대체역 심사 및 합리적 복무관리로 인권과 병역의 조화
 - ('18.6월~'20.6월) 법령, 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도 운영 기반 마련
 - * 대체역법 시행('20.1.1.) / 심사위원회 구성('20.6.29.) : 위원 29명, 사무국(1국 3과 33명)
 - ('20.7월~'21년) 대체역 심사, 교정기관 소집 및 복무 관리
 - * 심사접수 2,306명(편입 1,735명, 기각 등 35명, 심사중 536명) / 522명 소집('21.9월)

③ 향후과제

-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를 현행 병역기피 목적 면탈행위에서 대체역 허위 편입, 사회복무요원 복무위반·이탈 등 병무사범 전반으로 확대 필요
- 뉴미디어 1인 방송인, e스포츠 선수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새로운 직업군을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추가
- 대체역 편입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효율적 심사 운용 방안 마련 및 심사과정에서 신청인 인권보호 강화

2. 안정적 병력충원

① 추진배경

- 현역병 인력을 적기·적정 충원하여 강군의 안정적 병력 운영 지원
- 정예자원의 동원부대 지정 및 훈련으로 전시 임무 수행능력 확보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안정적 병력충원)** 정확한 입영예측, 입영연기자 공석 추가 통지 등 적극적 충원 대책 추진으로 현역병 적기·적정 충원
 - * 충원율 : '17년 92.5% → '18년 96.2% → '19년 95.5% → '20년 95.8% → '21. 9월 98.7%
- **(입영제도 개선)** 병역의무자 중심 제도개선·운영으로 민원 편익 제고
 - 다음해 입영일자 조기 결정으로 입영 및 미래설계 준비 지원
 - * 입영일자 조기 결정('20년 도입) : 입영 연도 전년 12월 → 7월(최대 5개월 단축)
 - 모집병 화상면접 도입으로 대면 면접 부담 해소 등 민원 편익 제고
 - * ('20년) 공군 시범 → ('21.2월) 육군·공군 확대 → ('21.7월) 육·해·공군·해병대 전면 실시
 - 모집병 지원 자격 완화 및 실기 등 전형 여비 현실화
 - * 색약자 지원 가능 특기 86개로 확대, 전형 여비 1회 지급 → 전형 시 매회 지급
- **(병력동원태세 확립)** 정예자원 동원지정 등으로 비상사태 대응력 확보
 - 신상변동 정비 등으로 정예자원 동원부대 지정률 유지(최근 4년 112.2%)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적정 충원(최근 4년 100.5%)

③ 향후 과제

- 병역자원 부족 대비 보충역 복무형태에 대한 현역자원 지원 축소, 병역판정검사 현역 처분을 향상 등 적극적 현역병 충원 방안 모색
- 모집병 1:1면접으로 면접관 1명의 주관적 판단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면접관을 복수로 하고, AI기술을 활용하는 등 제도개선으로 모집병 선발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예비전력의 전시 임무 수행능력 강화 등 고려,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에도 시행 가능한 병력동원훈련소집 체계 구축

3.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① 추진 배경

- 병역이 경력단절이 아니라 취업 등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생애 설계적 관점의 지원 필요
- K뉴딜 관련 기업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적성·전공 분야에서 군 복무 및 복무경력이 사회 진출과 연계되도록 상담, 정보제공, 체험·교육 서비스 제공
 - ('19년) 병역진로설계제도 도입 및 서비스 체계 기반 마련
 - * 정책연구용역 추진, 학교 등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1,615명)
 - ('20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서울) 및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구축
 - * 서비스 실적 : 9,688명(센터 3,002명, 온라인 4,995명, 학교 방문 1,691명)
 - ('21년) 센터 3개(대구광주대전) 추가 설치 및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 서비스 실적 : 94,878명(센터 7,762명, 온라인 85,264명, 학교 방문 1,852명)
- **(취업맞춤특기병 운영)** 관계기관 협업체계 확립, 모집인원 확대, 전역자 취업지원 강화 등으로 전역자 취업률 향상
 -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관계기관 협업체계

병 무 청	고용노동부	국방부(각 군)	부처합동
· 1:1 병역진로설계 · 취업맞춤특기병 선발	· 진로/적성 상담 · 맞춤식 기술훈련	· 해당분야 특기부여 · 복무 중 자기 계발	· 관련분야 취업지원 · 취업정보 제공 등

-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인원 확대 등 제도개선('14년 도입)

내 용	'14년 ~ '16년	'17년 ~ '21년
모집인원	('16) 1,300	('17) 1,800 → ('18) 2,200 → ('19) 2,600 → ('20) 3,200 → ('21) 5,000
모집 군	육군	해·공군, 해병대 기술병까지 확대
모집대상	고졸이하자	폴리텍대학·방통대 졸업자까지 포함

- 관계부처 협업으로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취업률 지속 상승
 - * '17년 51.8% → '18년 52.9% → '19년 56.0% → '20년 57.7% → '21.9월 57.9%
 - ** 국가보훈처('18년), 교육부('20년), 중소벤처기업부('20년)와 취업 지원 업무협약

- **(전문인력 산업지원)** 석사 이상 학위, 기술자격·면허 등 전문성을 갖춘 병역의무자를 중소기업 등에 연구·제조·승선인력으로 지원

< 산업지원인력 지원 현황 >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9월
계	72,294	16,593	17,256	14,229	13,696	10,520
전문연구요원	12,177	2,362	2,772	2,794	2,578	1,671
산업기능요원	55,606	13,263	13,591	10,490	10,198	8,064
승선근무예비역	4,511	968	893	945	920	785

- * 경제적 기여도(생산 유발액) : 14조 5,482억(전문요원 3조 8,840억, 산업요원 10조 6,642억)
자료출처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효과성 및 정책과제 보고서'('17년, '20년)

- 중소기업 위주 전문연구요원 배정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 * 연간 기업체 배정인원(1,500명) 중 중소기업 배정률 : '17년 57% → '21년 66.2%
- 직업계고 졸업자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으로 기술 인력 양성
 - * 연간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4,000~6,000명) 중 90% 이상 직업계고 졸업자 배정
- 산업지원인력 취업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취업 매칭 서비스
 - * 관계부처 협업 취업스쿨, 채용박람회 등 개최,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제공

③ 향후 과제

-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추가 설치 및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의 군 경력과 연계된 우수기업 취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산업지원인력이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근로 권익 보호 강화
- K-뉴딜 관련 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등 정부 중점육성분야에 대한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방위사업청

1.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① 추진 배경

- **(국산무기 우대정책)** 자주 국방력 강화, 국내 방위산업 육성, 국방과학기술수준 제고 등을 위해 국산무기 우대정책 필요성 증대
 - * 美 Buy American Act, 인도 Make in India 등 주요국에서도 국산품 우대 추진 중
- **(운영유지 효율성)** 무기체계의 국외 의존도 증가는 정비·부품조달 곤란, 운영유지비 상승 등 전력운영유지 측면에서도 애로사항 발생
- ☞ 무기체계 국내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국외무기 도입 시에도 국내업체 참여를 의무화하여 국내 방위산업 발전 및 업계 경쟁력 제고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주요내용)** 국내연구개발 우선 추진, 국외구매 시 국내업체 참여 확대
 - 방위력개선비 재원 반영 시 '지출목표 관리제(국내80:국외20)' 도입
 - 사업추진방법 비교 시 수명주기비용(획득비+운영유지비) 기준 평가, 국외무기 획득비에 50% 할증비율 적용하여 국내연구개발과 비교
 - 선행연구단계에서 진화적 개발전략 검토 및 경제적 파급효과 필수 반영
 - 국외구매의 경우 국내업체 생산·정비참여 및 국산부품 비율평가 의무화
- **(제도시행)** '21. 8월부터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 시행 통보
 - (연구개발사업) '21. 8월 이후 선행연구에 착수되는 사업부터 적용
 - (국외구매사업) '21. 8월 이후 구매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
 - * 현재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을 통해 국외구매 컨소시엄 구성 시범사업 추진 중

③ 향후 과제

- **(규정개정)** 제도 세부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는 관련규정 개정 필요
 - ▲사업추진 시 국내 우선 ▲구매절차 조항 신설 ▲기술성숙도에 따른 진화적 개발전략 적용 여부 등
- **(제도발전)**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실질적 적용을 위한 추가 개선사항 발굴
 - 향후 축적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행연구의 총사업비 비용분석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 제도발전 추진

2. 신속획득체계 구축

① 추진 배경

- **(빠른 기술발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무인·로봇, 인공지능 등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크게 신장되었으며, 발전속도도 매우빠름
- **(現 획득체계 한계)** 現 무기체계 획득제도는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에 적합한 구조이며,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은 빠른 군 적용 어려움
- **(제도개선)** 現 민간의 발전된 신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제도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신속시범획득사업 도입 및 운용)** 민간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구매하여 軍 시범운용 후, 신속하게 전력화 하는 사업('20년~)
 - (조기전력화) 10년 이상 걸리는 기존 일반 소요 절차 대비 전력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軍 전력화 기간 단축
- *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20년 신속시범획득사업 후 '23년 軍 전력화 예정

- (민간기술 활용) 방위산업에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적용
 - * 삼성전자의 전술용 스마트폰을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만 활용 중이었으나, 신속시범 획득 사업을 통해 국내 도입 및 시범운용 중('21.7월~)
- (중소기업 성장) 신속사업 참여를 통해 경영여건 개선 및 軍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 등 산업저변 확대
 - * '20년 신속시범획득 참여 중소기업의 매출액 평균 24% 증가
- (신속연구개발사업 신설)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범위를 R&D까지 확장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도입, 구매·연구개발을 포괄하는 제도 완비('21년)

③ 향후 과제

- (신속연구개발 운영) 신속연구개발사업 첫 시범사업* 선정 및 사업착수
 - * '22년 예산(정부안 기준) / 선정 대상사업 수 : 658억원 / 10개 사업
- 하향식(Top-down)사업과 상향식(Bottom-up)사업을 균형있게 추진하여 다양한 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업 관리
- 4차산업혁명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비약적인 성능향상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군 전력강화 및 기술발전에 기여
- (제도확대) 획득제도의 한 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획득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추진 가능토록 적용범위 확장
 - 신속시범획득사업 및 신속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기존 획득체계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
 - 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기술개발사업과 연계절차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절차 마련

3.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제도 개선

① 추진 배경

- AI, 무인화, 양자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및 과거에 없었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기체계가 미래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소요 기반·체계개발 중심의 국방연구개발 체제로는 도전적·혁신적 기술개발이 제한
- 급격한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신개념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소요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예정되지 않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이 필요

* 관련근거 : 국정과제 88-3 국방R&D 제도개선 및 각종 첨단무기 국내개발 검토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중점 분야 발굴)** 미래 군사력 혁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8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설정하고, 세계 방산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투자

* 양자물리, 합성바이오, 극초음속, 무인자율, 미래통신, 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 **(미래도전 역량집중)** 체계개발은 방산업체 주관을 원칙으로 하고 국과연은 전용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함으로써, 비닉무기 및 첨단국방과학기술 등 분야에 역량 집중

* 국과연 관련 예산(억원) : ('19) 200→('20) 580→('21) 1,204→('22) 2,844

- **(수행체계 내실화)** 군-산학연-ADD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통한 미래 도전 국방기술 기획 강화 및 과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수행체계 내실화
- **(챌린지 대회 확대)** 민간이 참여하는 챌린지 대회를 확대 운영하여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국방 패러다임 전환기술의 발굴·지원

- **(무기체계 전환 촉진)** 기술 구현가능성 및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가교적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도전적·혁신적 기술의 신속한 무기체계 개발 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 신설('22)

< 과제 추진현황 >

단위 : 예산(억원), 과제수(건)

구분	'19년		'20년		'21년(계획)		'22년(정부안)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종합	200.00	32	580.00	59	1,204.20	82+α	2,844.20	159+α
- 계속과제	31.60	13	311.80	30	807.30	46	1,280.02	80
· PM기획	-	-	121.50	4	303.00	9	508.80	14
· 과제경연	31.60	13	113.40	20	345.40	20	771.22	66
· 자체기획	-	-	76.90	6	156.90	16	-	-
· 기술경진	-	-	-	-	2.00	1	-	-
- 신규과제	162.60	19	247.60	29	374.70	36+α	1,542.00	79+α
· PM기획	63.10	4	119.60	5	112.50	5	360.00	12
· 과제경연	46.60	7	80.20	13	168.20	18	780.00	60
· 자체기획	42.90	6	45.80	10	90.00	12	-	-
· 가교적연구	-	-	-	-	-	-	380.00	6
· 기술경진	10.00	2	2.00	1	4.00+α	1+α	22.00	1+α
- 기획관리평가	5.80	-	20.60	-	22.20	-	22.18	-

③ 향후 과제

- **(조직개편)** 방사청 내 '첨단기술사업단('21.11.23.)' 운영을 통해,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과 체계개발을 연계한 개발성과물 조기 전력화 추진

- **(기반조성)** 고난도·한계돌파형 기술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추진체계* 와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여,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추진 기반 조성 필요

* 미래도전국방기술 : 소요창출형, 국방과학연구소 / 핵심기술 : 소요기반형,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19)200억원→('20)580억원→('21)1,204억원→('22/정부안, 별도사업화)2,844억원

- 아울러, 신기술 분야 간 융합 파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범분야·기술을 포괄하는 기획능력 제고 필요

- **(제도개선)** 미래도전국방기술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미래도전국방기술의 목적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제도 및 관리방안 검토·도입

- 첨단기술사업단 중심의 기획역량 결집·강화, 혁신적 성과평가 체계 도입, 연구결과의 후속 활용(신속연구개발로 전환·민간이전 등) 방안 구체화 등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령 개정,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정 등 추진

조정·지원 분야

1. 국무조정실	389
2. 국민권익위원회	401
3. 인사혁신처	413
4. 법제처	419

국무조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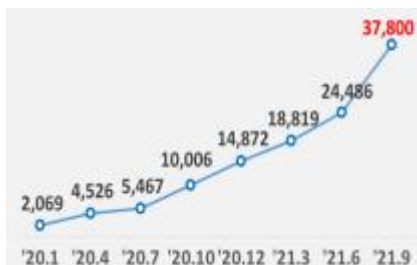
1. 규제혁신

①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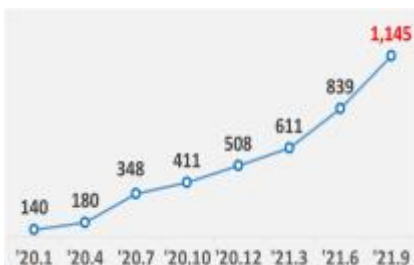
- **(제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경직된 규제체계*는 대응에 한계
→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 포지티브 방식(법령,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나머지는 불허하는 규제방식)은 신산업·신기술 출시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문제 발생
- **(방식)** 규제불편 건의를 사후·수동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은 사각지대 발생
→ 핵심규제 개선
- **(행태)** 규제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복지부동, 감사우려 등으로 규제혁신 성과와 체감 저해 →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② 추진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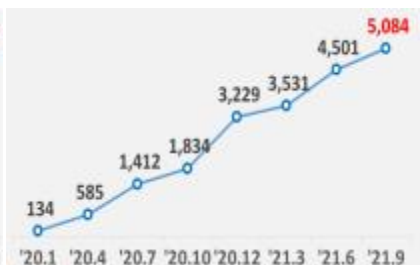
- **(규제혁신 플랫폼)** 先허용-後규제 전환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 기존 규제에도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샌드박스 548건 승인('21.9월말), 투자 3.8조원, 고용 5천여명 증가
 - * (예)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 투자유치(억원) >



< 매출증가(억원) >



< 고용증가(명) >

- 신산업 전개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미리 발굴·정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VR·AR, 로봇, AI, 자율운항선박 7개 신산업 분야('21.10월말)

- 법령 개정 없이도 신산업·신기술 허용이 가능토록 법령·자치법규·공공기관 규정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 네거티브리스트(금지사항 외 허용), 개념정의 확대, 분류체계 유연화 등

○ **(핵심규제 개선)** 기업활동·국민생활 핵심규제를 소통·협업을 통해 개선

- 신산업 5대 분야(DNA·비대면산업·바이오의료·기반산업·그린산업) 핵심규제·현장애로 개선 및 창업·입지·경쟁제한 등 중기·소상공인 규제부담 완화

* (예) 가명정보 도입, 오픈뱅킹 시행, 다양한 캠핑카 튜닝 허용, 이미용업소 영업장 공유 등

- 행정·복지·의료 등 일상생활 전반의 규제불편 해소,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 및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보다 과도한 자치법규 정비

* (예) 입국장면세점 허용,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재활용 허용범위 확대 등

○ **(적극행정)** 공직 인식·행태 변화를 위해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 적극행정위원회 자문 및 사전컨설팅시 면책보장, 면책기준 완화, 법령의견 제시, 인센티브 등 제도 구축*

* 적극행정부운영규정 제정('19.8, 대통령령)에 이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기본법에 적극행정 명문화('21.6)

-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지원 등 정책현안 신속 대응

* (예) 승차진료,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승인,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등

③ 향후 과제

○ **(성과 가속화)** ①규제혁신 플랫폼 ②핵심규제 개선 ③적극행정 등을 더욱 확대하여 규제혁신 성과 지속 창출

- ①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혁신 로드맵(바이오헬스 등) 성과·분야 확대,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및 사업화 지원 등

- ② 핀테크·모빌리티·바이오 등 신산업·자영업자 규제개선

- ③ 국민신청제 등 제도활용 확대, 지자체 등 일선 공무원 인식 제고

○ **(갈등규제 해결)** 비대면 진료 등 가치·이해 갈등 규제도 규제혁신 플랫폼과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2. 국제개발협력(ODA)

① 추진 배경

- **(대외환경)** 세계 최초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7.2, UNCTAD), G7 참석(21.6월) 등 국제적 위상과 국제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ODA 추진 필요
 - 특히, 최근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의 파급효과가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 국제 공조·협력의 필요성 급증
 - 우리의 성공적인 발전경험을 토대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을 넘어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 수행 필요
- **(대내환경)** 지난 30년간 ODA는 양적 성장을 하였으나, 종합전략 수립, 유·무상 연계 및 사후관리 강화 등 통한 효과성 제고에는 한계
 - 급격히 확대('10년, 1.3조원 → '21년 3.7조원)되는 우리 ODA*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ODA 추진체계 개선 요구 지속

* '10년 이후 우리나라의 ODA 총 규모 연평균 증가율은 9.7%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29개국) 중 2위(전체 회원국 평균 증가율은 2.7%)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글로벌 위기 대응)** 코로나19 및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기여
 - 글로벌 팬데믹 후 각국의 지원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 수립('20.7월) 및 138개국 지원*
 - 백신의 공평한 접근 등 개도국의 감염병 위기 대응* 및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의지 국제사회에 지속 표명

* ▲ COVAX AMC 2억불 기여 공약(G7 정상회의, '21.6월)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2억불 지원 공약(한·미 정상회담, '21.5월) ▲ 태국·베트남 백신 지원('21.10월) 등

** 그린뉴딜 ODA 비중을 '25년까지 DAC 회원국 평균 이상으로 확대(P4G 정상회의, '21.5월)

- **(추진체계 개편)** 체계적·통합적·효율적 ODA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총리)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20.11월 시행)
 - * (주요내용) 국제개발협력위의 전략수립 및 사업조정 기능 강화, 사무기구 설치, 예산편성시 위원회 심의결과 존중, 평가결과 환류 의무화, 사업정보 관리 강화 등
 - 위원회의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본부(본부장:1급) 설치('21.2월), ODA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21.4월)
- **(전략적 ODA 추진)** 중장기 전략 및 분야별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수원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기반 마련
 - 「제3차 ODA 종합기본계획('21~'25)」 수립('21.1월)을 통한 비전 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 수립('21.7월)
 - 재원 투입의 선택·집중을 위한 중점협력국 재선정*('21.1월, 24→27개국)
 - * 양자 ODA 예산의 70% 이상 지원, '10년부터 5년 주기로 재지정

③ 향후 과제

- **(국제협력 선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리더로 도약 필요
 - 한국의 국제위상에 걸맞게 선도적으로 국제사회 현안 대응·지원
 - 실효적인 세부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 국제사회의 논의 주도
- **(ODA 효과성 제고)**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해 개선된 법·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창출 필요
 -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선*을 통한 K-ODA 성과 극대화 및 소통 강화를 통한 대국민 지지 확보
 - * 전략수립부터 사업 심사, 점검·평가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ODA 업무 전반 혁신
 - 정부 - 시민사회 - 기업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활동 및 공공 - 민간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우리 ODA의 경쟁력 제고

3. 탄소중립

① 추진 배경

- **(기후위기 대응 동참)** 이상기후 발생, 파리협정 채택('15.12), 주요국 탄소중립·NDC 상향 발표* 등으로 국제사회 노력 동참 필요

* (獨) '90년 比 55%→65%('21.5), (美) '05년 比 '25년까지 26~28%→'30년까지 50~52%, (日) '13년 比 26%→46%, (英) '90년 比 '35년까지 78%(기존 '30년까지 68% 목표 병행)

- **(국제 경제질서·무역환경 급변)** EU·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계획 발표, 글로벌 기업의 RE100 선언, ESG 투자 확산 등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애플, BMW, 구글, 월마트 등 330여 글로벌 기업들이 선언('21.10월 현재)

⇒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추진

* 누적배출량(1951~2018년) 기준 우리나라 비중 1%, 세계 13번째에 해당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2050 탄소중립위 신설)**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후 추진동력 확보 및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신설('21.5)

* 전체회의 2회, 총괄기획위 10회, 분과위 72회, 전문위 33회, 협의체 26회 등 개최('21.11월 기준)

- ▶ (구성)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민간위원 78명과 중앙행정기관장 18명
- ▶ (기능) 탄소중립 정책 컨트롤타워로 주요 정책·계획 심의, 이행점검 등
- ▶ (운영) 전체회의, 총괄위, 8개 분과위 중심 안건 논의, 협의체·국민정책참여단 등 통해 사회 각 부문 의견수렴 및 정책 공감대 형성

- **(탄소중립 추진체제 마련)**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세계 14번째), '22년 탄소중립 예산 12조원 규모로 확대(기후기금 2.5조원 신설)

* ▲이행계획 수립·평가 ▲기금·기후영향평가 ▲민관합동 위원회 및 사무처 설치 등 現 녹색성장기본법을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맞춰 발전적 통합·재편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 사회상과 기술개발 방향, 정책 수단 및 실행규모 등을 제시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21.10)

- 세 가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표(8.5) 및 사회 각계·일반국민 대상 의견수렴** (8~10월)

- * ①석탄(화석) 발전 유무 ②전기·수소차 비율 ③건물 에너지 관리 ④축산 관리
⑤CCUS·흡수원 확보량 ⑥수소 공급방식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

** 산업계, 시민사회, 청년층 등 간담회 20회 개최, 115개 기관·단체의 94개 의견서 청취

-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해 석탄발전 중단 등 감축, 흡수·제거 등으로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21.10)

- *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제시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황)**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18년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291백만톤) 감축 → '30년 배출량: 436.6백만톤으로 결정

- * (당초) '17년 比 24.4%('18년 比 26.3%) 감축 → (변경) '18년 比 40% 감축
NDC 상향안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은 4.17%/년,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

- 국내 추가감축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국외 감축 활용*

- * 배출(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수소·기타), 흡수 및 제거(흡수원·CCUS·국외감축) 등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설정, 메탄 감축량 NDC 반영 등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및 '2030 NDC 상향안' 탄중위 심의·의결('21.10.18, 2차 전체회의), 국무회의 심의(10.27)를 거쳐 정부안 확정

- COP26 계기 상향 NDC 대외 발표('21.11.1), UN 제출 예정('21.12)

③ 향후 과제

- **(NDC 이행계획 마련)** 2050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NDC 이행계획 마련, 추진상황 점검('22년)
- 탄소중립을 우리 경제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이행계획 수립
- 2030 NDC(40%) 이행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 경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 투자, 인프라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
- **(기본법 시행 준비)** 시행령 제정,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기후변화영향평가·기후대응기금 등 후속조치 추진('22년)

4.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

① 추진 배경

- 일자리·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겪는 어려움 가중, 정책 지원 요구 증대
- ⇒ 청년 삶 개선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기반 마련 필요성 대두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기반 구축)**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구축
 - 「청년기본법*」 제정('20.2)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총리) 구성('20.9)
 - * 청년정책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등
 -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 출범('21.6) 및 주요 부처* 청년정책 전담 조직 설치('21.9) → 청년정책 총괄 기능 및 부처 협업 강화
 - * 9개부처 : (과단위) 기재·국토·금융·중기부 + (인력증원) 행안·복지·고용·문체·교육부
- **(정책 수립)** 청년의 삶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대책 수립
 - (법정계획) 청년정책에 관한 5개년 법정 기본계획으로, 청년정책의 비전·방향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수립('20.12)
 -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계획으로, 32개 부처 및 쏘지자체 참여下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21.3) 및 추진중(총예산 23.8조원)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개요 >

- ▶ (비전)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 ▶ (3대원칙) ▲참여와 주도 ▲격차해소 ▲지속가능성

분야	중점과제
일자리	코로나19 극복 구직자 55.5만명 지원, 청년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등
주거	청년주택 27.3만호 공급,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 감축 등
교육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미래 신산업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등
복지·문화	저소득층 10만명 자산형성 지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등
참여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20-30*, 청년마당 전국확대, 온라인 청년시스템 구축 등

*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30% 지정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 (종합대책) 청년제안 토대로 「제1·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마련('20)

- ▶ 제1차('20.3.26) : 5개 분야 34개 개선과제 마련
 - ↳ ▲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 확대 등
- ▶ 제2차('20.9.18) : 5개 분야 43개 개선과제 마련
 - ↳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등

→ 청년세대내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21.8) 발표

- ①코로나 위기 극복 ②청년세대 격차해소 ③미래도약 지원 등 3대 방향 下 5대분야 87개 과제 마련, 총예산 17.9조원 투입

< 참고자료 : 분야별 주요내용 >

- ▶ 일자리 분야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청년고용 개선(80만명+a)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年960만원, 14만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6만명) 확대 등
- ▶ 주거 분야 : 24만명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주택 5.1만호 공급
 - 청년 월세 바우처(月20만원, 15.2만명),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40년 고정금리) 신규 추진 등
- ▶ 복지·문화 분야 : 35만명 자산형성 지원, 문화누리카드 31만명 지원
 -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지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원, 1.5만명) 신설 등
- ▶ 교육 분야 : 56만명 등록금 부담 경감,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 국가장학금 확대(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 지원),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1,050명) 등
- ▶ 참여·권리 분야 : 정부위원회 20% 청년참여 확대 및 정책 전달체계 연계 강화

- (관계부처 지원) ▲직업계고 취업지원('21.7, 교육부) ▲보호종료청년 지원강화('21.7, 복지부) 등 관계부처 청년 삶과 밀착된 대책 수립 지원

③ 향후 과제

- (종합 전달체계 구축) 지역 청년센터의 유기적 연계 및 중앙-지방간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종합적 온라인 전달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 청년 삶 실태조사 추진, 청년참여 확대 및 연구기반 신설 등 청년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개선
- (청년정책 개선·보완) 청년정책 전반 점검 및 개선·보완 리모델링 추진, 청년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신규·개선과제 지속 발굴
 - 「청년특별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예산·법령 심의 대응 추진

5. 생활SOC 확충

① 추진 배경

- 그동안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 투자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양적·질적으로 부족

⇒ ①삶의 질 향상 ②지역균형 발전 ③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一石三鳥) 효과가 있는 생활SOC* 확충 추진

* 문화·체육·보육·의료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추진체계 구축)** 생활SOC협의회·추진단 설치('18.11), 「3개년계획('20~'22)」 수립('19.4)

< '생활SOC 3개년계획('20~'22)' 비전·목표·전략 >

- ▶ **(비전)**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 ▶ **(목표)** '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
- ▶ **(전략)** 3대 전략분야 : ①여가활력 ②생애돌봄 ③안전·안심 (3년간 30조원 투자)

- **(투자 확대)** '20~'22, 3년간 국비 총 33.0조원* 투자, 3개년계획 상 투자목표(30조원) 10.0% 초과 달성

* '20년 10.9조원(추경 0.4조원 포함) + '21년 11.0조원 + '22년 11.1조원(정부안)

- 공공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주요시설(33종)은 '22년 계획 대비 '21년 말까지 97% 달성 전망(착수기준)

- 그린·디지털*, 지역균형** 뉴딜 등 국정 주요과제 뒷받침

* 친환경 자재 사용, 온라인 서비스 **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1,150개 착수 등

- **(복합화 촉진)** 투자의 효율성 제고 위해 복합화시설 총 530곳 선정
↳ 생활SOC 국고보조사업 2개 이상을 단일부지에 복합·연계 (이용편의↑, 비용↓)

- 이용자 편의·만족도 제고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시설 이용자 80.5% 만족 / 일반국민 80.1% 확대 희망(건축공간연구원, '21.4, 8)

- ▶ **(3년간 선정현황)** 총 530건 선정* ('20년 289건 + '21년 149건 + '22년 92건)
→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02개(88.6%)에 1곳 이상** 선정

* (지역별) 서울54, 부산37, 대구9, 인천26, 광주28, 대전17, 울산10, 세종4, 경기76, 강원40, 충북27, 충남32, 전북35, 전남40, 경북46, 경남41, 제주8

- 학교(29)·공공주택(6)·국유지(13) 활용, **사업다각화** → 효율성 ↑, 지자체 부담 ↓
- 시설별로 문화센터(271) > 체육센터(172) > 돌봄센터(163) 등 주민선호 시설 順

- **(사업 내실화)** 기획·선정부터 운영단계까지 쏠과정 내실화 유도
 - 복합화 선정 시, 입지분석·계획평가 및 컨설팅 강화
 - 우수시설 공모전('20~ 매년), 사례집 배포(총3편) 등 선도사례 확산
 - '공유누리' 시스템(행안부) 연계, 검색·예약 서비스 제공('21.7~)
- **(참여·소통 강화)** 주민참여 및 소통 활성화로 국민 체감도 제고
 - 주민참여 시범사업('20.8~'21.4, 4개 지자체), 매뉴얼 개발(~'21.12)
 - 복합화 네이밍 국민공모('21.3~4), 로고 활용 등 브랜드화 추진
 - 온·오프라인 광고 실시, 부처별 정책홍보 추진·점검

③ 향후 과제

- **(지속가능성 제고)** 시설 준공·운영 본격화에 따라 지역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매뉴얼·네트워크 등 지원)를 통한 운영 내실화
- **(국민체감도 향상)**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중장기 발전 모색)** '3개년계획' 성과평가 및 후속과제 발굴·보완
 - * '생활SOC 3개년계획 성과평가 및 정책 발전방안' 연구中('21.4~12월, 건축공간연구)
 - 인구구조, 감염병, 기후변화, 기술혁신 및 지방분권 등 정책환경과 수요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마련

6.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① 추진 배경

- '11.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다량의 오염수 발생 중
 - ALPS* 정화처리 후 부지 내 탱크에 약 127만 톤('21.7) 저장
 - * ALPS(다핵종제거설비): 62개 핵종의 방사능 물질 제거 설비(삼중수소 제외)
 -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22년 가을경 既 설치된 저장 탱크용량(137만 톤) 한계에 도달할 전망
-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는 것으로 결정('21.4.13)·추진 중
 - 전체 ALPS 처리 오염수 중 배출농도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가 70% 이상인 상황
 - * 삼중수소의 경우 모든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배출농도기준 초과
 -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日오염수 방출 저지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관계부처 TF 설치·운영)** 日원자력규제위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검토' 발표('18.10) 이후 국조실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 * 9개 부처(국조실·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 현재까지 총 40차례 회의(국무조정실장, 차장, 실장 주재)
 - '20.9월부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운영
- **(對일본정부 대응)** 다양한 경로를 통해 ▲투명한 정보공개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 ▲객관적 검증 등 요구
 - *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 조치('19.8, 그린피스가 '日 오염수 방류계획 중' 발표시)
 - ▲IAEA에 객관적 검증과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19.9)
 - ▲한·일 외교장관회담('19.8) ▲원안위-日규제위 회의('19.9) 등
 - 특히, 日 해양방류 방침(4.13)과 세부실시계획(8.25) 발표 이후 범정부 대응 TF를 통해 대응시나리오 마련·시행 중
 - * 외교관 조치(구술서 전달), 정부입장 브리핑, 국제기구 서한문 발송, 각종 국제 회의에서 정부입장 발표, 주변국가와의 공조모색 중

- **(국제사회 협력강화)** IAEA 총회 기조연설 등 여러 다자회의를 통해 오염수 해양방출에 우려를 지속 표명하면서 국제사회 관심 제고
 - * ▲ 한중일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18.11, '19.11) ▲ IAEA 총회('19.9, '20.9, '21.9) ▲ 런던협약의정서(IMO) 당사국총회('19.10, '20.12, '21.10) ▲ WTO위생협정위원회 정례회의('20.6, '20.11, '21.3) 등
 - IAEA 국제검증단*에 우리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객관성 제고
 - *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호주 등 11개국 참여
 - **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기술원 김홍석 박사 참여 中('21.7.8~)
- **(국내 방사능 감시)** 해수·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제고 노력 강화
 - 연·근해해역 방사능 조사 정점을 확대(사고 전 22개 → 사고 후 71개) 하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확대(年 1회 → 4회)
 - 국내 다소비 수산물(40종) 대상 방사능 안전성 조사 실시,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日 수입수산물(참돔 등 5종) 대상 원산지 중점 단속('19.5~)
 - 후쿠시마 인근 현 수산물 수입금지 및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13~)
 - * 검사/미량검출(건) : ('18) 38,317 / 6 → ('19) 32,265 / 1 → ('20) 28,205건 / 0

③ 향후 과제

- **(對 일본대응)** 양자협의체 구성(국장급)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대비
 - ▲투명한 정보 공개와 ▲충분한 협의를 이행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 절차(잠정조치, 제소)까지 포함한 대응조치 검토
 - * (유엔해양법협약 규정) "각국은 자국 관할권 내에서의 활동으로 타국가 관할해역 또는 국가관할권 이외 해역에 환경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모든 필수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음
- **(국제사회 협력강화)** 주요 계기*시 마다 우리나라 입장 발표 및 관심 국가와 협력강화로 日 해양방류 방침 재고 압박
 - * IAEA, WTO, OECD, IMO(국제해사기구), INRA(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 등
- **(국내 방사능 감시강화)** 수산물 수입규제 지속* 및 해수 방사능 검사 강화
 - * 기존 WTO 수산물 분쟁시 승소를 지켜낸 현재의 검역조치 정당성과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수입규제 조치수준 지속

국민권익위원회

1.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추진

① 추진 배경

- 청렴선진국 도약을 위한 범국가적 반부패 대응체계 구축 필요
 - 급변하는 환경과 복합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종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필요
 - 정부주도 수직적 반부패전략에서 국민·사회각계가 직접 참여하는 수평적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반부패 정책 추동력 확보 필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으로 적시에 효과적인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시행
 - (추진현황) '17.9월에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총 7회 운영
 - (추진성과)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제2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생활적폐 개선(제3차),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제7차) 등 주요 반부패 정책과제 발굴
-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반부패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 (추진현황) 「청렴사회민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정('18.1.3), 청렴사회민관협의체 출범('18.3.6)
 - (추진성과) ① 민간주도의 반부패 의제 발굴 및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18건의 반부패·청렴 이슈에 대한 정책제안 및 정책반영 성과
 - ※ ▲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18.11월), 지방의원 겸직 투명성 강화('19.7월) 등 18건의 반부패정책 제안, ▲ 민관협의체와 정부가 함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 반부패 중장기 계획 수립에 기여
 - ②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각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실천중심의 청렴사회협약 체결 지원
 - ※ 17개 시·도별, 9개 분야별(중소기업·국방·공기업 등) 772개 기관 청렴사회협약 체결

- LH 토지투기 의혹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도입 추진
 - (추진현황)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로 발표('21.4월), 전문가 TF회의(4회), 대국민 설문조사 및 경제단체·시민사회 등 의견수렴('21.6월)
 - (추진성과) 제도개발 및 시범운영을 위해 6개 공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 * 한국전력공, 한국가스공, 한국지역난방공, 한국토지주택공, 한국도로공, 한국수자원공
- 국민이 공감하고 공직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청렴도 측정 제도 개편
 - (추진현황) 측정제도 개편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단 구성·운영
 - (추진성과) 청렴도-시책평가 통합으로 종합평가 체계 구축, 새로운 부패형태 반영, 평가대상 확대·조정 및 맞춤형 평가 강화 등

③ 향후 과제

- **(반부패 기능 중심 조직개편)** 행정심판 기능 분리 등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로 조직을 재설계하고 반부패·청렴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 부패 의혹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사실확인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대상을 대규모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계약관계'까지 확대도 필요
- **(법정부 대응 유지·강화)** 강력한 반부패 정책 추진과 적시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부패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유지·강화
- **(자발적 참여 확대)** 각 기관별·민간분야별 자율적 반부패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확대 등 지원 필요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설치근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등 기관협력,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권고적 효력 등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 공기업·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부패위험을 예방·탐지·대응·개선할 수 있도록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도입·확산
 - 학생·국민 등을 대상으로 자연스런 반부패·청렴 체득화·생활화를 위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청렴교육 프로그램 확대

2.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기준 확립

① 추진 배경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 및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21.5.18)됨에 따라 원활한 시행('22.5.19)을 위한 준비 필요
-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후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오면서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일부 남아 있는 불공정 청탁행위 차단을 위해 청탁금지법령 보완 필요
 - ※ 자녀의 인턴 경력 청탁 의혹 언론보도,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2017고합125판결) 등 법령 보완 필요성 대두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법 적용대상인 약 14,500개 공공기관, 200만명 공직자의 차질 없는 법·제도 준수를 위해 하위법령 제정 및 교육·홍보 실시
 - (시행령 제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6.10~8.31), 시행령안 입법예고(9.10~10.20)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 ※ 사전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등 각종 평가 실시(9.10~10.20)
 - (교육) 법 제정 후부터 현재까지 282개 공공기관* 대상 대면·비대면 교육 실시 및 표준강의안 제공 등으로 기관 자체교육 지원
 - * 헌법기관(5), 중앙행정기관(41), 지자체·지방의회(55), 교육행정기관(5), 공직유관단체(176) 등 282개 기관 대상 교육 완료(5.18~10.19)
 -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21.10.25 기준 63,547명 참여)
 - (홍보) 신문·TV·라디오·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대국민 홍보하고 있음
 - ※ 보도자료 14회, 언론인터뷰 20회 온라인 콘텐츠(영상·카드뉴스 등) 26건 등

-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제출)** 14개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대한 보완 및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내용의 개정안 마련·제출
 - **(부처안 마련)** 2030 청년층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정안 마련 및 권익위 전원위 의결(‘20.9.7)
 - *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20.4.27.~5.15.), 지방자치단체 대학생 행정인턴 등 2030 간담회(‘20.7.29.~8.14, 6회)로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 **(정부안 마련)** 입법예고(‘20.9.11~10.23), 관계부처 협의(9.11~9.21), 공청회*, 차관회의(‘21.2.19), 국무회의(2.23) 등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 마련
 - * 오프라인 전문가 토론(9.11)과 온라인 방식의 대국민 의견 수렴(9.11~9.20) 병행 실시
 - **(국회제출)** 정부안 국회 제출(‘21.2.26), 상임위 통과(9.29) 후 현재 법사위 심사 중

< 청탁금지법 개정안 내용 >

- ▶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견습생·장학생 선발, 연구실적 인정, 논문심사 학위수여, 교도관 업무)
- ▶ 기명신고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변호사를 통한 신고제도 도입
- ▶ 신고와 관련한 육체적·정신적 치료, 쟁송 비용 등 지원하는 구조금 지급 근거 마련

③ 향후 과제

-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기반 마련)** 이해충돌방지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행령 제정 후 시행령 내용을 포함한 제도 운영지침 등 마련 및 전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 제도 담당자 대상 설명 등 교육·홍보 지속 추진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신고사무 처리지침, 이해충돌방지법 매뉴얼 마련·배포
 -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 추진, 이해충돌방지법 인지도 제고 및 10대 행위기준 숙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 집행력 확보)** 청탁금지법 개정 후 집행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 및 개정된 내용 관련 법률 해석 기준 보완 등 추진
 - ※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 반영한 시행령 마련, 법 위반 신고 처리 현황 실태조사 시 개정사항 중점점검 및 해석기준 보완 검토

3.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① 추진 배경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제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에도, 국민 눈높이에서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8%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내부신고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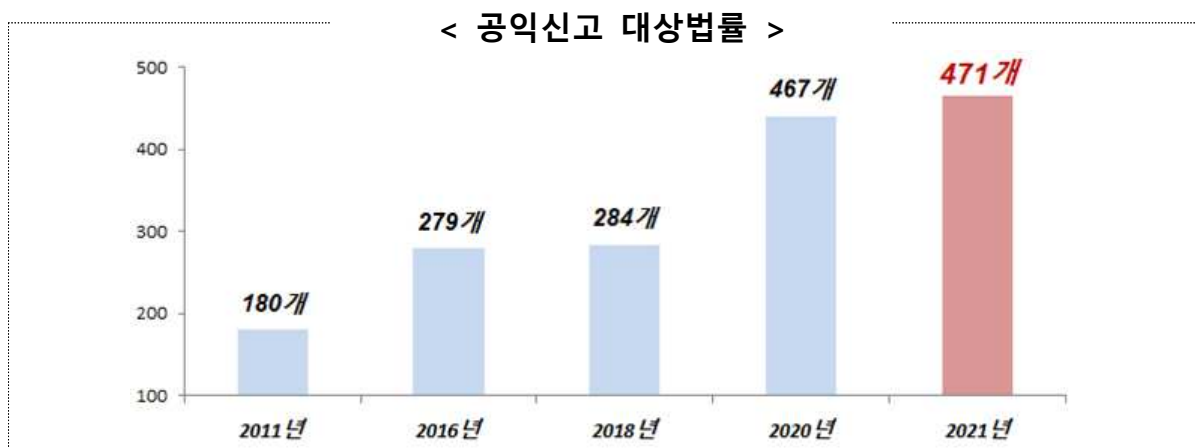
- 신고자 신분노출 방지, 적극적 신고자 보호·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언론·시민단체 등 외부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신고자 신분유출자에 대해 경미하게 처분하는 것에 대한 개선, 신고자 보호조치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방안 검토 필요 등('19~'20년 국정감사 지적)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보호범위 확대)** 부패·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 (부패신고자) 부패행위를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추가('19.10월)
- (공익신고자) 법제정 당시 180개였던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4회에 걸쳐 추가함으로써 471개까지 확대



- **(비밀보장 강화)**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18.5월, '20.6월) 및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18.10월)을 통한 신고자 신분 노출 원천 차단
 - * (종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강화) 5년/5천만원
- **(보호·보상 제도 강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3개월 → 1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이행강제금* 제도 강화,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등
 - * 권익위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시 이행할 때까지 연 2회 최대 3천만원 부과
 - ** (종전) 원상회복 관련 소송비용 → (확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소송비용
- **(적극적 보호·보상)** '17년~'21.9월까지 247건 보호*, 법 위반자 고발·징계요구 53건, 이행강제금 12건 부과, 보·포상금 226억원 지급**
 - * 보호건수 : ('17) 17건 → ('18) 34건 → ('19) 72건 → ('20) 81건 → ('21.9월) 43건
 - ** 보·포상금 : ('17) 42억원 → ('18) 55억원 → ('19) 43억원 → ('20) 55억원 → ('21.9월) 31억원

③ 향후 과제

- **(제도 일원화)** 권익위 소관 반부패법령*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
 -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 적용 법률이 달라 신고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 일원화 등 제도 정비 필요
- **(신고자 지원 강화)** 신고자 지원 확대를 위한 보상체계 개편 추진
 - 현행법 상 신고로 인한 국고수입 회복액이 커질수록 보상금 지급 비율은 낮아지는 구조로 신고자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일수록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내부신고 유도 필요
- **(보호제도 강화)**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 등 보호제도 강화
 - 신고자 색출행위 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을 통한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4. 적극적인 국민권익 구제 확대

① 추진 배경

-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등의 권익침해가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 행정심판 운영을 통한 권익구제 시급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고충해결)** 최근 5년간('17년~'21.9월) 다른 행정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여 국민권익위로 제기되는 고충민원 188,562건 처리
 - 특히, 집단민원 574건을 해결하여 132,800여 명 주민들의 숙원 해소
 - * 집단민원 해결건수 : ('17년) 139건 → ('18년) 115건 → ('19년) 86건 → ('20년) 113건 → ('21.10월) 121건
- **(현장소통)** 민생·경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고충 해소 확대
 - 소외지역·취약계층 대상 이동신문고를 373회 운영하고, 코로나19 등 사회적 현안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국민고충 긴급대응반' 설치('21.9월)
 - ※ 현장상담 해결률 : ('17) 43.9% → ('18) 47.7% → ('19) 50.4% → ('20) 51.8%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기업 고충해소를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17.12월)하여 현장을 찾아가는 기업고충 현장회의 60회 운영
- **(시민고충처리위)** 국민권익위와 동일한 권한·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시민고충처리위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
 -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20.9월), 전국협의회 구성·운영('21.3월~), 권역별 세미나 개최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 ※ 전국 지방자치단체 62개에서 시민고충처리위 설치·운영('21.10월 기준)
 -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20.9.9,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 **(수사 옴부즈만)** 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을 포괄하는 '수사옴부즈만' 도입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발의('21.5월)

- 기존 시행령에서 '경찰청'으로 한정되었던 수사기관 관련 규정을 '모든 수사기관'으로 확대하고, 수사 관련 자료 등 요구권 강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21.5.10,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 **(행정심판)** 최근 5년간('17년~'21.9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행정심판을 통해 11,826건 구제

- 행정심판청구 시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국민을 위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줌으로써 권익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 '18.11 제도 도입 후 기초생활수급자·기타 경제적 곤란자 등 376건 지원, 지속 확대

- 행정심판 재결(인용·기각·각하)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18.5월)

※ 조정성립 : ('18년) 14건 → ('19년) 17건 → ('20년) 15건 → ('21.9월) 20건

- 인용재결 이후 행정청이 재결취지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한 뒤 지연기간만큼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 도입('17.10월)

※ 간접강제신청 : ('18년) 16건 → ('19년) 17건 → ('20년) 29건 → ('21.9월) 23건

③ 향후 과제

○ **(집단민원)** 집단민원의 객관적·전문적 조정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개별 고충민원 중심의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 집단 고충민원 해결방식·업무체계 등을 규정한 「집단민원조정법」 제정 추진

※ 집단민원은 원칙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조정해결 모색 등 관리를 강화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 **(수사 옴부즈만)**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 감시·견제 기제로서 수사 옴부즈만을 도입하여 수사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필요

-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을 처리·예방함으로써 수사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5. 국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정책·제도개선

① 추진 배경

- **(제도개선)** 부패와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관행을 발굴·개선함으로써 민원과 부패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차단
-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운영)** 권리의식 향상·정보기술 발달 등으로 소통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소통시스템 활성화
- **(빅데이터 분석)** 국민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국민의 소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환류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제도개선)** '17.5월부터 '20.12월까지 216건의 생활 속 불공정 및 구조적 부패 관행, 국민불편 유발요인 등 제도개선
 -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 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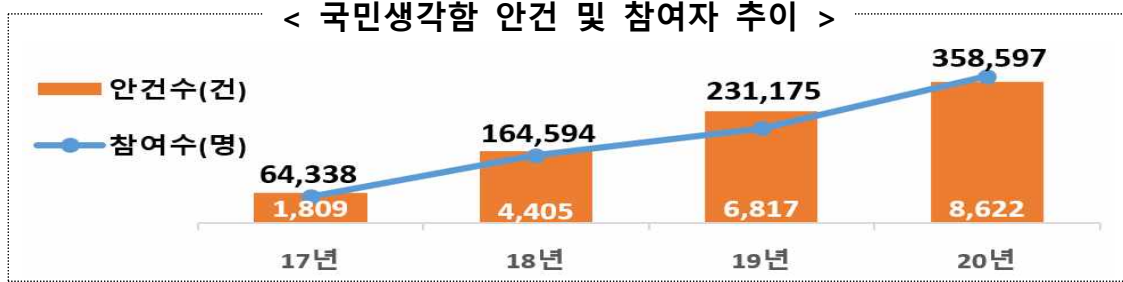
< 주요 제도개선 권고 사례 >

생활 속 불공정 및 구조적 부패 관행 개선	▶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19.) ▶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20.) ▶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21.) 등
국민불편 유발요인 개선	▶ 민원분석을 토대로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강화 등 미세먼지 제도개선('19.) ▶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 개선('20.) ▶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21.) 등

- **(국민신문고)**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민원·제안·정책참여 기능 통합·연계 추진 및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품질제고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사립대학 등 국민신문고 통합·연계 기관 총 1,057개('21.9월 기준)

※ 국민신문고 민원: ('18) 473만건 → ('19) 799만건 → ('20) 957만건 → ('21.9월) 1,034만건

- **(국민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16.3월~))** 국민·공직자·전문가 등과 협업으로 일상의 공공의제에 대한 국민 참여 유도



- **(빅데이터분석)** 주·월간 민원추이, 기관별 민원현황, 국민불편 검토요청 사례 등이 포함된 민원동향보고서 「국민의 소리」 발간(매주·매월)

- 1,191여개 공공기관 등 제공,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에 공개

- ▶ 데이터 원천 : 국민신문고·지자체(시·도·포털, 서울) 민원 등 월평균 127만여건('21년)
- ▶ 데이터 수집건수 : ('18) 700만 → ('19) 1,077만 → ('20) 1,235만 → ('21.9월) 1,140만

- **(빅데이터개방)**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다양한 유형과 기준*으로 시각화하여 데이터 13종 개방(Open-API)('19.1월~)

* 지역별·기관별·분야별(28개 유형), 민원인별(성별·연령별), 민원키워드 등

※ '21년 월평균 방문자수 26,631명 및 페이지 조회수 674,571회('21.9.30 기준)

③ 향후 과제

- **(국민신문고 운영 근거 필요)** 현행 규정만으로는 급증하는 온라인 이용 수요 및 새로운 고객 요구 등에 적극 대처하는데 한계

-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온라인 민원처리, 국민의견 수렴과 함께 다량의 정보를 분석·활용하기 위한 근거 법령(가칭 「국민신문고법」) 마련 필요

- **(민원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민원데이터의 사회·경제적 활용을 위해 국민이 직접 분석·활용할 수 있는 민원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필요

※ 정보화 전략계획(BPR/ISP) 도출('21.6월), '21년 전자정부과제로 선정되었으나 '22년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자원 확보 노력 지속 예정('23~'25년, 약 172억원)

- **(빅데이터 전문 조직 구성)** 부패방지·고충처리·민원 관련 위원회 및 범정부 내·외부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전문조직 구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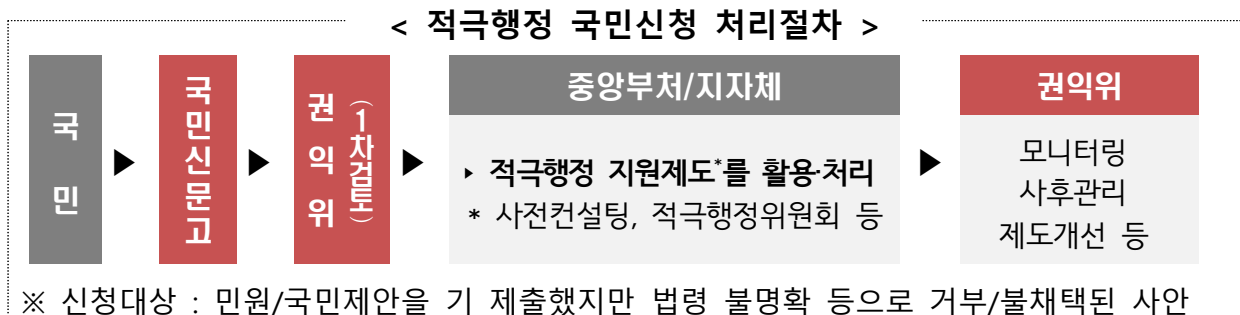
6.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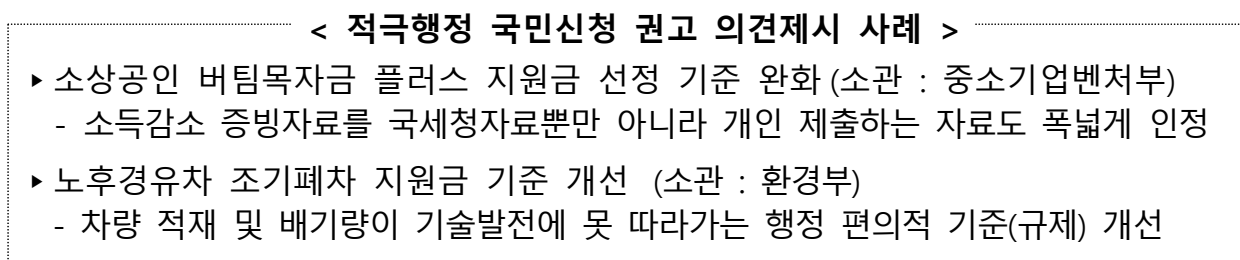
- 정부와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된 적극행정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을 받아 정책개선에 적극 반영
- 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에 불복 시, 재신고 받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익구제 및 문제해결 방안 검토 필요
 - ※ 연간 약 4만 여 건 중, 각 기관에서 소극행정으로 인정·처리되는 비율은 2%에 불과

2 추진현황 및 성과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21.7월)
 - 국민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체감도 제고



- 국민신청제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시 담당공무원의 징계면책·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 조치 등 가능
- 제도 도입('21.7.27) 후 1,020건 접수, 이 중 65건에 대해 해당기관에 권익위 권고 의견제시('21.10.26 기준)



- ▶ 태국 재외국민 여권 재발급 해결 (소관 : 외교부)
 - 코로나19로 여권재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에 대한 순회영사를 통해 대책 마련
- ▶ 종이 건강보험증 증명서로 대체 개선 (소관 : 보건복지부)
 - 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종이 발급비용 절감 등을 위해 건강보험증 개선
- ▶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해소 (소관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아동급식 단가 기준 마련 및 급식제공 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

○ 소극행정 재신고제 도입('21.7월)

- 기관별 소극행정 신고로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권익위가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
 - * 재조사 요구, 신고 처리실태 확인·점검, 소극행정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 ※ 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 94%(365명 중 344명)와 공무원 68%(12,851명 중 8,721명)가 소극행정신고 처리결과에도 이의신청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
- '21.8월 신고창구 개설 후 '21.10.26.까지 531건의 재신고 접수
 - ※ 소관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부서는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 재조사, 개선조치 등 처리 후 권익위 및 신고인에게 결과통보

< 소극행정 재신고 사례 >

- ▶ 임대차계약 신고 사전안내 강화 (소관: 국토교통부, 삼척시)
 - 임대차계약 신고 기간 오인으로 인한 과태료 반복민원 제기되어 국민불편 없도록 소극행정 예방위해 사례전파 및 교육실시, 민간임대등록제도 개선 권고
- ▶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사건 지연 처리 (소관: 고용노동부)
- ▶ 도로적치물 단속업무처리 방식 개선 (소관: 지방자치단체) 등

③ 향후 과제

- **(법적 근거 보완)** 실질적인 국민권익 보호 및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현재의 대통령령 외에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 보완 추진 필요
 -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대상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제도의 운영 근거 명확화 추진
- **(전담부서 정규화)** 적극행정 성과창출 및 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현 TF 체제에 대한 인력보강 및 정식 직제화 필요

인사혁신처

1. 적극행정 활성화

① 추진 배경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장과 법·규정의 간극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개선하여 국민권익 증진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적극행정 제도화)** '19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한 이후, '2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구 분	주 요 내 용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	'19년	·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기관별 설치)에 의견제시 요청 및 감사기구(자체감사기구,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요청
	'20년	· 적극행정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 규모 확대(최대 15명 → 45명), 회의시 안건 관련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 도입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 도입(출석·발언 등)
	'21년	·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 :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의사결정 지원제도(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문제해결 추진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합동회의 운영 등
적극행정 면책	'19년	·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시 징계단계에서 징계 면제 ※ 사전컨설팅의 경우 감사단계(자체감사,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보장
	'20년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시 적극행정 면책 보장 ·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원에 면책 건의
	'21년	·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적극행정 보호	'19년	·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의결 요구를 받는 경우나 민사 소송이나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변호사 등 선임비용 지원
	'20년	·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도입 : 공무수행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 지원

- **(지원제도 정착)** 코로나19 대응 등 정책현장에서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증가* 및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추진

* '19년 대비 '20년 적극행정위원회 활용건수 11.6배 증가, 사전컨설팅 활용건수 1.7배 증가

- **(공직문화 확산)** 우수공무원 선발 및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등 확실한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 부여 확산
 - * 중앙부처 우수공무원 선발현황 : ('19)294명, ('20)934명 / '20년부터 우수공무원 중 50% 이상 파격적 인센티브(특별승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국외훈련 등) 부여
- **(국민체감 개선)** '20년도 국민체감도 조사결과가 전년 대비 상승
 - ※ ▲적극행정 노력도(62.8% → 68%)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적정성(59.7% → 62.9%) ▲향후 공직사회의 변화 기대(74.6%→79.5%) 등 쏠 분야에서 체감도 향상

③ 향후 과제

- 일선 현장에서의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MZ세대 등 젊은 공무원 특성을 고려한 적극행정 정책 추진
 - (보상제도 개선) 적극행정은 작은 성과에도 보상하고, 칭찬·휴가 등 비금전적 보상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MZ세대가 중요시하는 '인정감' 제고
 - * 예시) 포상 휴가, 우수공무원 인증 메달 등 다양화
 - (교육 및 홍보) 젊은 층이 흥미와 재미를 갖고 몰입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 * 예시) 게임과 교육을 접목한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교육자료 개발 등

2. 공직사회 전문성·개방성·다양성 확대

① 추진 배경

-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및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전문성·개방성을 높이고 정부인사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
- 여성·장애인 등 소수집단에 대한 균형인사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공직 내 다양성 확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채용제도 개선)** 우수한 인재의 공직 유치 및 수험생 편의 제고를 위해 채용시험 과목 개편 등 추진

< 주요 개선사항 >

- ▶ **(시험과목 개편)** 신규 공무원의 종합적 사고력 측정 및 직무전문성 함양 등을 위해 7급·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 ※ (7급) 1차 필기시험에 PSAT(공직적격성평가) 도입 ('21년 적용)
 - (9급) 고교선택과목 폐지 및 직종·직류별 특성에 맞는 전문과목 필수화 ('22년 적용)
- ▶ **(성적 인정기간 연장)** 영어·한국사 등 공채시험 대체 시험과목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연장('20.10월)
 - ※ (영어 및 외국어) 3년→5년 / (한국사) 4년→5년

- **(공정채용 확산)** 정부·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정채용 컨설팅·교육 등 강화

- 시험 단계별 준수사항*을 법령 등에 구체화하고 각 부처 채용담당자 교육, 공정채용 워크숍 및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18년~) 등 실시

* 시험위원 1/2 이상 외부위원으로 위촉, 배경 블라인드 강화, 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

▶ 공무원 채용시험 공정성 인식도 : ('18) 78.7% → ('19) 80.2% → ('20) **87.2%**

※ 면접시험 응시자 대상 조사

- **(인재DB 다양성·활용성 제고)** 여성·지방·이공계인재 등의 적극적인 발굴 및 국가인재DB를 활용한 추천 인원 증가

※ (여성) ('16) 68,419명 → ('21.8월) 86,949명 / (지방인재) ('16) 82,151명 → ('21.8월) 133,751명
(이공계) ('16) 82,595명 → ('21.8월) 104,55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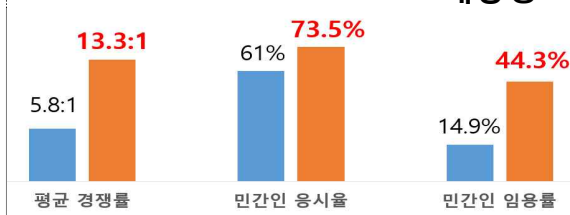
※ (추진직위/인원) ('16) 5,774개/25,189명 → ('20) 12,999개/46,180명 (각 125%↑, 85%↑)
(국가인재DB 활용률) ('16) 8.6% → ('20) 14.3% (5.7%p↑ / '21년 14.8% 달성 예정)

- **(우수 민간인재 공직 유입 확대)** 민간 출신 공무원의 신분보장 강화·보수 상향 등 지속적 제도 개선* 및 정부헤드헌팅 본격적 확대**를 통한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 증가

* 연봉책정범위 확대(고공단 170%→200%, 과장급 150%→170%),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민간 임용자 승진 허용, 일반직 전환 근무요건 단축(5년→3년) 등 우수인재 보상체계 강화

** 정부헤드헌팅 현황 : ('17) 12명 → ('18) 6명 → ('19) 5명 → ('20) **16명** → ('21.11월) **19명**

< 개방형 직위 운영 성과 >



< 민간인재 개방형 직위 관심도 증가 >

- 평균 경쟁률 : ('14) 5.8:1 → ('20) **13.3:1**
- 민간인 응시율 : ('14) 61% → ('20) **73.5%**
- 민간인 임용률 : ('14) 14.9% → ('20) **44.3%**

- 미래차 산업, 생명연구자원 등 신산업 분야 직위 신설* 및 국제통상·보건의료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영입으로 정부 경쟁력·전문성 제고

*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 과기부 생명연구자원과 신설 후 민간 인재 임용

<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 >



후쿠시마 수산물, 공기업 밸브 등 무역 분쟁 주무부서 과장으로 WTO승소에 기여

<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의대교수 출신으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으로 활동

< 산업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 >



공학박사, 연구원 출신으로 코로나19 관련 'K-방역모형 국제표준화' 추진

- **(균형인사 확산)** 최초로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균형인사정책의 중장기 비전 제시

- (여성관리자) 공직내 유리천장 해소를 위해 고위공무원·본부과장급 대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 수립·시행, 미임용부처 감축 노력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및 실적('18~'22) >

구 분	'18년(실적)	'19년(실적)	'20년(실적)	'21년	'22년
고위공무원단	6.8%(6.7%)	7.2%(7.9%)	8.2%(8.5%)	9.6%	10.0%
본부과장급	15.7%(17.5%)	18.4%(20.8%)	21.0%(22.8%)	23.0%	25.0%

※ 미임용부처 : ⁽¹⁷⁾11개 → ⁽¹⁸⁾10개 → ⁽¹⁹⁾8개 → ⁽²⁰⁾7개 → ⁽²¹⁾9월 3개

- (장애인·지역인재) 장애인 채용* 확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사업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

* (구분모집+중증경재) ⁽¹⁷⁾297명 → ⁽¹⁸⁾287명 → ⁽¹⁹⁾329명 → ⁽²⁰⁾294명 → ⁽²¹⁾384명

** (7급/9급) ⁽¹⁹⁾140/210명 → ⁽²⁰⁾145명/244명 → ⁽²¹⁾160명/320명(예정)

③ 향후 과제

- **(채용역량 제고)** 채용의 공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부처 채용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

<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플랫폼 >

- (개요) 부처 채용절차를 온라인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
⇒ 각 부처 채용시험 담당자가 단일 시스템을 통해 공고·원서접수 등 시험을 운영하고, 수험생은 온라인으로 시험지원·서류제출 등 진행
- (추진일정(안))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사업예산 반영('22년), 통합시스템 구축·시범운영 및 운영·관리조직 정비('23년~)

- **(균형인사 내실화)**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공직 구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3-'27)」 수립 추진('22.12월)

- (여성관리자) OECD 최하위 수준인 고위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지속 확대 추진

※ '20년 여성 고위직 비율 OECD 33개국 평균 37%, 우리나라 8.5%(32위), 일본 4%(33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 추세*를 고려하여 각 부처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구분모집 등 채용 확대 추진

* ('17년~'18년) 3.2% → ('19년~'21년) 3.4% → ('22년~'23년) 3.6% → ('24년~) 3.8%

3. 공직윤리제도 개선

① 추진 배경

- LH 사태, 방산비리 등으로 훼손된 공공부문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 주식투자 확대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
- 사회·환경변화에 맞추어 징계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공직 비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직 내 경각심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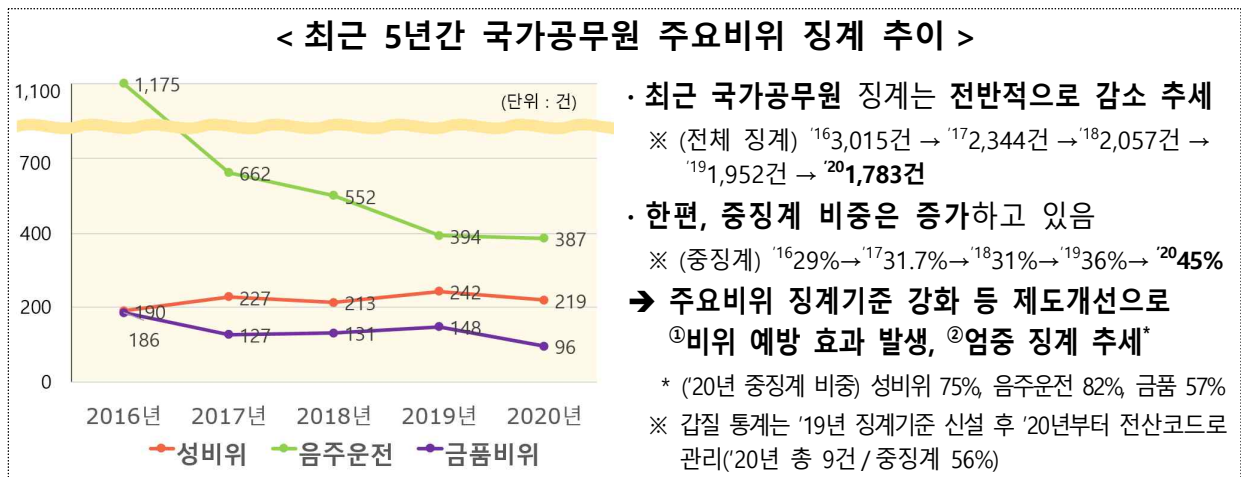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공직윤리 강화 >

- **윤리 취약분야 취업제한 강화 및 생계형 취업 완화로 공정심사 원칙 확립**
 - (제한 강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등 안전·방산 분야 및 사학 분야 기관은 규모 관계없이 취업심사 대상으로 지정
※ 「공직자윤리법」 개정, '19.12.3. 공포 / '20.6.4. 시행
 - (제한 완화) 6·7급 공무원의 경비·택배 등 재취업 시 심사 면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20.6.2. 공포 / '20.6.4. 시행
-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재산등록 및 주식취득 제한제도로 현실적합성 제고**
 - (신고방법 개선)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방식 변경(액면가 → 실거래 가격 또는 별도 평가금액)으로 재산 등록(신고)시 실제 가치를 반영
 - (주식취득 제한) 이해충돌 가능 부서 근무시 관련주식 신규취득 제한
※ 「공직자윤리법」 개정, '19.12.3. 공포 / '20.6.4. 시행
- **부동산 관련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대책으로 투기 근절 기반 마련**
 - (투기 예방) 부동산 관련 담당자를 재산등록 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기관별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 도입
※ 「공직자윤리법」 개정, '21.4.1. 공포 / '21.10.2. 시행
 - (집중 심사)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

〈 주요비위 근절 〉

- **(성비위)** ‘성희롱’ 징계기준을 ‘성폭력’ 징계 수준으로 **상향**(‘18.5월), 새로운 성비위 유형 추가* 및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비위 **징계양정 강화**(‘21.8월) 등
*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성비위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 신설
- **(갑질)** 직무권한을 이용한 갑질(「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및 해당 비위 은폐·미조치 등 관련 징계기준 신설 및 징계감경 제한(‘19.4월)
- **(음주운전)**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기존보다 1단계씩 **상향** 조정,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0.1%에서 0.08%로 **강화**(‘19.6월)
- **(금품 등)** 수당·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신설(‘20.12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및 징계감경 제한(‘21.8월)



3 향후 과제

- **(가상자산 보유 관리 강화)** 가상자산을 재산신고대상 재산으로 추가하여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가능성 차단
 - 관계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가상자산 신고가액 산정방법 및 거래내역 확인방법*을 마련하고 신고 실효성 확보
 - *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정보 회신기관으로 추가하여, 재산등록 및 심사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부여
 - ※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개정 필요
- **(징계기준 강화 및 절차 개선)** 수당·여비 부당수령에 관용적인 조직문화·행태 개선을 위해 비위행위 은폐·미조치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및 갑질, 상해 등 징계처분결과 통보 피해자 범위* 확대
 - * (현행) 성비위 사건 피해자 → (확대) 갑질, 상해 등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는 비위

법 제 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한 법령정보 제공

① 추진 배경

- **(국민이 편리한 법령정보 제공)**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대국민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중('00 ~)*

* 현행·연혁 법령('00) → 해석례, 심판례, 판례('09) → 행정규칙('10) → 자치법규('11) → 공공기관 규정('21)으로 제공범위 확대

-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법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정확한 법령정보를 국민에게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필요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12.10.)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법령정보 제공량 증가)**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해석례, 공공기관 규정 등으로 법령정보 제공 범위 지속 확대

※ 법령정보 제공량(만건) : 376('17) → 379('18) → 405('19) → 425('20) → 450('21.9.)

- **(방문자 수 증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정보 제공으로 방문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

* 일평균 방문자수(만명) : 43.6('17) → 44.5('18) → 49.9('19) → 59.2('20) → 68.4('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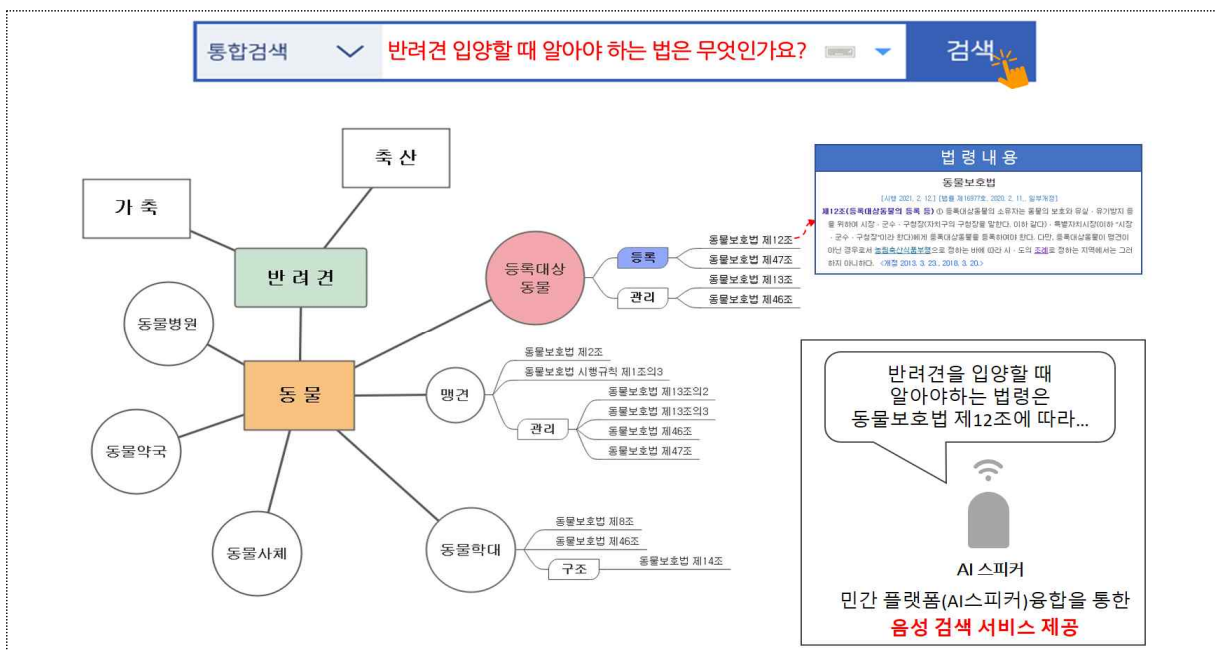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지능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법령정보 서비스 고도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차세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ISP) 수립('20.11.)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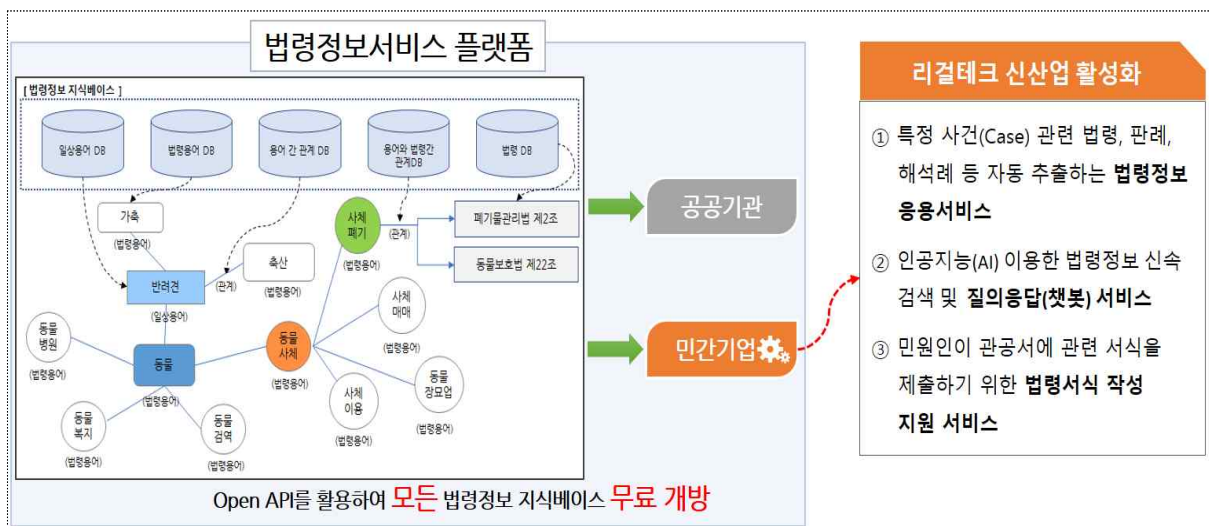
과제명	추진연도	재정소요액
▶ 법령정보 지식베이스 구축	'22 ~ '26	2,322
▶ 인공지능 기반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23 ~ '25	3,712
▶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22 ~ '25	2,419
▶ 고객특성과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UI/UX 등 개편	'23 ~ '24	370

3 향후 과제

- **(AI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수요자 중심의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으로 개편('22 ~ '26년)
-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문장, 질문, 일상용어 등을 통한 법령검색, AI 스피커를 이용한 음성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여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 법령정보 제공 확대 및 통합 제공을 위한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법령정보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 법령정보 지식베이스를 개방하여 법령정보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데이터 융합 기술을 결합한 민간기업의 리걸테크 신산업 활성화 지원



2.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① 추진 배경

- 법령 속에 있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한자어, 외래어, 일본식 용어 등)나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법령안의 집중 검토)** 부처협의를 사전 검토를 통해 어려운 용어 2,023개를 발굴, 1,576개를 법령에 반영('18.3. ~ 현재)
-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을 통해 입법예고안 속 어려운 용어 310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법령에 반영('19. ~ 현재)

< 주요 정비 사례 >

	개선 대상 용어	개선안	법령명
부처협의를 사전 검토	헬더로우더	화물 하역장비	항공사업법 시행령
	바이오마커	생체지표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
	난백	흰자	축산법 시행규칙
법령안 새로 쓰기	국세에 만족시킬 수 있다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세징수법
	20착	20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사료빈	사료보관통(사료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현행 법령의 정비)** 현행 법령 전수 검토를 통해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 3,400여개를 발굴, 해당 용어가 포함된 법률 116건 및 하위법령 1,224건 개정('19. ~ 현재)

< 주요 정비 사례 >

	개선 대상 용어	개선안	법령명
어려운 용어 정비	간찰류	편지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풍치	경관	물환경보전법
일본식 용어 정비	개호(介護)	간병	5·18보상법
	어분(魚粉)	생선가루	담건설관리법

○ **(기본법 정비)** 민법·형법·상법 등 기본법 속 법령 용어가 일상생활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해당 법령 용어를 다른 법령에서 인용·사용 중

- < 개선이 필요한 기본법 용어 예시 >**
- ▶ 통정(通情) → 일반적인 의미는 “정을 통하다”의 의미이나 법령에서는 “서로 짜다”의 의미로 사용
 - ▶ 조지(阻止)하다 → “저지(沮止)하다”의 잘못된 표현
 - ▶ 균분(均分)하다 → 똑같이 나누다

- 국민이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22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 실시(개발대상 법령 확대 및 지속적인 콘텐츠 유지·관리)

수급기간 및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제48조)

소정급여일수

대기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실업인정일로부터 12개월

(수급일수: 최단 120일, 최장 270일)

실업신고일: 7일, 8일, 실업인정일

연령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 50세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50세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비고: (1) 연령은 피보험자의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의미함.
(2) 장애인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를 적용함.

주요구조부(「건축법」 제2조)

주요구조부

지붕틀

내력벽

바닥

차양

기둥

보

주계단

차양면

기초

지하층벽면

사이기둥

옥외계단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부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콘텐츠 개발	12개	30개	30개	30개	30개
관리 시스템	-	구축	유지·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

3. 「행정기본법」 제정 및 행정법제 혁신

① 추진 배경

- 행정법 분야의 법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 제정('21.3.)
 - ※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90% 이상)을 차지하나, 입법·집행의 원칙이 되는 '기본법'이 미제정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행정기본법 제정 완료)** '행정기본법 제정계획' 수립·보고('19.7.2) 후, 추진기구(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및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구성('19.9.)
 - * 행정법 학계, 판사·변호사 등 법조계, 연구계, 관계 부처 등 각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
-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논의(36회)와 충실한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 제출('20.7.8.), 국회 심의·의결**('21.2.26.) 및 제정 완료('21.3.23. 공포)
 - * 입법예고(3회), 권역별 공청회(3회), 중앙·지자체 설명회, 15개 관계부처와의 협의 완료
 - **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 98% 찬성으로 가결
- 대한민국 수립 후 최초로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실체적 기준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된 성과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모범 입법 사례

< 「행정기본법」 주요 내용 >

- ▶ 국민 권리보호 강화(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확대, 행정의 法원칙 명문화, 재심사 도입 등)
- ▶ 적극행정 촉진(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명시, 신고의 효력 명확화 등)
- ▶ 행정 통일성 제고(과징금 등 유사제도 체계화, 법 적용기준 명확화)

- **(하위법령 제정)** 행정기본법에 따라 위임·집행사항을 규정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완료('21.9.24. 공포)

< 「행정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

- ▶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의신청, 재심사 등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 및 절차 마련
- ▶ 법제처 소속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운영
- ▶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국내 최초 실시

3 향후 과제

◇ 행정기본법이 행정에 원활하게 안착·확산되고 국민 중심의 행정법 제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법제 혁신’ 지속 추진

○ **(개별법 정비)**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과징금·인허가의제 등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의 공통규정 입법화 완료

- 행정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요 법제도와 관련된 개별법 정비를 단계적으로 실시('22~'25년 예정)해 국가 법체계의 정합화·통일화 추진 예정

<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법 정비 주제 >

연도	정비 주제
2022년	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② 인허가의제, ③ 과징금, ④ 이의신청
2023년	① 결격사유, ② 제재처분의 기준, ③ 이행강제금, ④ 직접강제, ⑤ 즉시강제, ⑥ 수수료 및 사용료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민·관 합동 국가행정법제위원회* 구성·운영('21.12 출범) 예정

* 법제처장 및 민간 전문가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정부·민간) 이내로 구성

○ **(행정기본법 안착 지원)** 국민들이 행정기본법과 행정법 체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해설서’ 제작·배포('21년 말) 및 중앙·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교육 지속 실시('21.4월~)

○ **(입법영향분석 실시)** 현행 법령 또는 공통 제도를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입법의 효과성, 집행실태, 규범적 타당성 등을 종합·체계적으로 분석해, 법제 개선 및 법령정비에 활용 예정

○ **(행정기본법 발전·보완)** 행정기본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제정 당시 담지 못했던 쟁점*들에 대한 추가 연구·검토를 거쳐 행정기본법 보완 추진

- 이와 함께, 행정절차법과의 통합을 위한 노력 경주

* 향후 연구 대상 : ▲행정기본법 제정 시 미반영 사항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한 법제 정립 ▲학계·법조계 요청사항 ▲국민제안 사항 등

4. 아시아 국가 법제행정을 선도하기 위한 법제교류협력

① 추진 배경

- 아시아 법제기관 등과의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법제발전 경험을 전파하고, 각국의 법제 개선사항 및 발전전략을 도출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기업에 친숙한 법제환경 조성

② 추진현황 및 성과

- **(법제교류협력)**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6개 국가의 법제기관과 30건의 MoU를 체결하여 우리나라 법제를 전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제교류협력 추진 중

※ 법령정비·심사·해석 등 법제처 실무업무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여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영상을 요청한 국가에 제공('21.2.)

- KOICA ODA사업으로, 미얀마 법무부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40억원 규모로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 '18년 5월에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미얀마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 현재('21.10.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140만 명임

- 2020년부터 신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인도네시아 대상 한-인니 법제분야 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아시아 국가와의 법제교류협력 심화 및 외연 확대

* (주요사업) KOICA ODA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2억원 규모로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예정

-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도시개발, 교통체계 효율화, 안전관리, 국민참여·소통,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제개선방안 논의(연 1회)

- 우리나라 법제발전의 우수 사례와 행정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상호간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법제교류협력 사업 발굴

※ 제9회('21.10.) 회의 주제 : 아시아 각국의 법제 행정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



③ 향후 과제

- 법제교류협력,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경제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 국민·기업이 진출하는 경우 친화적인 법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법제교류협력)** 아시아 국가와의 법제교류협력 외연 확대를 통해 아시아 지역 전체 법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법제교류협력 수요가 있는 아시아 국가를 적극적으로 발굴, 대상국의 구체적 협력수요에 기반하여 해당 국가 공무원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제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대한민국 법제 발전경험 전파
- * ① 국가법령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② 법제처와 유사한 법제전문기관 설립, ③ 우즈베키스탄에 부패방지법, 몽골에 「말산업 육성법」 관련 법제를 지원한 사례 등 개별 법령정보 지원 등
-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아시아 국가의 법제개선 및 이를 통한 경제 발전 기반 마련으로 아시아 경제 공동체의 상생·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 지속 및 확대